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상열 · 정종은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상열 · 정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연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조광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연수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 김한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자문위원 김석흥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위원)

김세훈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김재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진욱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배인식 (키클롭스 대표)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상진 (생활문화진흥원 정책사업팀장)

이정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임학순 (카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최진우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 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과 속도 중심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정책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정책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의 해소에 기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다양한 사회적 갈등, 지역 쇠퇴, 삶의 질 제고, 4차 산업 혁명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가 문화정책에 보다 많은 역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과 그 이슈들을 포착하고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문화정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현재와 미래의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을 도출하고, 도출된 이슈와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향후 문화정책의 기획과 추진, 후속 연구과제의 모색에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서 자문과 인터뷰,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신 많은 전문가와 연구진에게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김 정 만

연구개요 ●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이 삶의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문화정책에도 구조적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됨.
- 각 분야에서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있으나, 기존 문화정책 연구는 현안 대응에 집중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정책 전망과 의제를 발굴하는 데에 미흡하였음.
- 본 연구는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그 대응방향을 선별하여 향후 문화정책의 의제와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문화정책에서 미래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미래가 13.1년 후인 점, 국제 사회 문화의제가 2030년 목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된다는 점, 미래 문화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와 비교 필요성을 고려하여 2017년 현재부터 2030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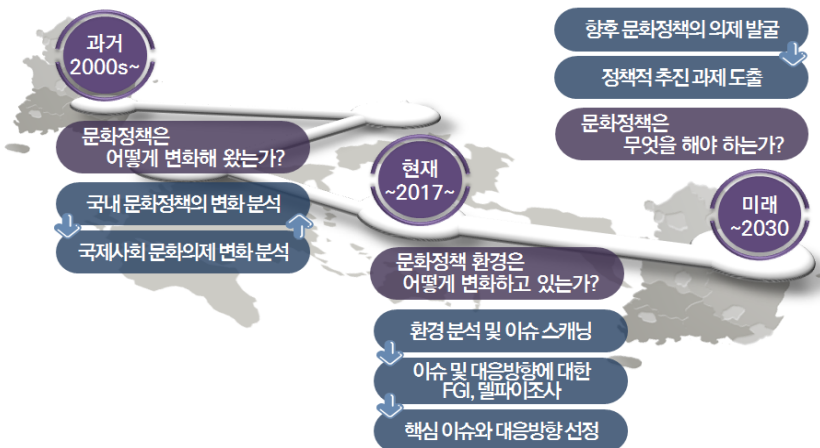
○ 또한 정책 이슈와 의제 도출을 위해 요구되는 국내외 문화정책의 흐름 분석을 포함하여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였음.



[그림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본 연구는 ‘문화정책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과거~현재)’, ‘문화정책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과거~현재~미래)’, ‘문화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현재~미래)’라는 질문 하에 진행되었음.

○ 이를 위해서 국내 및 국제사회 문화정책의 흐름과 관련 이슈를 파악하는 한편, 정책 환경 분석, 전문가 인터뷰 및 델파이 등을 거쳐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와 대응방향을 선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문화정책의 의제와 과제를 제안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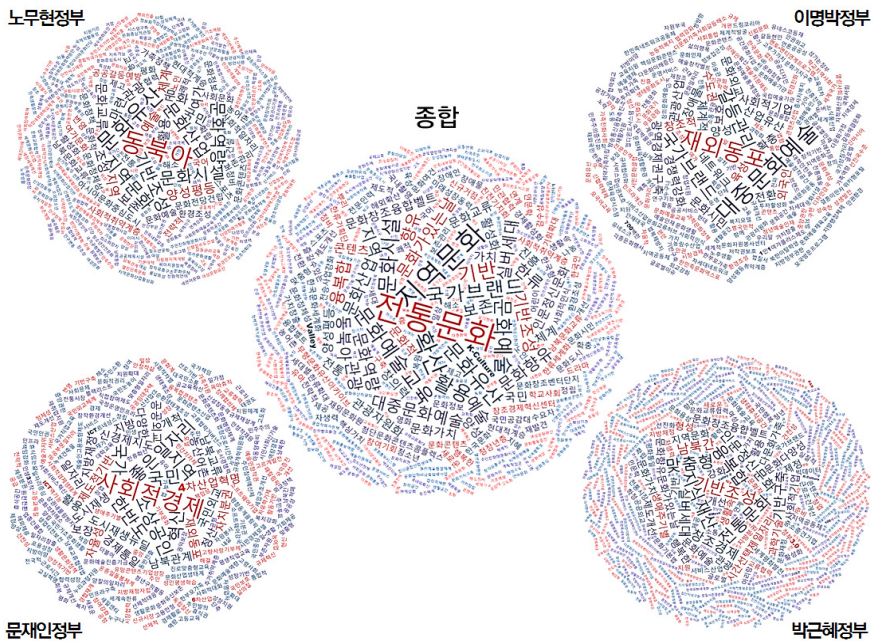


[그림 3] 연구 개념도

3. 국내외 문화정책의 흐름

□ 국내 문화정책의 변화

- 본 연구에서 설정한 2017~2030년이라는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각 정부 문화정책 변화를 노무현정부부터 현 문재인정부까지 국정 과제 및 이와 연동되어 수립된 문화계획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전통문화나 문화유산, 예술 관련 국정과제가 문화부처의 고유영역으로 설정된 것과 아울러 경제나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정책이 관련 과제에 통합적으로 협력을 모색하도록 계획되는 경향도 증가하였음.



[그림 4] 각 정부 문화정책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 정책의 내용에서는 지방분권의 부각, 문화격차 해소, 지역의 문화 역량 강화 등 지역문화정책이 각 정부의 문화정책을 관통하고, 이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생활속 문화 확산, 국민의 주체적인 문화 참여와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여가 확대 등이 유지되었음.

□ 국제사회 문화의제의 변화

- 1998년 유네스코(UNESCO)의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에 관한 정부 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에서 ‘문화 발전’ 개념을 진전시켜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의제로 제시하였음.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2015년에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제로 전환 시에 반영되었고, 유네스코, 유럽연합(EU),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등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 진행된 문화의제와 문화계획을 분석한 결과, ‘문화 발전’,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개의 담론이 기둥을 이루고, 최근에는 도시 문제에서 문화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그림 5] 국제사회 문화 관계 회의 및 계획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 국내외 문화정책의 흐름 종합

- 국제사회 의제는 ‘문화와 발전’, ‘문화다양성’, ‘문화교류와 혁신’, ‘창조성과 참여’ 등으로 확장되는 경향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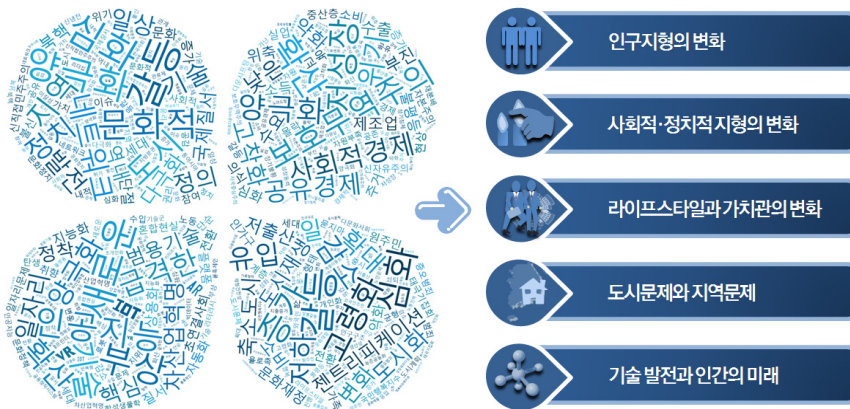
틀로 수렴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은 우리 문화정책에도 나타나며 국가정책 전반에서 문화의 역할이 강조되고,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문화민주주의’, ‘지역과 도시’, ‘문화와 기술의 융합’이 강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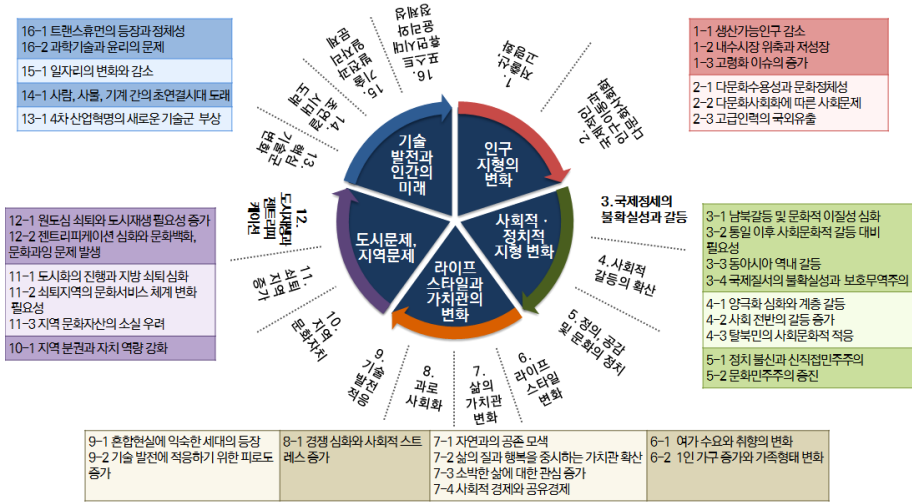
4. 환경 분석을 통한 이슈 도출 및 델파이조사 결과

□ 이슈의 도출과 범주화

-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및 기술 환경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도출하고 전문가 자문 및 FGI를 거쳐 선별한 결과, 총 16개 이슈에 35개 세부 이슈가 도출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각 이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 지형의 변화’,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라는 5개 범주로 묶고, 각 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을 도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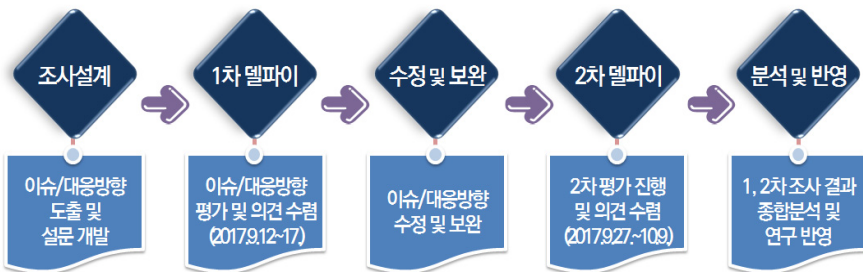
[그림 6] 거시환경 이슈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및 범주화



[그림 7] 거시환경 분석에 의한 1차 도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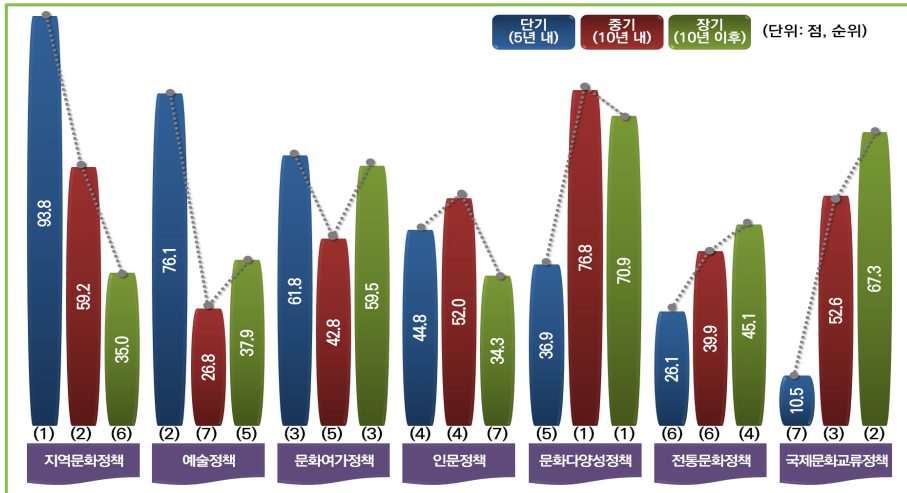
□ 이슈의 영향력 및 대응방향 평가

○ 일차 도출된 이슈 및 대응방향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조사(1, 2차 모두 응답한 참여자 수 n=51)를 시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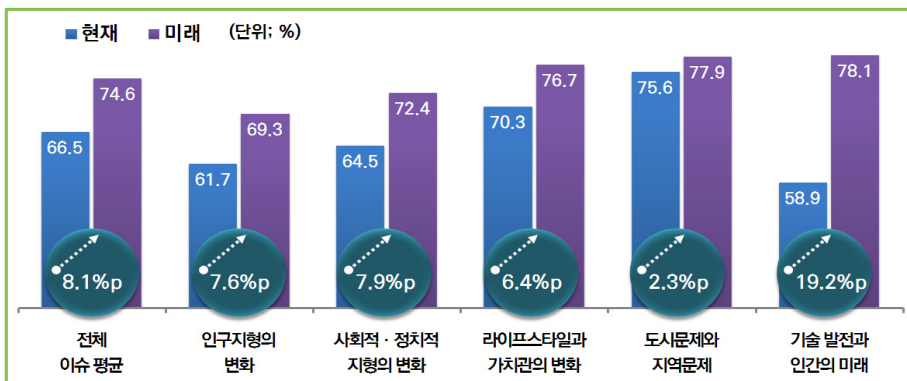
[그림 8] 전문가 델파이조사 과정 및 내용

○ 이슈와 대응방향 평가에 앞서 현행 문화정책 분야별로 향후 중요도 변화 전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지역문화 정책과 예술정책의 중요도가, 중장기적으로는 문화다양성정책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전망되었음.



[그림 9] 문화정책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전망(2차 조사)

○ 각 이슈가 현재 및 미래의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 결과, 5개 범주별 영향력은 단기적으로 ‘도시문제와 지역문제’가, 중장기적으로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평가되었음.



[그림 10] 이슈 범주별 현재 및 미래 영향력 비교(2차 조사)

□ 핵심 이슈와 대응방향 분석 결과

○ 이슈별 영향력과 대응방향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대한 전문가 평

가 결과를 중요도성취도분석(IPA)과 편익구조분석(BSA)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24개 이슈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대응방향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석에서는 편차가 나타났음(〈표 1〉 참조).

- 현재(단기)와 미래(중장기) 영향력이 모든 큰 이슈 16개, 현재 영향력만 큰 이슈 4개, 미래 영향력만 큰 이슈 4개



[그림 11] 이슈 영향력에 대한 해석

〈표 1〉 핵심 이슈별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범주	영향력	순위	이슈	대응방향	중요도	시급성
인구지형의 변화	현재 ▲ 미래 ▲	8	고령화 이슈 증가	예술통계 및 노인문화프로그램 등 건강한 노년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	▲
	현재 ▲ 미래 ▲	14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다문화수용성 증진	▲	▲
	현재 ▲ 미래 ▲	17	다문화 수용성과 문화정체성			
	현재 ▲ 미래 ▼	19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문화분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장기 침체에 따른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문화적 접근 모색	▲	▼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현재 ▲ 미래 ▲	5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공존·협력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	▲
	현재 ▲ 미래 ▲	7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문화분야 중·저소득 직업 및 삶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제도 개선	▲	▲
	현재 ▲ 미래 ▲	12	문화민주주의 증진	문화기본권 및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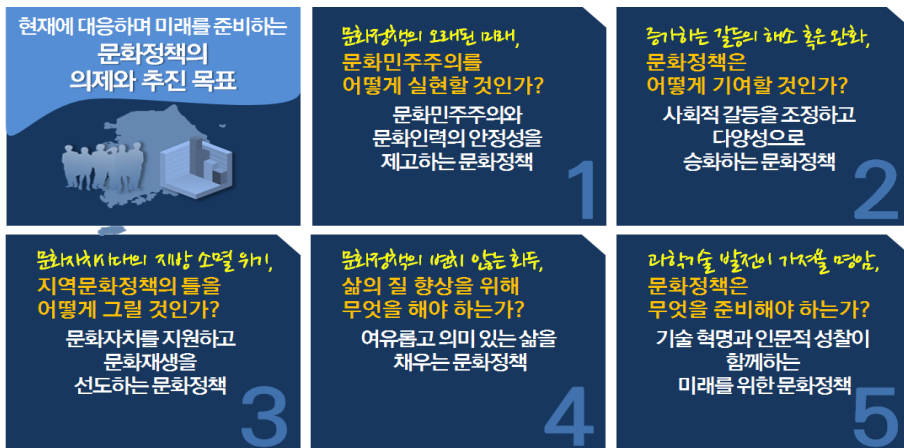
범주	영향력	순위	이슈	대응방향	중요도	시급성
	현재▲ 미래▽	20	정치 불신과 신작집민주주의	문화행정의 권료주의 점검 및 개선 모색 신작집민주주의에 대응한 문화유리 장립	▲ ▽	▲ ▲
	현재▽ 미래▲	24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	남북한(재외동포 포함) 문화 이해 등 통일 대비 문화정책 강화	▽	▽
리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현재▲ 미래▲	1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생애 주기와 세분화된 취향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 정책 강화	▲	▲
	현재▲ 미래▲	2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일상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 제공	▲	▲
	현재▲ 미래▲	3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다양성 공존·생생의 가치 등을 포함한 자습 능 한 문화적 삶의 지표 설정	▲	▲
	현재▲ 미래▲	10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여시간 확보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	▲
	현재▲ 미래▼	18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세대 간 기술적응 격차 완화 및 세대 이해 계기 확대	▽	▽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현재▲ 미래▲	4	지역 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문화치료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문화체정의 확충과 효과적 운용 도시 및 지역 간 문화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 ▽	▲ ▲ ▽
	현재▲ 미래▲	6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	지방쇠퇴정밀현황파악및여취체제도입유류공간 활용 체계 마련	▲	▽
	현재▲ 미래▼	9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문화적 도시재생 도시문화의 재생 정책 수립 및 시행 공간 시설 중심에서 사람 활동 중심으로 재생사업 체계 변화	▲ ▲	▲ ▲
	현재▲ 미래▲	11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괴잉 문제 발생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자활성 및 자습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젠트리피케이션 모-타링 체계 구축 및 자산화 전략 지원	▲ ▽	▼ ▽
	현재▲ 미래▲	15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지역의 역사문화 전통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존 및 활용	▲	▼
	현재▲ 미래▲	16	쇠퇴지역의 문화 서비스체계 변화 필요성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와 공동문화서비스 체계 의 보완적 운영	▲	▲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현재▲ 미래▲	13	일지리의 변화와 감소	예술창작 및 문화기획 분야 인공지능 이용 교육 확대 새로운 기술문화에 대한 재교육 확대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기술 변화에 대응한 문화분야의 새로운 생산양식 및 일자리 창출	▽ ▽ ▲ ▲

범주	영향력	순위	이슈	대응방향	중요도	시급성
현재▽ 미래▲	21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	예술계의 기술 리터러시(literacy)와 과학기술계의 예술 리터러시 제고를 통한 융합 및 협업 촉진	일반 국민의 4차 산업혁명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	▲
			초연결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진흥 및 여흥연구 강화	협업 기반 창작 지원 및 플랫폼 사업 확대	▽	▽
현재▽ 미래▲	22	사람, 사물, 기계 간 초연결시대 도래	미래사회에 대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미래형적 인문정책 모색	가계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재정립	▲	▲
					▲	▲

*주: '▲'은 평균값 이상인 경우, '▼'은 평균값보다 낮지만 그 차이가 1점 미만인 경우, '▽'은 평균값보다 1점 이상 낮은 경우를 의미함.

5. 미래 대응을 위한 문화정책의 의제 및 과제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화정책의 흐름, 거시환경 분석, 델파이조사 결과 및 전문가 제언 등을 고려하여 2017년 현재부터 2030년이라는 미래 시점까지 향후 문화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를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각 의제에 따른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음([그림 12] 참조).



[그림 12] 현재에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정책의 의제와 목표

○ 각 의제에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이슈들이 모두 관련되나 상대적으로 ‘의제 1’은 단기적인 영향력이, ‘의제 2’부터 ‘의제 4’까지는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의제 5’는 중장기적인 영향력이 큰 이슈들이 포함됨(〈표 2〉 참조).

〈표 2〉 미래 문화정책을 위한 의제와 과제

구분	내용	관련 이슈(영향력)
의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정책의 오래된 미래, 문화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인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불신과 신직접민주주의(현재)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현재) 문화민주주의 증진(현재~미래)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민주주의와 문화권 신장을 위한 기반 강화 문화재정의 확충과 안정적 운용 문화인력의 안정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인력의 일자리 및 삶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문화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의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가하는 갈등의 해소 혹은 완화, 문화정책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현재~미래)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현재~미래) 고령화 이슈 증가(현재~미래)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현재~미래) 다문화 수용성과 문화정책성(현재~미래)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미래)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성으로 승화하는 문화정책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존·상생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및 삶의 지표 설정 문화다양성의 제고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다문화수용성 증진 공존과 상생을 위한 문화다양성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한 대응력 강화 	
의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자치시대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문화정책 틀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현재) 지역 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현재~미래) 도시협의진행과 지방 소멸 심화(현재~미래)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코잉 문제 발생(현재~미래)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현재~미래) 지역문화자산의 소실 우려(현재~미래)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자치를 지원하고 지역재생을 선도하는 문화정책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마련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자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지역의 문화생태계 진단 및 역량 강화 모색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자활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와 공공문화서비스의 연계 운영 사람과 활동 중심의 문화적 도시재생 및 도시문화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사업 체계를 공간·시설에서 사람·활동 중심으로 전환 도시 ‘문화의 재생’ 정책 추진 및 사업 체계·지표 전환 지방쇠퇴 진단과 스마트 축소 재생 전략 도입을 위한 정책 협력 역사·전통문화자산의 체계적 발굴·보존 및 지역학 진흥 	

구분	내용	관련 이슈(영향력)
의제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정책의 변치 않는 화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란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현재)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채우는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현재~미래)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여가시간 확보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생애주기·취향을 고려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강화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현재~미래)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현재~미래)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현재~미래)
의제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명암 문화정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혁명과 인문적 성찰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현재~미래)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사회의 인류를 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 정립 기술 변화에 조응한 협업 기반 및 새로운 생산양식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기반 플랫폼 사업 확대 기술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문화 분야 생산양식 및 일거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고유의 창의성’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정립 • 문화예술-과학기술 간 리더러시 제고와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군 부상(미래) 사람 시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미래)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미래)

6. 2030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 제언

- 본 연구의 결과, 도출된 의제와 과제는 기존 문화정책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이슈가 정책의 경계와 상관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특정한 정책 영역만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반영하며, 실제로 산업, 경제, 복지, 도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정책 분야가 관련 과제에 통합적으로 협력을 모색하도록 계획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정책 영역에만 집중하거나 다양한 정책 협력에서 주변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점

에서 문화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다양하게 전개되는 갈등의 양상을 포착하여 문화적 다양성으로 승화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회적·문화적 갈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영역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함.
- 둘째, 소극적 문화도시 정책에서 적극적인 문화재생 정책으로 전환하고, 도시개발이 가져올 악순환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론적 수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의 개선 및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셋째, 미래 사회가 가져올 인간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철학의 정립을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모색해야 함.
- 이와 같은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에 다가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정책 연구에서는 현안 대응을 위한 연구와 함께 트렌드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연구, 이슈를 포착하여 추적하는 연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조화시킴으로써 시의성과 적절성을 지닌 정책 제시를 위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의 방법 및 과정	10
제2장 문화정책,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15
제1절 국내 문화정책의 변화	17
1. 국내 문화정책 분석 개요	17
2. 각 정부 시기 문화정책의 특징	18
3. 각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 분석	27
제2절 국제사회 문화의제의 변화	30
1. 국제사회 문화의제 분석 개요	30
2. 유네스코가 이끈 국제사회 문화의제의 흐름	31
3. SDGs 체제로 전환기의 국제사회 문화의제	34
4. ‘Post-2015’ 시대의 국제사회 문화의제	42
5. 국제사회 문화의제의 변화 분석	46
제3절 소결: 국내외 문화정책의 흐름	49
제3장 문화정책 환경,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55
제1절 정치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이슈	57
1. 정치 환경의 변화 및 전망	57
2. 문화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이슈	61
제2절 경제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이슈	66
1. 경제 환경의 변화 및 전망	66
2. 문화정책을 둘러싼 경제적 이슈	69
제3절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이슈	77

1.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및 전망	77
2. 문화정책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이슈	79
제4절 기술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이슈	98
1. 기술 환경의 변화 및 전망	98
2. 문화정책을 둘러싼 기술적 이슈	101
제5절 소결: 이슈의 범주화 및 대응방향 도출	113
1. 인구지형의 변화	113
2.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115
3.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117
4.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119
5.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120
제4장 미래 문화정책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123
제1절 델파이조사 개요	125
1. 조사 개요	125
2. 조사 내용 및 방법	126
제2절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129
1. 문화정책 분야별 중요도 변화 전망	129
2.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평가	134
3.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평가	140
4.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평가	147
5.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평가	153
6.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평가	160
7. 정책 및 중장기 의제 제언	165
제3절 소결: 핵심 이슈 및 대응방향 선정	173
1. 문화정책의 핵심 이슈 선정	173
2. 문화정책의 핵심 이슈별 대응방향 분석	176
제5장 문화정책, 무엇을 해야 하는가?	181
제1절 현재가 미래 문화정책에 던지는 의제	183

1. 문화정책을 둘러싼 환경 전망	183
2. 미래 대응을 위한 문화정책의 의제 및 목표	189
제2절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인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문화정책	195
1. 문화민주주의와 문화권 신장을 위한 기반 강화	195
2. 문화재정의 확충과 효과적 운용	197
3. 문화인력의 안정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199
제3절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성으로 승화하는 문화정책	203
1. 공존·상생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및 삶의 지표 설정 ..	203
2. 문화다양성의 제고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205
3.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한 대응력 강화	209
제4절 문화자치를 지원하고 지역재생을 선도하는 문화정책	211
1.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마련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원	211
2.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자활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216
3.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와 공공문화서비스의 연계 운영 ..	217
4. 사람과 활동 중심의 문화적 도시재생 및 도시문화 재생 ..	219
5. 역사·전통문화자산의 체계적 발굴·보존 및 지역학 진흥 ..	224
제5절 여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채우는 문화정책	226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 강화	226
2. 생애주기·취향을 고려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강화 ..	229
3.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확충	230
제6절 기술혁명과 인문적 성찰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 ..	233
1. 미래사회의 인류를 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 정립 ..	233
2. 기술 변화에 조응한 협업 기반 및 새로운 생산양식 창출 ..	234
3. ‘인간 고유의 창의성’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정립	237
4. 문화예술-과학기술 간 리터러시 제고와 생태계 조성	238
제6장 결 론	241
제1절 2030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역할	243
1. 연구의 내용과 결과	243

CONTENTS

2. 문화정책의 방향과 역할	246
제2절 미래 정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제언	248
참고문헌	250
ABSTRACT	257
부록 전문가 델파이 조사양식	261

표 목차

〈표 2-1〉 역대 정부의 국정목표 및 과제 개요 18

〈표 2-1〉 역대 정부의 국정목표 및 과제 개요 18

〈표 2-2〉 노무현정부 문화 관련 국정과제 및 문화계획의 내용 20

〈표 2-3〉 이명박정부 문화 관련 국정과제 및 문화계획의 내용 22

〈표 2-4〉 박근혜정부 문화 관련 국정과제 및 문화계획의 내용 24

〈표 2-5〉 문재인정부 문화 관련 국정과제 26

〈표 2-6〉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 후속 실행계획의 5대 목표 32

〈표 2-7〉 SDGs 이전 시기 국제사회 문화의제 관련 동향 33

〈표 2-8〉 IFACCA 세계문화예술정상회의 의제 35

〈표 2-9〉 ASEM 문화장관회의 의제 36

〈표 2-10〉 아시아문화포럼 의제 37

〈표 2-11〉 세계도시문화포럼 총회 의제 39

〈표 2-12〉 SDGs 체제 준비를 위한 문화 분야 주요 회의 개요 40

〈표 2-13〉 SDGs 체제 준비를 위한 문화 분야 주요 회의의 주제 41

〈표 2-14〉 SDGs의 문화의제 관련 내용 42

〈표 2-15〉 유네스코 「문화정책의 재구성」의 4대 실행 목표 43

〈표 2-16〉 세계지방정부연합 「문화 21 실천」의 9대 책무 44

〈표 2-17〉 EU 「국제 문화관계 전략」의 행동 원칙과 전략 45

〈표 2-18〉 SDGs 전후 국제사회 문화의제 종합 47

〈표 2-19〉 국내외 문화정책의 흐름 비교 51

〈표 3-1〉 주요 미래 보고서의 국내외 정치 환경 이슈 60

〈표 3-2〉 사회문화 분야 남북교류협력 승인 현황 62

〈표 3-3〉 국내 공유경제 기업 사례 76

〈표 3-4〉 선행연구의 축소도시계획을 위한 전략 및 과제 95

〈표 3-5〉 가트너가 선정한 전략기술 변화(2013~2017) 102

〈표 3-6〉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선정 향후 10년을 이끌 기술 ... 103

〈표 3-7〉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저서들에서 도출한 핵심 기술군 104

〈표 3-8〉 4차 산업혁명에 의한 2015~2020년 고용 증감규모 추정 109

〈표 3-9〉 ‘인구지형의 변화’ 범주의 이슈 및 대응방향 114

〈표 3-10〉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범주의 이슈 및 대응방향 116

CONTENTS

〈표 3-11〉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범주의 이슈 및 대응방향	118
〈표 3-12〉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범주의 이슈 및 대응방향	120
〈표 3-13〉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범주의 이슈 및 대응방향	122
〈표 4-1〉 전문가 델파이조사 내용	126
〈표 4-2〉 문화정책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 전망	129
〈표 4-3〉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문화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132
〈표 4-4〉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의 현재 영향력	135
〈표 4-5〉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의 미래 영향력	135
〈표 4-6〉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138
〈표 4-7〉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시급성	139
〈표 4-8〉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의 현재 영향력	141
〈표 4-9〉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의 미래 영향력	141
〈표 4-10〉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144
〈표 4-11〉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시급성	145
〈표 4-12〉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의 현재 영향력	147
〈표 4-13〉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의 미래 영향력	148
〈표 4-14〉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150
〈표 4-15〉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시급성	152
〈표 4-16〉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의 현재 영향력	154
〈표 4-17〉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의 미래 영향력	154
〈표 4-18〉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157
〈표 4-19〉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대응방향의 시급성	158
〈표 4-20〉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의 현재 영향력	160
〈표 4-21〉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의 미래 영향력	161
〈표 4-22〉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163
〈표 4-23〉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대응방향의 시급성	164
〈표 4-24〉 전문가 델파이조사의 정책 제언(1차 조사)	166
〈표 4-25〉 전문가의 중장기 문화정책 의제 및 과제 제안	169
〈표 4-26〉 영향력 평가로 본 문화정책의 핵심 이슈(2차 조사)	175
〈표 4-27〉 핵심 이슈별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178
〈표 5-1〉 「미래문화전략 2030」의 주요 내용	184
〈표 5-2〉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의 주요 내용 ..	185
〈표 6-1〉 미래 문화정책을 위한 의제와 과제	24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그림 1-2] 연구의 범위와 내용 9

[그림 1-3] 미래예측 연구를 위한 종합적 접근 방법 10

[그림 1-4] 연구 개념도 10

[그림 1-5] 연구의 방법과 과정 13

[그림 2-1] 노무현정부 국정과제와 문화계획 워드클라우드 분석 19

[그림 2-2] 이명박정부 국정과제와 문화계획 워드클라우드 분석 21

[그림 2-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와 문화계획 워드클라우드 분석 24

[그림 2-4] 문재인정부 문화 관련 국정과제 워드클라우드 분석 27

[그림 2-5] 각 정부 문화정책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28

[그림 2-6] 국제사회 문화 관계 회의 및 계획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46

[그림 3-1]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61

[그림 3-2] 청소년의 선거 투표율 64

[그림 3-3] 연도별 경상수지 추이 67

[그림 3-4]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추이 68

[그림 3-5]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 68

[그림 3-6]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 69

[그림 3-7] 우리나라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변화 추이 70

[그림 3-8] 소비양극화 지수 71

[그림 3-9] 보호무역주의 조치 현황 72

[그림 3-10] 사회적경제의 조직 유형 75

[그림 3-11]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변화(2015~2035) 78

[그림 3-12] 합계 출산율 및 첫 자녀 출산 연령 80

[그림 3-13] 인구피라미드 변화 81

[그림 3-14]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81

[그림 3-15]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 추계 82

[그림 3-16] 인구 오너스(onus)기로의 이행 83

[그림 3-17] 외국인주민 수 추이 83

[그림 3-18] 주요 국가의 다문화수용성 비교 85

[그림 3-19] 혼인·이혼 건수 및 초혼연령 86

CONTENTS

[그림 3-20] 1인 가구 비율과 평균 가구원 수	87
[그림 3-21] 1인 가구 증가 이유에 대한 국민 인식	87
[그림 3-22] 19세 이상 국민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89
[그림 3-23] 한국과 OECD의 일과 삶의 균형 비교	92
[그림 3-24] 세계 도시인구 분포 변화 전망	93
[그림 3-25]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위상	99
[그림 3-26] 문화적 측면에서 본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군	105
[그림 3-27] 제4차 산업혁명의 다각적 국면들	108
[그림 3-28] 거시환경 이슈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및 범주화	113
[그림 4-1] 전문가 델파이조사 과정 및 내용	125
[그림 4-2]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방법	127
[그림 4-3] 이슈 영향력에 대한 해석	128
[그림 4-4] 문화정책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전망(2차 조사)	131
[그림 4-5]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영향력 비교(2차 조사)	136
[그림 4-6]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영향력 분석(2차 조사)	136
[그림 4-7]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140
[그림 4-8]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영향력 비교(2차 조사)	142
[그림 4-9]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영향력 분석(2차 조사)	143
[그림 4-10]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146
[그림 4-11]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영향력 비교(2차 조사)	149
[그림 4-12]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영향력 분석(2차 조사)	149
[그림 4-13]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 분석 (2차 조사)	153
[그림 4-14]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영향력 비교(2차 조사)	155
[그림 4-15]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영향력 분석(2차 조사)	156
[그림 4-16]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159
[그림 4-17]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영향력 비교(2차 조사)	161
[그림 4-18]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영향력 분석(2차 조사)	162
[그림 4-19]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165
[그림 4-20] 이슈 범주별 현재 및 미래 영향력 비교(2차 조사)	173
[그림 5-1] 현재에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정책의 의제와 목표	189
[그림 5-2]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인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문화정책’ 개요	195

[그림 5-3]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성으로 승화하는 문화정책’ 개요 · 203
[그림 5-4] ‘문화자치를 지원하고 지역재생을 선도하는 문화정책’ 개요 ···· 211
[그림 5-5] ‘여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채우는 문화정책’ 개요 ·········· 226
[그림 5-6] ‘기술혁명과 인문적 성찰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 개요 · 233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필요성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책 환경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인간의 창조적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미래예측은 “예비적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변화의 동인과 지식의 출처는 모으는 작업”(권기현, 2008: iv)이며, “가능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체계적으로 탐구, 창조, 검증하는 것이다.”(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2007: 11). 이를 통해서 미래의 변화에 대한 단서를 찾고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다.

정책 연구에서도 미래예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미래예측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역사, 특정 사회를 둘러싼 환경 등이 의제의 형성이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등을 통해서 짧게는 몇 년 후, 길게는 수십 년 후에 맞이할 상황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연속성을 관리하고 선택 가능한 대안의 모색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여한다(노화준, 2007; 권기현, 2008).

이와 같이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때문에 각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정책에서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의제 및 정책 개발을 위한 대응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정책 연구에서 미래예측이나 관련 연구는 지속성과 주기성을 갖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나. 미래사회가 문화정책에 던지는 의제 발굴 필요성

오늘날 거시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 문화정책의 내외부적인 환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화정책 연구는 단기적인 현안 대응에 집중된 경향이 강했고, 그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데 미흡하였다(정광렬, 2011). 이러한 한계는 현재진행형이다. 종종 중장기 문화정책의 방향이나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문화정책의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 미래 문화정책 연구는 김향자 외(2006)와 정광렬(2011)의 연구에 국한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 연구가 정치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종다양한 문화 관계 법률이 요구하는 계획의 수립이나 개별 정책사업 발굴 또는 개선을 위한 연구에 집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는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정보 수집과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한다.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는 한편, 태동 또는 성장 단계의 이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2007). 국제사회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별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 한 예로, 유엔(UN)은 인간, 지구 및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으로서 2030년을 목표로 한 2030 의제(UN, 2015)를 설정하고,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하였다. 각국도 이러한 국제의제나 자국 상황을 반영한 정책 의제를 통해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도 각 분야에서 국제의제나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 정책 의제를 발굴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문화정책에서도 정책 환경 변화와 이슈에 대한 점검과 추적을 통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향후 문화정책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지, 어떠한 전망 하에서 미래

전략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 미래 정책 환경을 고려한 문화정책 구조 전환 대비 필요성

국제사회는 문화를 지속가능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경향이
 며, 이런 경향에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라는 핵심 원칙 및 지속가
 능발전목표(SDGs)의 기본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제와 약속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그러한 도전에 대한 통합적인 해결책과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유네스코(UNESCO)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이하 ‘문화다양성협약’) 기념리포트인 「문화정책의 재구성
 (Reshaping Cultural Policies)」(UNESCO, 2015)에서 문화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과 통합하는 경향이 확대됨을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 발전은 산업구
 조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간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에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 KISTEP
 · KAIST, 2015, 20; KAIST 미래전략대학원 2014 & 2015; KAIST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2016; 서울대학교, 2017).

문화정책과 타 정책의 통합 경향이 확대되고 다른 어느 때보다 과학기
 술 발전이 인간 삶의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은 문화
 정책에 구조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한 변화에 직면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문화정책의 미래 대응력을
 확보를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미래 문화정책 연구
 는 다가올 미래의 기회와 위협을 예측함으로써 중장기 의제 개발이나 정
 책의 개발 및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가늠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목적

불확실성이 전제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과거나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 문화정책과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현재 및 중장기적으로 문화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슈를 발굴하고자 한다. 관련 이슈의 파악과 분석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기초가 되지만, 지금까지 문화정책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이 취약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거시환경 분석에서 도출된 이슈와 해당 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을 선별하여 문화정책이 지속성을 가지고 고려해야 할 의제와 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안된 의제와 과제는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위한 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회와 위협의 요소들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가 포함된”(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2007: 113-114) 정책 결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시공간적 범위

미래 문화정책은 미래의 한 시점을 시간적 범위로 하지만, 빠르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너무 장기적인 전망은 실효성 있는 의제 발굴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현재 기준으로 2030년까지를 미래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미래 시점이 평균 13.1년 후라는 조사 결과(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2013)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국제 문화 의제들이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성에서 추진되고 있기에 국제사회의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 미래 문화정책 연구들이 2020년(정광렬, 2011)이나 2030년(김향자 외, 2006)을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연구 당시와 현재 시점에서의 환경 변화를 비교하여 미래 문화정책을 전망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되,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제사회의 문화의제와 우리의 문화정책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미래가 과거~현재라는 시간적 흐름의 연장선에 위치하고, 미래예측에서 과거와 현재의 상황 및 환경 변화, 그와 같은 변화의 요인 및 지속되는 트렌드, 제기되는 문제 등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2007). 즉, 역대 문화의제의 내용이나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도출된 이슈들과 비교 검토하는 것은 미래 문화정책의 예측에서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를 위한 기존 의제나 정책에 대한 검토는 위에서 설정한 시간적 범위에 대응하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하였다.

한편, 공간적으로는 국내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다만, 문화정책이 여타 분야 및 국내외의 정책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거시환경 분석과 문화의제 분석에서는 국내외를 망라하여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나. 내용적 범위

기존에 이루어진 미래 문화정책 연구(김향자, 2006; 정광렬, 2011)에서는 문화, 체육, 관광, 콘텐츠산업 등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의 전 영역을 포괄하였다. 그 이유는 문화라는 용어가 매우 광의적으로 해석되고, 각 영역과 관련한 정책이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문화정책을 광의적으로 이해하면서도 다시 각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각 정책 영역이 처한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도 나타났다.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에 대한 고전적 정의와 유네스코의 정의를 기반으로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정의한다. 또한 문화정책 분야를 ‘문화유산·전통문화’, ‘국어’,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자원’, ‘문화복지’, ‘여가문화’, ‘문화경관’, ‘국제 문화 교류·협력’, ‘지역문화’, ‘남북 문화 교류’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부서들의 업무 구분과 다르지 않은데, 2017년 7월 기준으로 현행 업무는 문화여가, 지역문화, 전통문화, 국어, 예술, 국제문화, 인문정신문화로 나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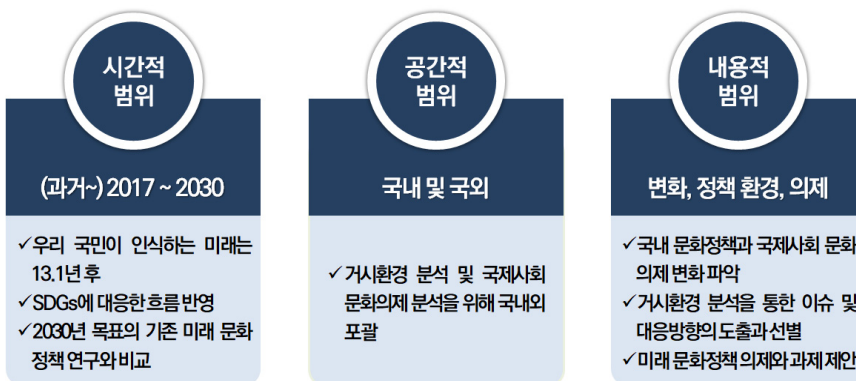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제 분야를 포괄하여 문화정책의 범주를 설정하기보다 「문화기본법」에 의한 정책 분야 및 업무를 고려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정책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문화정책의 범주를 제한하고, 다음처럼 세 가지 질문 하에 연구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문화정책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문화정책과 국제사회 문화의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제기된 이슈나 의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문화정책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문화정책은 다양한 내외부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변화해 왔다. 따라서 문화정책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환경 등에 대한 분석은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셋째, 문화정책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환경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각 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을 일차 도출한 후 전문가 델파이(delphi)를 거쳐 선별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문화정책이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들을 도출하고 그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도출된 의제들은 ‘문화민주주의의 실현’, ‘증가하는 갈등의 해소 혹은 완화’, ‘문화자치시대의 지방소멸’, ‘삶의 질 향상’, ‘과학기술 발전의 명암’이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그림 1-2] 연구의 범위와 내용

2. 연구의 방법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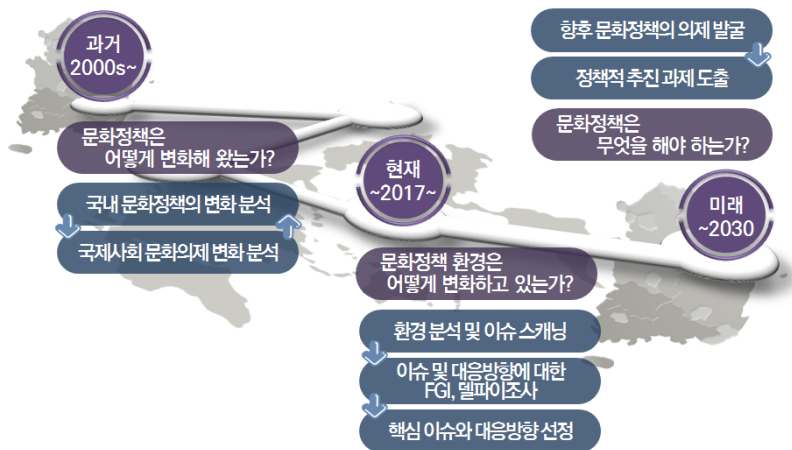
미래예측에서는 합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중시된다. 이를 위해서 환경 분석 등을 통한 이슈 확인을 거쳐 해당 이슈의 전개 양상에 관한 통계 분석이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정책 델파이, 시나리오 분석 등을 진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측된 미래 상황을 우선순위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다(권기현, 2008: 120).



*자료: 권기현(2008: 120).

[그림 1-3] 미래예측 연구를 위한 종합적 접근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래 문화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미래예측 방법론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아래에 기술한 것처럼 우선, 국내 및 국제사회의 문화정책 흐름과 관련 이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분석과 델파이조사 등을 통해 핵심 이슈와 대응방향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문화정책에서 주요하게 논의해야 할 정책적 의제와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그림 1-4] 연구 개념도

가. 국내외 문화정책의 흐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래 문화정책 모색을 위하여 우선, 문헌연구 등을 통해서 국내외 문화정책 흐름을 검토하고 관련 이슈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경우, 노무현정부부터 현 문재인정부까지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및 주요 문화계획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노무현정부까지로 한정된 것은 시간적 범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이유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경우에는 특정 국가를 사례 연구하기보다 유네스코 및 주요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문화의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의제들은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현행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전환되는 과정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나. 거시환경 분석을 통한 이슈 스캐닝

일반적으로 미래예측의 첫 단계는 미래에 나타날, 혹은 현재에 나타나서 미래까지 지속될 문제 중 어떤 것을 정책적으로 선택하여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정책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제기되거나 제기될 문제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거시환경 변화와 그 요인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노화준, 2007; 권기현, 2008; 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2007). 이는 미래 문화정책을 위한 이슈 도출과 선별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책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등의 거시환경을 분석하고,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이슈스캐닝을 진행하였다. 거시환경 분석과 이슈 스캐닝은 최근 시점에서 환경 분석에 필요한 각 분야의 통계자료, 미래예측 연구 및 미래정책 연구보고서 등의 관련 문헌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정책포럼과 학술회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문화 의제나 정책 이슈를 파악하여 반영하였다.

다. 이슈 점검 및 선별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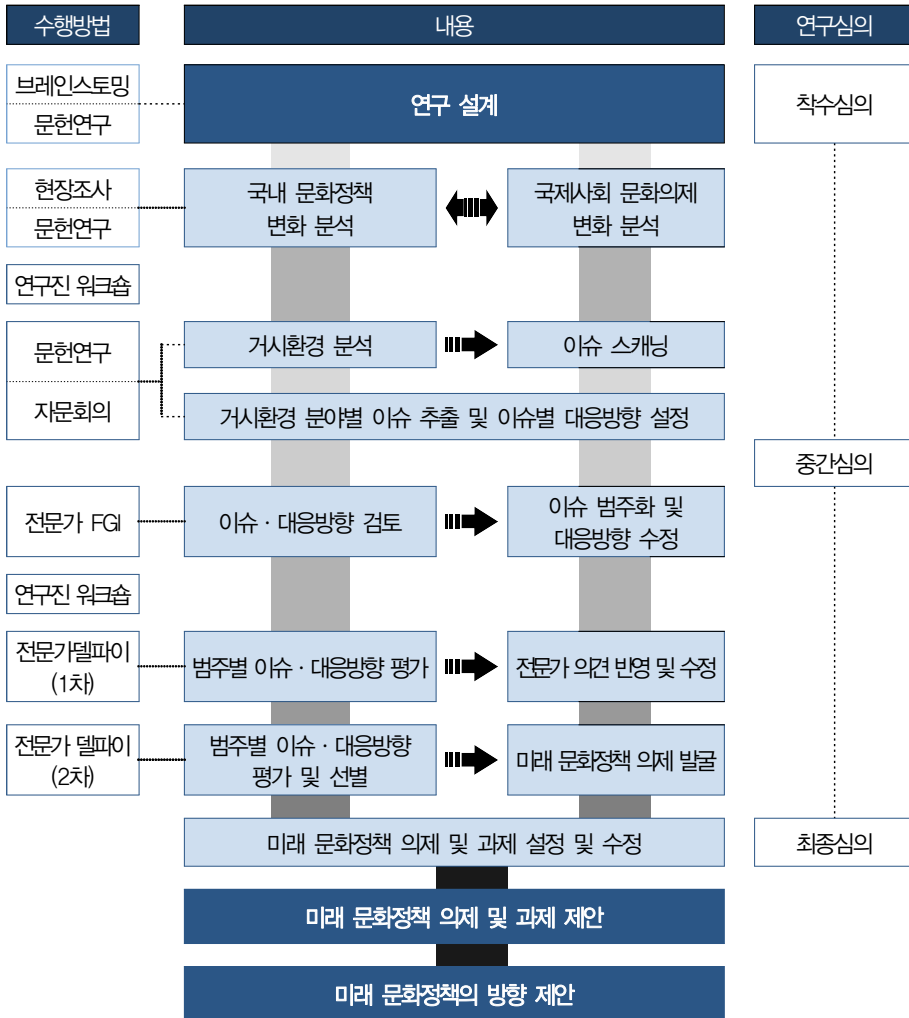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및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분야 전문가 대상의 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시행(3회)하여 환경 분석과 이슈 스캐닝을 통해서 추출한 이슈 및 이슈별 대응방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각 이슈를 범주화하는 한편, 대응방향을 수정하였다.

범주화된 이슈와 이슈별 대응방향 평가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델파이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델파이는 익명성에 의거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feedback)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일치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대중적인 의견을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함으로써 미래예측을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된다(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2007: 150). 본 연구에서는 2회의 델파이조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n=57)에서는 각 이슈가 현재와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이슈별 대응방향을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평가하였고, 이슈와 대응방향을 수정 등을 위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2차 조사에는 1차 응답자 중 51명의 전문가가 최종 응답하였다.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점수화하여 전문가들에게 피드백하고 이를 조정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라. 조사 결과 분석 및 문화정책의 의제 도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문화정책의 이슈와 이슈별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에 대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 전 중요도와 이용 후 만족도(또는 성취도)를 측정하여 개선 순위 설정이나 전략 모색에 사용되는 중요도성취도분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IPA)과 편익구조분석(Benefit Structure Analysis: BS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써 주요 이슈와 대응방향을 선별하는 한편, 이를 통해서 향후 문화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의제를 중심으로 대응과제를 설정하였다. 의제 및 과제의 도출에서는 델파이조사에서 수렴된 정책 제안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현재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림 1-5] 연구의 방법과 과정

제2장 ●●

문화정책,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제1절

국내 문화정책의 변화

1. 국내 문화정책 분석 개요

이 절에서는 역대 정부의 문화 관련 국정과제 및 국정과제와 연동하여 수립된 문화계획을 활용하여 시기별 문화정책의 흐름과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해당 국정과제와 계획의 내용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시기는 앞서 설정한 시간적 범위에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출범한 노무현정부부터 현 문재인정부까지로 한정하였다.

분석에 앞서 역대 정부의 정책기조를 보면(〈표 2-1〉 참조), 노무현정부에서는 ‘민주주의’, ‘복지’, ‘삶의 질’, ‘균형 발전’ 등을 강조하며 ‘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②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③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3대 국정목표 하에 4대 전략 100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에 비해서 이명박정부에서는 ‘시장경제’, ‘복지’, ‘세계화’ 등을 강조하며 ‘① 섬기는 정부’, ‘② 활기찬 시장경제’, ‘③ 능동적 복지’, ‘④ 인재대국’, ‘⑤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5대 국정지표 하에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이전 정부의 ‘균형 발전’과 같은 기조는 각 과제를 통해서 반영되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경제’, ‘행복’, ‘평화통일’ 등과 함께 ‘문화융성’을 강조하며 ‘① 경제부흥’, ‘② 국민행복’, ‘③ 문화융성’, ‘④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 하에 14대 전략 140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타 정부와 달리 ‘문화’가 국정의 주요 축으로 다루어졌다. 현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민주권’, ‘민주주의’, ‘삶의 질’,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을 강조하며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 하에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 하에 설정된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는 총 440개 과제에 달한다. 그중 각 정부 국정과제에서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이 주무 또는 협업 부처로 설정된 과제,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고려한 유관 과제를 검토한 결과, 총 106개 과제가 추출되었다. 이들 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 환경 및 국제사회 문화의제와 비교하여 우리의 문화정책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 역대 정부의 국정목표 및 과제 개요

구분	노무현 정부 (2003~2008)	이명박 정부 (2008~2013)	박근혜 정부 (2013~2017)	문재인 정부 (2017~현재)
국정목표 (국정기조)	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②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③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① 섬기는 정부 ② 활기찬 시장경제 ③ 능동적 복지 ④ 인재대국 ⑤ 성숙한 세계국가	① 경제부흥 ② 국민행복 ③ 문화융성 ④ 평화통일 기반 구축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과제	4대 전략 100대 과제	20대 전략 100대 과제	14대 전략 140대 과제	20대 전략 100대 과제
문화 관련 과제	12개 과제	25개 과제	42개 과제	27개 과제

*자료: 역대 정부 국정과제 계획 참조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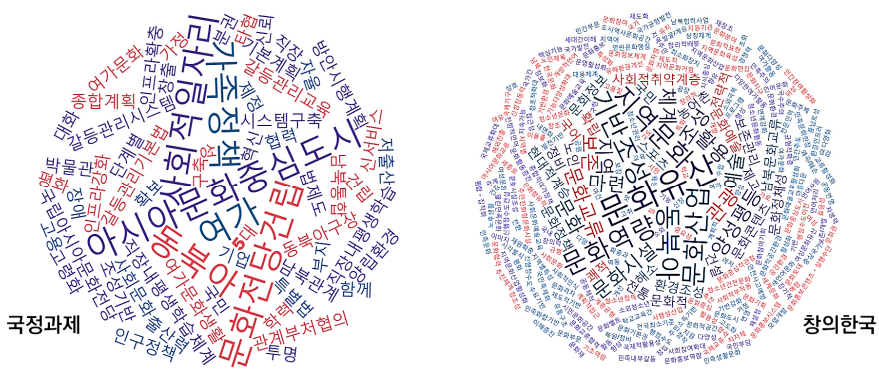
2. 각 정부 시기 문화정책의 특징

가. 노무현정부의 문화정책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정부는 3대 국정목표(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②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③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와 4대 국정원리(① 원칙과 신뢰, ② 공정과 투명, ③ 대화와 타협, ④ 분권과 자율)을 설정하였다. 또한 그 실현을 위하여 12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적으로 100대 로드맵 과제를 추진하였다. 그중 문화부처가 주무 부처이거나 문화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과제는 12개가 추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표 2-2〉 참조), 분권과 균형 발전이 이슈가 되며 지역 및 지역문화 관련 세부 과제가 다수 확인된다. 관련 과제를 워드클라우드 분석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아시아문화, 역사 문화, 전통문화, 영상문화 등을 주제로 한 문화도시 조성 정책과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3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공공갈등예방’, ‘동북아’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 그리고 ‘가족’, ‘여가’ 등의 키워드가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정부 시기에 국정과제와 연동하여 수립된 「창의한국」(문화관광부, 2004)에서는 ‘개인’, ‘지역’, ‘국가’를 문화정책의 중심축으로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3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5대 기본방향(① 문화참여를 통한 문화역량 강화, ②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③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④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⑤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에 27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문화정책 관련 과제를 보면, 문화산업 발굴 및 육성과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을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 및 지역문화 발전 등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서 ‘문화유산’, ‘지역문화’, ‘문화산업’, ‘동북아’, ‘문화역량’, ‘문화시설’, ‘기반조성’, ‘문화교류’ 등의 키워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노무현정부 국정과제와 문화계획 워드클라우드 분석

〈표 2-2〉 노무현정부 문화 관련 국정과제 및 문화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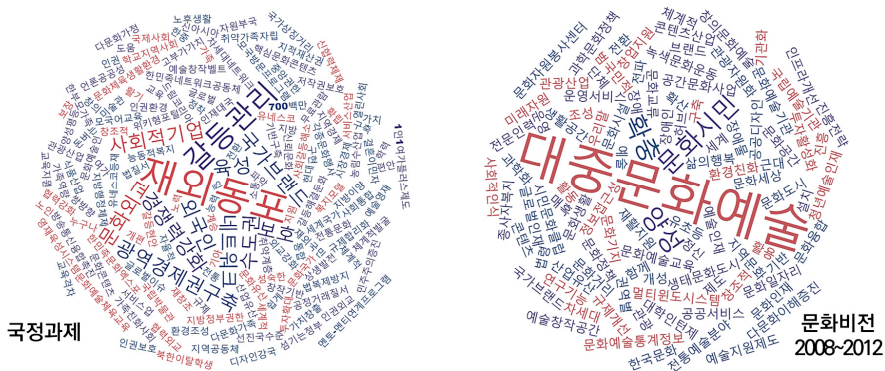
국정과제(관계 부처)	창의한국
04. 남북통합을 위한 국내 인프라 강화 방안 수립(외교, 통일, 국방)	01.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역량 강화
08.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외교, 문광)	03. 문화활동 증진과 여가문화의 질 향상
38.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지역 개발(문광)	05. 창의적인 청소년문화의 육성
53. 고령화 사회 대비 기본대책(복지, 여성)	06. 양성평등 문화 확립
54. 출산력 제고와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복지, 여성)	07. 문화적인 노후생활 보장
59. 교육·여가·문화 향상 주거환경 개선(복지, 문광)	08.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62. 갈등관리시스템 구축(국조실, 행자, 환경)	09. 새 언어문화의 형성
7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제고(노동, 복지)	10. 열린 민족문화로 다가서는 문화정책
74. 5대 차별시정 로드맵 추진(노동, 교육, 행자 등)	11.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90. 직장 내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여가 및 문화생활 혁신(노동, 문광, 농림, 환경)	12.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
99.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기반 추진(문광)	14. 문화산업의 고도화
1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문광)	17.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
	18.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
	19.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
	20.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보체계 구축
	21.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22. 농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23.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24.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향상
	25.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
	26.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27. 남북 문화교류 확대

*자료: 국정홍보처(2008) 및 문화관광부(2004) 참조 정리.

나. 이명박정부의 문화정책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5대 국정지표(① 섬기는 정부, ② 활기찬 시장경제, ③ 능동적 복지, ④ 인재대국, ⑤ 성숙한 세계국가)와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하였다. 그중 문화부처가 주무부처인 과제 및 문화정책 관련 과제는 25개가 추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표 2-3〉 참조),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 정부의 특성이 문화 관련 과제에도 나타났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과 국가브랜드 제고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이들 국정과제에 대한 워크클라우드 분석 결과, 증가하는 갈등에 대응한 ‘갈등관리’가 강조되는 한편, 문화외교, 재외국민 보호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가 추진됨에 따라서 ‘재외동포’, ‘국가브랜드’ 등의 키워드도 부각되었다. ‘광역경제권 구축’, ‘사회적기업’ 등의 키워드도 두드러졌다.



[그림 2-2] 이명박정부 국정과제와 문화계획 워드클라우드 분석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문화비전 2008~2012」이 국정과제와 연동되어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을 누리고 대외적으로 문화를 통해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초를 두었다. 이와 같은 기초에서 4대 정책 목표(① 문화가 펼쳐지는 나라, ② 콘텐츠로 부유한 나라, ③ 브랜드가 있는 관광의 나라, ④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를 설정하였고, 문화정책은 그중 ‘문화가 펼쳐지는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4대 목표를 위해 설정된 32대 중점과제의 내용을 보면, 콘텐츠산업 창업 지원,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설치·운영 활성화, 문화예술 산업화 등과 같이 문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전 시기보다 강조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중점과제로 설정되었다. 이 밖에 국가브랜드 제고 및 융합 연구기능 강화, 법령·제도 과학화, 문화통계의 정교화 등을 모색하고, 녹색문화운동 전개 등 환경친화적 문

화정책을 모색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접근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국가브랜드 제고 및 지속적인 한류 지원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이 핵심 키워드로 두드러졌고, ‘문화시민’ 등의 키워드도 부각되었다.

〈표 2-3〉 이명박정부 문화 관련 국정과제 및 문화계획의 내용

국정과제(관계 부처)	문화비전 2008~2012
06.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행안)	01. 미래 자원 문화인재
07.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겠습니다(행안)	02. 매혹적인 한국문화 전파
08.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겠습니다(재정, 국토, 지경, 행안, 총리실)	03. 창의적인 문화예술
11. 법질서가 엄밀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법무, 경찰, 교육, 행안, 방통위, 교과)	04. 대중문화예술의 체계적 진흥
13.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문화)	05. 개성 있는 문화공간 조성
14. 사회갈등 해소 및 소통에 힘쓰겠습니다(문화, 총리실)	06. 함께하는 문화생활
15.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장가뭄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공정위, 문화, 관세청)	07. 장애 없는 문화세상
30. 지방·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도록 규제를 줄이겠습니다(국토, 농식품)	08. 아름다운 문화시민
36.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농식품)	08. 아름다운 문화시민
37.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키우겠습니다(금융위, 지경, 문화, 교과, 복지)	09. 과학적인 문화정책
38. 방송통신융합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방통위, 지경, 행안, 문화, 국토)	10. 환경친화적 문화정책 추진
48.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복지)	11. 문화 일자리 만들기
49.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노동, 복지, 문화)	
60.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노동, 지경)	
65.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교과, 문화)	
67. 학력을 높이고 교육격차는 줄이겠습니다(교과)	
75. 체계적인 영재육성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교과, 문화)	
85. 신아시아 협력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외교, 문화)	
89. 인권외교와 문화외교에 힘쓰겠습니다(외교, 법무, 문화)	
90.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외교, 행안)	
96. 세계적인 국가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총리실, 지경, 문화, 국토, 재정)	
97.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문화)	
98.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문화)	
99.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법무, 노동, 경찰청, 행안)	
100.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을 이루겠습니다(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2008) 및 문화체육관광부(2008) 참조 정리.

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

박근혜정부는 4대 국정기조(① 경제부흥, ② 국민행복, ③ 문화융성, ④ 평화통일 기반구축) 하에 140개 국정과제를 계획하였다. 특히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의 등장으로 이전 시기보다 문화부처가 주무부처이거나 문화정책과 관련한 과제가 대폭 증가하여 총 42개 과제가 추출되었다. 이들 과제는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참여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등이 포함되었다. 그 내용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지식재산’, ‘창조경제’가 강조되는 한편, 다양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관련한 ‘기반조성’ 및 ‘기반구축’이 키워드로 부각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문화다양성’ 등 다문화사회화 관련한 키워드나 ‘사회적기업’, ‘생애주기’ 등 다양한 키워드가 부각되었다.

국정기조에서 문화융성을 강조한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 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계획을 수립하였다. 국정 1기에 수립된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문화가 있는 삶」에서는 생활문화, 지역문화가 강조되는 한편, 인문정신문화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국정 2기에 수립된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의 경우에는 국정 1기 문화계획을 계승하면서 전통문화가 전면적으로 부각되었고, 기존 ‘문화가 있는 날’ 관련 사업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박근혜정부 국정 1기와 2기 문화계획의 내용을 워드클라우드 분석한 결과, ‘전통문화’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부각되었고, 이어서 ‘문화가 있는 날’ 및 ‘지역문화’, ‘실버세대’,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문화창조융합벨트’, ‘생활속 문화’ 등의 키워드가 부각되었다. 이 밖에 ‘한국문화’와 ‘국가브랜드’ 등 문화 세계화 관련 키워드가 눈에 띈다. 그러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4)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문화계획에는 국정과제 및 이전 정부의 문화계획에서 부각되던 문화다양성이나 갈등 증가와 관련한 키워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림 2-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와 문화계획 워드클라우드 분석

<표 2-4> 박근혜정부 문화 관련 국정과제 및 문화계획의 내용

국정과제(관계 부처)	문화융성시대를 열다-문화가 있는 삶
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1. 문화융성을 이끌 '인문가치'정립
5.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2. 전통문화의 생활화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3. 생활속 문화 확산
12.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4.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5. 예술계 자율적 창작생태계 조성
18. 자율과 창의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6. 문화융합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19. 혁신적인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7.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23.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 촉진	8.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 축제화
35.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 계획
51.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1. 한국인의 뿌리에서 찾는 국가브랜드
61.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2.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
62.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3. 민관협력을 통한 한류 영역 확대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4. 미래성장동력의 기반, 문화창조융합벨트
65. 여성 고용 활성화 및 양성평등 확산	5. 재외문화원을 통한 한류 세계화
66. 청년 고용 활성화	6. 문화가 있는 날
67.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7. 세대별 문화향유 프로그램 확대
68.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8. 문화가 있어 행복한 실버시대
74.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83.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96.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102.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104.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국정과제(관계 부처)	
105.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106.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균형 발전 추진	
107. 지역경제 활력 제고	
108.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109.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110.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111.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	
112.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113.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114.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115. '한국 스타일' 콘텐츠 산업 육성	
116.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 산업 육성	
117.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12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126.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127.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 추진	
130.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	
131.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133.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문화융성위원회(2013) 및 문화체육관광부(2015) 참조 정리.

라. 문재인정부의 문화정책

2017년 5월에 출범한 현 문재인정부는 7월에 국정운영의 목표와 과제를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며 ‘국민’과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5대 국정목표(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하였다. 그중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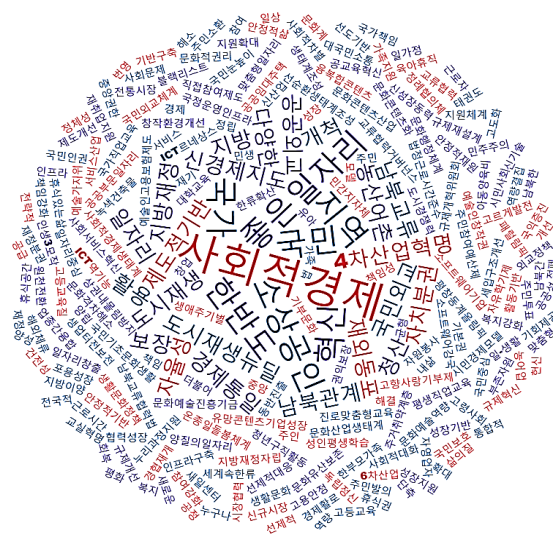
등 문화부처가 주무부처인 과제와 문화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된 27개 과제가 추출되었다.

〈표 2-5〉 문재인정부 문화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명	비고
0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0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 행자부, 인권위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기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8. 소상공인·지역업자 역량 강화	중기청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자부
75. 지방재정 지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자부, 기재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슈와 함께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 권과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더불어 잘사는 경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문화정책과 관련한 국정과제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민생경제 및 미래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좋은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의 키워드가, 지방분권 및 재생과 관련하여 ‘지방’, ‘도시재생’, ‘지방재정’, ‘자치분권’ 등의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다. 이 밖에 남북교류와 ‘신경제지도’, ‘경제통일’ 등의 키워드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문화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관련 키워드는 부각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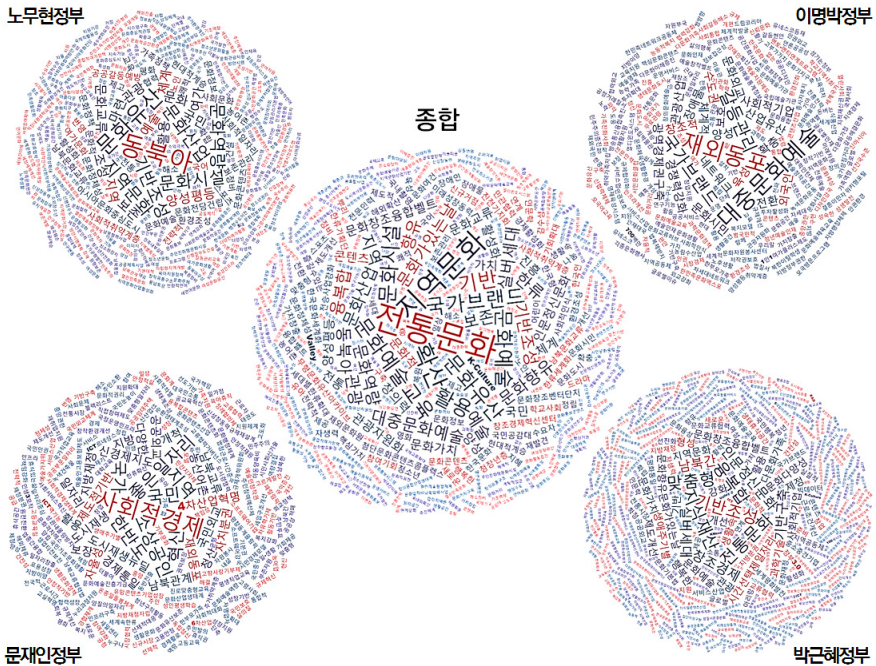
[그림 2-4] 문재인정부 문화 관련 국정과제 워드클라우드 분석

3. 각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 분석

각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전통문화나 문화유산, 예술 관련 과제는 문화부처의 고유영역으로 설정되는 경향이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나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적 접근이 요구되면서 문화정책 분야가 관련 과제에 통합적으로 협력을 모색하도록 계획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한 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움에 따라서 정책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국정과제 및 이와 연동된 문화계획을 중심으로 노무현정부부터 현 문재인정부까지 문화정책을 워드클라우드 분석한 결과, 그 출현 빈도에 차

이는 있지만, 대체로 ‘전통문화’, ‘지역문화’, ‘문화유산’, ‘문화예술교육’, ‘문화시설’ 등이 핵심적인 정책 영역에 속해 왔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 영역들은 ‘확산’, ‘활용’, ‘융복합’ 등의 키워드를 통해서 관광, 문화산업, 국가브랜드 등과 연결되고 있다.



[그림 2-5] 각 정부 문화정책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이와 같은 큰 흐름 속에서 각 정부마다 문화정책 및 연관 정책과의 관계에서 그 방향이나 지향점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그에 따라서 강조점도 조금씩 변화해 왔다. 노무현정부 시기에는 지역 분권과 갈등 관리 등이 부각되면서 문화정책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반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명박정부시기에도 갈등관리가 주요 키워드로 부각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류의 확산과 연계되어 대중문화예술 및 문화외교가 강조된 경향이 있었다. 박근혜정부시기 문화정책에서는 타 정부에 비해서 전통문화가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인문정신문화, 지역문화도 강조되었다. 이에 비해

서 현 문재인정부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일자리 관련 정책이 문화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노무현정부 시기에 문화정책 관련 키워드에 포함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점차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으로 확대된 현상과도 관련되며, 특히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주요 키워드로 부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것과 함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정책이 각 정부의 문화정책을 관통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 증폭된 양상이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생활속 문화 확산, 국민의 주체적인 문화 참여와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여가 확대 등도 각 정부의 문화정책을 관통하며 유지되고 있다.

제2절

국제사회 문화의제의 변화

1. 국제사회 문화의제 분석 개요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모색을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문화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그와 같은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왔고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사회 문화의제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UN, 2015)를 통해서 각국 및 주요 국제기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발표된 2015년을 분기점으로 그 전후와 전환기의 국제사회 문화의제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우리의 문화정책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1988년 채택된 유네스코 「세계문화 발전 10개년 계획(A 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t 1988-1997)」과 2000년 채택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등을 중심으로 문화의제의 흐름을 우선 검토한다. 또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채택되고 다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전환되는 시기의 국제사회 문화의제는 국제예술문화기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IFACCA)의 세계문화예술정상회의(Work Summit on Arts and Culture: WSAC),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문화정상회의(Culture Ministers' Meeting: CMM),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주최 아시아문화포럼(Asia Culture Forum: ACF), 세계도시문화정상회의(World Cities Culture Summit: WCCS)처럼 다양하게 증가한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유엔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한 2015년 이후에 수립된 문화계획을 중심으로 최근 동향을 검토한다.

2. 유네스코가 이끈 국제사회 문화의제의 흐름

국가 단위의 문화정책 발전과정과 유사하게 국제 단위의 문화정책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가 발족하면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 문화정책의 발전에 대한 고민도 본격화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 시기에 예술을 중심으로 좁은 의미로 사용되던 ‘문화’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문화’는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는 이념 간 대립 상황을 반영하면서 ‘정체성’ 자체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문화와 경제·사회 발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발전의 토대이자 핵심 요소로서 ‘광의의 문화 개념’이 자리 잡은 데 기인한다. 더 나아가 문화가 민주주의 개념과 연계되며 사회통합, 소수자 인권 같은 문제를 포괄한 개념으로 확장된 것도 중요하다. 유네스코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아울러 ‘문화와 발전(culture and development)’ 또는 ‘문화 발전(cultural development)’ 개념을 화두로 삼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국제회의는 1982년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세계문화정책회의(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다. 이 회의에서 「세계문화정책선언(Declaration of the World Cultural Policies)」이 발표되었고, 이 선언을 계기로 사회조직, 가치와 신념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재정립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문화는 집단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경제 및 사회 발전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982년 세계문화정책회의 이후, 국제적 공감대를 얻게 된 ‘문화’ 개념에 기반하여 유네스코는 문화 분야 국제의제들을 주도해 왔다. 그중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유엔이 정하고 유네스코가 추진한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이 특히 중요한데, 이 계획을 통해서 ‘문화와 발전’ 개념이 국제사회에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5년에 ‘문화와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

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WCCD)가 채택한 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에서는 보존에 초점을 맞추던 소극적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 성장 및 창조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문화 및 문화정책 발전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였다.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성과 계승을 위하여 1998년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네스코의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에 관한 정부 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에서는 ‘문화 발전’에 관한 지난 10년의 경험과 사례를 돌아보며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통해서 보다 진전된 의제를 제시하였다. 이 회의를 계기로 세계 각지의 문화예술위원회가 모여 국제예술문화기관연맹을 창설하고 세계문화예술정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채택한 실행계획의 5대 목표를 보면, ‘발전’ 전략에서 문화정책을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창조성과 참여 증진’,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산업 증진’,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 증진’, ‘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 확충’이 강조되었다. 이 액션 플랜과 ‘문화와 발전’ 개념은 유엔 총회 및 유네스코의 후속 회의와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빠른 속도로 여러 국가에 확산되었다.

〈표 2-6〉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 후속 실행계획의 5대 목표

구분	주요 내용
문화정책	• 문화정책을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할 것
문화적 삶	• 문화적 삶에서 창조성과 참여를 증진할 것
문화유산과 문화산업	•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산업의 증진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할 것
정보화	• 정보화사회에서 문화 및 언어 다양성을 증진할 것
문화 발전	• 문화 발전을 위해 기용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것

이와 같은 국제사회 문화정책의 흐름 속에서 새천년을 맞이하여 2000년에 개최된 제54차 유엔 총회에서는 기본적인 인권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권리 간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자 평화로운 공존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선

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1년에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이하 ‘문화다양성선언’)을 채택하고, 문화를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물질적·지적 특성의 총체이며,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뿐 아니라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1988년부터 국제의제의 중심을 이루었던 ‘문화와 발전’ 담론이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을 거쳐서 ‘문화교류와 혁신’, ‘창조성과 참여’ 등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유엔의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2000) 채택 10년 후인 2010년에 개최된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한 정상회의’ 결과에서도 인류의 발전에서 문화가 갖는 중요성 및 개발목표 달성에서 문화의 기여도가 강조되었다. 또한 2010년과 2011년에 2회 연속으로 유엔 총회 결의안은 발전 정책과 전략에서 문화가 중심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문화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명시하였다. 이러한 선언에는 앞서 언급한 멕시코시티 회의, 스톡홀름 회의는 물론이고, 그 후 문화다양성선언 등에서 논의된 주요 기조가 녹아들어 있다.

〈표 2-7〉 SDGs 이전 시기 국제사회 문화의제 관련 동향

연도	주요 내용
1948	세계인권선언 27조 1항(3차 유엔총회): “모든 인간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지닌다.”
1982	세계문화정책회의선언(멕시코시티 회의): 사회조직 및 가치와 신념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제시되고, 비로소 경제 및 사회발전과의 관계가 주목 받기 시작
1988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 문화 발전(cultural development) 개념의 국제적 확산
1998	유네스코 문화 발전 10년 보고서(스톡홀름 회의): 인간적·문화적 맥락과 결별한 개발은 영혼이 없는 성장임을 천명
200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31차 유네스코총회): 문화적 다양성은 인간의 권리이며 창의적 경제발전의 토대임을 천명
2005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33차 유네스코총회)
2011	문화와 발전 결의안(66차 유엔총회): 문화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정보 공유, 정책 개발, 국가와 지역 내 협력 강화 등을 강조

3. SDGs 체제로 전환기의 국제사회 문화의제

문화 관계 국제회의들은 1998년 스톡홀름 회의와 새천년개발목표 채택 이후, 다양하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되기 이전까지 국제사회 문화의제의 발전 과정에 조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스톡홀름 회의 후 문화 분야 주요 국제회의 의제

1) 세계문화예술정상회의

1998년에 개최된 스톡홀름 회의를 계기로 2000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세계문화예술정상회의(WSAC)는 국제예술문화기관연맹(IFACCA)이 각국의 예술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이다. 전 세계의 예술지원기관·예술가·관리자·정책결정자 간 정보 공유와 학습 및 협력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에서 문화의 역할, 비영리조직과 정부기관의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00년부터 총 7회가 개최되었다.

각 회의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 제1회(캐나다 오타와) 회의에서는 다양한 영역과의 관계에서 문화의 역할을, 2003년 제2회(싱가포르) 회의에서는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연계 문제를 다루었다. 2006년 제3회(영국 뉴캐슬-게이츠헤드) 회의에서는 물리적·사회적 환경 및 경제의 재생이라는 문제를, 2009년 제4회(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는 예술의 도구화와 이문화 간 대화 등을 다루었다. 2011년 제5회(호주 멜버른) 회의에서는 장소와 공동체라는 문제를, 2014년 제6회(칠레 산타아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창조산업과 문화를 주제로 다루었다. 그리고 2016년에 개최된 제7회(몰타 발레타) 회의에서는 문화리더십과 관련한 거버넌스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전반적으로 세계문화예술정상회의의 의제는 문화의 본질적 역할에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문제들로, 그리고 경제 및 산업과의 관계에서 문화의 역할 및 거버넌스라는 문제로 변화해 왔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는 다양한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의 역할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2019년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제8회 회의에서는 “MOBILE MINDS: Culture, Knowledge and Change(모바일 마인드: 문화, 지식 그리고 변화)”를 의제로 하여 빠른 기술 환경과 향상된 연결성이 미치는 영향과 지식, 문화, 예술적 실천, 창조적 공간, 혁신 및 디지털 혁명 사이의 전통과 현대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표 2-8〉 IFACCA 세계문화예술정상회의 의제

회차	개최지	의제
제1회(2000)	캐나다 오타와	• The role of culture in foreign affairs, to diversity and private sector support(외교, 다양성 및 민간 부문 지원에 있어 문화의 역할)
제2회(2003)	싱가포르	• Creating Connections: Trends in Government Support for Artistic Creativity(연결 만들기: 예술적 창의력을 위한 정부지원)
제3회(2006)	영국 뉴캐슬-게이츠헤드	• Transforming places, transforming lives(장소 변형, 삶의 변화)
제4회(2009)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 Meeting of Culture: Making Meaning Through the Arts(문화회의: 예술을 통한 의미 창조)
제5회(2011)	호주 멜버른	• Creative Intersections(창조적 교차점)
제6회(2014)	칠레 산티아고	• Creative Times: new models for cultural development(창조시대: 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제7회(2016)	몰타 발레타	• At the Crossroads? Cultural Leadership in the 21st Century(21세기 문화리더십, 기로에 서있는가?)
제8회(201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예정)MOBILE MINDS: Culture, Knowledge and Change(모바일 마인드: 문화, 지식 그리고 변화)

*자료: 국제예술문화기관연맹 누리집(ifacca.org) 참조.

2) ASEM 문화장관회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문화장관회의(CMM)는 2년마다 개최되며,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협력과 폭넓은 의견 교환의 장으로 기능한다. 2003년 북경을 시작으로 2016년 광주까지 총 7차례 개최되었다.

각 회의의 내용을 보면, 2003년 제1회(중국 북경)와 2005년 제2회(프랑스 파리), 2008년 제3회(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회의에서는 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2010년 제4회(폴란드 포즈난)와 2012년 제5회(인도네시아 욕카르타) 회의에서는 문화유산의 보호·활용과 유산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2014년 제6회(네덜란드 로테르담) 회의에서는 기술·무역 등과 관련하여 창조산업을, 2016년 제7회(한국 광주) 회의에서는 문화유산과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전반적으로 ASEM 문화정상회의의 의제는 문화다양성에서 문화유산으로, 이와 연계한 창조산업 육성 및 국가 간 협력으로 변화해 왔다.

〈표 2-9〉 ASEM 문화장관회의 의제

회차	개최지	의제
제1회(2003)	중국 북경	• Cultural diversity in Asia and Europe(아시아와 유럽의 문화다양성)
제2회(2005)	프랑스 파리	• Cultural Diversit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ASEM's long-term plan(문화다양성: 기회와 도전 – 아셈 장기계획)
제3회(200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Cultural Diversity – Realizing the Action Plan(문화다양성 – 실행계획의 실현)
제4회(2010)	폴란드 포즈난	• Heritage and the Challenges of the Present(유산과 현재의 도전과제)
제5회(2012)	인도네시아 욕카르타	• Managing Heritage Cities for a Sustainable Future(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유산도시 관리)
제6회(2014)	네덜란드 로테르담	• Creative Industries for Society: Talent, Technology and Trade(사회를 위한 창조산업: 재능, 기술 및 무역)
제7회(2016)	한국 광주	• Culture and Creative Economy(문화와 창조경제)

*자료: ASEM 누리집(www.aseminfoboard.org) 참조.

3) 아시아문화포럼

아시아문화포럼(ACF)은 아시아문화심포지엄(2004~2005)을 모태로 2006년 첫 개최 후 매년 광주시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문화예술계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문화에 대한 경험과 지식 교류를 증진하고 상호 교류 및 네트워킹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장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주최로 아시아권 도시들이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정체성과 전략을 갖추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이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 왔다.

각 포럼의 내용을 보면, 제1회에는 문화와 기술을, 제2회에는 문화교류와 네트워크를, 제3회부터 제5회까지는 아시아문화의 가치와 다양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제6회에는 ‘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였고, 그 후 제8회를 제외한 모든 포럼에서 ‘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그중 제7회에는 문화예술복합체를, 제9회에는 문화를 통한 도시 발전을, 제10회에는 창조산업을, 제11회에는 4차 산업혁명과 문화도시를 다루었다. 제8회는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정책과 연동하여 아시아 문화융성을 주제로 하였다. 아시아문화포럼의 경우, ‘문화, 기술, 창의성’을 중심으로 의제가 설정되고 있는데, 다른 국제회의에 비해 문화와 기술의 융합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다.

〈표 2-10〉 아시아문화포럼 의제

회차	의제
제1회(2006)	• Culture & Technology(문화와 기술)
제2회(2007)	• Asia's Cultural Window to the world(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
제3회(2008)	• Looking to the future of the Asia Culture Complex through the European Cultural Cities and Cultural Contents of Asia(유럽문화도시와 아시아문화콘텐츠를 통해 본 아시아문화전당의 미래 모색)
제4회(2010)	• New Asia(새로운 아시아)
제5회(2011)	• One Asia, Diversity and Festival(하나의 아시아, 다양성, 그리고 축제)
제6회(2012)	• Culture, Technology, and Creativity(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
제7회(2013)	• Culture, Technology, and Creativity: Art & Culture Complex(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 문화예술 복합체)
제8회(2014)	• Cultural Prosperity and Mutual Growth of Asia(아시아의 문화융성과 동반성장)
제9회(2015)	• Culture, Technology, and Creativity: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through Culture(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제10회(2016)	• Culture, Technology and Creativity: Creative Industry and City(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 창조산업과 도시)
제11회(2017)	• Culture, Technology and Creativity: Culture Cities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도시)

*자료: 아시아문화포럼 누리집(asiacultureforum.org) 참조.

4) 세계도시문화정상회의

세계도시문화정상회의(WCCS)는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 WCCF) 총회 성격을 지닌다. 세계도시문화포럼은 세계 주요 도시 간 문화정책정보의 공유와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12년 런던올림픽 기간 중에 런던시가 주도하여 공식 발족하였다. 그 후 2013년 제2회(이스탄불)부터 2016년 제6회(서울)까지 매년 11월에 개최되고 있다.

「세계도시문화보고서 2012(World Cities Culture Report 2012)」 발간과 연계된 제1회(런던)에는 별도 의제가 아닌 공공정책의 핵심으로서 문화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회(이스탄불)에는 세계 도시에서 문화의 장려를 위한 효과적 전략, 도시의제에 대한 문화의 영향력 확장, 문화의 가치와 영향을 보여주기 위한 협력이라는 질문을 통해 도시의 홍보와 브랜딩 및 내부 투자 유치, 새로운 문화인프라, 시민 참여와 창의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공공서비스에서 문화 확산을 다루었다. 그 결과로 ‘부스터리즘을 넘어서(Beyond Boosterism)’가 새로운 문화의제로 설정되었다. 이는 도시를 열정적으로 홍보, 선전하는 차원의 행위나 정책을 넘어 성공적 도시계획을 위하여 문화와 새로운 문화인프라에 대한 민주적 접근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제3회(암스테르담)에는 도시의 경제적·도시적·사회적 의제에서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대중관광시대의 문화적 진정성, 현대성과 문화유산 및 정체성의 균형, 문화와 도시재생, 시민의 문화역량 개발 등을 논의하였다. 제4회(런던)에는 문화와 포괄적인 성장을 의제로 과거 20년 간 이루어진 도시 성장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기술을 통한 도시의 문화생활, 공정한 계획의 수립과 포괄적 성장에서 문화의 역할 등을 다루었다. 제5회(모스크바)에는 기후 변화와 난민 문제 등 국제문제에서 문화적 대응, 공공문화기금 유지의 우선순위, 도시의 개발 과잉 통제, 문화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및 공동제작과 적극적 참여의 문제, 정책 전달에서 예술가의 참여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개최된 제6회

총회에서는 각 도시의 정책 입안자가 문화와 창조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시민의 수요에 대한 이해와 참여 장려, 시민의 행복 증진, 메이커운동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조기업 지원을 논의하였다.

세계도시문화정상회의에서는 도시정책에서 문화의 힘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그 흐름은 기존에 도시브랜드 등을 통해서 열정적인 홍보와 선전을 행하는 부스터리즘을 극복하고, 도시정책에서 문화를 핵심 영역에 위치시키면서 도시계획 및 도시문제에서 문화의 조정자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시민 역량 강화 및 정책 추진의 민주적 접근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표 2-11〉 세계도시문화포럼 총회 의제

회차	개최지	의제
제1회(2012)	런던	(세계 도시들에서 공공정책의 핵심으로서 문화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
제2회(2013)	이스탄불	• A New Cultural Agenda: how can world city leaders unleash the full potential of culture?(새로운 문화의제: 세계 도시 리더들이 어떻게 문화의 잠재력을 발휘할 것인가?)
제3회(2014)	암스테르담	• Sustaining Success(지속적인 성공)
제4회(2015)	런던	• Culture and Inclusive Growth in World Cities: Seizing the Opportunity(세계 도시에서 문화와 포괄적인 성장: 기회의 포착)
제5회(2016)	모스크바	• Creating the future: Culture taking the lead in world cities(미래 창조: 세계 도시에서 주도권을 잡은 문화)
제6회(2017)	서울	• Beyond the Creative City: new civic agendas for citizens and by citizens(창조도시를 넘어서: 문화시민도시에서의 문화와 민주주의)

*자료: 세계도시문화포럼 누리집(www.worldcitiescultureforum.com) 참조.

나. 2015년을 준비한 문화 분야 국제회의 의제

문화 발전,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발전 및 확산되어 온 문화 분야의 국제의제는 유엔이 설정한 새천년개발목표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새천년개발목표를 뛰어넘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할 때에는 다양한 목표와 연계되며 반영되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에 앞서 문화 분야에서 2015년을 준비

하기 위한 회의들이 개최되었다. 2014년 1월 세계문화예술정상회의, 2013년 11월 발리 세계문화포럼(World Culture Forum-"Bali Forum" 2013), 2013년 5월 항저우 국제회의(Hangzhou International Congress), 2012년 8월 에든버러 국제문화정상회의(Edinburgh International Culture Summit)가 대표적이다. 이들 회의의 참석자들은 각국의 문화 분야 정부기관과 민간 대표자가 주를 이루었고, 'post-2015'의 중요 의제로 '문화 발전'을 포함시키려는 목적을 공유하였다. 특히 2013년 5월에 항저우에서 '문화: 지속가능 발전의 열쇠(Culture: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를 의제로 열린 국제회의와 11월에 발리에서 '지속가능 발전에서 문화의 힘(The Power of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을 의제로 열린 세계문화포럼은 1998년 스톡홀름회의 이후 15년 만에 열린 문화와 발전에 관한 대규모 회의였다.

〈표 2-12〉 SDGs 체제 준비를 위한 문화 분야 주요 회의 개요

구분	세계문화예술정상회의	세계문화포럼	항저우 국제회의	에든버러 국제문화정상회의
시기	2014.1.13~16.	2013.11.24~27.	2013.5.14~17.	2012.8.13~14
장소	칠레 산티아고	인도네시아 발리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영국 에든버러 (스코틀랜드의시당)
주최	IFACCA, CNCA	인도네시아교육문화부, 유네스코(후원)	중국문화부, 유네스코, 유네스코중국위원회, 항저우시 인민정부	영국문화부, 스코틀랜드 주정부, 에든버러축제 사무국, 영국문화원
참석	전 세계 10여 개 예술위원회 및 문화예술기관 대표자	30개국 정부 대표 및 전문가 1,000여 명	82개국 22개 국제기구 대표 등 450여 명	런던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각국 문화부장관, 전문가 등(프랑스, 호주, 일본 등 40여 개국 장관 또는 대표자)
의제	창조시대: 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의 힘	문화: 지속가능 발전의 열쇠	국제적 대화수단으로서의 문화
비고		발리선언문 채택		

〈표 2-12〉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을 준비하는 전환기 회의들의 대주제에서는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의제가 두드러진다. 2012년에 런던올림픽과 연계되어 개최된 에든버러 국제문화정상회의에서는

‘국제적 대화’라는 의제가 두드러졌지만, 유네스코가 주도한 2013년 항저우 국제회의와 발리 세계문화포럼에서는 ‘문화와 발전’이라는 의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다. 2014년 1월에 열린 IFACCA의 세계예술문화 정상회의는 2013년의 두 회의와 연속성 마련 차원에서 ‘문화와 발전’ 의제를 계승하면서 좀 더 의제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4개 주요 회의의 의제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 회의에서 진행된 논의 내용을 분석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적인 세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부 주제를 종합하여 범주화하면 <표 2-13>처럼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문화와 발전’, 문화민주주의와 관련된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과 관련된 ‘문화와 경제’, 문화 간 대화와 관련된 ‘문화와 평화’, 문화유산의 보존·활용과 관련된 ‘인류문명과 문화유산’,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문화융합과 미래’로 범주화할 수 있다.

<표 2-13> SDGs 체제 준비를 위한 문화 분야 주요 회의의 주제

구분	핵심 주제
문화와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없는 지속가능 발전이 성취 가능한가 • 빈곤 해소와 경제 성장에 대한 문화 영역의 기여 • 발전에서 문화에 관한 총체적인 접근
문화다양성과 창조성 (문화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와 문화민주주의 • 분권화와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모델
문화와 경제 (창조경제, 창조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과 문화경제 • 산업 재인식을 위한 창의적 플랫폼 • 창조경제와 문화의 가치
문화와 평화 (문화 간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와 화해-어떻게 문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 신앙 간 대화와 공동체 구축 • 문화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
인류문명과 문화유산 (문화유산 보존·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과 복원 • 미래 발전을 위해 우리의 과거를 존중하기 • 지속가능한 도시, 유산과 창의성
문화융합과 미래 (새로운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표현을 위한 기술 • 미래와 창조산업을 위한 기술, 기술의 역할 • 실험을 위한 창의적 공간 •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 개발

4. ‘Post-2015’ 시대의 국제사회 문화의제

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된 문화의제

유엔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시한인 2015년에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에서 2030년까지 세계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다. 이 목표에서는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을 위해 사람, 지구, 번영, 평화 및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조는 1988년 스톡홀름회의가 제시한 ‘문화와 발전’ 개념을 계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여 간 국제사회가 주목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2005)의 키워드인 ‘문화다양성’ 개념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거시적 관점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문화유산에서 창조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한다. 양질의 교육, 양성 평등, 경제적인 성장,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의 증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표에서 문화가 핵심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는 인간 존엄성, 사회적 정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성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롭게 설정된 의제를 바탕으로 각국은 문화를 지속가능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경향이다.

〈표 2-14〉 SDGs의 문화의제 관련 내용

관련 의제	내용
문화다양성	모든 문화교류는 상호이해를 위한 것임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 활용 지원	활용 시스템이나 지식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임
지속가능한 관광	상업적 대중관광이 아니라 지역커뮤니티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평화의 문화	문화 자체가 세계의 평화 및 안정, 갈등 치유에 기여함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문화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자료: UN(2015) 참조 정리.

나. 문화계획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문화의제

1) 유네스코의 문화계획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한 문화 분야의 대표적 움직임으로는 유네스코가 2015년 발표한 「문화정책의 재구성(Reshaping Cultural Policies)」(UNESCO, 2015)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유네스코는 2005년에 발표된 문화다양성협약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연결하고,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과 모니터링 지표를 제시하였다.

「문화정책의 재구성」에서는 문화로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체계를 강조하며 ‘문화정책’, ‘공공서비스 미디어’, ‘디지털환경’,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모니터링 대상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들은 문화 거버넌스,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균형 공급, 문화인력의 이동성 증진, 지속가능발전체제와 문화의 통합,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표 2-15〉 유네스코 「문화정책의 재구성」의 4대 실행 목표

구분	내용
문화 거버넌스	① 문화 거버넌스의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정립한다.
문화 상품·서비스 및 문화 인력	②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균형적 공급과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의 이동성을 활성화한다.
지속가능발전	③ 지속가능발전 체제 안으로 문화를 통합한다.
인권과 자유	④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한다.

2) 세계지방정부연합의 문화계획

지속가능발전목표 체제에 조응하여 새로운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 것은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관련 국제기구나 단체에서도 나타난다. 그중 2004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UN 193개 회원국 중 140개 회원국의 1천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구가 참가해 설립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문화 21(Culture 21: Agenda 21 for Culture)」를 채택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에 즈음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환기하고, 각 도시 및 지방정부의 장기적인 문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정상회의(UCLG Culture Summit)을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에 스페인의 빌바오에서 ‘지속가능 도시에서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제1차 UCLG 문화정상회의는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한 새로운 실행계획인 「문화 21 실천(Culture 21: Actions)」을 채택하였다.

「문화 21 실천」은 세계지방정부연합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서 문화와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담고 있다. 이 계획을 통해 설정한 가치는 ‘① 문화, 권리 그리고 시민권’, ‘②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요인’, ‘③ 지방정부의 특별한 책무’로 요약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9대 책무를 설정하면서 전 세계 도시 및 지방정부의 행동을 촉진하고 있다.

〈표 2-16〉 세계지방정부연합 「문화 21 실천」의 9대 책무

연번	책무	내용
1	문화권(Cultural rights)	• ‘지역의 문화정책은 문화권에 기반’ 등 총 10개 과제
2	문화유산, 다양성 및 창조성 (Heritage, diversity, and creativity)	• ‘지방정부는 문화적 책임성을 다하는 수준에서 문화예산 확보’ 등 총 9개 과제
3	문화와 교육(Culture and education)	• ‘지방정부는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을 연계한 지역정책을 가져야 함’ 등 총 9개 과제
4	문화와 환경(Culture and environment)	• ‘지역의 문화적 요소는 지역환경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통합되어야 함’ 등 총 10개 과제
5	문화와 경제(Culture and economy)	• ‘지역경제 개발 전략은 문화경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등 총 12개 과제
6	문화, 형평성 그리고 사회적 포용 (Culture,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	• ‘지역 사회정책은 모든 유형의 차별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문화를 포함’ 등 12개 과제
7	문화, 도시계획 그리고 공공 공간 (Culture, urban planning, and public space)	• ‘지역 도시계획은 문화이슈와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등 총 12개 과제
8	문화, 정보 그리고 지식 (Culture, information, and knowledge)	• ‘법률은 예술적 표현 의의개인의 자유, 정보의 자유, 문화다양성과 사생활 존중 등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등 총 10개 과제
9	문화 거버넌스(Governance of culture)	• ‘지방정부는 Culture21에 기반한 문화정책을 실행해야 함’ 등 총 11개 과제

3) 유럽연합의 문화계획

프랑스의 테리, 독일의 이민자 문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일련의 국제적 갈등과 긴장상황을 민감하게 느낀 유럽연합은 2016년 8월에 「국제 문화관계 전략(Towards an EU strategy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EU, 2016)을 발표하며 이러한 위기상황에서야말로 문화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정받고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갈등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소프트파워의 역할을 보다 민감하게 인지하고 대외정책의 도구로서 문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 문화관계 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문화와 창의성의 잠재력 결합’, ‘문화 간 대화를 통한 평화 증진’, ‘문화유산에 대한 협력 강화’를 지향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의 위상 제고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문화유산 보호, 문화와 발전에서 영향력 확보를 강조한다. 특히 문화를 대외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외교의 영향력을 일반 시민의 범주까지 상정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즉, 문화의 범위를 일상생활로 확대함으로써 문화교류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동시에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협력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디지털과 소셜미디어에 강한 젊은 세대가 미래의 주요 그룹임을 인식하며 젊은 세대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2-17〉 EU 「국제 문화관계 전략」의 행동 원칙과 전략

구분	내용
EU 행동을 위한 원칙	• 문화다양성 및 인권 존중 증진
	• 상호존중 및 문화 간 대화 촉진
	• 상보성과 보완성에 대한 존중 보장
	• 문화에 대한 교차적 접근 장려
	• 기존의 협력 체제를 통한 문화 진흥
국가 간 문화적 협력 증진을 위한 3대 전략	•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서 문화 지원
	• 평화로운 지역사회 관계를 위한 문화 및 문화 간 대화 촉진
	• 문화유산에 대한 협력 강화

5. 국제사회 문화의제의 변화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사회 문화의제의 흐름(〈표 2-18〉 참조)을 보면, 정책적인 지향이나 의제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또한 점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문화의제 발굴과 확산은 유네스코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기념비적인 회합과 선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정상회의 및 국제회의의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특징도 나타난다.

그 내용에서는 ‘문화 발전’,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개의 담론이 기둥을 이룬다. 그중에서 ‘문화 발전’, 즉 문화 자체의 발전과 함께 문화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강조, 즉 힘의 불균형이 지배하는 국가 간, 도시 간, 사람 간 관계에서 상호 간 표현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기초가 주목된다. ‘지역과 도시’에 대한 강조나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강조 역시 문화다양성과 정체성 관련 의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 발전’이 강조되면서 ‘문화 발전’과 ‘문화다양성’ 담론이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는 흐름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기초 아래로 ‘도시와 커뮤니티’, ‘정체성과 근대성’, ‘창조성과 창조산업’, ‘디지털과 미래기술’, ‘도시 간·국가 간 대화와 협력’ 등이 핵심적인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6] 국제사회 문화 관계 회의 및 계획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한편, 2015~2030년을 기간으로 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기존에 논의된 국제사회 문화의제의 연계, 융합, 공진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및 유럽연합 등의 문화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고, 국가별로 이행 점검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더욱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18〉 SDGs 전후 국제사회 문화의제 종합

구분	내용
유네스코 핵심 화합과 선언의 주요 담론	① 문화 발전 ②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스톡홀름 회의 이후 문화 분야 국제회의 의제	① 문화 발전 ② 문화다양성과 문화민주주의 ③ 도시와 커뮤니티의 발전 및 도시 간·국가 간 대화와 협력 ④ 정체성과 현대성의 균형 ⑤ 창조성과 창조산업 및 미래기술
SDGs 체제 준비를 위한 문화 분야 국제회의 의제	① 문화와 발전(지속가능한 발전) ② 문화다양성과 창조성(문화민주주의) ③ 문화와 경제(창조경제, 창조산업) ④ 문화와 평화(문화 간 대화) ⑤ 인류문명과 문화유산(문화유산 보존·활용) ⑥ 문화융합과 미래(새로운 기술)
SDGs의 문화의제 관련 내용	① 문화다양성 ②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 활용 지원 ③ 지속가능한 관광 ④ 평화의 문화 ⑤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UNESCO 「문화정책의 재구성」(Reshaping Cultural Policies) 4대 목표	①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체계 지원 ② 문화상품과 서비스 균형 공급 및 예술가와 문화 전문인력 이동성 증진 ③ 지속가능발전체제와 문화의 통합 ④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UCLG 「문화 21 실천」(Culture 21: Actions) 9대 책무	① 문화권 ② 문화유산, 다양성 및 창조성 ③ 문화와 교육 ④ 문화와 환경 ⑤ 문화와 경제 ⑥ 문화, 형평성 그리고 사회적 포용 ⑦ 문화, 도시계획 그리고 공공 공간 ⑧ 문화, 정보 그리고 지식 ⑨ 문화 거버넌스

물론 국가별 인구지형의 변화 속도나 수준이 다르고, 정치적 역학관계나 라이프스타일의 성격 역시 차이가 있겠지만, 문화가 가진 삶과 사회의 발전에 대한 힘을 신뢰하는 것, 숲을 보되 인간의 권리와 참여라는 나무의 중심성을 인정하는 것,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화정책의 세부 단위들을 연결하는 것, 상호간 대화와 협력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등은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울림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소결: 국내외 문화정책의 흐름

세계적으로 문화의 개념이 확장되고 정치·경제·사회 발전에서 문화의 기여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문화의제도 점증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 흐름을 보면 유네스코에 의해서 확산되어 온 ‘문화와 발전’이라는 의제가 ‘문화다양성’을 거쳐서 ‘문화교류와 혁신’, ‘창조성과 참여’ 등으로 확장되는 경향이다. 또한 관련 의제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틀로 수렴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문화정책에서도 나타나며 국가정책 전반에서 문화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표 2-19>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문화민주주의’, ‘지역과 도시’, ‘문화와 기술의 융합’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우리의 문화정책과 국제사회 문화의제를 시기별로 비교하면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문화다양성’은 2000년 제54차 유엔총회 및 2001년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선언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중요 문화의제로 부상하였다. 국제 예술문화기관연맹(IFACCA)의 세계문화예술정상회의도 2000년 제1회 회의에서 다양성을 주제로 삼았다. 그 후로도 문화다양성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2년 UN ‘리우+20 정상회의’에서도 주제로 논의되었고, 2015년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에서도 문화다양성이 강조된다. 그에 따라서 유네스코도 「문화정책의 재구성(Reshaping Cultural Policies)」을 발표하며 문화다양성협약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연계한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고, 2014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우리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외국인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개념에서 탈북민, 성소수자,

젠더, 장애인, 세대 등 소수인권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윤소영 외, 2017).

문화발전과 맥을 같이 하여 등장한 ‘문화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문화 분야로 확장된 개념이다. 특히 1998년 스톡홀름 회의 이후 국제사회 문화 의제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문화의 향유와 접근성 증진이라는 ‘문화의 민주화’에 비해서 문화민주주의는 참여, 동등한 권리, 실천을 강조한다(김경옥, 2003). 국제사회의 문화의제와 우리의 문화정책에서도 시민의 참여, 분권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강조된다. 우리의 경우, 노무현정부 시기에 민주주의라는 정책 의제가 강조되면서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각 정부시기에 문화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지속되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과 도시’에 관한 의제에서는 도시와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 간·국가 간 대화와 협력이 강조된다. 한 예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문화 21 실천」 계획의 9대 책무에서 문화와 도시계획, 거버넌스 등을 골자로 지역과 도시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세계지방정부연합 문화정상회의나 세계도시문화정상회의(WCCF) 등에서는 지역의 재생이 정책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방분권이라는 정책 이슈 및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및 지역문화 진흥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고, 2014년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2014년 1월)되어 생활문화 진흥, 전문인력 및 기관 양성, 문화도시 및 지구 육성 등 ‘문화자치’에 기반한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했다(윤소영 외, 2017). 현 정부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급속한 인구 감소 및 도시 집중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이라는 문제(이상호, 2016)도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문화와 기술의 융합’은 빠르고 향상된 기술 환경을 활용하여 문화의

본질적 가치와 영향력, 예술적 실천 등을 모색하는 방법론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또한 경제 및 산업과의 관계에서 문화의 역할 및 거버넌스라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문화 분야 국제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주요하게 다루고, 특히 아시아문화포럼은 지속적으로 ‘문화, 기술, 창의성’을 주제로 개최된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미래기술과의 융합 및 그 활용이 문화정책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표 2-19〉 국내외 문화정책의 흐름 비교

연도	국제 문화의제			각 정부 문화계획			
		논의 내용	키워드	계획	방향	과제	키워드
2003	제2회 WSAC	예술적 창의력과 정부지원	창의성	창의 한국	①문화참여를 통한 문화역량 강화	문예교육 강화, 양성 평등문화 확립, 취약 계층 문화권 신장 등	문화민주주의 문화다양성
	제1회 CMM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②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열린 민족문화보다 가치는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 등	문화유산 문화정체성 문화민주주의
2005	제3차 UNESCO 총회	문화다양성협약 채택	문화다양성		③문화를 국가 발전의 신성장 동력화	문화산업 고도화 등	문화산업
	제2회 CMM	문화다양성 실행 계획	문화다양성		④국가 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지역 문화역량 제고, 문화시설 균형 확충,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등	지역, 도시문화
2006	제3회 WSAC	장소와 삶의 변화 물리적·사회적 환경 및 경제 재생	도시재생 문화재생		⑤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남북 문화교류 확대 등	문화다양성, 문화교류
	제1회 ACF	문화정체성 문화다양성 문화민주주의 기술융합	문화융합 기술		문화 비전 2008 ~ 2012	①문화가 펼쳐지는 나라	국가브랜드 제고, 문화요요, 환경친화적 문화정책, 외국인과의 함께하는 열린사회, 선진국 수준의 양성형
2007	제2회 ACF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문화교류				
	2008	제3회 CMM	문화다양성 실행 계획의 실현	문화다양성			
제3회 ACF		유럽문화도시 아시아문화도시 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류, 문화다양성				

연도	국제 문화의제			각 정부 문화계획			
		논의 내용	키워드	계획	방향	과제	키워드
2009	제4회 WSAC	예술의 도구화, 예술을 통한 문화 간 대화	문화민주주의, 문화다양성, 문화교류			등 추진 등	
2010	제4회 CMM	문화유산과 도전 과제	문화유산, 활용		②콘텐츠로 부유한 나라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 콘텐츠 산업 창업 지원 등	문화산업
	제4회 ACF	새로운 아시아	문화정책성, 문화교류				
2011	66차 UN 총회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개발목표, MDGs 달성을 위한 문화의 기여, 문화와 발전에 관한 결의안	지속가능발전		③브랜드가 있는 관광의 나라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등	문화유산, 지역, 도시문화
	제5회 WSAC	장소와 커뮤니티 재생 캠프트 공간 외 지역	지역, 도시문화				
	제5회 ACF	하의 아시아 다양성 축제	문화다양성, 문화교류, 역사기억 재생				
2012	UN 리우+20 정상회의	문화의 중요성, 문화다양성, 문화유산 및 문화관광	문화다양성, 문화유산				
	제5회 CMM	문화유산도시의 지속가능성	문화유산, 지속가능발전				
	제1회 WCCS	세계도시의 문화적 역할	지역, 도시문화		④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	체육진흥을 위한 공공 서비스 확대 등	-
	에딘버러 국제문화 정상회의	국제적 대화 수단으로서의 문화	지속가능발전				
	제6회 ACF	문화 기술 창의성	창의도시, 문화융합, 기술				
2013	UNESCO 향저우회의	문화: 지속가능발전의 열쇠	지속가능발전	문화가 있는 삶	①문화융성을 이끌 인문기초 정립 및 확산	인문정신문화제도적 기반 구축 및 교육 확산 등	문화유산, 문화정책성
	제2회 WCCS	문화와 새로운 문화인프라에 대한 민주적 접근	문화민주주의, 지속가능발전		②전통문화의 생활화	전통문화 가치 규명 및 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유산자원의 활용 확대 등	문화유산, 문화정책성

연도	국제 문화의제			각 정부 문화계획						
		논의 내용	키워드	계획	방향	과제	키워드			
2014	WCF 발리포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힘	지속가능발전		③생활속 문화 확산	생활속 문화공간 조성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참여형 문화 예술 활성화 등	문화향유, 문화민주주의			
	제7회 ACF	문화와 기술 복합 문화시설	문화교류, 문화융합, 기술			④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지역문화진흥제도 정비 지역간 문화의 균형발전 도모 등	지역, 도시문화		
	제6회 WSAC	문화발전의 새로운 플랫폼과 문화, 창조산업과 경제 환경과 문화 등 타 영역과의 융합	창조시대, 창조산업				⑤예술계 자율적 창조생태계 조성	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창작지원 확대 및 개선 문화예술 유통 구조 선진화 등	문화복지, 문화민주주의	
	제6회 CMM	창조산업과 기술 무역 등	문화융합, 미래기술, 문화유산					⑥문화·융복합 모델 개발 및 육성 지원	문화융합 창작공간 조성 창의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등	문화융합, 기술
	제3회 WCCS	지속적 성공 문화적 진정성 유산 시민 문화 역량 등	지속가능발전 문화유산 문화민주주의						⑦ 문화기치의 국내외 확산	문화기치 확산 공간대형성 문화기치 글로벌 확산과 한류 콘텐츠 다변화 등
제8회 ACF	아시아 문화융성과 동반성장	문화예술교육 문화산업 문화 정체성 문화 다양성	2015	⑧ 이리랑의 재해석과 국민총체화	이리랑 공연 지역 확산 이리랑 향유 여건 마련 등	문화유산, 문화정체성				
UN SDGs 채택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의 중요성, 문화다양성, 문화유산 활용지원, 지속가능한 관광, 평화의 문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지속가능발전 문화다양성			국정2기 문화계획	① 전통문화유산과 보유자산 세계화 방안	국가브랜드 확정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 등	문화유산, 문화정체성		
UNESCO 문화정책의 재구성 발표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	문화다양성 지속가능발전							제4회 WCCS	젠트리피케이션 기술을 통한 도시 문화생활
제9회 ACF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창조도시 지속가능발전								

연도	국제 문화의제			각 정부 문화계획			
		논의 내용	키워드	계획	방향	과제	키워드
2016	제7회 WSAC	문화가버니스 지역이 상형식 접근법 등	지역, 도시문화				
	제7회 CMM	문화와 창조경제	문화, 경제		②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시너지 창출 방안	민간협력을 통한 한류 영역 확대 미래성장 동력 기반 강화(문화 창조융합발전), 재외 문화원을 통한 한류세계화	문화세계화, 문화융합, 미래기술
	제5회 WCCS	기후변화 난민문제 공공지원 협업 창조적 긴장	지속가능발전		③국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방안	문화가 있는 날 확산 세대별 문화향유 프로그램 확대 행복한실버세대 등	문화향유
	제10회 ACF	창조산업과 도시	문화산업, 도시재생, 문화융합, 기술				
2017	제6회 WCCS	시민 참여 메이커 문화 4차산업혁명	문화민주주의, 문화융합, 미래기술				
	제11회 ACF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도시	4차 산업혁명, 문화도시				

제3장 ●●

**문화정책 환경,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제1절

정치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이슈

1. 정치 환경의 변화 및 전망

미래 보고서들은 정치 환경 변화에서 국제질서 재편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정치권력의 양극화와 다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한 예로, 미국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는 2030년 미래보고서(NIC, 2012)에서 이데올로기 분쟁이 증가하면서 국가 내부의 분쟁은 감소하는 대신에 국제적인 갈등과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세계적 하드파워의 한계에 따른 권력 분산이 중요한 메가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그 전후 시기의 보고서(NIC, 2008 & 2017)에서도 공통적이다. 특히 후자(NIC, 2017)의 경우에는 양극화와 다극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급격하게 성장한 데 따른 갈등 및 불안감 증가와 관련된다. 한편, NIC는 미래예측을 통해서 2030년의 가상 시나리오 중 하나로 국가 하위 단위의 권력 확대를 제시하였다(NIC, 2012: 283-288). 이 시나리오에서는 국가는 지속되지만 중앙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하위 정부나 비국가 세력의 권위나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제질서의 양극화와 다극화는 아시아로의 권력 이동을 지속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밀레니엄프로젝트(The Millennium Project)는 2030년에는 다방면의 글로벌 위기로 인해서 생태학자 길딩(Gilding, Paul)이 예측한 ‘대붕괴(The Great Disruption)’가 진행되고, 국제질서에서 아시아의 권력이 북미와 유럽을 능가함으로써 다국적 리더십으로 권력이 이양될 것으로 예측하였다(박영숙 외, 2011 & 2012).

다른 한편으로, 정치 불신으로 인한 위기도 주요한 국제정치 트렌드로 제시된다(홍성주, 2016). 이는 특히 리더십의 위기와 관련되는데, 세계경

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글로벌아젠다위원회(Global Agenda Councils: GAC)는 10대 글로벌 트렌드의 하나로 세계적인 리더십의 위기를 선정하고, 이 문제가 다른 트렌드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리더십 및 비즈니스, 정부, 학계, 시민사회 간의 협력 강화가 세계적인 관점에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WEF, 2015). GAC의 조사는 단기 트렌드를 주로 다루었지만, 각종 미래예측 연구에서는 제시된 트렌드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리더십 문제는 미국 중심의 일강 체제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양강 체제로 재편되고, 국가 간 분쟁과 연계된 국제질서의 다극화 양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특히 다극화라는 문제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반발로서 약소국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는 현상과 밀접히 관련된다. GAC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민족주의 강화가 10대 글로벌 트렌드의 하나로 꼽혔고, 특히 유럽, 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WEF, 2015: 30).

이와 같은 국제정치 질서 변화는 미국과 중국 간 국제 정치·경제에서의 권력 갈등 심화와 함께 약소국의 객체화를 초래하고, 그 과정에서 배타적 민족주의나 종교적 배타주의가 국제정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위기담론도 증가하고 있다(김태현, 2016).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민족주의의 부상 등이 과거사 문제와 얽히면서 역내 국가 간 갈등과 긴장, 경쟁을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되고(NIC, 2012 & 2017), 최근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이러한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단기간에 양적인 고도성장을 경험하였고, 정치적으로 짧은 민주화의 경험을 지니는 등 정치·경제의 압축적인 발전 과정을 겪었다. 그 결과로써 대외적으로 위상이 향상되었지만, 국내적으로는 압축적인 발전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 갈등은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조화순 외(2016)는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통해서 한국정치의 트렌드를 ‘정치권의 양극화’, ‘소셜미디어의 솔림’, ‘보스와 계파정치’, ‘이미지와 평판의 정치’, ‘세대 갈등의 정치’, ‘일상의 정치화’, ‘언론생태계의 붕괴’라는 7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도 28개 이슈를 미래이슈로 선정한 바 있다(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 KISTEP · KAIST, 2015). 그 중 정치 분야와 관련하여 ‘식량안보’,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북한과 안보 · 통일문제’, ‘전자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선정되었다. 특히 ‘북한과 안보 · 통일문제’는 10대 이슈이자 우리나라에 특화된 이슈로 선정되었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력이 큰 이슈로 평가하였다.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은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은 이슈로 분석되었는데, NIC의 미래보고서(NIC, 2012 & 2017)에서도 동아시아의 역학 관계에 의한 갈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선행연구(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2016)에서는 우리사회의 변화를 ‘저성장 시대’, ‘삶의 질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국가 거버넌스의 다양화’, ‘저출산 · 고령화’, ‘불평등 심화’, ‘직업의 변화’로 분석하고, 해결할 절대과제로 ‘저출산 · 고령화’, ‘사회통합 · 갈등해결’, ‘평화(통일)과 국제정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 ‘지속가능한 민주복지국가’,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와 과제에서 평화(통일)와 국제정치는 우리의 독특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 국내외의 다른 미래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 국가 거버넌스의 다양화라는 문제는 행정부 중심의 의사결정구조가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시민단체의 참여 및 참여 확대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 외에 사회통합과 갈등해소, 지속가능한 민주복지국가도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와 함께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1〉 주요 미래 보고서의 국내외 정치 환경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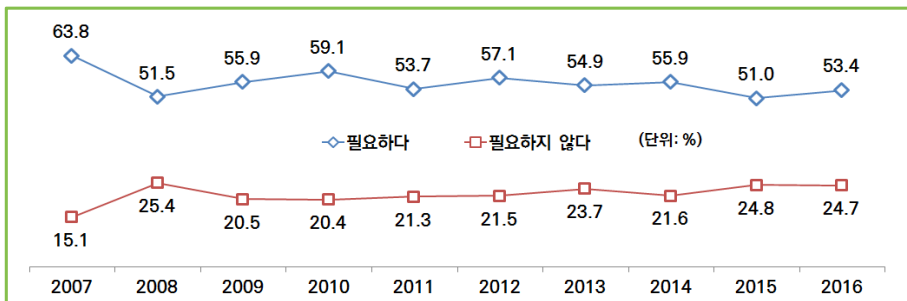
출처	이슈	
NIC (2012 & 2017)	분쟁의 증가와 분산되는 권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데올로기 분쟁의 증가 • 국내 분쟁의 감소와 국제 분쟁의 증가 • 세계적 하드파워의 한계
	지역적 불안정성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잠재적 갈등 증가 등 아시아의 지역 불안 • 타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유럽의 위기 안정 제공능력 약화
	아이디어와 정체성이 배타의 물결을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의 연결성 증가와 저조한 성장이 사회적 긴장을 고조 • 포퓰리즘의 증가가 자유주의를 위협 • 일부 국가 지도자들의 국가주의를 이용한 통제 강화 • 종교의 영향력 증가
	더 어려워지는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 불신, 양극화, 새로운 문제 등이 정부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 • 기술 발전으로 정치 행위를 가로막거나 우회할 수 있는 플레이어 범위 확대 • NGO, 기업, 역량이 강화된 개인 등의 증가로 세계적인 문제의 관리가 어려워짐
	분쟁의 본질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대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약소국의 불안 지속 •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기술의 확산으로 충돌 위험성 증가 • 기술로 파괴되는 사회의 증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 KISTEP · KAIST, (2015)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 독도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의 급부상(수출경쟁, 생산기지의 중국이전, 대중 경제의존 심화) 등
	북한과 안보 · 통일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지적 테러 가능성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 등 남북 분단 상황에서 통합에 이르기까지 발생하게 될 다양한 이슈 등
	전자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술로 인한 직접 민주주의, 거버넌스 변화, 전자정부 구현에 의한 행정 서비스 개선 등
	글로벌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블록화 등 국제질서의 다극화, 핵확산 금지 환경 이슈에서의 상호의존성 증대로 글로벌 거버넌스 · 파트너십 확대 등
KAIST 문술미래 전략대학원(2016)	국가 거버넌스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변화
	불평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 고착화로 사회의 역동성 감소
	사회통합과 갈등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심화 • 관용과 포용, 나눔과 배려는 점차 사라지고 이기주의와 집단적 배타성은 증가
	평화(통일)과 국제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평화의 구조적인 안착화 및 제도화 •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의 단결과 지혜로운 대외정책
	지속가능한 민주복지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포퓰리즘과 과대공약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 • 복지와 민주주의 선순환 필요성

2. 문화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이슈

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남북문제

정치 환경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현상은 양극화(G2)와 다극화다. 이는 신냉전체제와 신고립주의의 부상, 자국중심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 확산 문제와 연동되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갈등을 증가시키고 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역사, 영토,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내 국가 간 갈등이 지속 및 심화되는 양상도 전개된다. 국제정치 질서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구조적으로 대결해 온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보와 갈등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김태현, 2017). 이로 인해 역내 역학 관계와 갈등이 더욱 복잡해지고, 국내적으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을 두고 갈등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동아시아의 정세 불안과 북핵 문제는 남북 관계의 단절을 지속시키고 70년 이상 지속된 분단 상황과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를 보면, 해마다 약간의 증감이 있지만, 대체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줄고,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늘어나는 추세다([그림 3-1] 참조).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을 희망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다른 조사 결과들(최인수 외, 2016; 박주화, 2017)에서도 확인된다.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7) 참조.

[그림 3-1]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의 당위성이나 희망 정도가 약화된 것은 분단 유지 경향의 가속화, 통일 문제가 개인 생활과 분리되어 인식되는 경향,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통일의식의 약화와 관련된다(박주화, 2017). 경제적·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나 남북의 긴장 국면 지속 등 다양한 요인과의 관련된다. 그 결과는 남북의 문화교류마저 위축시켜서 사회문화 분야 남북협력승인은 2005년 47건을 정점으로 급감하여 단절된 상태다(〈표 3-2〉 참조). 이런 상황은 남북의 경제적·문화적 이질화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통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북 이질화는 남북 주민 간 언어·문화·가치관·생활양식 차이로 인한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에 대비할 정책적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표 3-2〉 사회문화 분야 남북교류협력 승인 현황

연도	'91~'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계
현황	23	7	13	16	47	26	19	3	-	1	1	-	-	1	2	-	159

*자료: 통일부(www.unikorea.go.kr) '주요사업 통계(2017.10.1. 최종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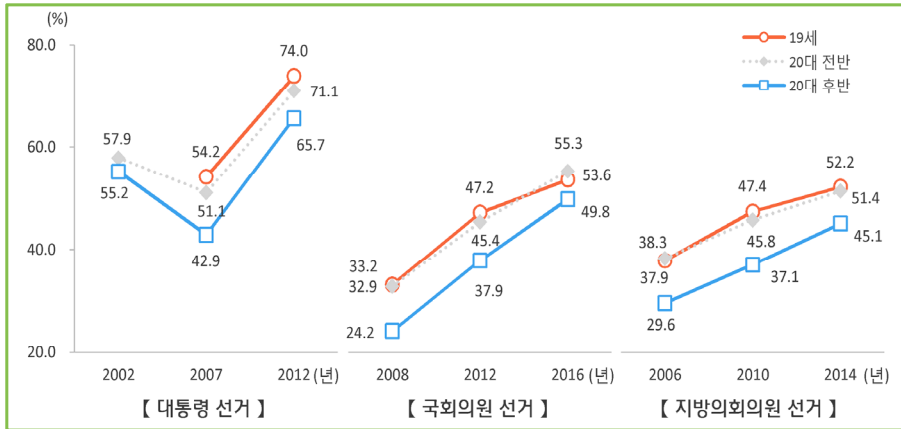
한편, 남북문제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문제와 직결된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통계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기준(잠정)으로 입국 탈북민 수는 총 30,885명에 달한다. 그 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통일 후 남북통합에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은 체제에 통합되는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에 정서적·문화적으로 적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탈북민의 정체성,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문화적 차이 이해 등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송은희·신은성, 2012). 또한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이 남한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언어는 남북 간 문화적 동질성의 핵심 영역이지만, 사용 어휘나 화법의 차이, 억양 차이 등으로 탈북민의 언어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권순희, 2014). 이와 같은 문화적 문제의 해소와 탈북민의 정체성 등이 한국사회 적응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 사회적 갈등과 정치 불신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는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기술 발전 등 제반 환경 변화와 함께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OECD와 우리의 사회적 갈등지수를 비교한 연구들(정영호·고숙자, 2014; 이부형·박용정, 2016)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갈등지수가 지속적으로 OECD 상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갈등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념 갈등, 세대갈등, 계층 갈등, 성별 갈등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갈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은 사회나 타인에 대한 불신, 리더십의 위기와 관련한 정치 불신으로도 이어진다.

정치 불신은 글로벌 정치 트렌드의 하나이며,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 불신은 높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홍성주, 2016). 2001년, 2011년,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정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의 정치 현실에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는 2001년 74.1%, 2011년 76.0%, 2016년 75.5%로써 지속적으로 7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수 외, 2016; 엠브레인 트렌트모니터, 2011).

그런데 정치 불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19세 이상 청소년층의 선거 투표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 통계(통계청, 2017a)를 보면, 19세 연령층은 2006년에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부여 받은 이래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타 연령에 비해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그림 3-2] 참조). 이러한 현상은 반값등록금 논쟁이나 탄핵 정국에서 촛불집회처럼 일상적 이슈의 정치화 내지 일상의 민주주의라는 측면과도 관련된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증가는 디지털기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발달이 사회경제적 이슈와 결합하는 과정 및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와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료: 통계청(2017a).

【그림 3-2】 청소년의 선거 투표율

네트워크 사회는 전통적 공동체나 정치 행위를 약화시키지만, 디지털 기술에 의해 네트워크화된 개인의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활성화한다. 그에 따라서 SNS를 활용한 주민입법제도나 예산 수립 또는 집행에서 주민참여 등의 신직접민주주의 및 시민의 분노 표출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박영숙 외, 2011: 94-97). 신직접민주주의는 정보통신기술과 뉴미디어 발전으로 기존에 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포함한다. 그 특성상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또는 인터넷민주주의(Internet democracy)로도 이해되는데, 이를 통해서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촛불집회와 정권 교체 과정은 소통, 공감, 정의라는 화두를 던지며 새로운 민주주의 방식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정치 불신과 리더십 위기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 사회나 조직의 구조와 관련한 제도로서 관료제의 위기를 잘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관료제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등장하여 정부조직을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관료제의 효율성이 수직적 위계질서로 인해 경직되고 비효율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홍성주, 2016). 정권 교체라는 일련의 정국은 경직화된 관료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다. 지역분권과 문화자치, 문화민주주의

정치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며 국가 권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하위 단위, 즉 지역 단위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고, 정치 주체도 중앙정부나 행정 주도에서 비국가적 단위의 참여와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세계적인 다자 간 기구보다 도시네트워크나 지역네트워크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NIC, 2012). 이러한 상황은 지역분권의 강화와 맞닿아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역분권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현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지역에 이양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을 통한 법적 기반 확보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화정책에서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는 문화자치와 연결되고, 지역분권과 문화자치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것이 문화민주주의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민주주의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현재 및 미래 진행형의 과제다. 문화자치와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념들은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과 이듬해 1월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반영되었지만, 문화행정은 이와 괴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정책에서 지향해야 함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문화적 양상을 비판적으로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하는데(김경욱, 2003: 3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지고 문화행정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 번 문화민주주의가 문화정책의 이슈이자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화민주주의는 ‘모든 이에 의한 문화(culture by everybody)’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문화민주화가 문화예술 향유와 접근성을 중시한다면, 문화민주주의는 문화를 정치적 자유로 해석하며 주체적·실천적인 문화 활동과 정치적·성적·민족적·사회적인 다양성과 다원성을 중시한다(김경욱, 2003; 김용신, 2008). 따라서 문화다양성 개념과도 만나는데, 다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도 문화민주주의의 이와 같은 특성과 관련된다.

제2절

경제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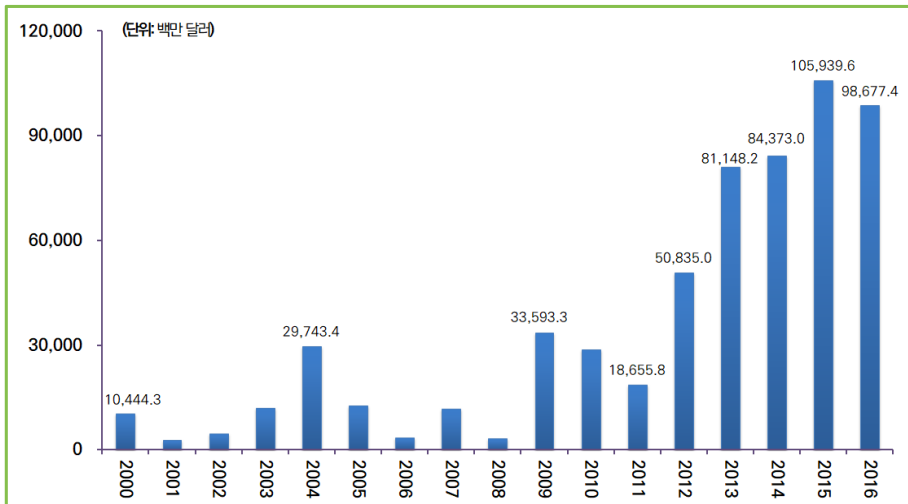
1. 경제 환경의 변화 및 전망

세계경제는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다양한 지역 및 국가경제”라는 특성을 보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NIC, 2012: 114). 최근에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가 침체된 상황이다. 2017년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통상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은 금리상승을 이끌고,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인해 달러화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 급락과 내수 위축이 세계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상황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 내지 불황이 예측되고 있다. 미래 보고서들(NIC, 2017; 박영숙 외, 2012)에서는 부유한 국가의 노화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가 새로운 기회의 창조와 함께 해고와 일자리 감소, 가난한 나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세계은행도 보호무역주의 증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금융시장 붕괴 가능성, 약화된 장기 성장 잠재력, 개발도상국에서 투자 부진이 선진국에서 생산성 향상의 정체와 함께 장기 해결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WBG, 2017).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각종 장기 전망은 경제성장이 이전 시기보다 둔화 내지 정체될 것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OECD, 2012; PwC, 2017).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센터(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 CEBR)의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30년에 우리나라의 G7 합류를 예상(CEBR, 2015)하기도 했지만, 국내경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성장 동력 약화에 처해 있다.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특히 2013년 이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6%를 상회하고 있지만, 그 배경이 유가 하락과 내수 위축 등의 요인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기에 향후 경상수지 흑자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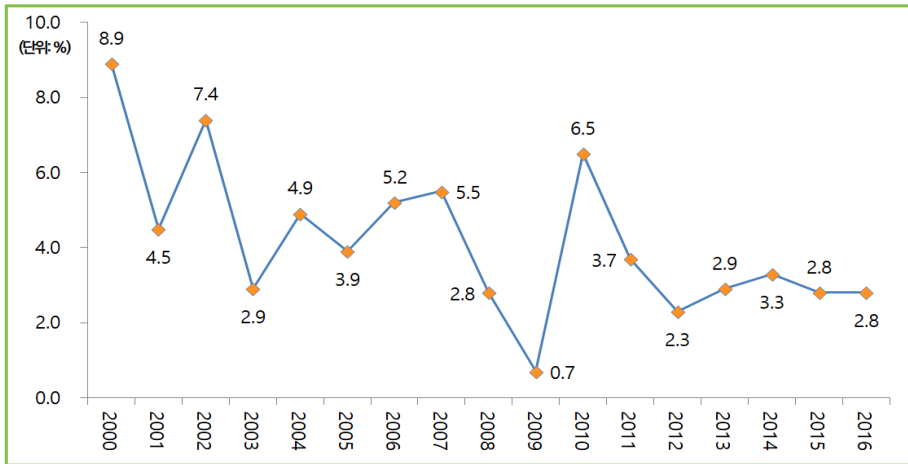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국가통계포털 kosis.kr) 참조.

[그림 3-3] 연도별 경상수지 추이

경제성장률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12~2016)의 국내 경제성장률은 평균 2.8%에 머물렀다. 세계은행이 전망한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2.7%(2017.6. 발표 기준)이고, 한국은행의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도 2.8%(2017.7. 발표 기준)로써 국내외적으로 2%대에 머문다. 이와 같은 저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권규호·조동철, 2014), 우리나라의 실질GDP 잠재성장률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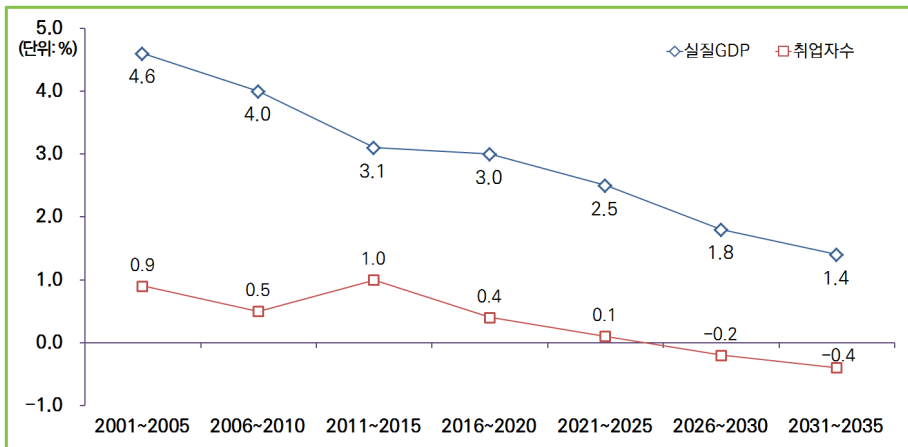
1) 한 예로, 국제유가(Dubai유 기준)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대로 지속되고 있으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공급 축소로 인해 그간의 공급과잉이 해소됨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원유생산,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3.0%에서 2021~2025년 2.5%, 2026~2030년 1.8%, 2031~2035년 1.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취업자 수도 2026년 이후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저성장은 기존 성장 동력의 고갈과 한계, 성장을 전제로 작동해 온 한국 경제시스템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거시경제분석 지표'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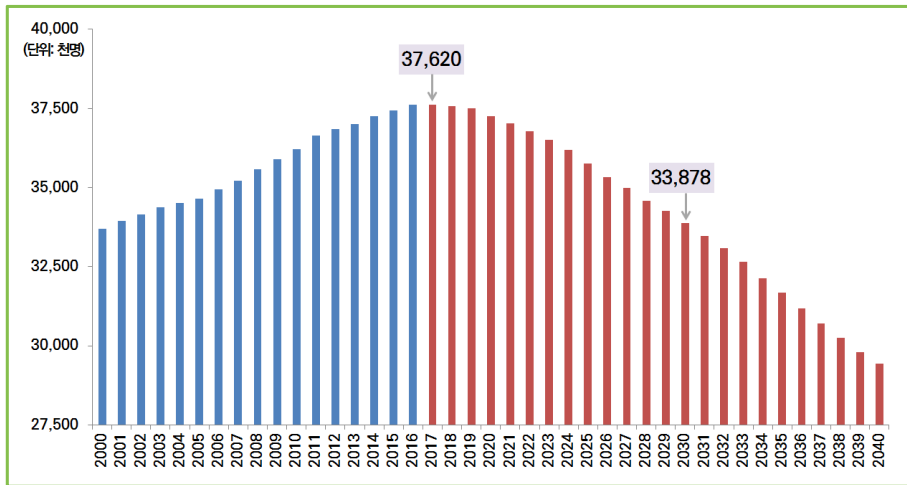
[그림 3-4]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추이



*자료: 권규호·조동철(2014: 11 (표 1-2)) 참조.

[그림 3-5]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 경제 이슈로 청년실업 및 고용 불안과 관련한 일자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KISTEP·KAIST, 2015).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운용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2017년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working-age population)가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국내 생산과 소비활력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이 저성장을 지속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국가통계포털 kosis.kr) 참조

*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중위 추계(기본 추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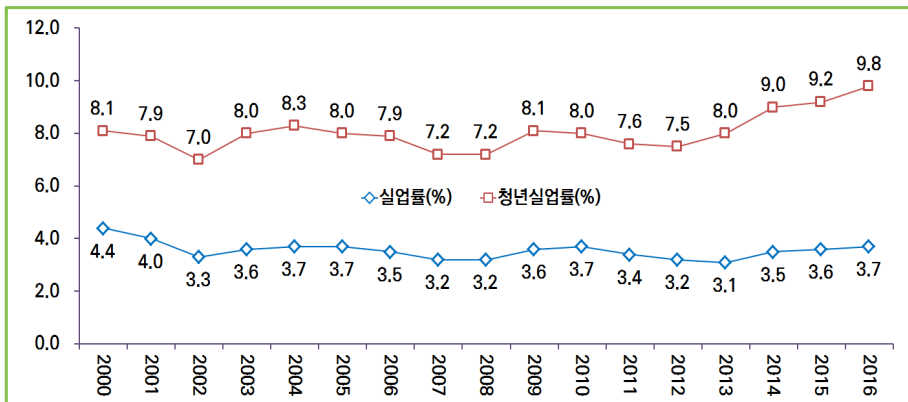
[그림 3-6]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

2. 문화정책을 둘러싼 경제적 이슈

가. 저성장 고착화와 경제 양극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주요 기관 전망치를 밑돌면서 장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공급과잉 후유증과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으로 투자심리 위축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 및 소득격차 확대에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총수요 결핍이 세계 경기 및 국내 경기 회복을 제한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로 인한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이 민간소비를 둔화시키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2%를 유지하며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해에 따른 증감은 있으나 최근 실업률은 3.5% 이상, 청년실업률은 9.0%를 상회하는 실정이다([그림 3-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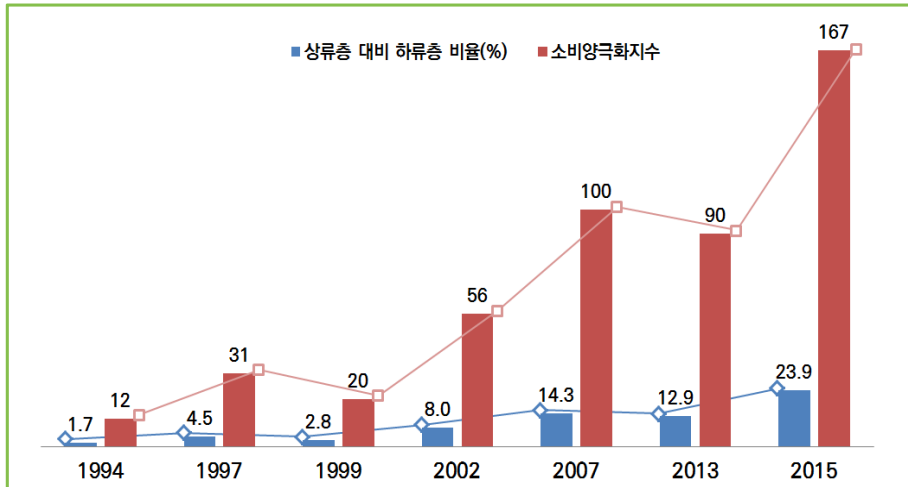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국가통계포털 kosis.kr) 참조.

[그림 3-7] 우리나라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변화 추이

이와 같은 저성장 상황에서 소득 분배의 악화는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OECD의 ‘일자리의 질(job Quality)’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2007년에 0.34로써 조사된 24개 국가 중 24위였고, 이러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2013년에 0.32로써 22개 국가 중 21위, 2014년에 0.32로써 8개 국가 중 7위에 머물렀다.²⁾ 소득의 분배 악화와 양극화는 다시 소비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조사 결과, 소득기준으로 중산층 비율(76.0%)과 소비생활에서 중산층 인식 비율(65.2%) 간 차이를 의미하는 ‘소득-소비 중산층 격차’는 10.9%p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에 비해서 소비를 통해 중산층이라고 체감하는 비율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 OECD 통계 누리집(stats.oecd.org).

상류층에 대한 하류층 비율은 23.9배로 나타나서 2013년의 12.9배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소비양극화지수(2007년=100 기준)도 1994년 조사 이래로 최고치인 167로 나타나서 소비생활의 양극화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황은애·정영훈, 2016: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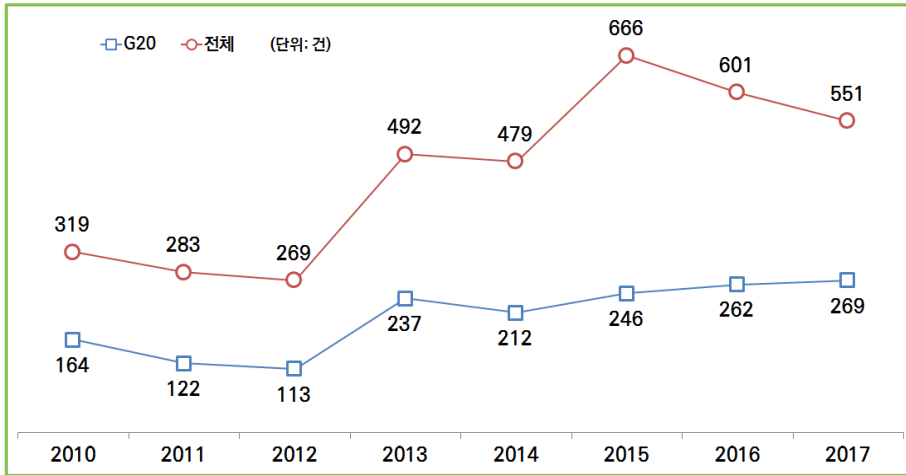


*자료: 황은애·정영훈(2015: 54 <표 2-6> 참조).

[그림 3-8] 소비양극화 지수

나.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는 대외경쟁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자국중심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 예로 경제정책연구센터(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EPR)에 따르면, 해마다 편차는 있지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가 급증하였고 G20 국가들에서 그러한 경향이 지속되는 경향이다. 특히 자국우선주의, 반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확대되며 전 세계적인 통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Evenett & Fritz, 2017).



*자료: Evenett, Simon J. & Fritz, Johannes(2017) 및 Raw Data 참조.

[그림 3-9] 보호무역주의 조치 현황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 흐름 속에서 국내의 경제 환경도 다양한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대내외 수요 부진, 판매가격 정체, 부실산업 구조 조정 여파 등으로 수출 및 제조업 위축이 지속되고 내수마저 둔화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중장기적 통상전략 및 산업별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의 한류 콘텐츠 규제 등과 같이 콘텐츠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문화 분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 위축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 국제문화교류의 위축 등의 형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 장기불황 시대의 자발적 가난

자발적 가난(Voluntary Poverty)은 1973년에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Schumacher, E. F.)가 그의 저서 「작은 것은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에서 탐욕스러운 이기주의를 소멸시키기 위한 첫걸음은 자발적 가난이라고 한 데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물질주의와 그것의

소산, 즉 자신의 발전에 어떤 한계도 없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현대 경제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거대한 부가 축적되어 있지만,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서 가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자발적 가난은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근본 원리가 된다. 과도한 경쟁사회에 살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은 ‘부는 성공, 가난은 실패’라는 인식을 변화시킨다. 그에 따라서 소유를 지상과제로 여기는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정신적·철학적 비움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통해 불필요한 물건과 욕심을 버리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라이프 다운사이징(life downsizing)이나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및 여유를 추구하며 삶의 속도를 낮추는 다운시프팅(downshifting)과도 연결된다.

국내적으로는 자발적 가난을 추구하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은 고도성장기의 성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행복을 함께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과 관련된다. 우리 사회는 지난 세기에 고속 성장을 거듭하였지만, 국민의 행복감은 높아지지 않았다. 유엔이 2017년에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17)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4~2016년 평균 55위에 불과하여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국민의 행복감이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다. 다만, 2005~2007년과 2014~2016년 기간을 비교할 경우에는 다소 상승(0.299)한 것으로 나타났다(Helliwell, Layard & Sachs eds., 2017).

우리 국민의 낮은 행복감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건강, 가족, 일과 삶의 균형, 교육, 환경, 공동체 등을 포함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학업과 구직 등 다방면에서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가

한 2030세대의 상황과 맞물려 일상 속 작은 여유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휘게라이프(Hygge life³⁾’, 나만의 가치와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 추구 경향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라.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부상

자연과 공존을 중시하며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원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대안적 삶을 모색하고 공생사회를 지향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상한 사회적경제는 이윤의 극대화를 최고 가치로 삼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에 우위를 두는 사람 중심의 경제활동이자, 여러 경제주체를 존중하는 다양성의 경제다. 사회적경제는 국가, 시장, 공동체의 중간 영역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경제가 공식경제와 비공식 경제, 영리와 비영리, 공과 사의 경계에 존재함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공동체가 새로운 거버넌스의 원리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들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에 위기가 도래하면 부상하고, 그 위기가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특징을 보인다. 그 논의에서는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회의 혹은 자본주의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이나 보안책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정상훈, 2014). 우리의 경우, 양극화 해소나 일자리 창출 등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라는 요구와 관련된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1.3. 제정)과 기획재정부 소관 「협동조합 기본법」(2012.1.26. 제

3) 덴마크 소재 행복연구소(Happiness Research Institute)의 CEO인 비킹(Wiking, Meik)은 그의 저서 「Hygge life」에서 덴마크가 세계행복지수 1위인 이유를 ‘휘게’에서 찾았다. 휘게란 ‘웰빙(wellbeing)’이라는 뜻의 덴마크어인데, 그는 휘게를 사물보다는 어떤 정취나 경험, 분위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정)이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행정자치부 차원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의 사회적기업 인증현황을 보면, 2017년 9월 12일 집계 기준으로 전국에 1,814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다. 문화 분야에서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인데, 문화 분야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각 연도 9월 집계 기준으로 2013년 143개, 2015년 183개(문화·예술형 175개, 문화재형 8개), 2017년 221개(문화·예술형 213개, 문화재형 8개)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 증가와 맞물려 정책적 관심과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자료: (사)한국사회적기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누리집(www.jcse.kr).

[그림 3-10] 사회적경제의 조직 유형

한편, 사회적경제와 함께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공유경제는 유·무형의 자원을 소유하는 대신에 서로 대여하고 차용하여 쓰는 협력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기반의 신경제활동 방식이다. 공유경제는 경제적·사회문화적·기술적 요인이 복합되어 등장하였는데, 특히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자본주의의 위기, 저성장 지속,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스마트폰 보급과 모바일 기술 발전, SNS 발달에 따른 개인 간 연결 촉진 등이 주요 배경이다. 공유경제는

201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공유경제가 상용화 및 확산되는 변곡점(Tipping Point)을 2025년으로 전망하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25년 공유경제시장 규모를 3,350억 달러로 예상하였다(PwC, 2015; 박문수, 2017).

국내에서 공유경제는 ICT 및 모바일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 온디맨드형 서비스, 비용절감, 협력소비를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인데, 그 유형은 거래방식에 따라 '1)제품·서비스 공유', '2)불필요한 제품의 재분배', '3)커뮤니티 내 사용자간 협력'으로 분류된다(김유진, 2015). 정책 차원에서 공유경제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논의 및 공유분야 스타트업(startup) 기업에 대한 인증·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모색 중이다. 한 예로, 서울시는 2012년 9월에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관련 조례 제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유경제의 주요 분야는 에어비앤비(AirBnB)로 상징되는 숙박을 비롯하여 교통, 금융, 공간 등이지만, 자원과 이용자 특성에 따라 지식, 기술, 재능 등 무형자원의 공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예술이나 이야기, 공간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창작처럼 문화 분야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표 3-3〉 국내 공유경제 기업 사례

자원	업체 명	서비스 내용	누리집
여행경험	마이리얼트립	현지인 여행가이드 서비스	www.myrealtrip.com
	플레이플래닛	현지인 여행가이드 서비스	www.letsplayplanet.com/ko/
의류	열린옷장	면접용 정장 대여 서비스	www.theopencloset.net
	키플	유아 및 어린이 의류교환 서비스	www.kiple.net
공간	BnBhero	민박 공유 서비스	www.bnbhero.com/ko
	코업	사무공간 대여 서비스	www.co-op.co.kr
지혜, 경험	위즈돔	지혜, 경험 이야기 공유 서비스	www.wisdo.me
	트립플	여행경험 콘텐츠 서비스	tv.naver.com/letstudio
도서	국민도서관책꽂이	도서 대여 서비스	www.bookoob.co.kr
식사	집밥	소셜다이닝 서비스	www.zipbob.net

*자료: 클라우드산업연구소(2013: 37) 부분 수정.

제3절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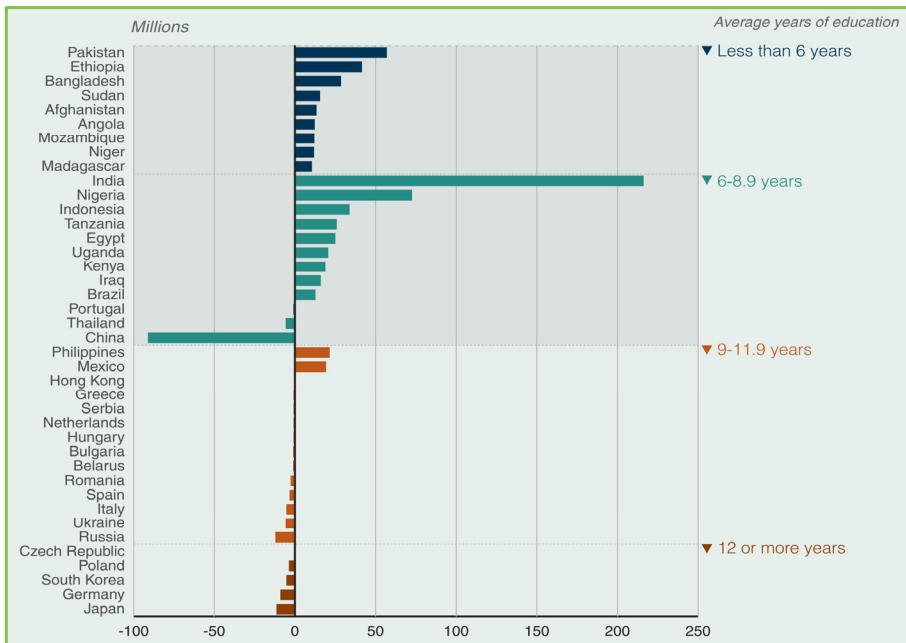
1.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및 전망

미래 보고서들에서는 정치, 경제, 기술 및 환경 변화가 가져올 사회문화적 변화를 중요하게 다루며, 사회문화 분야의 내부 환경 변화에도 주목한다. 사회문화 환경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다. 현재 세계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유럽처럼 인구 감소 지역이 있는 반면,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역 간 인구 증감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 세계 인구는 매년 1.24%씩 증가했고, 그 속도가 다소 완화된 현재도 1.10%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증가로 세계 인구는 2030년에는 2017년 75.5억 명보다 약 13%가 늘어난 85.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UN, 2017).

생산가능인구는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북미나 유럽,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구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이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 및 보건 수준의 향상은 인류의 기대수명을 급격히 증대시켰고,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져오며 젊은 국가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NIC, 2012). 그에 따라서 중위 연령도 2015년 29.6세에서 2020년 30.9세, 2030년 33.0세, 2050년 36.1세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UN, 2017: 3).

세계화, 지역 및 국가 간 인구구조의 차이, 경제적 불평등, 기후 변화 등은 국제적인 인구이동과 국가 또는 지역 내부의 인구이동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난민의 증가에 따

른 인구이동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간 인구이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자신이 태어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거주하는 이주자 수는 지난 20년간 38% 가량 증가했다(NIC, 2017). 다문화사회화의 진전 및 세계화된 노동시장의 등장으로 숙련인력이 한 국가 이상의 노동시장을 경험하는 한편, 인재 유치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가 또는 지역 내부의 인구이동은 농촌 거주자의 도시로의 이동을 통해 도시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NIC, 2012; 박영숙 외, 2012).



*자료: NIC(2017: 9)

*주: 인구의 증가 및 감소가 큰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결과임

[그림 3-11]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변화(2015~2035)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이데올로기, 종교의 영향력 증대, 개인의 권한 확대, 양극화, 도시화, 여성의 권리 신장, 윤리적 문제의 등장 및 기준 변화 등이 트렌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서 갈등 증가 및 그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NIC, 2012; 박영숙 외, 2012)

& 2013). 우리 내부적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의 지속으로 인한 불평등의 구조화와 함께 세대별·성별·계층별 갈등 심화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이러한 갈등의 해소가 우리 사회의 현재 및 미래의 과제로 제기된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2016). 이와 함께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는 삶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도 나타난다. 특히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박영숙 외(2011)는 미래 트렌드에서 문화 분야를 중요하게 다룬다. 즉, 기술의 발전으로 문화예술의 유통과 소비 구조가 변화하며 문화예술 시장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다양한 과학기술 및 지식산업과 문화예술의 융합이 증가하고 문화예술이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영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문화예술 교육콘텐츠 개발,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문화정책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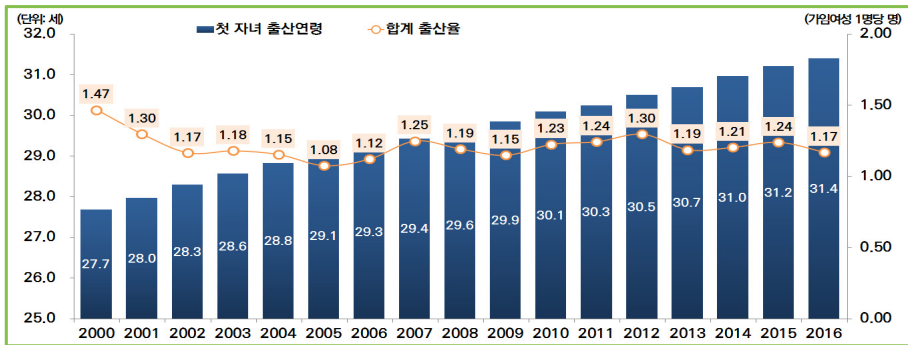
사회문화 환경 변화에서 현재 및 미래에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이슈를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인구구조 변화다. 그 중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심화, 국제적인 인구이동으로 인한 외국인 유입 증가, 1인가구의 증가와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으로 대표되는 가족형태 변화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사회적 양극화의 지속으로 인한 불평등의 구조화와 함께 세대별·성별·계층별 갈등의 심화다. 셋째는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추구 경향인데, 그에 따라서 소비에서도 양보다 질을 중시하며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는 인구구조 변화 및 도시화의 지속에 따른 축소도시계획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도심의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장소에 대한 문화적 소비가 가속화되며 문화 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다는 점이다. 끝으로 여섯째는 문화예술 분야의 메가트렌드로 여가의 강조, O2O(Online to Offline) 문화, 융합과 협력을 통한 예술생태계 협업, 집단지성의 영향력 증대, 문화다양성 사회의 본격화 등이 예측된다는 점이다.

가.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인구 오너스기로의 이행

1)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연령구조 변화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상징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주요 이슈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2년에 합계출산율⁴⁾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 미만으로 떨어지며 저출산사회에 진입한 이후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에 불과하다. 첫 자녀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연령도 증가하여 31.4세에 달한다([그림 3-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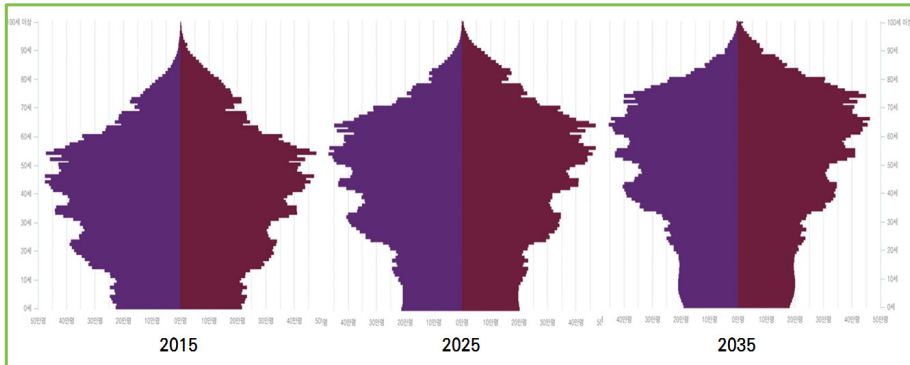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b 참조).

[그림 3-12] 합계 출산율 및 첫 자녀 출산 연령

출생아 수 감소와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른 수명 연장 등의 원인으로 인구피라미드 구조는 2016년 기준으로 30대~50대가 가장 넓은 형상에서 점차 윗부분이 넓은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유소년 인구(0~14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 규모는 2060년에는 2016년 규모의 약 6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

4)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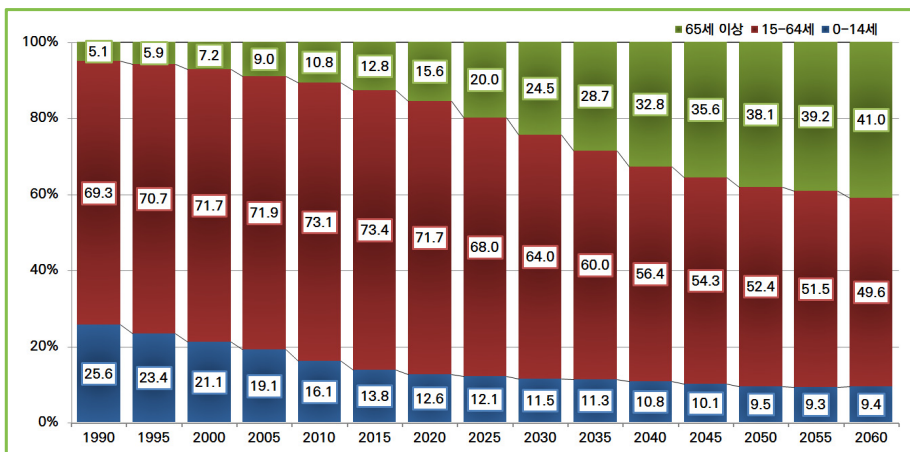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kostat.go.kr) '인구피라미드'.

*주: 중위 추계(기본 추계) 기준.

[그림 3-13] 인구피라미드 변화

2) 고령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인구 오너스기로의 이행 임박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 13.8%에서 2020년 15.6%, 2030년 24.5%로 증가하며 2060년에는 41.0%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비해서 유소년인구는 2017년 13.1%에서 2020년 12.6%, 2030년 11.5%로 감소하며 2060년에는 9.4%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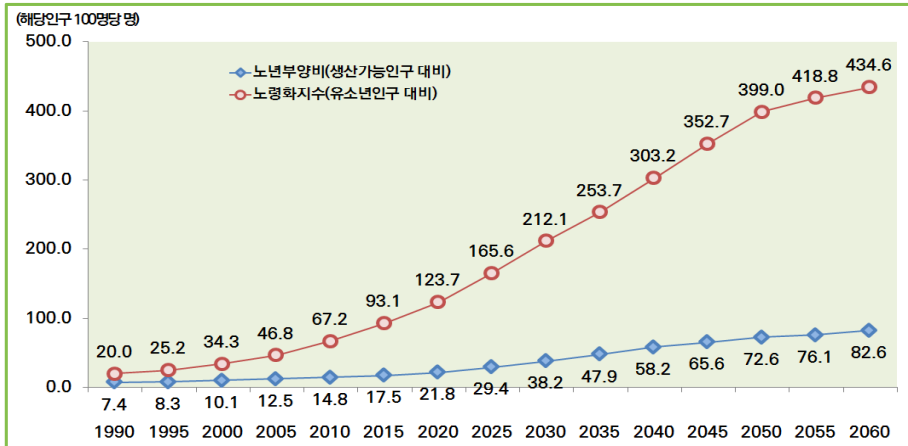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국가통계포털 kosis.kr).

*주: 2016년 12월 공표 및 중위 추계(기본 추계) 기준.

[그림 3-14]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도 2017년 기준으로 104.8명에 달하고,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12.1명, 2040년 303.2명, 2060년 434.6명으로 전망될 만큼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도 2017년 18.8명에서 2030년 38.2명, 2060년 82.6명으로 증가하며 부양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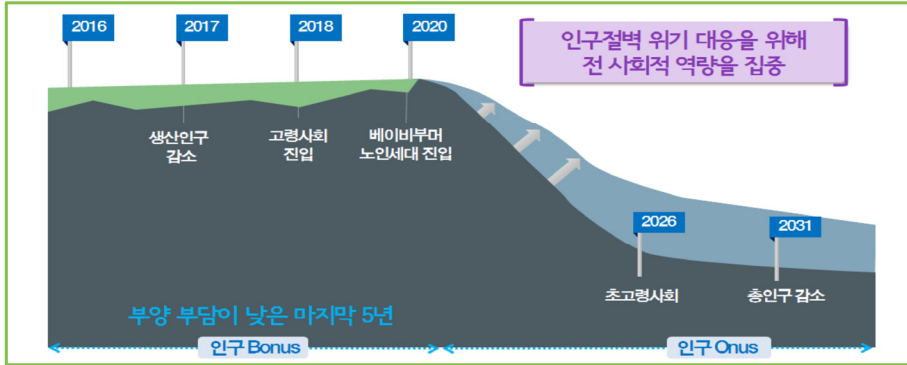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국가통계포털 kosis.kr).

*주: 2016년 12월 공표 및 중위 추계(기본 추계) 기준.

[그림 3-15]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 추계

통계청(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25만 명이며, 2031년에 5,29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에 차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2016년에 30대~50대 연령층의 인구보다 그 이상 인구의 층이 넓어지는 인구피라미드의 변화가 시작되고 2017년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 2018년에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이어지며 그간 풍부한 인적자원을 통해 성장을 이루었던 인구 보너스기가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되는 인구 오너스기로 이행할 것이 전망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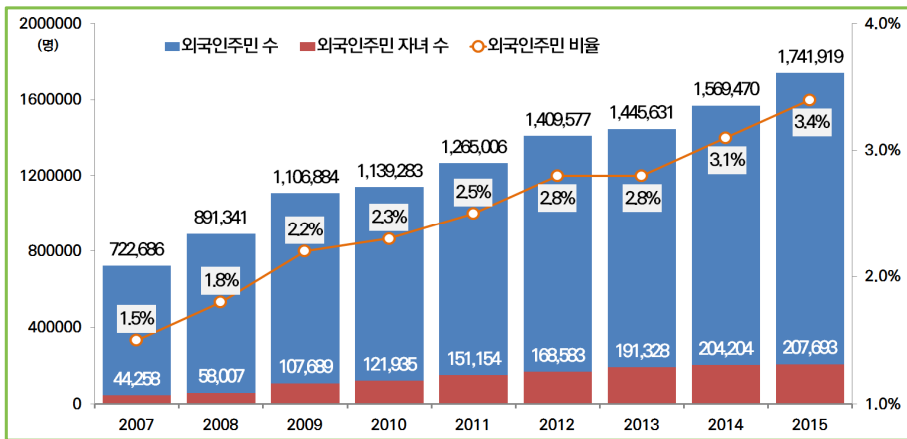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6: 8).

[그림 3-16] 인구 오너스(onus)기로의 이행

나.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1) 다문화사회화와 사회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총 인구 중에서 외국인주민 비율은 2007년 1.5%(722,686명)에서 2015년 3.4%(1,741,919명)로 증가하였다. 거주 유형은 근로목적이 66.4%로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 가족형성 목적도 25.5%에 달한다(행정자치부, 2016). 그에 따라서 외국인주민의 자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국가통계포털 kosis.kr) 참조.

[그림 3-17] 외국인주민 수 추이

이와 같이 외국인주민 증가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비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인식조사(중복응답) 결과(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7), 우리 국민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차별과 편견으로 상처받는 일이 많아질 것(54.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사회통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문화 충돌 발생(38.8%),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더욱 두드러질 것(35.1%), 외국인 노동자들의 낮은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의 고착화(31.1%), 일자리를 놓고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쟁과 갈등이 생길 것(30.3%)을 꼽았다. 이는 우리의 다문화사회화가 이주노동이라는 의미를 많이 포함하기 때문이며, 주로 저임금 영세사업에 한정된 이주노동자의 상황은 장기적으로 이주민 및 그 2세들의 계층 고착화, 이에 따른 갈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기선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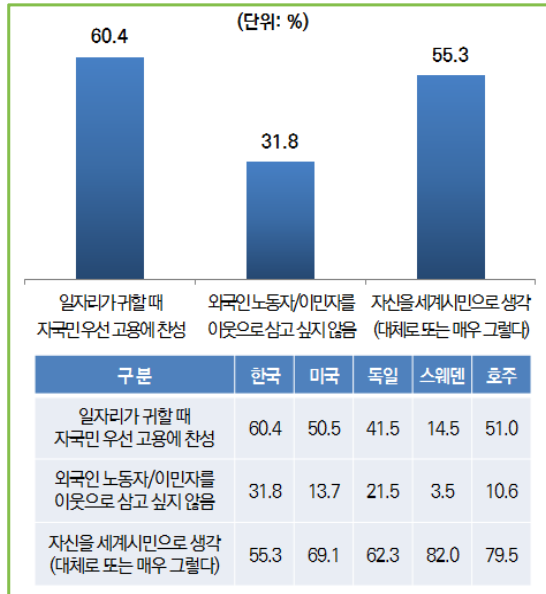
2)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

기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외국인과 이민에 대한 태도를 시계열로 분석한 연구(정기선 외, 2016)의 결과를 보면, 이민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고, 이민자 증가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국민은 한국인이라는 자각, 한국국적, 한국어 능력을 한국인이 되기 위한 3대 조건으로 인식하였고, 그 비율은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정체성 문제와도 관련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중단조사 연구(2011~2015) 결과(양계민 외, 2016),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인식은 75% 내외를 기록하며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학교 성적이나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중학교 진학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고 학업 포부도 고학년이 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수준, 사회적 위축 정도도 중학교 진학

이후 지수가 낮아짐으로써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15) 결과, 우리 국민의 다문화 인식은 성인 기준으로 2011년 51.2점에서 2015년 54.0점으로 개선되었다. 젊은 층일수록 수용성이 높아서 2015년 기준 청소년(중·고교생 포함) 67.6점, 30대 연령층 56.8점, 40대 연령층 51.5점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교육이나 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수용성은 높았다. 이에 비해서 이주민·외국인이 다수 취업한 업종 종사자의 다문화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외국인 주민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1.8%로써 다문화사회화를 일찍부터 경험한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다.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청소년층의 경우에도 ‘(출신국에 따른) 이중적 평가’,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 동화 기대’ 등의 평가지표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편이었다.



*자료: 여성가족부(20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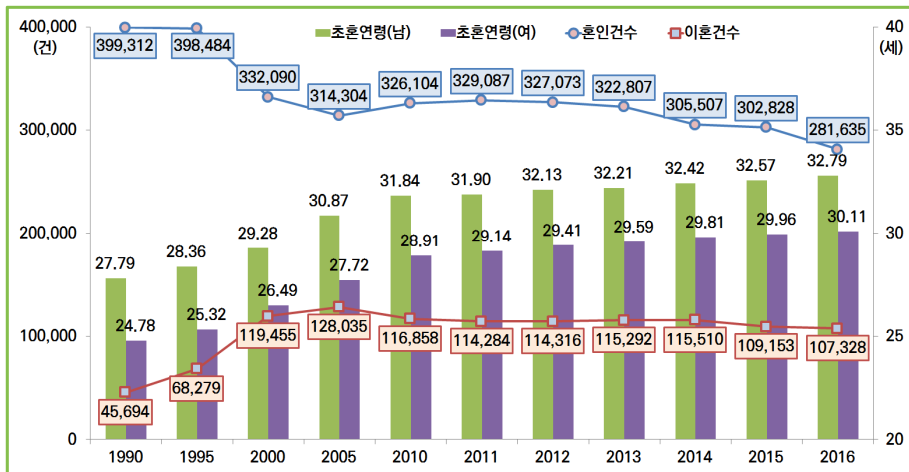
[그림 3-18] 주요 국가의 다문화수용성 비교

우리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의 역사와 경험이 긴 유럽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오랫동안 단일민족 이데올로기가 지배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생활방식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다문화사회화의 진전을 인정하고 다양한 삶에서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찾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영숙 외, 2012: 79).

다. 1인 가구의 확대와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

1)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2016년 우리 국민의 혼인건수는 28만 2천 건으로써 1990~2016년에 지속적 감소세를 보였고, 이혼건수는 10만 7천 건으로써 1990~2005년에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가 최근 10년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만혼의 영향으로 2016년 기준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2.8세, 여자 30.1세로써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고, 중장년층의 이혼이 증가하면서 평균이혼연령도 남자 47.2세, 여자 43.6세로 높아졌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여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0년 64.7%에서 2016년 51.9%로 감소하였고,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0년 56.6%에서 2016년 39.5%로 낮아졌다(통계청, 201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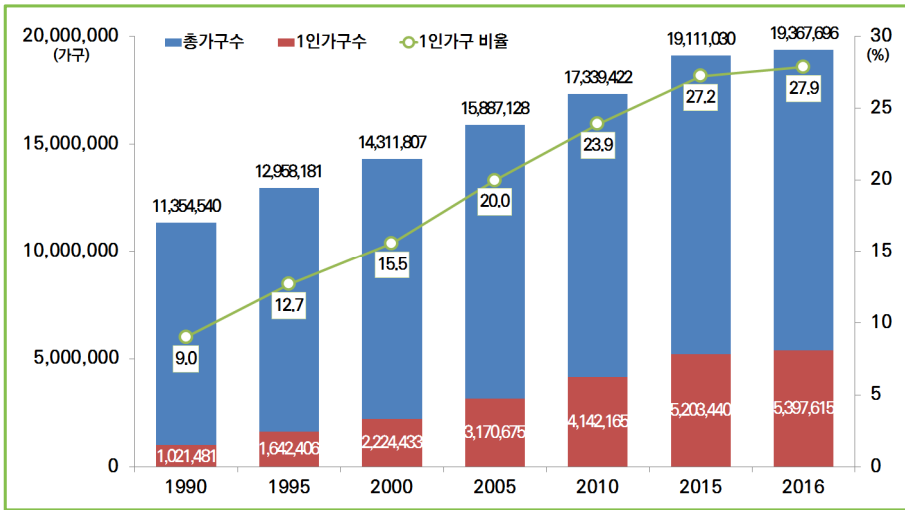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b) 참조

[그림 3-19] 혼인·이혼 건수 및 초혼연령

2)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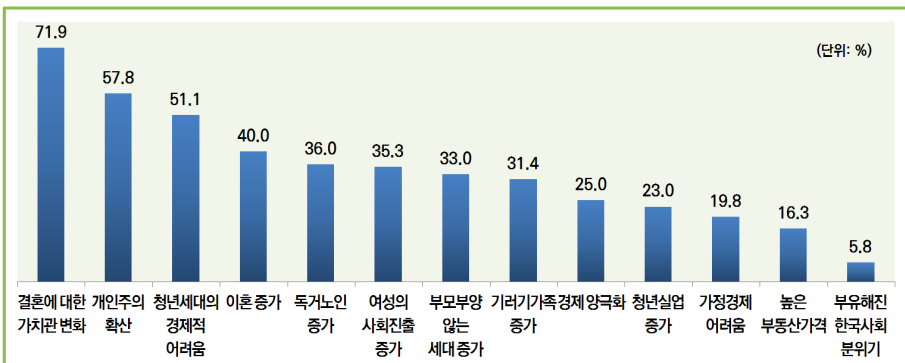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7.9%로써 2010년 23.9%보다 4%p 증가하였다. 1인 가구 증가로 가족 규모도 축소되면서 2015년

기준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2010년 2.69명보다 0.16명 감소한 2.53명에 불과하다(통계청, 2017b). 1인 가구 증가는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과 만혼 증가, 개인주의 확산, 노동시장의 경쟁구조나 일자리 문제 등과 관련된 청년세대의 경제적 어려움, 이혼 증가, 고령화, 노인 독거세대 증가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4).



*자료: 통계청(2017b).

[그림 3-20] 1인 가구 비율과 평균 가구원 수



*자료: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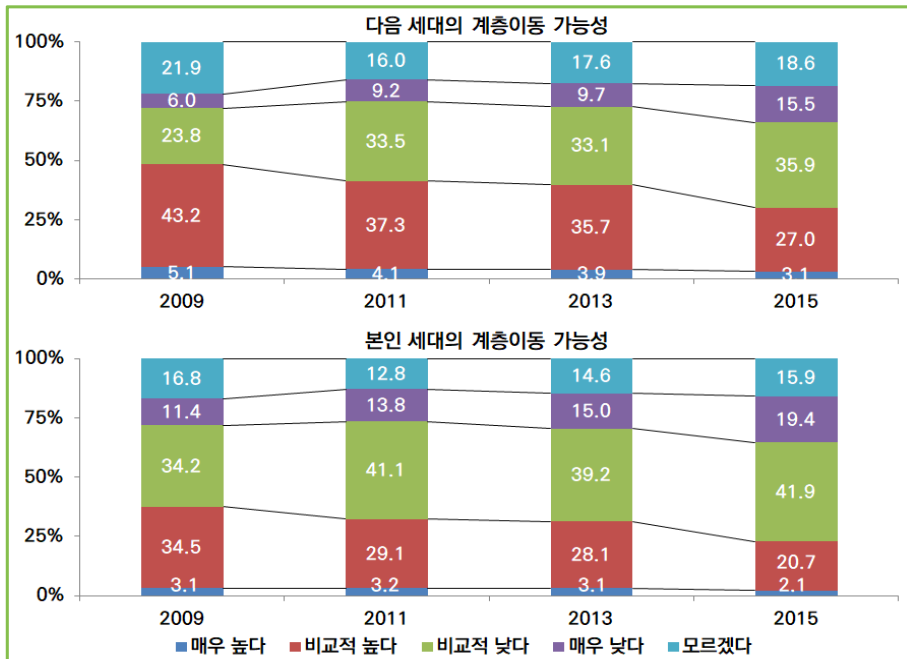
[그림 3-21] 1인 가구 증가 이유에 대한 국민 인식

1인 가구의 증가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여타의 사회적·경제적 문제 등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가족형태, 즉 결혼과 출산을 통해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에 기반한 신가족의 출현을 이끌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족, 결혼은 하지만 자녀는 갖지 않는 덩크(Double Income, No Kids: DINK)족, 서로의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해 부부생활은 유지하지만 따로 사는 이증주거(Living Apart Together: LAT) 부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미혼모 등의 증가로 인한 모자가족·부자가족과 같은 편부모가족, 동성혼 가족, 주거를 공유(share house)하는 사람들, 함께 식사하는(social dining) 사람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혼자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여행을 가는 등 혼자 활동하는 경향이 강한 나홀로족의 증가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라. 불평등 및 갈등의 지속과 심화

1) 심화되는 불평등

심화되는 불평등(inequality) 또는 격차(disparity)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이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의제 중 하나도 불평등과 관련된다.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2015년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보면, 상류층 대비 하류층 비율이 2년 전인 2013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소비양극화지수도 조사 이래 최고치에 달하였다(황은애·정영훈, 2016: 53). 소득 불평등은 1990년대 이후 점차 심화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로 악화되고 있다(오성재·주병기, 2016).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계층 이동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2017b)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점차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22] 참조).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국가통계포털 kosis.kr) 참조

[그림 3-22] 19세 이상 국민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불평등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며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와 구조화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갈등 해소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OECD는 불평등 문제 대응이 주요 성장 전략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과가 불평등하면 기회의 평등도 없다. 조세와 소득이전을 통한 재분배는 평등과 성장에 기여하는 강력한 정책도구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KISTEP·KAIST, 2015: 108-109 재인용)라고 권고한 바 있다.

2)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세대

한국의 청년인구(만 19세~39세)는 과거 ‘88만원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로 명명되고 있다. N포 세대란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혹은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다. 기존의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3포+‘내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 7포(5포+‘꿈’, ‘희망’ 포기)를 넘어선다.

N포 세대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함을 ‘헬조선’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헬조선은 조선시대의 ‘조선’에 ‘지옥(hell)’을 붙여서 ‘지옥 같은 한국사회’라는 부정적 인식을 상징하는 용어다. 초·중·고 시절에는 시험성적과 입시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강요받고, 대학에서는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용,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하고 대출하는 청년 수가 증가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나아지지 않는 고용률과 실업률 증가에 따른 취업경쟁 심화로 취업 준비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대출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박영정, 2015). 한편, 교육을 통해 계층이동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금수저’, ‘흙수저’ 논의가 시사하듯이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극히 낮아지고 있어 장밋빛 미래를 꿈꾸거나 보다 나은 내일을 희망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3) 갈등의 다양화와 심화

한국사회의 갈등은 소득계층 간 갈등을 넘어서 다양화하고 있다. 그중 세대갈등은 ‘권력점유 세대’와 ‘윗세대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아 혁신(innovation)을 도모하려는 ‘저항 세대’ 간 갈등으로,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다. 세대갈등은 권력 이양 시기에 세대교체 공방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 대 보수’라는 세대 간 이념갈등과 함께 표출되는 양상을 보인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촛불 집회’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태극기집회’가 하나의 사례가 된다.

세대갈등은 권력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중 문화갈등은 1970년대 이후에 출생하여 풍요로운 환경에서 정보화와 세계화, 사회주의권 붕괴, 국내의 민주화, 대중소비사회 출현 등 이전 시기와 질적으로 구분된 변동과정을 청소년기에 겪은 ‘탈이념·

정보화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발생한다. 세대 간 문화갈등은 기성세대의 성장주의·집단주의·권위주의와 탈이념·정보화세대의 소비주의·개인주의·탈권위주의적 지향 간 갈등으로 나타난다(박재홍, 2010).

한국사회의 가족구조 변화와 고령화, 저성장의 지속도 세대 간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는 세대 간 접촉 기회를 감소시켜 교류·협력 기반을 약화시킨다. 고령화는 기성세대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한 공약경쟁으로 기성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의견이 공약에 반영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은 세대 간에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가능성을 제약하고, 세대 간 자산과 소득의 불균등한 분포, 노동시장에서 각 세대가 점유하는 기회구조의 차이도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최유석·오유진·문유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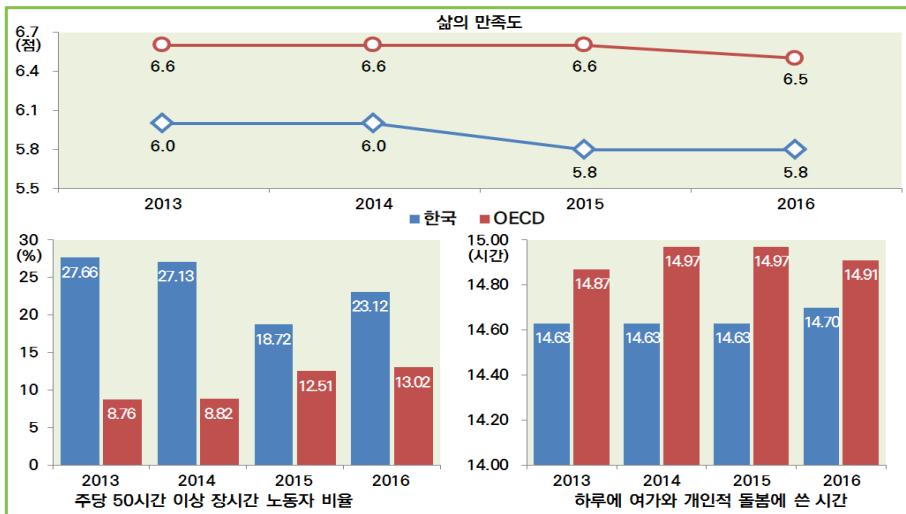
한편, 여혐, 남혐으로 대변되는 성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특정 집단에 ‘충’을 붙여 약자에 대한 조롱을 정치색 비판과 함께 묶어버리는 혐오의 정치,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남녀 역할 논쟁 및 남성인권 담론, 여혐 담론의 활성화, 여혐담론에 반격하는 여성들이 구축한 온라인 공간의 등장,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된 여혐논쟁, 국내 최대 불법음란사이트 소라넷 폐쇄를 둘러싼 논쟁 등 우리사회의 성별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수진, 2016).

마.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추구

성장을 위한 개인 희생, 물질주의 가치관이 팽배한 시기를 지나서 우리 사회는 삶의 질과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그러한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2016;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KISTEP·KAIST, 2015 & 2016). 경제지표인 GDP가 아니라 GNH(국민행복지수, Gross National happiness)를 국가발전 지표로 삼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사회

는 일의 양을 중시하고 직장생활이 중심이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일의 질을 따지고, 행복,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work & leisure balance) 및 가족중심 생활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2017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17)」의 조사 결과(Helliwell, Layard & Sachs eds., 2017)처럼 한국인의 행복감은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스트레스지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수준이다. 연간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 2,069시간으로써 OECD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서 2위이고, 이 순위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행복지수 비교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 BLI)를 예로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주당 5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은 23.12%로써 OECD평균보다 10%p 이상 많았고, 하루에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도 20분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일과 삶의 균형은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IMD, 2016)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조사대상 61개국 중 47위에 그침으로써 국민 삶의 질과 행복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됨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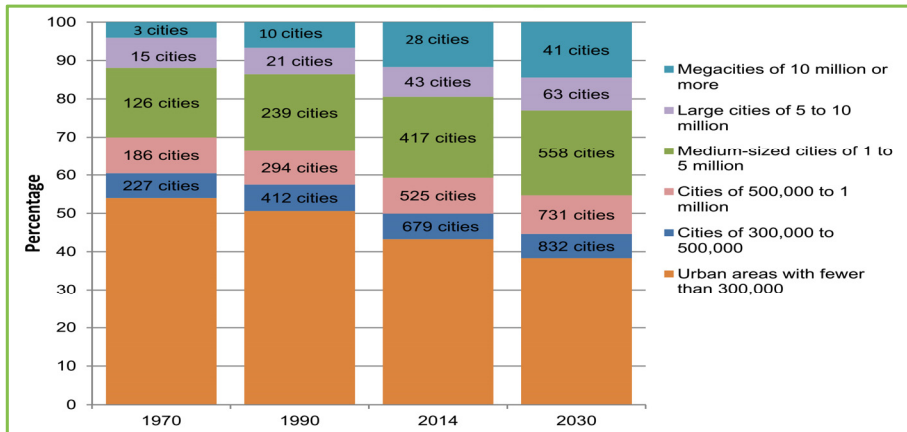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OECD통계 stats.oecd.org) 참조.

[그림 3-23] 한국과 OECD의 일과 삶의 균형 비교

바. 도시화 진행과 스마트 축소 도시계획의 필요성 공존

1) 세계적인 도시화의 진전과 한국의 도시화

유엔의 통계(UN, 2014)에 따르면, 2007년에 전 세계의 도시인구는 농촌인구를 넘어섰고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00만 명 이상 거주도시(megacity)는 2014년 28개에서 2030년 41개로, 500만~1,000만 명 거주도시(large city)는 같은 기간 43개에서 63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 UN(2014: 17).

[그림 3-24] 세계 도시인구 분포 변화 전망

우리의 도시화율도 1960년에 39.1% 수준이었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여 1970년대에 50%, 1990년대에 75%에 도달하였고, 2014년 기준으로 인구의 91.7%인 4,700만여 명이 도시에 거주한다. 그에 따라서 도시정책도 지속적 성장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인구 감소도시에서도 미래에 성장하거나 적어도 인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도시계획을 수립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도시쇠퇴에 대응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쇠퇴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성장지향적 패러다임을 답습하는 한계를 지닌다.

2)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쇠퇴와 지역문화자산 소실

국외의 경우, 심각한 도시쇠퇴를 경험한 일부 도시들은 쇠퇴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즉, 쇠퇴지역에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성장정책을 추진하던 차원을 넘어 계획적 차원에서 기반시설 축소, 도시서비스 공급 조정, 공원녹지 확충, 공가(公家) 정비 등 감소된 인구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중소도시와 농촌은 1970년대부터 인구감소를 경험하였다. 인구감소는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이동, 산업구조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총량적인 인구 감소시대에는 인구 감소지역이 현재보다 광범위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과거 도시성장시대에 만들어진 용도지역, 토지이용,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성장 친화적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도시인구 감소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2014년 기준으로 79개 시군구가 소멸될 위험이 높다고 조사된 바 있다(이상호, 2016). 지역 소멸은 단지 행정 단위가 사라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해당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어 온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자산이 소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스마트 축소도시계획의 필요성 증가

전 세계 도시 중 1/6~1/4이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도시가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비롯한 각종의 공공재가 감소되지 않는 것은 도시 계획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주택의 경우, 유리창 효과에 따른 연쇄적 주거환경의 악화 문제를 발생시키며, 인구에 맞추어 공급되었던 사회간접자본은 많은 관리비용을 수반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 독일과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독일에서는 2003~2005년에 독일연방문화재단 지원으로 ‘독일 축소도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미국에서도 2004년에 버클리대학을 중심으로 ‘축소도시 국제 연구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전경구·전형준, 2016).

축소도시계획은 도시인구감소에 따라 각 도시가 제공하는 기반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조정하는 도시계획모형을 지칭하는데, 인구증가에 따라 공급하던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을 인구가 감소한 만큼 줄이고 서비스를 재조정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인구가 감소한 만큼 토지이용밀도를 낮추고 공원과 녹지를 포함한 공공용지를 보다 많이 공급하는 정책을 포함한다(전경구·전형준, 2016). 이러한 축소도시계획이 국내에서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현재 논의되는 축소도시계획을 위한 전략과 과제는 <표 3-4>와 같다.

〈표 3-4〉 선행연구의 축소도시계획을 위한 전략 및 과제

부문	비전 및 목표	전략
행정 및 계획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체도의 개선 • 인구감소를 수용하는 도시계획 수립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와 정원 등 지방행정체제를 인구와 연동하는 것을 지양 • 계획체계 개편 및 인구지표 하향조정 • 주민참여형 협동계획
도시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콤팩트 도시개발 • 토지이용도의 효과적인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외 신개발의 지양 • 도시개발경계조정 • 하향용도지역제 도입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폐가 및 주거지 정비 • 공·폐가를 인구 유입 및 정착 수단으로 활용 •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적정주택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폐가를 정비하여 녹지 확대 • 공·폐가를 관광·숙박 등의 기반시설로 활용 • 증가하는 단독가구 및 노령인구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유지 비용 및 서비스 제공비용 절약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주민조직을 활용함으로써 관리비용의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여공공기반시설 적정규모화 • 공공서비스의 제한 • 잉여기반시설의 합리적 활용 • 기반시설의 효과적인 유지관리
토지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활용을 위한 기구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 토지의 효과적인 활용 • 토지은행제도 도입
계획의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절감을 위하여 서비스제공을 민간 부문으로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도형 집행조직의 활용 • 서비스 책임을 민간부문으로 이전
행정·재정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직의 축소 재편 • 행정구역의 조정 • 보다 나은 지역사회에 자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인구증가를 유도하는 각종 제도 개선 • 자치단체 행정 구역 축소 또는 합병 • 공공 및 비영리 투자에 대한 지원

*자료: 전경구·전형준(2016: 22 <표 6>).

사. 도시재생 추진과 문화 주도 젠트리피케이션 대두

도시재생이 본격화되기 이전, 도시정비는 민간 중심의 대단위 재개발과 철거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와 같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간관리는 사회, 경제, 도시구조, 도시문화 등의 제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였고, 특히 장소성의 상실 문제를 발생시켰다. 철거를 통한 재개발은 도시의 다양한 문화적 속성을 일시에 사라지게 하여 도시정체성을 약화시켰고, 사업성 위주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간 갈등을 유발하여 공동체 해체의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철거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치단체와 주민 주도로 물리적 환경과 경제적·사회문화적 재생을 종합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에 선도지역 13개소, 2016년에 일반사업지역 33개소가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도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재생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에 따라서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도시재생에서 문화는 수단이자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결과이며 추구해야 할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도시의 문화를 재생한다는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나, 현행 도시재생사업이 전자에 집중됨으로써 문화 주도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영국의 사회학자 글라스(Glass, Ruth)가 중간계급(gentry)이 도심이나 그 주변 저소득층 주거지의 주택을 수리하여 이주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고급 주택화하고 기존 저소득층 주민을 대체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다. 국내에서는 ‘상권활성화에 따라 상승하는 임대료에 의해 소상공인이 떠나게 되는 사회 변화 현상과 같은 부정적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이 이슈가 되면서 「임대차보호법」 등의 관련 법제 개정이 추진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 자산화 전략지원, 모니터링체계 구축, 예술 커뮤니티의 보호 및 자활성·지속가능성 지원 정책 등이 수립되고 있다(김연진, 2016: 3-4).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주목되는 현상 중 하나는 문화 주도 젠트리피케이션(Art-led- Gentrification)의 대두다. 이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예술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예술가가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이자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하는 젠트리파이어(gentrifier) 역할을 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에 주요하게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문화 주도 젠트리피케이션은 다양한 주체가 복합적으로 개입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그 과정에서 주거·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문화 주도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술가의 이탈은 문화백화를 가속화하여 장소 소비에 이르게 하고, 그 촉발기에 예술가의 활동이 의도적으로 급격히 일어날 때에는 문화과잉에 의한 장소 상실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즉, 젠트리피케이션은 문화백화와 문화과잉이라는 상반된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김연진, 2016).

제4절

기술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이슈

1. 기술 환경의 변화 및 전망

각종 미래 연구나 보고서들은 기술 발전 및 그것이 미칠 영향을 중요하게 다룬다. 한 예로, NIC(2012)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경제·사회·군사적 발전을 형성할 기술로 정보기술, 자동화, 제조기술, 자원기술 및 보건의료기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영숙 외(2012)는 2030년이면 기술 발전으로 진정한 빅데이터 사회가 도래하고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배우는 시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기술의 진보가 가속화되면서 나타날 일자리의 변화나 윤리의 문제 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KISTEP·KAIST, 2015; NIC, 2017).

기술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2016년 다보스포럼의 키워드로 제시된 ‘4차 산업혁명’이다. 이 포럼 이후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수많은 저서와 TV프로그램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정부와 기업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구촌 각 부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도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정부와 기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1차 산업혁명(수력과 증기기관)과 2차 산업혁명(전기), 그리고 3차 산업혁명(컴퓨터와 인터넷)을 거쳐서 산업혁명의 새로운 단계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는 역사적 진화 단계에 대한 담론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은 다보스 포럼의 설립자인 슈밥(Schwab, Klaus)의 영향이다. 이러한 논의는 2011년부터 독일정부가 진행한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를 배경으로 한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기

제로 대체하고자 했던 ‘제1의 기계시대’(1, 2차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정신적 노동마저 기계로 대체하고자 하는 ‘제2의 기계시대’(3, 4차 산업혁명)가 열렸다고 한 미국 MIT 정보경제학자들의 논의(Brynjolfsson & McAfee, 2014)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시기	18세기	19~20세기 초	20세기 후반	21세기
특징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혁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
영향	수공업 시대에서 증기기관을 활용한 기계화 시대로 변화	전기와 생산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 체계 구축	정보의 생성, 가공, 공유를 가능케 하는 정보기술시대의 개막	사람, 사물, 공간을 연결하고 자동화, 지능화 되어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시대
	육체노동 보완		두뇌기능 보완	

*자료: 김현주(2017).

[그림 3-25]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위상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화, 초연결성, 초개인화, 가상화 등의 새로운 트렌드를 통해 기술과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2000년대에 들어 빅데이터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함께, 정체되어 있던 인공지능 연구가 새 국면을 맞게 되었다. 특히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술 발달로 기계의 자동화, 초지능화는 알파고로 상징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범용 기술로서 여타의 팔목할만한 기술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특히 IoT(Internet of Things)·스마트시티(초연결성), 로봇과 합성생물학(정체성), 3D프

린터와 스마트앱(초개인화), 5G기술과 VR·AR 및 MR(혼합현실), SNS와 블록체인(참여, 분권, 협업) 등 연쇄적인 기술 변화가 커다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기술 변화의 규모와 범위, 속도와 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명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통해 기존 산업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엄청난 자본 투입을 통해서 기하급수적 발전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Brynjolfsson & McAfee, 2014). 이는 비단 과학기술계나 산업계 종사자에 국한되는 변화가 아닌 사회 전반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Schwab, 2016).

한편, 4차 산업혁명 담론의 급격한 부상은 박근혜정부에서 부상한 ‘창조경제’를 떠올리게 한다. 양자는 모두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사회 각 부문에 떠들썩한 논쟁거리를 가져다주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실제로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ICT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직업,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는 창조경제 정책은 분명 4차 산업혁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역사적 발전 단계에 대한 서술이 부재하여 관련 정책의 토대 마련 및 분야 확산이 미흡했다는 점,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공감대 부재로 인해 관련 통계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했다는 점, 창조교육·창조도시·창조거버넌스 및 창조산업 등의 개념이 파편적으로 활용되면서 정부 전체에서 일관적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에 대한 풍부한 서사를 장착하고 제조업은 물론 물리학, 생물학 및 다양한 첨단 미래기술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통한 풍성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은 창조경제의 개념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영역을 갖출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17년 2월에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향후 부처별 구체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에는 국정과제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제가 포함되면서 2017년 9월에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며 범정부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과학기술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일반 국민도 기술 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별 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 기반과 토대를 제대로 정초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처 간 협업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기존 창조경제 정책이 부딪혔던 여러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2. 문화정책을 둘러싼 기술적 이슈

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

4차 산업혁명은 1, 2, 3차 산업혁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일련의 새로운 기술군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군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문화정책을 둘러싼 기술적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이와 관련하여 ICT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지닌 자문회사인 가트너(Gartner)가 선정한 10대 전략기술, 미래준비위원회가 선정한 15대 핵심 기술, 그 외에 관련 연구에서 제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트너는 도입 단계를 벗어나 향후 5년 내에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을 선정하여 「가트너 10대 전략기술 트렌드(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최근 5년(2013~2017)의 전략기술을 보면,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기술도 있지만, 일부 기술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 속에서 흡수되거나 발전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2016년에 발표된 2017년 기술 트렌드는 지능

형, 디지털, 메쉬(mesh)로 나뉘어 제시되었다. 지능형에는 ‘인공지능과 고급 머신러닝’·‘지능형 앱’ 및 자율주행차 같은 ‘지능형 사물’이, 디지털에는 ‘AR과 VR’·‘디지털 쌍둥이(동적 소프트웨어 모델)’ 및 ‘블록체인과 분산장부’이, 메쉬에는 ‘대화형 시스템’·‘그물망 앱과 서비스 아키텍처’·‘디지털 기술 플랫폼’ 및 ‘능동형 보안 아키텍처’가 선정되었다.

〈표 3-5〉 가트너가 선정한 전략기술 변화(2013~2017)

연번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1		마더 태블릿 그 이후	모바일 대전	다양한 모바일 기기 관리	컴퓨팅 에브리웨어	인공지능과 고급 머신러닝
2		모바일 중심 앱과 인터페이스	모바일 앱과 HTML	모바일 앱과 플리케이션	사물인터넷	지능형 앱
3		상황 인식과 소셜 결합 사용자 경험	퍼스널 클라우드	민물인터넷	3D 프린팅	지능형 사물
4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비스 브로커IT	보편화된 첨단분석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5		앱스토어와 마켓 플레이스	하이브리드 IT와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클라이언트 아키텍처	콘텐츠스트 리치시스템	디지털 쌍둥이(동적 소프트웨어 모델)
6		차세대 분석	전략적 빅데이터	퍼스널 클라우드	스마트 머신	블록체인과 분산장부
7		빅데이터	실용분석	소프트웨어 정의	클라우드·클라이언트 컴퓨팅	대화형 시스템
8		인메모리 컴퓨팅	인메모리 컴퓨팅	웹스케일 IT	소프트웨어 정의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그물망 앱과 서비스 아키텍처
9		자전력 서버	통합생태계	스마트 머신	웹스케일 IT	디지털 기술 플랫폼
10		클라우드 컴퓨팅	안타프라이즈 앱스토어	3D 프린팅	위험 기반 보안과 자정어	능동형 보안 아키텍처

*자료: Gartner,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각 연도

다음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는 기 발표된 유망 기술 관련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미래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15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KISTEP·KAIST, 2015), 그중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은 가트너의 전략기술 전망과 일치하나,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술 등은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다소 낮다.

〈표 3-6〉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선정 향후 10년을 이끌 기술

연번	기술	설명
1	사물인터넷	•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주위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기술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 스마트홈,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카 등
2	빅데이터	• 대량의 정형·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술
3	인공지능	• 지성을 갖추고 사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장치
4	가상현실	• 컴퓨터 같은 기기로서 실체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실제처럼 구현하는 기술
5	웨어러블 디바이스	• 신체에 착용할 수 있도록 휴대가 가능하거나, 피부에 직접 부착 또는 복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디바이스
6	줄기세포	• 무한증식이 가능한 자가 재생산과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만능세포
7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 유전자 등 생명현상에 관여하는 분자를 조작하여 인간에게 이로운 산물을 얻어내는 기술
8	분자영상	• 세포나 그 이하 단계의 생물학적 과정을 생체 내에 영상화하여 그 특성 규명하고 정량화하는 기술
9	나노소재	• 나노미터 단위로 물질의 구조를 제어하거나 혼합함으로써 제작되는 새로운 기능이나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는 소재
10	3D프린터	• 3차원 제품의 형상을 디지털로 설계 및 스캔하여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입체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
11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폐기물·바이오 에너지 등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환경 위해성이 적은 에너지
12	온실가스 저감기술	•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대기 중 온실가스를 포획하여 감축시키는 기술
13	에너지·자원 재활용 기술	• 에너지·자원을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기술
14	우주기술	• 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우주공간의 이용·탐사와 관련되는 기술
15	원자력기술	• 원자핵 반응을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그 반응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KISTEP·KAIST(2015: 64-65 〈표 3〉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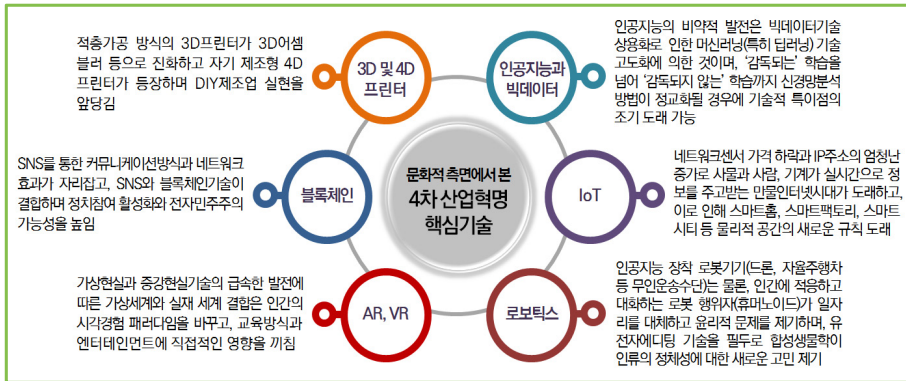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여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저서들과 보고서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을 보면, 그 서술에 차이는 있으나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기술들이 나타난다. 그러한 기술들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와 스마트 소

사이버티, 로봇과 합성생물학, 3D 프린터와 스마트앱, VR·AR·MR, SNS와 블록체인 등 크게 여섯 가지로 범주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여섯 가지 기술군에 대한 분석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술을 제외하면 가트너나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기술 분석과 대체로 일치한다.

〈표 3-7〉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저서들에서 도출한 핵심 기술군

출처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와 스마트사이버티	로봇과 합성생물학	3D 프린터와 스마트앱	VR, AR, 그리고 MR	SNS와 블록체인
Schwab (2016)	인공지능 빅데이터 무인운송수단	IoT, 카바이트 홀 스마트시티	로봇공학 신경기술 유전자에디팅	4D프린팅 공유경제	-	비트코인 블록체인
Schwab 외(2016)	인공지능 빅데이터 마신러닝	IoT, 스마트시티	로봇공학 합성생물학	3D프린터 3D어셈블러 모바일 핀테크	-	소셜미디어 (정치변혁)
吉川良三 외(2016)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공장	5G네트워크, 스마트가전 웨어러블기기, M2M	휴먼노이드로봇 네트워크로봇 생활자원로봇	-	VR, AR로 사람 적 경험 확장	소셜미디어 (누구나 크리에이터)
미래전략 정책연구원 (2016)	인공지능 딥러닝	IoT, 스마트팩토리, 클라우드컴퓨팅	코봇(협업로봇), 바이오에디팅	3D프린팅 4D프린팅 공유경제	AR/VR, HMD, 360도 카메라	-
이경주 (2016)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5G이동통신 IoT, 스마트 그리드	무인화 로봇 생명공학 나노신소재	3D프린터 O2O모바일인터넷 핀테크	실감형 영상 무크(Mooc)	블록체인
임일 (2016)	인공지능 마신러닝 클라우드컴퓨팅	센서/네트워크기술 스마트홈	무인운송수단 나노생체컴퓨터	O2O서비스 공유경제 핀테크, 3D프린터	현실/AR/VR, 마케팅방법	SNS (네트워크 효과 텍스트마이닝)
김윤이 외(2016)	인공지능 노과학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컴퓨팅	신소재 로봇공학 미래에너지	3D프린팅 메이커 스페이스 공유경제	-	블록체인
하원규 · 최남희 (2015)	인공지능 딥러닝 초빅데이터	5G시스템센서, 모바일 스마트홈, 양자인터넷컴퓨팅	첨단 로봇 헬스케어	-	-	-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군을 문화적 측면과 연관해서 보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 기술, 로봇틱스 기술, AR·VR 기술, 블록체인 기술, 3D프린팅 및 4D프린팅 기술이 중요하게 떠오른다. 한 예로, 신용카드 사용실태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문화예술 소비나 공연 시장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문화재 복원·활용에 AR·VR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과 문화의 융합은 문화가 주는 미적·감성적 체험의 양태나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구조, 문화 분야 직업 등 다양한 방면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 정종은(2017a 그림 수정).

[그림 3-26] 문화적 측면에서 본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군

나. 사람, 사물, 기계 간 초연결시대 도래

핵심 기술군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의 범위와 규모, 강도와 속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융합하는 속성 등은 4차 산업혁명의 실제 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환경 변화가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함에 있어서 다음 다섯 가지 국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면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지능화·자동화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래한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의 새로운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관심을 요청한다.

1) 지능화와 자동화

제4차 산업혁명의 차별성을 담보하는 범용기술로서 산업 분야의 지능화와 자동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현재까지 인공지능은 ‘감독된 학습(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작동하는데, 이는 일종의 ‘극단적인 주입식 교육’ 방식, 즉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입력하여 기계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을 설계한 것이다. 물론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발달로 기계가 실행하는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빨라졌으며 일부는 자율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데이터의 ‘크기(Volume)’·‘속도(Velocity)’·‘다양성(Variety)’이라는 3V를 추구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가치판단을 실행하는 인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않는다면, 기계의 지능화와 자동화의 ‘표상’처럼 받아들여지는 인공지능의 발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감독되지 않은 학습(unsupervised learning)’이 주를 이루는 분야,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적용이 제한적이다.

2) 초연결성

웨어러블 인터넷(wearable internet),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등의 발전으로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 실현이 가까워질수록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은 지구 상에서 점차 사라져 갈 것이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등처럼 이미 상당 부분이 현실화된 사물인터넷 기술은 초연결사회에 대한 전망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사람과 사물과 기계 각각 및 상호간의 긴밀한 연결·융합·공진화를 통해서 과거의 관습을 뒤흔들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존재론을 널리 확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초개인화

초연결사회에서는 더 이상 소품종 대량생산은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 실시간으로 취향을 만족시키는 온디맨드경제(On-Demand Economy)를 넘어서 소비자 스스로 3D프린터를 활용하고, 4D프린터 등을 활용한 자족적인 ‘메이커’의 라이프스타일 역시 빠르게 확산될 공산이 크다. 온디맨드 경제, 공유경제, DIY경제 등 새로운 경제적 실천 및 행동 양식이 초개인화된 시민-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 급속하게 발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과거의 수동적이고 일방향적인 ‘push-pull’ 패러다임 역시 ‘pull-push’ 패러다임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협업창작

비즈니스 기업들이나 정책 공급자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시민-소비자를 위한 재화와 용역의 제공을 위해서 생산과정은 물론이고 초기의 기획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있어서도 초개인화된 수요자와의 협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또한 수요자-공급자의 협업창작(co-creation)만이 아니라 골드코프 광산이나 캐글의 사례 등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기술 혁신이나 문제해결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소비와 향유에서의 초개인화 트렌드와 함께 기획과 제작에서의 협업창작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전 산업 및 정책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혼합현실

이미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그래픽 완성도나 어지럼증 등의 기술적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AR·VR 기술은 현실과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구분과 간섭, 혼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함께 실감형

체험기술을 지식 교육이나 직업 훈련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분야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관광이나 광고 등에서도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자료: 정중은(2017b 그림 수정).

[그림 3-27] 제4차 산업혁명의 다각적 국면들

다.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

앞서 살펴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군 및 문화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초연결시대의 새로운 존재론과 인식론이라는 이슈는 궁극적으로 현대인의 삶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전망은 새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산업혁명이 '기술-일자리-교육'의 트라이앵글을 근원적인 층위에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이끄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과학기술 관련 부처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초래하는 영향에 대해 많은 분석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인용되는 것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의 보고서다. 이 포럼이 15개 국가의 기업중사자 약 1,300만

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제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총 7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WEF, 2016). 이와 같이 일자리 감소라는 위기 담론은 기술계와 산업계를 넘어서 일반 언론과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4차 산업혁명에 높은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다. 2020년까지 7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세계경제포럼의 전망은 기계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비전문·저숙련 노동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만, 기자나 의사, 통번역가 등 전문·숙련 노동 역시 인공지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표 3-8〉 4차 산업혁명에 의한 2015~2020년 고용 증감규모 추정

(단위: 천 개)

순고용 감소군	사무·행정	제조·생산	건설·채굴	디자인·스포츠 ·미디어	법률	시설·정비
	-4,759	-1,609	-497	-151	-109	-40
순고용 증가군	비즈니스 ·금융	경영	컴퓨터·수학	건축· 엔지니어링	영업·관리	교육·훈련
	492	416	405	339	303	66

*자료: WEF(2016: 15 〈Figure 6〉).

중요한 것은 기계와의 공존·공생·공진화에 실패하는 직종은 이러한 노동 위기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며, 이는 직업군 간 및 직업군 내의 소득과 지위 등에서 노동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신기술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나 피로도는 세대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식 공감 및 기본적인 기술 리터러시(literacy)⁵⁾ 학습이 학령기 세대는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인류 역사에서 ‘창의성’의 보고 역할을 감당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예술가 및 예술계가 이와 같은 급격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문화적 이슈

5) 리터러시(literacy)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말하며, 문화적으로는 서로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지식 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 등을 의미한다.

로부터 자유로운 무풍지대로 남으리라는 생각은 매우 순진한 것일 수 있다. 일례로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 예술계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약진하고 있음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의 ‘넥스트 렘브란트(Next Rembrandt)’나 구글의 ‘딥드림(deep dream)’ 같은 프로젝트처럼 미술 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2016년 2월 샌프란시스코 미술전시회·경매에서는 ‘딥드림’의 작품 29점이 총 97,000달러에 팔렸는데, 그 중에는 8,000달러라는 고가를 기록한 것도 있었다.⁶⁾

인공지능 작곡도 조만간 널리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2015년 예일대의 도냐 퀵 교수가 개발한 작곡 로봇 ‘쿨리타’도 기존의 악보들에서 규칙을 분석하여 새롭게 음계를 조합하는 인공지능인데, 100명의 패널 중 다수는 쿨리타가 작곡한 곡을 사람이 만든 곡으로 생각했으며 실제 바흐의 곡과 구별하지 못했다고 한다.⁷⁾

아직까지 문학 분야는 다른 예술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딘 분야이지만, 일본에서는 특정 작가의 소설 1,000여 편을 학습한 인공지능 소설이 문학상 공모전의 1차 심사를 통과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인기 시트콤 ‘프렌즈’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새로운 에피소드의 대본을 작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특히 구글이 MIT, 스탠퍼드 대학과 함께 개발 중인 인공지능은 약 12,000여 권의 소설, 특히 연애소설을 학습하여 지속적으로 소설을 발표 중이다.

라. 포스트휴먼 시대의 윤리와 정체성

아직까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관심은 주로 기술 변화와 일자리 감소 및 이에 대비한 교육개혁 등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핵심 기술군의 부상 및 새로운 존재론과 인식론의 확산이 가져올

6) “고흐가 광화문을 그렸다?” 소름 돋는 인공지능의 그림..저작권은 누구 소유일까”, 조선비즈(biz.chosun.com), 2017년 5월 4일, 기사.

7) “작곡도 로봇 시대... ‘바흐 작품과도 헛갈리네’”, 조선비즈(biz.chosun.com), 2015년 9월 2일 기사.

파급효과는 단순히 기술과 산업 부문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기존 미래 보고서들에서는 기술 환경 변화가 가져올 불평등이나 생명공학 및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 등도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영숙 외, 2012;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KISTEP·KAIST, 2015). 특히 인지과학, 나노기술, 바이오공학 등의 발전이 인간과 기술(또는 기계)의 융합으로 나타나는 포스트휴먼(post-human) 시대의 인간 정체성이나 윤리 문제가 문화 분야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경작하다’에서 출발한 문화(culture) 개념이 출현하였을 때, 인류는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자연(nature)과 뒤엉켜서는 안 되는 존재로 스스로를 규정하였다.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일반화된 문화의 개념은 문화정책이 추구하는 인간형을 짐승과 구분되는 ‘교양인’으로 제시하는 논법의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IoT 기술과 뇌파를 연결하여 생각만으로 자신의 취향을 관철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초연결사회의 초개인화된 시민-소비자(citizen-consumer)는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이미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일부를 기계화한 사이보그’가 되었고, 4차 산업혁명은 유전자 편집 및 인공지능의 고도화를 통해서 인류의 ‘사이보그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능화·자동화의 새로운 국면에 입각한 기술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를 인류 문화사의 흐름에서 새로운 도전의 출현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반성과 전망이 이루어졌을 때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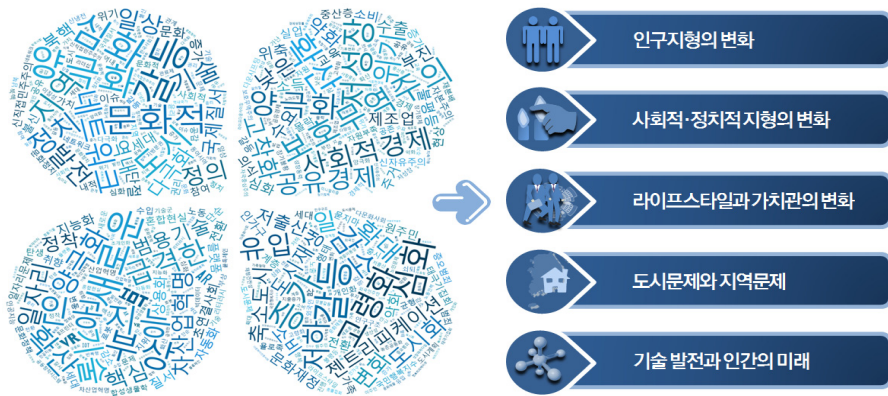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기술적 특이점의 도래를 준비하여야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로봇틱스 기술과 합성생물학 기술 등을 통해 ‘포스트휴먼’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인류는 말 그대로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일부를 기계화한 사이보그의 정체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장착한 인간들이 포스트휴먼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즉, 비단 인간이 기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으로 로봇틱스 기술이 인간의 지능과 감정처리 방식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하게 될 경우에는 ‘인간과 구분되는 로봇 고유의 윤리학’에 대한 복잡하고도 미묘한 논의가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작가 아시모프(Asimov, Isaac)가 제시한 ‘로봇공학의 3원칙(Three Laws of Robotics)’을 뛰어넘는 훨씬 더 정교한 윤리학적 기준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5절

소결: 이슈의 범주화 및 대응방향 도출

본 연구에서는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이슈들에 대한 키워드 분석과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및 FGI를 거쳐서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일차 선별하고, 그 성격에 따라서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5개 범주([그림 3-28] 참조)에 16대 이슈 35개 세부 이슈가 선정되었다. 이 절에서는 범주별로 선정 이슈를 살펴보고, 텔파이조사를 위해 각 이슈 관련 현상을 고려한 문화정책의 대응방향을 일차 도출하여 제시한다.



[그림 3-28] 거시환경 이슈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및 범주화

1. 인구지형의 변화

‘인구지형의 변화’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대두된다. 그중 하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적인 인구이동의 증가와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사회화다. 이들 이슈는 모든 미래 보고서와 미래예측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두 이슈에서는 6개 세부 이슈가 선정되었다(〈표 3-9〉 참조).

‘저출산, 고령화’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과 노동력 부족, 이러한 변화로 인한 구매력 감소와 내수 위축, 저성장 장기 침체 등이 복합된 상황을 반영한 이슈다. 이들 이슈에 대해서는 ‘문화 분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장기침체에 따른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문화적 접근 모색’을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고령화 이슈의 증가’는 노인층 증가로 실버산업이 성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인문제가 증가하며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이슈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적 접근을 지향하여 ‘예술치료 및 노인문화프로그램 등 건강한 노년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를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국제적인 인구이동과 다문화사회화’에서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책성’과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는 다문화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갈등, 이주민의 한국문화 수용과 정체성 문제, 이주민 2세의 적응 문제 등을 반영한 이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련 정책 강화’를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은 숙련인력 등 고급인력이 고용환경이 나은 국가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이슈인데, 이런 상황은 문화산업 분야의 인력 유출처럼 다방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 분야 창의인력 양성 정책 강화 및 국외유출 완화 모색’을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표 3-9〉 ‘인구지형의 변화’ 범주의 이슈 및 대응방향

이슈	세부 이슈	대응방향 도출
저출산, 고령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	• 문화 분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 장기침체에 따른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문화적 접근 모색
	• 고령화 이슈의 증가	• 예술치료 및 노인문화프로그램 등 건강한 노년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국제적인 인구이동과 다문화사회화	•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책성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련 정책 강화
	•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	• 문화 분야 창의인력 양성 정책 강화 및 국외 유출 완화 모색

2.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범주에는 미래 보고서나 미래예측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갈등’이 주요 키워드로 부각되며, 세 가지 이슈가 대두된다. 하나는 국제정치의 불확실성과 갈등의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는 갈등의 확산 혹은 지속이라는 문제다. 마지막은 탄핵과 정권 교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각된 정의, 공감 및 문화의 정치라는 이슈다. 이들 이슈에서는 9개 세부 이슈가 선정되었다(〈표 3-10〉 참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갈등’에서 ‘남북 갈등 및 문화적 이질성 심화’는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한 남북 관계 단절과 갈등의 지속, 분단 장기화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 심화,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한 이슈이며, ‘관계 회복과 이질성 완화를 위한 문화 교류 강화’를 그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도 남북의 이질성과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통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화갈등을 고려한 이슈이며, ‘남북한(재외동포 포함) 문화 이해 등 통일 대비 문화정책 강화’를 그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동아시아 역내 갈등’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는 역사·영토 문제 등으로 인한 역내 갈등, 중국의 부상 등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양극화와 다극화 경향,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증가 등을 반영한 이슈다. 이들 이슈에 대해서는 ‘쌍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협력 강화’, ‘인류 공생의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의제 연계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갈등의 확산’에서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와 ‘사회 전반의 갈등 증가’는 불평등, 양극화, 계층이동성 저하, 세대·이념·성별 등 다양한 갈등의 증가 등을 반영한 이슈다. 이들 이슈에 대해서는 ‘공존·협력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 강화’와 함께 ‘문화 분야 종사자의 안정성 제고 기반 마련 및 제도 개선’을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

다. ‘탈북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은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한 국사회 적응 문제를 반영한 이슈이며, ‘남북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 및 탈북민의 문화적응력 제고’를 그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정의, 공감 및 문화의 정치’에서 ‘정치 불신과 신직접민주주의’는 정치 불신의 지속, 탄핵과 블랙리스트 사태가 가져온 리더십과 관료제의 위기, 전자민주주의 확대 및 일상적 이슈와 관련한 젊은 층의 정치 참여 증가를 반영한 이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행정의 관료주의 점검 및 개선 모색’과 ‘신직접민주주의에 대응한 문화윤리 정립’을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문화민주주의 증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화기본권 신장과 문화민주주의 증진의 필요성을 반영한 이슈이며,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을 그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표 3-10〉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범주의 이슈 및 대응방향

이슈	세부 이슈	문화정책의 대응방향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갈등	• 남북 갈등 및 문화적 이질성 심화	• 남북 관계 회복 및 문화적 이질성 완화를 위한 문화 교류 강화
	•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	• 남북한(재외동포 포함) 문화 이해 등 통일 대비 문화정책 강화
	• 동아시아 역내 갈등	• 한중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쌍방향 문화 교류 및 문화협력 강화
	•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 주의	• 인류 공생의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의제 연계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사회적 갈등의 확산	•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 공존·협력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 사회 전반의 갈등 증가	• 문화 분야 종사자의 직업 및 삶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제도 개선
	• 탈북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 남북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 및 탈북민의 문화적응력 제고
정의 공감 및 문화의 정치	• 정치 불신과 신직접민주주의	• 문화행정의 관료주의 점검 및 개선 모색 • 신직접민주주의에 대응한 문화윤리 정립
	• 문화민주주의 증진	• 문화기본권 및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3.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에는 우리의 발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비롯, 사회문화·경제·정치·기술 환경 변화와 맞물리며 문화정책과 밀접히 관련되는 이슈들이 포함되었다. 이 범주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변화, 삶의 가치관 변화, 과로사회화, 기술 발전 적응이라는 네 가지 이슈가 대두되며, 세부적으로 9개 이슈가 선정되었다(〈표 3-11〉 참조).

‘라이프스타일 변화’에서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및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 초개인화된 취향 부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한 이슈다. 이에 대해서는 ‘생애주기와 세분화된 취향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 정책 강화’와 ‘일상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 제공’을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삶의 가치관 변화’에서 ‘자연과의 공존 모색’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자원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과 공존을 중시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색하는 경향과 관련된 이슈다.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은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삶의 질,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확대되는 경향 등을 반영한 이슈다. 이들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성, 공존·상생의 가치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문화적 삶의 지표 설정’을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장기불황시대의 자발적 가난(소박한 삶)’은 미니멀 라이프 등으로 상징되는 소박함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과 관련되는 이슈이며,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관리’를 그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는 공존, 공유 등 가치 지향적 삶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경제형태가 부상되는 상황을 반영한 이슈이며, ‘문화 분야의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가치 창출’을 그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과로사회화’에서는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를 선정하였

다. 이 이슈는 경쟁의 심화와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팽배, OECD 최상위에 속하는 노동시간 등과 같은 경제적·사회문화적 환경이 개선되지 못함
 채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과로사회, 피로사회 등으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가시간 확보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를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기술 발전 적응’에서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은 빠른 기술 발전에 적응하며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등에 익숙한 세대가 등장함에 따라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서비스나 문화예술교육 방식의 변화 필요성 등을 반영한 이슈다. 이에 대해서는 ‘세대 간 기술적응 격차 완화 및 세대 이해 계기 확대’를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기술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피로도 증가’는 빠른 기술 발전으로 생활의 편리성은 증진되고 있으나, 기술 발전의 결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기술피로도도 증가하는 현상 등을 반영한 이슈다. 이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피로도 완화를 위한 문화적 방안 마련’을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표 3-11〉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범주의 이슈 및 대응방향

이슈	세부 이슈	문화정책의 대응방향
라이프스타일 변화	•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와 세분화된 취향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 정책 강화 • 일상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 제공
	•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삶의 가치관 변화	• 자연과의 공존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 공존·상생의 가치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문화적 삶의 지표 설정
	•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 장기불황사태의 지별적 가난(소박한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관리
	•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분야의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가치 창출
과로사회화	•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시간 확보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기술 발전 적응	•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기술적응 격차 완화 및 세대 이해 계기 확대
	• 기술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피로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발전에 따른 피로도 완화를 위한 문화적 방안 마련

4.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도시문제와 지역문제’는 인구지형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지역의 재생을 위해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에서 문화의 역할에 대한 관심 증가와도 관련된다. 이 범주에서는 최근에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정책 환경 변화와 관련된 지역 문화자치, 쇠퇴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도시재생 추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세 가지 이슈가 대두된다. 세부적으로는 6개 세부 이슈가 선정되었다(〈표 3-12〉 참조).

‘지역 문화자치’에서는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를 선정하였다. 이 이슈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정책기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화자치의 필요성을 반영한 이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자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문화재정의 확충과 효과적 운용’ 및 ‘도시 및 지역 간 문화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쇠퇴지역 증가’에서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는 도시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도는 심화되고,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쇠퇴지역이 지역이 증가하며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이 발생하는 현상을 반영한 이슈다. 이에 대해서는 ‘유희공간 활용체계 마련, 스마트 축소도시 계획의 도입과 운영’을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은 쇠퇴지역 증가로 성장 지향의 기존 도시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문화시설의 역할이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가 필요해지는 상황을 반영한 이슈이며,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와 공공문화서비스 체계의 보완적 운영’을 그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는 소멸위험 지역 증가에 따라 지역문화자산 소멸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이슈이며, ‘지역의 역사문화, 전통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존 및 활용’을 그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

가'는 인구 감소, 상권 쇠퇴 등에 따른 원도심이 쇠퇴로 도시재생 필요성은 증가하지만 기존사업의 한계점도 대두되는 상황을 반영한 이슈이며, '문화적 도시재생, 도시문화의 재생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그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은 단기적 재생사업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 혹은 문화과잉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을 반영한 이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자활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자산화 전략 지원'을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표 3-12〉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범주의 이슈 및 대응방향

이슈	세부 이슈	문화정책의 대응방향
지역 문화자치	•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 문화재정의 확충과 효과적 운용 • 도시 및 지역 간 문화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쇠퇴지역 증가	•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	• 유희공간 활용체계 마련, 스마트 축소도시계획의 도입과 운영
	•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	•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와 공공문화서비스 체계의 보완적 운영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 지역의 역사문화, 전통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존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도시재생, 도시문화의 재생 정책 수립 및 시행 •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자활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자산화 전략 지원

5.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는 빠르게 변화 발전하는 기술 환경이 인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관련된다. 특히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부상한 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한 논의에서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 범주에서는 핵심 기술군 변화, 초연결시대 도래, 기술 발전과 일자리 문제, 포스트휴먼시대의 윤리와 정체성이라는 네 가지 이슈가 대두되고, 세부적으로는 5개 이슈가 선정되었다(〈표 3-13〉 참조).

‘핵심 기술군 변화’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이 선정되었다. 이 이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범용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것이며, ‘예술계와 과학기술계의 상호 간 리터러시(literacy) 제고를 통해 융합, 협업 촉진’, ‘일반 국민의 4차 산업혁명과 핵심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를 그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초연결시대 도래’에서는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가 선정되었다. 이 이슈는 지능화와 자동화를 기반으로 초연결사회로 전환되는 상황과 초개인화된 소비자 취향을 고려할 필요성, 공동창작 시스템과 플랫폼의 일반화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초연결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전망 및 예측연구 강화’와 ‘협업 기반 창작 지원 및 플랫폼 사업 확대’를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기술 발전과 일자리 문제’에서는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가 선정되었다. 이 이슈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 반복형 일자리는 감소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하는 한편, 기술 발전에 대한 적응에 따른 노동자 간 양극화 전망 등을 반영한 이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술창작 및 문화기획 분야 인공지능 이용 교육 확대’, ‘새로운 기술문화에 대한 재교육 확대’와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을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포스트휴먼 시대의 윤리와 정체성’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래와 관련된다. 세부 이슈로는 현 인류와 포스트휴먼의 중간 존재로서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인간이 지닌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트랜스휴먼(trans human)의 등장과 정체성’, 그러한 상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고려한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가 선정되었다. 이들 이슈에 대해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책 철학과 미래지향적 인문정책 모색’ 및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재정립’을 대응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표 3-13〉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범주의 이슈 및 대응방향

이슈	세부 이슈	문화정책의 대응방향
핵심 기술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계의 기술 리터러시(Literacy)와 과학기술계의 예술 리터러시 제고를 통한 융합 및 협업 촉진 일반 국민의 4차 산업혁명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초연결시대 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 시대 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연결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전망 및 예측연구 강화 협업 기반 창작 지원 및 플랫폼 사업 확대
기술 발전과 일자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지리의 변화와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창작 및 문화기획 분야 인공지능 이용 교육 확대 새로운 기술문화에 대한 재교육 확대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포스트휴먼시대의 윤리와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책 철학과 미래지향적 인문정책 모색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재정립

제4장 ●●

미래 문화정책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제1절

델파이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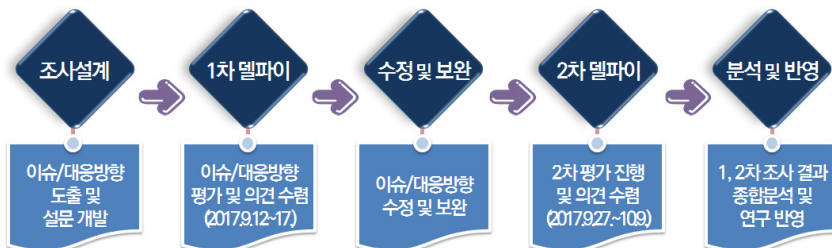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전문가 델파이조사는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 및 이슈별로 설정된 대응 방향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평가 및 추가 제안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문화정책의 의제와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나. 조사 기간 및 과정

본 전문가 델파이조사는 2단계로 나누어 온라인조사로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2017년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2차 조사는 2017년 9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1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환경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이슈와 이슈별 대응방향을 제시하여 전문가 평가 및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시된 이슈와 대응방향을 재평가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슈와 이슈별 대응방향을 최종 수정 및 선별하여 반영하였다.



[그림 4-1] 전문가 델파이조사 과정 및 내용

다. 조사 대상 및 표본

본 조사에서는 문화정책 관계 전문가 및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등 거시환경과 관련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1차(n=57)와 2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전문가는 총 51명이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가. 조사 내용

전문가 델파이조사 내용은 현행 문화정책 분야별 중요도의 시기별 변화에 대한 전망, 미래 문화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분야에 대한 제언,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이슈들이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및 이슈별 문화정책적 대응방향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한 평가, 추가적인 정책 제언 등의 의견 수렴으로 구성되었다. 각 이슈는 거시환경 분석에서 설정한 5개 범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표 4-1〉 전문가 델파이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정책 분야별 전망(1차,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문화정책 분야의 중요도 변화 전망 및 미래 정책 분야 제언
이슈 및 이슈별 대응방향 평가(1차,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가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이슈별 대응방향의 중요도 및 시급성 • ‘사회적·장차적 지형의 변화’ 이슈가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이슈별 대응방향의 중요도 및 시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가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이슈별 대응방향의 중요도 및 시급성 •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가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이슈별 대응방향의 중요도 및 시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가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이슈별 대응방향의 중요도 및 시급성
정책적 제언(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와 관련한 제언 사항
중장기 정책의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중장기적 관점의 문화정책 핵심 의제 및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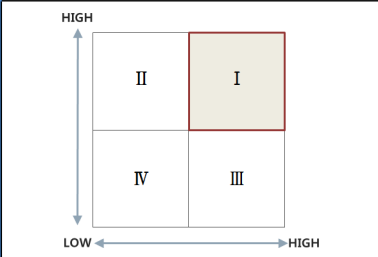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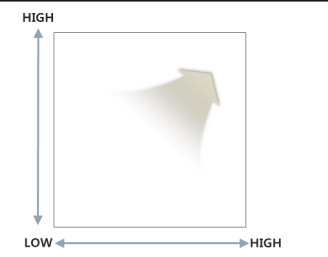
나. 자료의 처리와 분석 방법

1) 자료의 처리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조사 결과를 편집-코딩(Editing-Coding)하여 산출된 데이터를 SPSS 통계패키지로 분석하였다.

2) 분석 방법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각 이슈가 현재 및 미래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이슈별 대응방향의 중요도와 시급성 평가를 위하여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활용하였다. IPA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전 중요도 인식과 이용 후 만족도(또는 성취도)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나 전략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범주별로 이슈와 대응방향이 다중으로 제시되었음을 감안하여 BSA(Benefit Structure Analysis)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즉, 박스그래프 상에서 우측 상단 모서리에 위치할 경우 핵심 이슈나 대응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분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BSA(Benefit Structure Analysis)
이슈 영향력	I : 현재 영향력▲, 미래 영향력▲ II : 현재 영향력▲, 미래 영향력▽ III : 현재 영향력▽, 미래 영향력▲ IV : 현재 영향력▽, 미래 영향력▽	우측 상단 모서리에 가까울수록 영향력이 큰 이슈임
대응방향을 중요도 및 시급성	I : 중요도▲, 시급성▲ II : 중요도▲, 시급성▽ III : 중요도▽, 시급성▲ IV : 중요도▽, 시급성▽	우측 상단 모서리에 가까울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대응방향임

[그림 4-2]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슈의 영향력 평가는 전체 평균값을 적용한 박스그래프 상에서 각 이슈의 위치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영향력은 단기적인 대응과 관련되고 미래 영향력은 중장기적인 대응과 관련되는데, 현재와 미래의 영향력이 모두 크다면, 현재부터 미래까지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슈로 해석된다. 따라서 단기적인 처방을 지양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슈의 변화를 추적하며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래 영향력만 크다면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므로, 그 변화를 추적하며 선제적인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비해서 현재 영향력만 크다면, 정책적 현안이 되는 이슈이므로, 이슈의 해소 또는 완화 등을 위하여 기존 정책의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현재와 미래 영향력이 모두 작다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가 아니거나 문화정책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이슈로 해석된다. 한편, 이슈별 대응방향 평가에서는 해당 이슈 범주의 평균값을 적용한 박스그래프 상에서 각 이슈의 위치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각 대응방향이 특정 이슈에 대응하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4-3] 이슈 영향력에 대한 해석

제2절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1. 문화정책 분야별 중요도 변화 전망

가. 시기별 상대적 중요도

현행 「문화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정책 분류 및 정부 업무에 기초하여 문화정책 분야를 지역문화, 예술, 문화여가, 인문, 문화다양성, 전통문화, 국제문화교류로 제시하고, 각 정책 분야의 현재 대비 미래의 중요도 변화 전망을 단기(5년 이내), 중기(10년 이내), 장기(10년 이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1차 조사에서 시기별로 중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를 선택(중복응답)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선택된 순위를 제시하고 조정하도록 한 결과에 대해 중간 값을 적용하여 백분위로 환산하였다.

〈표 4-2〉 문화정책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 전망

(단위: %, 점)

구분	단기			중기			장기		
	1차* 선택률	2차**	순위 (2차 조사)	1차 선택률	2차	순위 (2차 조사)	1차 선택률	2차	순위 (2차 조사)
지역문화	89.3	93.8	1	60.7	59.2	2	35.7	35.0	6
예술	67.3	76.1	2	50.0	26.8	7	38.5	37.9	5
문화여가	63.0	61.8	3	55.6	42.8	5	38.9	59.5	3
인문	56.0	44.8	4	66.0	52.0	4	38.0	34.3	7
문화다양성	46.4	36.9	5	71.4	76.8	1	44.6	70.9	1
전통문화	44.2	26.1	6	65.4	39.9	6	38.5	45.1	4
국제문화교류	43.1	10.5	7	70.6	52.6	3	45.1	67.3	2
평균	58.5	50.0		62.8	50.0		39.9	50.0	

*주 1차 조사 점수는 시기별(단기, 중기, 장기)로 현재보다 정책적 중요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선택비율임

**주 2차 조사 점수는 정책적 순위 응답을 100점으로 환산(중간 값 50점)하여 산출한 점수이며, 1차 조사 환산 점수와는 기준이 다르므로 상호 비교 대상은 아님.

시기별 중요도 전망 결과(〈표 4-2〉 참조), 단기에서는 1차와 2차의 순위가 동일하였고, 중기와 장기에서는 1차와 2차 조사 순위가 일부 변화하였다. 2차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단기에는 지역문화정책·예술정책·문화여가정책이, 중기에는 문화다양성정책·지역문화정책·국제문화교류정책·인문정책이, 장기에는 문화다양성정책·국제문화교류정책·문화여가정책이 타 분야 비해서 상대적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2차 조사 결과 기준으로 분야별 전망을 보면, 지역문화정책은 단기 중요도가 가장 높지만, 중장기적으로 중요도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지역분권에 대한 관심 증가와 현 정부의 헌법 및 관계법 개정 추진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정책이 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과 관련된 결과로 분석된다.

예술정책은 단기 중요도가 높게 전망되나, 중장기적으로 중요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의 문제와 연동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장기 중요도는 중기에 비해서 다소 높게 전망되었는데, 이는 과학기술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중요도가 높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과도 비교될 수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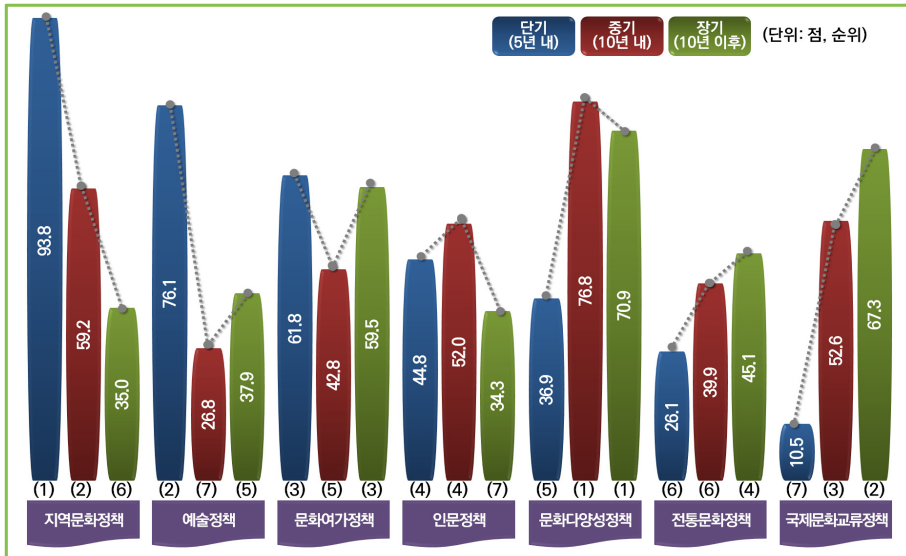
문화여가정책은 시기별 변화 폭이 크지 않으며 일정 수준의 중요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문화정책에서 문화여가정책이 지닌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인문정책은 전통문화정책과 함께 시기별 변화 폭이 크지 않으며 일정 수준의 중요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상대적으로 중기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 심화나 과학기술 발전 및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에 대한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문화다양성정책은 단기 중요도는 낮은 편이나 중장기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핵심 정책 영역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정책 증가와 함께 우리의 다문화사회화나 사회적 갈등의 증가 전망 등과 관련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통문화정책은 중요도 변화 폭이 가장 작게 전망되었다. 타 정책 분야에 비해서 외부 이슈에 민감하지 않은 특성과 관련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중요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문화다양성정책이나 문화교류정책의 중요도 증가에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제문화교류정책은 단기 중요도는 가장 낮지만,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문화다양성정책과 함께 핵심 정책 영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문화외교의 중요성 및 국가브랜드 제고 문제, 문화다양성정책의 중요도 증가와 연동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림 4-4] 문화정책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전망(2차 조사)

나. 향후 부상하거나 주목할 정책

1차 조사 결과, 문화정책 분야별 장기 중요도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선택비율은 모두 50% 이하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2차 조사에서는 장기적으로 미래에 부상하거나 주목해야 할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표 4-3>처럼 기존 문화정책 분야와 관련한 세부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그 중에는 지역문화와 관련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의견들을 거시환경 분석에서 설정한 이슈의 범주로 나누면 보면,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관련 의견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는데, 그중에는 문화와 기술의 융합에 관한 정책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어서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및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문제의 해소에 대한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이 외에 ‘도시문화와 지역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화가, ‘인구지형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표 4-3〉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문화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전문가(n=44, 중복응답) 의견	이슈 범주
문화일반	문화정책체성 정책, 문화시민 정책	인구지형의 변화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문화교육정책(문화리터러시·정보큐레이션 등 문화교육, 유아교육·평생교육 분야의 문화교육)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노령화, 1인 가구, 공동체 해체)	인구지형의 변화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라이프스타일 변화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시민참여형 문화, 개별 소비자향적 문화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지역문화	인구 감소와 행정구역 변화를 반영한 지역문화정책의 단위 재조정	인구지형의 변화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역사·인문 중심의 지역문화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축소도시 심화에 따른 도시 및 지역의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역문화 생활문화가 여전히 중요	
	지역분권 지역자치를 기반으로 한 문화정책 주체의 전환	
	문화 계획과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로의 전면 이양	
문화정책과 도시변화와의 연계		
예 술	예술치유 정책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문화예술교육(2010년 유네스코 서울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문화예술교육 의제 채택 후 한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와 위상이 높아졌고 학교예술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의 소외계층, 특수계층 예술교육이 실시되므로 문화예술교육정책 영역 별도 설정 필요)	
	예술 시장·산업 정책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의 변화

구분	전문가(n=44, 중복응답) 의견	이슈 범주
예 술	문화예술과 디지털기술 접목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고도화되어 가는 디지털 기술과 산업 환경에서 문화예술의 지속적·실용적이고 새로운 창작을 시도할 수 있는 안전지대(safety zone)를 마련해줄 수 있는 창작 지원 및 기술 기반 R&D 사업	
문화여가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집단별 차별화된 문화서비스 제공	인구지형의 변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노인문화복지정책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의 변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여가정책 여가문화 발전에 따른 문화민영융합정책	
인 문	피로사회의 자기착취에 따른 사회문제 관련 정신문화(정신문화 영역을 새롭게 개념화하거나 문화여가정책이나 인문정책에서 추진)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공동체 의식 축소, 자기중심적 사회협력구조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외톨이문화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의 변화
	문화공동체정책과 문화재생정책	
문화다양성	다문화가정 증대, 2세의 성인화에 따른 문화다양성정책 방향 재조정	인구지형의 변화
	문화다양성의 본래 개념을 살린 문화다양성정책	인구지형의 변화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지역문화, 전통문화를 포함하는 방향의 문화다양성정책	인구지형의 변화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의 변화
	정보, 테크놀로지 관련 문화정책에 따른 문화다양성정책	인구지형의 변화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전통문화	전통문화 관련 지식재산권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의 변화
국제문화교류	문화산업 육성 및 국제문화교류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의 변화
기 타	남북한 문화협력과 문화격차 해소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른 통일문화정책	
	환경문화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의 변화
	문화와 기술 결합의 일반화에 따른 계층·지역·경제적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문화정책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예술정책, 문화여가정책, 지역문화정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기술 및 과학에 의한 인간 삶의 변화와 관련한 과학기술문화정책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되는 다양한 연관 분야의 융합문화정책	
	기술 발전에 따른 삶의 변화	
	타 분야와 연계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정책(4차 산업과 문화정책의 연계)	
4차 산업과 연계한 IT융합형 문화정책		
기술변화(인공지능, 4차산업)에 따른 문화정책		

구분	전문가(n=44, 중복응답) 의견	이슈 범주
기 타	디지털문화정책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사이버와 관련된 신문화 정책	
	문화기술정책	
	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화창조산업 및 문화서비스 강화정책	
	새로운 기술시대 도래(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비	
	기술과 문화의 융합 분야	
	기술문화정책(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기술문화가 더욱 깊이 문화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	
	기술 발전(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법제도 및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휴먼라이프스타일의 변화(노동과 가치창출의 개념 재정립, 문화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시스템의 비중과 역할 재정립)	
기상 및 증강 공간·기술 정책		

*주: 제시된 전문가 의견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일부 의견의 경우에는 요약·정리하여 제시하였음.

2.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평가

가. 이슈의 현재 및 미래 영향력

1)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들이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점수는 1차 대비 2차 조사 결과에서 모두 소폭 상승하였다. 이슈 중에서는 ‘고령화 이슈 증가’의 현재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고 평가되었고, 이어서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 순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되었다. 그 외 이슈의 영향력은 평균값보다 작게 평가되었다. 그중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에 대한 평가는 국제사회 문화의제 변화에서 살펴본 예술가와 문화전문가의 이동성 증진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4-4〉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의 현재 영향력

(단위: 점)

이슈		1차	2차	순위 (2차)	GAP (1차-2차)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59.2	61.1	5	▲1.9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70.2	70.4	2	▲0.2
	고령화 이슈 증가	72.8	73.5	1	▲0.7
국제적인 인구이동과 다문화사회화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	66.2	67.4	4	▲1.2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68.4	69.0	3	▲0.6
	탈북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53.5	54.7	6	▲1.2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	35.1	35.9	7	▲0.8
전체 이슈 평균		65.5	66.5		

2)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들이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점수는 1차와 2차 조사 결과가 유사하였고, 순위에 차이가 없이 점수만 소폭 등락하였다. 이슈 중에서 ‘고령화 이슈 증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의 순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외 이슈의 영향력은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의 영향력은 전체 이슈 평균에 가깝게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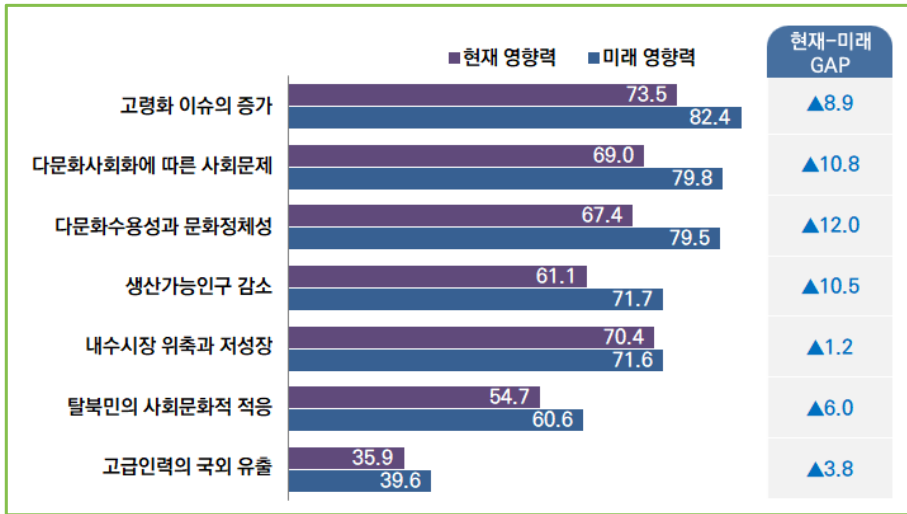
〈표 4-5〉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의 미래 영향력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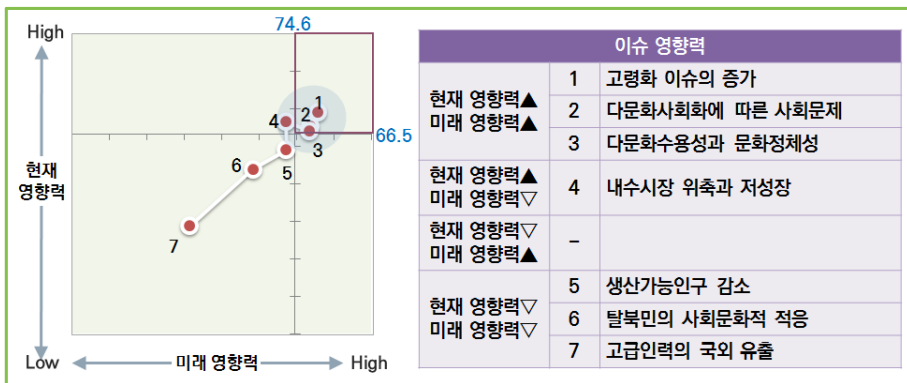
이슈		1차	2차	순위 (2차)	GAP (1차-2차)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71.5	71.7	4	▲0.2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71.5	71.6	5	▲0.1
	고령화 이슈 증가	83.3	82.4	1	▽0.9
국제적인 인구이동과 다문화사회화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	79.4	79.5	3	▲0.1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79.8	79.8	2	0.0
	탈북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58.8	60.6	6	▲1.8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	39.9	39.6	7	▽0.3
전체 이슈 평균		74.0	74.6		

3) 이슈 영향력 평가 결과 분석

2차 조사 결과,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는 현재보다 미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중에서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이슈 증가’는 현재 대비 미래 영향력의 증대 수준은 그 외 이슈에 비해서 더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4-5]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영향력 비교(2차 조사)



[그림 4-6]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영향력 분석(2차 조사)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의 문화정책 영향력 IPA 및 BSA 결과(2차 조사), ‘고령화 이슈 증가’가 영향력이 가장 큰 핵심 이슈로 평가되었다. 이어서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도 영향력이 큰 핵심 이슈로 평가되었다.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은 현재 영향력이 더 큰 이슈로 평가되었지만, 미래 영향력도 평균값에 가깝게 평가되었다. 그 외 이슈들은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고 평가되었다([그림 4-6] 참조).

나.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와 시급성

1) 대응방향의 중요도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별 문화정책 대응방향의 중요도는 1차 대비 2차 조사 결과에서 소폭 등락하였으나 순위에는 변화가 없었다. 2차 조사를 기준으로 이슈별 대응방향의 중요도 평가 결과를 보면,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 및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다문화수용성 증진’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 ‘고령화 이슈 증가’에 대응한 ‘예술치료 및 노인 문화프로그램 등 건강한 노년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에 대응한 ‘문화 분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나, 동일한 이슈의 대응방향으로 제시된 ‘장기침체에 따른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문화적 접근 모색’은 평균값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이 밖에 ‘탈북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응한 ‘남북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 및 탈북민의 문화적응력 제고’이나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에 대응한 ‘문화 분야 창의인력 양성 정책 강화 및 국외유출 완화 모색’과 ‘문화 인력의 미스매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적 인력 정책 추진’은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표 4-6〉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단위: 점)

이슈		대응방향(2차 기준)	1차	2차	순위 (2차)	GAP (2차-1차)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화 분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72.4	73.1	3	▲0.7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장기침체에 따른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문화적 접근 모색	61.0	63.7	4	▲2.7
	고령화 이슈 증가	예술치료 및 노인문화프로그램 등 건강한 노년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77.6	77.0	2	▽0.6
국제적인 인구 이동과 다문화사회화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	(수정)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다문화수용성 증진	77.6	77.9	1	▲0.3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탈북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남북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 및 탈북민의 문화적응력 제고	60.1	60.3	6	▲0.2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	문화 분야 창의인력 양성 정책 강화 및 국외유출 완화 모색 (추가)문화 인력의 미스매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적 인력 정책 추진	51.3	53.1	7	▲1.8
평균			66.7	66.8		

2) 대응방향의 시급성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에 대한 문화정책 대응방향의 시급성은 1차 대비 2차 조사에서 소폭 등락하였으나 순위에 변화는 없었다. 2차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고령화 이슈 증가’에 대응한 ‘예술치료 및 노인문화프로그램 등 건강한 노년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의 시급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에 대응한 ‘문화 분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같은 이슈에 대응한 ‘장기침체에 따른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문화적 접근 모색’은 평균값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이어서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 및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다문화수용성 증진’의 시급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 밖에 ‘탈북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이나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에 대한 대응방향의 시급성은 중요도 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낮게 평가되었다.

〈표 4-7〉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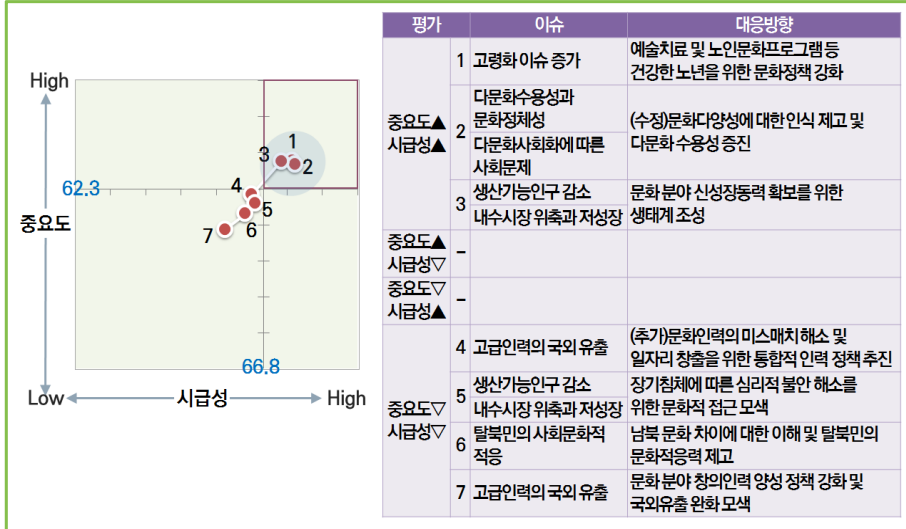
(단위: 점)

이슈		대응방향(2차 기준)	1차	2차	순위 (2차)	GAP (2차-1차)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화 분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70.6	72.1	2	▲1.5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장기침체에 따른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문화적 접근 모색	53.9	57.6	5	▲3.7
	고령화 이슈 증가	예술치료 및 노인문화프로그램 등 건강한 노년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71.9	72.4	1	▲0.5
국제적인 인구 이동과 다문화사회화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	(수정)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다문화수용성 증진	70.6	71.1	3	▲0.5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탈북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남북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 및 탈북민의 문화적응력 제고	53.5	53.9	6	▲0.4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	문화 분야 창의인력 양성 정책 강화 및 국외유출 완화 모색 (추가)문화 인력의 미스매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적 인력 정책 추진	46.9	48.5	7	▲1.6
평균			61.2	62.3		

3) 이슈 대응방향 평가 결과 분석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별 문화정책 대응방향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한 IPA 및 BSA 결과(2차 조사), ‘고령한 이슈 증가’에 대응한 ‘예술치료 및 노인문화프로그램 등 건강한 노년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대응방향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과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다문화수용성 증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의 대응방향으로 제시된 ‘문화 분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타 대응방향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되었다.



[그림 4-7]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3.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평가

가. 이슈의 현재 및 미래 영향력

1)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들이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점수는 1차 대비 2차 조사 결과에서 소폭 등락하였다. 이슈 중에서는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의 현재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고 평가되었고, 이어서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문화민주주의 증진', '정치 불신과 신직접민주주의'의 순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갈등에 관련된 세부 이슈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되었다. 이는 해당 이슈들이 정치나 외교 문제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표 4-8〉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의 현재 영향력

(단위: 점)

이슈		1차	2차	순위 (2차)	GAP (1차-2차)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갈등	남북 갈등 및 문화적 이질성 심화	47.8	49.5	8	▲1.7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	53.9	54.7	7	▲0.8
	동아시아 역내 갈등	59.2	59.7	5	▲0.5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53.5	54.9	6	▲1.4
사회적 갈등의 심화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79.4	79.2	1	▽0.2
	(수정)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75.9	75.9	2	0.0
정의, 공감 및 문화의 정치	정치 불신과 신작집민주주의	69.3	68.8	4	▽0.5
	문화민주주의 증진	72.8	73.6	3	▲0.8
전체 이슈 평균		65.5	66.5		

2)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들이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점수는 1차와 2차 조사 결과가 유사하였고 순위에도 변동이 없었다. 이슈 중에서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문화민주주의 증진’,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 순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외 이슈의 미래 영향력은 평균값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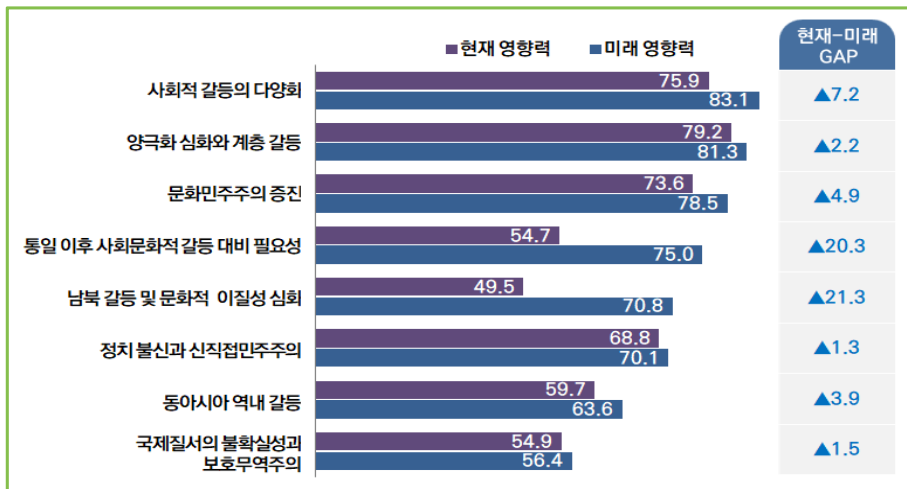
〈표 4-9〉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의 미래 영향력

(단위: 점)

이슈		1차	2차	순위 (2차)	GAP (1차-2차)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갈등	남북 갈등 및 문화적 이질성 심화	70.6	70.8	5	▲0.2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	75.4	75.0	4	▽0.4
	동아시아 역내 갈등	62.3	63.6	7	▲1.3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53.1	56.4	8	▲3.3
사회적 갈등의 심화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82.0	81.3	2	▽0.7
	(수정)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83.8	83.1	1	▽0.7
정의, 공감 및 문화의 정치	정치 불신과 신작집민주주의	70.6	70.1	6	▽0.5
	문화민주주의 증진	78.5	78.5	3	0.0
전체 이슈 평균		74.0	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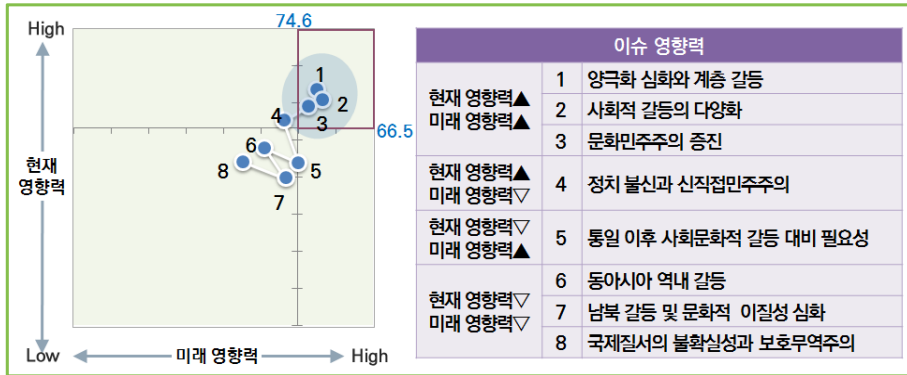
3) 이슈 영향력 평가 결과 분석

2차 조사 결과,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들은 현재 영향력보다 미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슈 중에서는 ‘남북 갈등 및 문화적 이질성 심화’와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은 현재 대비 미래 영향력 증대 수준이 타 이슈에 비해서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4-8]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영향력 비교(2차 조사)

문화정책에 대한 영향력 IPA 및 BSA 결과(2차 조사),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문화민주주의 증진’은 현재와 미래 영향력이 모두 큰 핵심 이슈로 평가되었다. ‘정치 불신과 신직접민주주의’는 현재 영향력이 더 큰 이슈로 평가되었지만, 미래 영향력도 평균값에 가깝게 평가되었다.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은 현재 영향력은 작으나 미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되었다. 그 외 이슈들은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게 평가되었다 ([그림 4-9] 참조).



[그림 4-9]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영향력 분석(2차 조사)

나.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와 시급성

1) 대응방향의 중요도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에 대한 문화정책 대응방향의 중요도는 1차와 2차 조사 결과가 유사하였다. 2차 조사 기준으로 ‘문화민주주의 증진’에 대응한 ‘문화기본권 및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1차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 ‘정치 불신과 신직접 민주주의’의 대응방향 중 하나인 ‘문화행정의 관료주의 점검 및 개선 모색’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나, 이와 함께 제시된 신직접민주주의에 대응한 문화윤리 정립은 평균값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이어서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및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의 대응방향으로 제시된 ‘공존·협력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직업 및 삶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제도 개선’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 밖에 이슈들의 대응방향은 평균값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다만, ‘동아시아 역내 갈등’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의 대응방향으로 제시된 ‘한중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쌍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협력 강화’는 평균값에 가깝게 평가되었다.

〈표 4-10〉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단위: 점)

이슈		대응방향	1차	2차	순위 (2차)	GAP (2차-1차)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갈등	남북 갈등 및 문화적 이질성 심화	남북 관계 회복 및 문화적 이질성 완화를 위한 문화 교류 강화	69.3	70.0	6	▲0.7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	남북한(재외동포 포함) 문화 이해 등 통일 대비 문화정책 강화	68.9	69.7	7	▲0.8
	동아시아 역내 갈등	한중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쌍 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협력 강화	70.2	71.6	5	▲1.4
	국제질서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인류 공생의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 의제 연계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63.6	65.4	9	▲1.8
		(추가)문화와 교육, 복지, 의료 등을 통합한 관점의 문화ODA 추진 및 협 업 모델 마련		65.0	10	
사회적 갈등의 확산	양극화 심화와 계층갈등	공존·협력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문화정 책 강화	78.9	78.7	3	▽0.2
	(수정)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문화 분야 종사자의 직업 및 삶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제도 개선	80.3	78.6	4	▽1.7
정의, 공감 및 문화의 정치	정치 불신과 신직접민주주의	문화행정의 관료주의 점검 및 개선 모색	78.1	78.8	2	▲0.7
		신직접민주주의에 대응한 문화윤리 정립	68.9	69.5	8	▲0.6
	문화민주주의 증진	문화기본권 및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82.0	82.1	1	▲0.1
평균			73.4	72.9		

2) 대응방향의 시급성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별 문화정책 대응방향의 시급성은 1차보다 2차 조사에서 대체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순위 변화는 없었다. ‘정치 불신과 신직접민주주의’에 대응한 ‘문화행정 관료주의 점검 및 개선 모색’이 1차와 2차 조사에서 시급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2차 조사 기준으로, ‘문화민주주의 증진’에 대응한 ‘문화기본권 및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정치적 기반 마련’이 그 다음으로 시급성이 높게 평가되었

다. 이어서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및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에 대응한 ‘공존·협력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직업 및 삶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제도 개선’, ‘정치 불신과 신직접민주주의’에 대응한 ‘신직접민주주의에 대응한 문화윤리 정립’ 순으로 시급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 밖에 ‘동아시아 역내 갈등’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한중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쌍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협력 강화’은 평균값에 가깝게 평가되었으나, 그 외에는 평균값과 편차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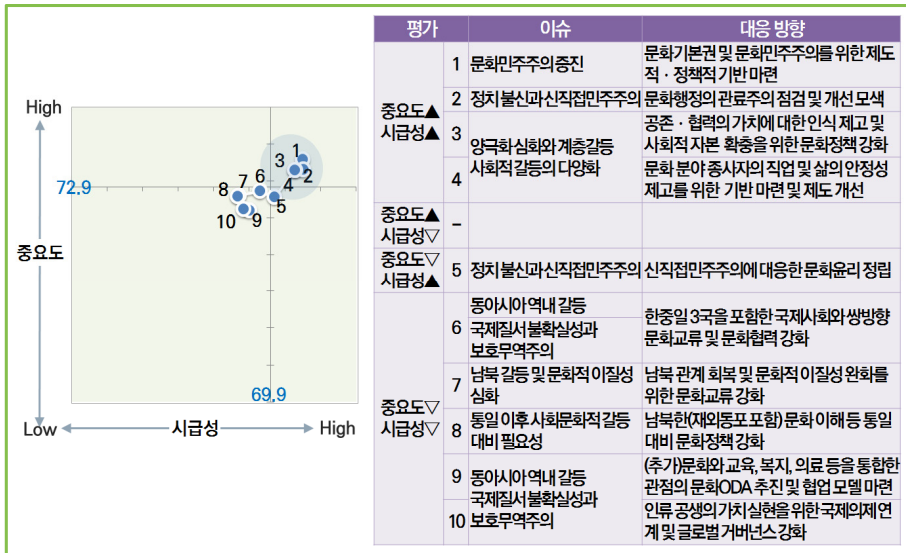
〈표 4-11〉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시급성

(단위: 점)

이슈		대응방향	1차	2차	순위 (2차)	GAP (2차-1차)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갈등	남북 갈등 및 문화적 이질성 심화	남북 관계 회복 및 문화적 이질성 완화를 위한 문화 교류 강화	56.1	59.0	9	▲2.9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	남북한(재외동포 포함) 문화 이해 등 통일 대비 문화정책 강화	53.9	58.4	10	▲4.5
	동아시아 역내 갈등	한중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쌍 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협력 강화	64.9	66.4	6	▲1.5
	국제질서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인류 공생의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 의제 연계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58.8	60.6	8	▲1.8
사회적 갈등의 확산	양극화 심화와 계층갈등	(추가)문화와 교육, 복지, 의료 등을 통합한 관점의 문화ODA 추진 및 협 업 모델 마련		62.6	7	
	양극화 심화와 계층갈등 및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문화정 책 강화	공존·협력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문화정 책 강화	78.5	78.9	3	▲0.4
	(수정)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문화 분야 종사자의 직업 및 삶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제도 개선	78.5	78.5	4	0.0
정의, 공감 및 문화의 정치	정치 불신과 신직접민주주의	문화행정의 관료주의 점검 및 개선 모색	81.1	81.6	1	▲0.5
		신직접민주주의에 대응한 문화윤리 정립	71.1	71.3	5	▲0.2
	문화민주주의 증진	문화기본권 및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81.1	81.3	2	▲0.2
평균			69.3	69.9		

3) 이슈 대응방향 평가 결과 분석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별 문화정책 대응방향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한 IPA 및 BSA 결과(2차 조사), ‘문화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문화기본권 및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대응방향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치 불신과 신직접 민주주의’에 대응한 ‘문화행정의 관료주의 점검 및 개선 모색’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평가되었다. 이어서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및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에 대응한 ‘공존·협력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와 ‘문화 분야 종사자의 직업 및 삶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제도 개선’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대응방향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정치 불신과 신직접 민주주의’에 대응한 ‘신직접민주주의에 대응한 문화윤리 정립’은 중요도는 평균 값보다 낮지만 시급성은 높게 평가되었다.



[그림 4-10]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4.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평가

가. 이슈의 현재 및 미래 영향력

1)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들이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1차와 2차 조사 결과가 유사하였고, ‘자연과의 공존 모색’, ‘소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는 타 이슈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슈 중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의 현재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평가되었고, 이어서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의 순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되었다.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영향력은 평균값과 거의 동일하게 평가되었다. 그 외 이슈의 영향력은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12〉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의 현재 영향력

(단위: 점)

	이슈	1차	2차	순위 (2차)	GAP (1차-2차)
라이프스타일 변화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78.9	79.2	2	▲0.3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81.1	81.1	1	0.0
삶의 가치관 변화	자연과의 공존 모색	59.2	62.6	7	▲3.4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77.6	78.6	3	▲1.0
	(수정)소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58.3	61.1	9	▲2.8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64.0	65.4	6	▲1.4
과로사회화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74.1	75.5	4	▲1.4
기술 발전 적응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66.2	67.9	5	▲1.7
	기술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피로도 증가	60.5	61.6	8	▲1.1
	전체 이슈 평균	65.5	66.5		

2)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들이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점수는 1차와 2차 조사 결과가 유사하였으나, 대체로 영향력 순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이슈 중에서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의 순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자연과의 공존 모색’의 영향력은 평균값과 거의 동일하게 전망되었으나, 그 외 이슈의 영향력은 평균값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4-13〉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의 미래 영향력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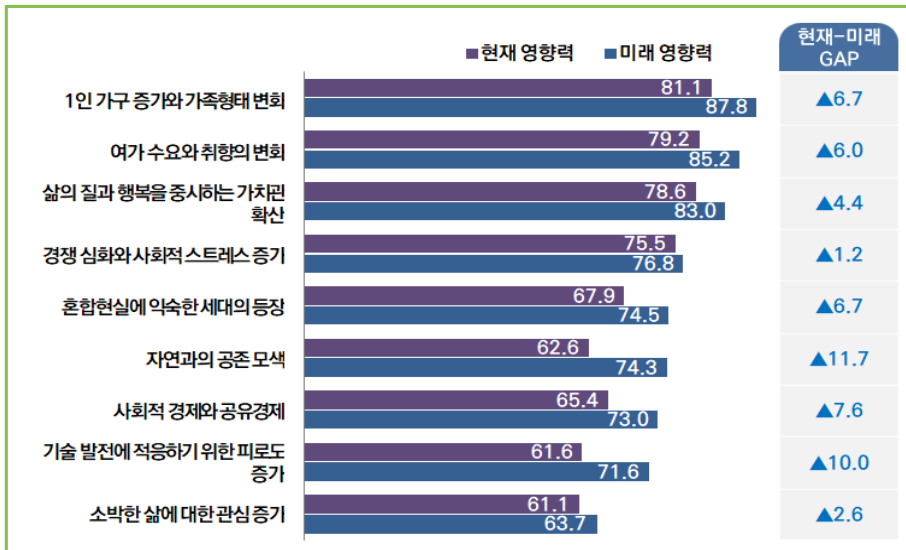
이슈		1차	2차	순위 (2차)	GAP (1차-2차)
라이프스타일 변화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85.1	85.2	2	▲0.1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88.2	87.8	1	▽0.4
삶의 가치관 변화	자연과의 공존 모색	71.9	74.3	6	▲2.4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82.5	83.0	3	▲0.5
	(수정)소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60.1	63.7	9	▲3.6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72.8	73.0	7	▲0.2
과로사회화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74.6	76.8	4	▲2.2
기술 발전 적응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72.4	74.5	5	▲2.1
	기술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피로도 증가	70.6	71.6	8	▲1.0
전체 이슈 평균		74.0	74.6		

3) 이슈 영향력 평가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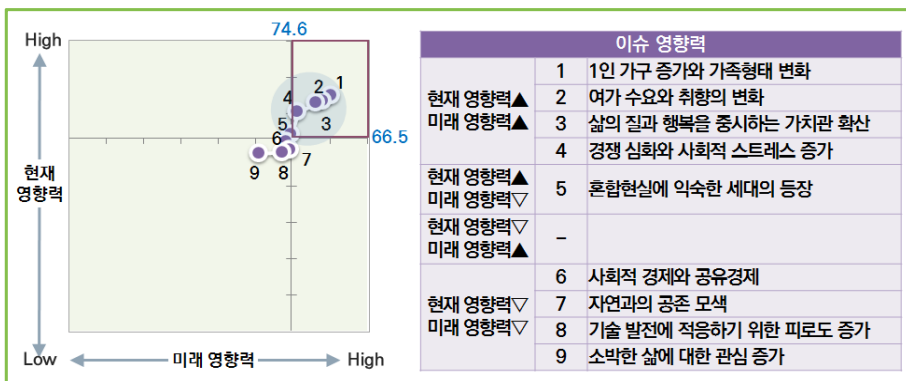
2차 조사 결과,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들은 현재보다 미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중에서 ‘자연과의 공존 모색’, ‘기술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피로도 증가’는 현재 대비 미래 영향력 증대 수준이 타 이슈에 비해서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4-11] 참조).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IPA 및 BSA 결과(2차 조사),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이슈는 현재와 미래 영향력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

고, 이어서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도 현재와 미래 영향력이 모두 높게 평가되었다.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은 현재 대비 미래 영향력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평균값에 매우 가깝게 평가되었다. 그 외 이슈들은 현재 및 미래 영향력이 평균값 이하로 평가되었으나,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자연과의 공존 모색’은 상대적으로 평균값에 가깝게 평가되었다([그림 4-12] 참조).



[그림 4-11]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영향력 비교(2차 조사)



[그림 4-12]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영향력 분석(2차 조사)

나.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와 시급성

1) 대응방향의 중요도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에 대한 문화정책 대응방향의 중요도는 1차 대비 2차 조사에서 모든 이슈가 높게 평가되었다. 2차 조사 기준으로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및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에 대응한 ‘일상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 제공’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에 대응한 ‘여가시간 확보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어서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및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에 대응한 ‘생애주기와 세분화된 취향 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 정책 강화’, ‘자연과의 공존 모색’ 및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에 대응한 ‘다양성, 공존·상생의 가치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문화적 삶의 지표 설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이슈들의 대응방향은 평균값보다 낮게 평가되었지만, ‘소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에 대응한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관리’는 평균값에 가깝게 평가되었다.

〈표 4-14〉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단위: 점)

이슈		대응방향	1차	2차	순위 (2차)	GAP (2차-1차)
라이프 스타일 변화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생애주기와 세분화된 취향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 정책 강화	79.4	79.6	3	▲0.2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일상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 제공	83.3	83.8	1	▲0.5
삶의 가치관 변화	자연과의 공존 모색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다양성 공존·상생의 가치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문화적 삶의 지표 설정	75.4	77.0	4	▲1.6
	(수정)소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관리	73.2	74.3	5	▲1.1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문화 분야의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가치 창출	70.2	71.3	6	▲1.1

(단위: 점)

이슈		대응방향	1차	2차	순위 (2차)	GAP (2차-1차)
과로 사회화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여가시간 확보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82.9	83.5	2	▲0.6
기술 발전 적응	혼잡한 삶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세대 간 기술적응 격차 완화 및 세대 이해 계기 확대	68.4	70.3	7	▲1.9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피로도 증가	기술 발전에 따른 피로도 완화를 위한 문화적 방안 마련	65.8	68.4	8	▲2.6
평균			74.8	76.0		

2) 대응방향의 시급성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들에 대한 문화정책 대응방향의 시급성 평가 결과, 중요도 평가와 마찬가지로 1차 대비 2차 조사에서 모두 이슈가 시급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상대적으로 ‘문화 분야의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가치 창출’의 상승폭이 타 대응방향에 비해서 컸다. 제시된 대응방향 중에서 시급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에 대응한 ‘여가시간 확보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이었다. 그 다음으로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및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의 대응방향으로 제시된 ‘일상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 제공’과 ‘생애주기와 세분화된 취향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 정책 강화’의 시급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어서 ‘소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에 대응한 ‘문화 분야의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가치 창출’, ‘자연과의 공존 모색’ 및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의 대응방향으로 제시된 ‘다양성, 공존·상생의 가치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문화적 삶의 지표 설정’의 순으로 시급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 밖에 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의 시급성은 평균값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표 4-15〉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의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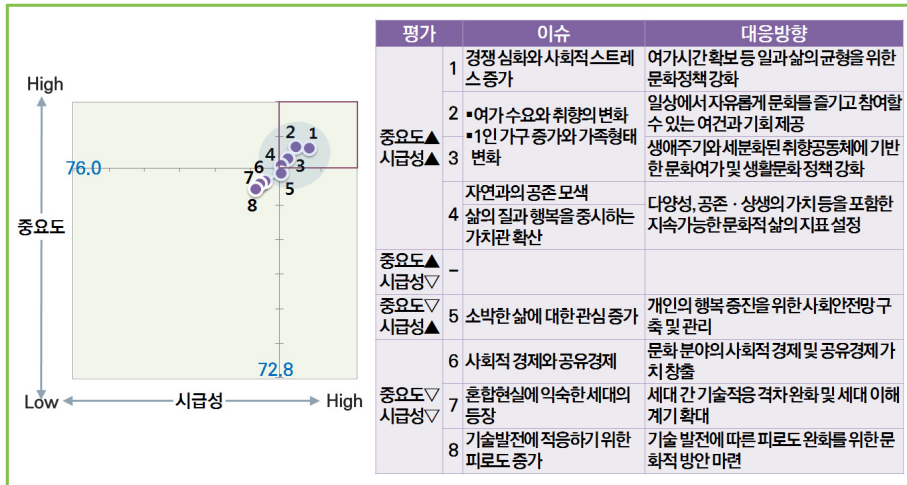
(단위: 점)

이슈		대응방향	1차	2차	순위 (2차)	GAP (2차-1차)
라이프 스타일 변화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생애주기와 세분화된 취향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 정책 강화	74.6	75.7	3	▲1.1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일상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 제공	76.8	78.6	2	▲1.8
삶의 가치관 변화	자연과의 공존 모색	다양성 공존·상생의 가치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문화적 삶의 지표 설정	71.1	73.4	5	▲2.3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수정)소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관리	71.5	73.4	4	▲1.9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문화 분야의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가치 창출	64.5	67.6	6	▲3.1
과로 사회화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여가시간 확보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82.9	83.2	1	▲0.3
기술 발전 적응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세대 간 기술적응 격차 완화 및 세대 이해 계기 확대	63.6	65.9	7	▲2.3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피로도 증가	기술 발전에 따른 피로도 완화를 위한 문화적 방안 마련	62.3	64.3	8	▲2.0
평균			70.9	72.8		

3) 이슈 대응방향 평가 결과 분석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별 문화정책 대응방향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한 IPA 및 BSA 결과(2차 조사),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에 대응한 ‘여가시간 확보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가 우선순위가 높은 가장 높은 대응방향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및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에 대응한 ‘일상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 제공’과 ‘생애주기와 세분화된 취향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 정책 강화’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자연과의 공존 모색’ 및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에 대응한 ‘다양성, 공존·상생의 가치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문화적 삶의 지표 설정’이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

되었다. ‘소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에 대응한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관리’는 중요도가 평균값보다 낮게 평가되었지만, 시급성은 평균값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그림 4-13]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5.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평가

가. 이슈의 현재 및 미래 영향력

1)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들이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점수는 1차와 2차 조사 결과가 유사하였으나, 이슈별로 소폭 등락하였다. 제시된 이슈 모두가 평균값보다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도시문제와 지역문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이슈 중에서는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의 현재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고 평가되었다. 이어서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의 순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4-16〉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의 현재 영향력

(단위: 점)

이슈		1차	2차	순위 (2차)	GAP (1차-2차)
지역 문화자치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73.2	76.7	4	▲3.5
쇠퇴지역 증가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	76.3	77.5	2	▲1.2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	68.9	71.1	6	▲2.2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71.5	72.9	5	▲1.4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79.4	78.6	1	▽0.8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	77.2	76.7	3	▽0.5
전체 이슈 평균		65.5	66.5		

2) 미래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들이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점수는 1차와 2차 조사 결과에서 소폭 등락하였다. 이슈 중에서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의 미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이어서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평가된 ‘원도심 쇠퇴와 도시 재생 필요성 증가’의 영향력은 타 이슈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전망 되었으나, 평균값에 매우 가깝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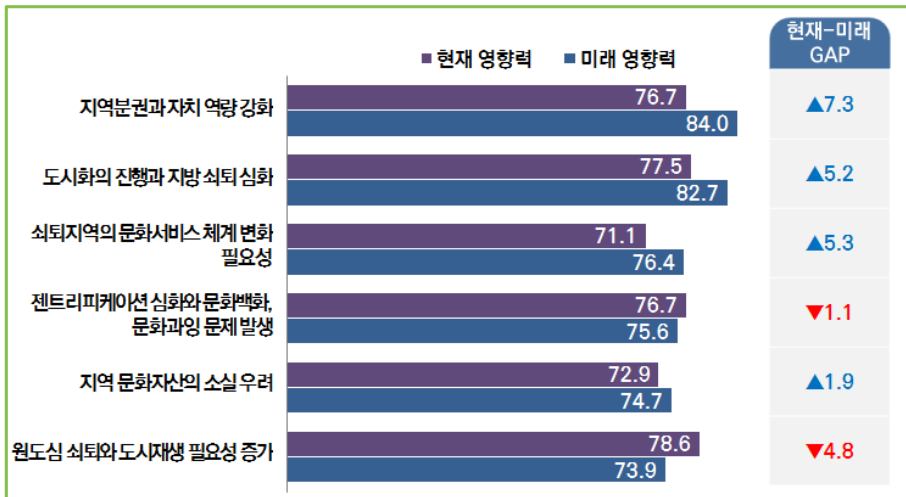
〈표 4-17〉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의 미래 영향력

(단위: 점)

이슈		1차	2차	순위 (2차)	GAP (1차-2차)
지역 문화자치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82.5	84.0	1	▲1.5
쇠퇴지역 증가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	82.9	82.7	2	▽0.2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	75.0	76.4	3	▲1.4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71.9	74.7	5	▲2.8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71.9	73.9	6	▲2.0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	75.0	75.6	4	▲0.6
전체 이슈 평균		74.0	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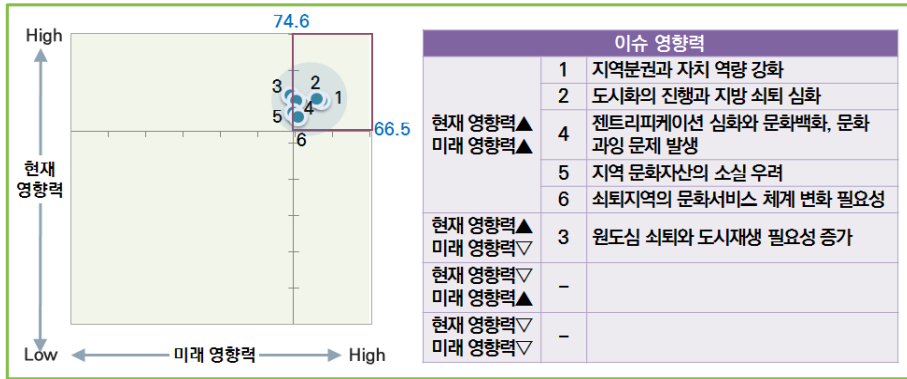
3) 이슈 영향력 평가 결과 분석

2차 조사 결과, ‘도시문제와 지역문제’에 선정된 이슈 중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과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는 미래 영향력이 현재보다 작다고 전망되었다. 그 외 이슈는 현재보다 미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중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가 현재 대비 미래 영향력 증대 수준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4-14]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영향력 비교(2차 조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IPA 및 BSA 결과(2차 조사), 선정된 모든 이슈가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되었고, 그중에서도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가 가장 영향력이 큰 핵심 이슈로 평가되었다. 이어서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 순으로 나타났다.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는 현재 영향력은 가장 컸지만, 미래 영향력은 평균값보다 미세하게 낮았다([그림 4-15] 참조).



[그림 4-15]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영향력 분석(2차 조사)

나.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및 시급성

1) 대응방향의 중요도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별 문화정책 대응방향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1차 대비 2차 조사 결과에서 모두 상승하였고, 대부분의 대응방향이 평균값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2차 조사를 기준으로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에 대응한 ‘문화재정의 확충과 효과적 운용’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같은 이슈에 대응한 ‘문화자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의 중요도가 그 다음이었다. 두 대응방향은 1차 조사에서도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어서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에 대응한 ‘문화적 도시재생, 도시문화의 재생 정책 수립 및 시행’,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에 대응한 ‘지역의 문화 생태계 진단 및 역량 강화 모색’,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에 대응한 ‘지역의 역사문화, 전통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존 및 활용’,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에 대응한 ‘공간, 시설 중심에서 사람, 활동 중심으로 재생 사업 체계 변화’,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에 대응한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와 공공문화서비스 체계의 보완적 운영’,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에 대응한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자활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이슈의 대응방향은 중요도가 평균값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조사 시 추가된 대응방향들의 중요도는 평균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단위: 점)

이슈		대응방향	1차	2차	순위 (2차)	GAP (2차-1차)
지역 문화자치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문화자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78.5	80.7	2	▲2.2
		문화재정의 확충과 효과적 운용	80.3	81.0	1	▲0.7
		도시 및 지역 간 문화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69.3	70.7	10	▲1.4
		(추가)지역의 문화 생태계 진단 및 역량 강화 모색		76.6	4	
쇠퇴지역 증가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쇠퇴 심화	(수정)지방쇠퇴 정밀 현황 파악 및 예측체계 도입, 유휴공간 활용 체계 마련	67.1	72.3	9	▲5.2
	쇠퇴지역의 문화 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와 공공문화서비스 체계의 보완적 운영	74.1	76.0	7	▲1.9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지역의 역사문화, 전통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존 및 활용	74.6	76.6	5	▲2.0
도시재생과 젠트리피 케이션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문화적 도시재생, 도시문화의 재생 정책 수립 및 시행	75.9	76.9	3	▲1.0
		(추가)공간, 시설 중심에서 사람, 활동 중심으로 재생사업 체계 변화		76.2	6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자활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75.4	75.9	8	▲0.5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자산화 전략 지원	68.4	69.8	11	▲1.4
평균			73.7	75.7		

2) 대응방향의 시급성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별 문화정책 대응방향의 시급성도 1차 대비 2차 조사에서 모두 상승하였다. 2차 조사 기준으로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에 대응한 '문화자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같은 이슈에 대응한 '문화재정의 확충과 효과

적 운용'이 다음이었다. 이어서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에 대응한 '문화적 도시재생, 도시문화의 재생 정책 수립 및 시행',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에 대응한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와 공공문화서비스 체계의 보완적 운영',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에 대응한 '공간, 시설 중심에서 사람, 활동 중심으로 재생사업 체계 변화' 순이었다.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에 대응한 '지역의 역사문화, 전통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존 및 활용'은 평균값보다 낮게 평가되었지만, 그 차이는 0.05점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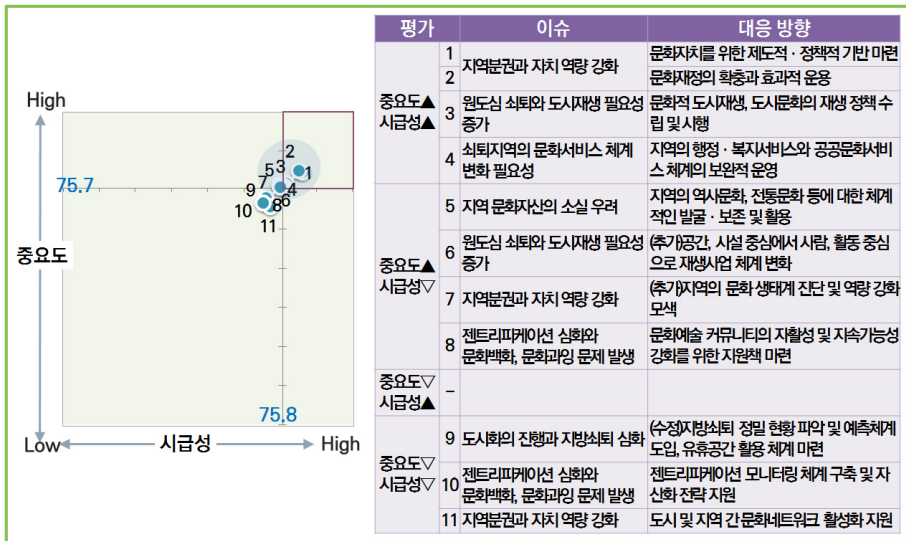
〈표 4-19〉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대응방향의 시급성

(단위: 점)

이슈		대응방향	1차	2차	순위 (2차)	GAP (2차-1차)
지역 문화자치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문화자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81.6	83.2	1	▲1.6
		문화재정의 확충과 효과적 운용	80.7	81.9	2	▲1.2
		도시 및 지역 간 문화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66.2	69.5	11	▲3.3
		(추가)지역의 문화 생태계 진단 및 역량 강화 모색		75.1	8	
쇠퇴지역 증가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쇠퇴 심화	(수정)지방쇠퇴 정밀 현황 파악 및 여층체계 도입, 유휴공간 활용 체계 마련	63.2	70.6	10	▲7.4
		쇠퇴지역의 문화 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	76.3	76.7	4	▲0.4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74.1	75.7	6	▲1.6
도시재생과 젠트리피 케이션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문화적 도시재생, 도시문화의 재생 정책 수립 및 시행	77.2	77.5	3	▲0.3
		(추가)공간, 시설 중심에서 사람, 활동 중심으로 재생사업 체계 변화		75.8	5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포잉 문제 발생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자활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74.6	75.4	7	▲0.8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자산화 전략 지원	71.5	72.0	9	▲0.5
평균			73.9	75.8		

3) 이슈 대응방향 평가 결과 분석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별 대응방향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한 IPA 및 BSA 결과(2차 조사),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에 대한 ‘문화자치를 위한 제도적·정치적 기반 마련’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같은 이슈에 대한 ‘문화재정의 확충과 효과적 운용’이 그 다음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어서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에 대한 ‘문화적 도시재생, 도시문화의 재생 정책 수립 및 시행’,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에 대한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와 공공문화서비스 체계의 보완적 운영’,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에 대한 ‘지역의 역사문화, 전통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존 및 활용’,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에 대한 ‘공간, 시설 중심에서 사람, 활동 중심으로 재생사업 체계 변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지역분권과 자치역량 강화’ 및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이슈들의 대응방향이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되었다.



[그림 4-16]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6.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평가

가. 이슈의 현재 및 미래 영향력

1)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들이 현재 문화정책 미치는 영향력은 점수는 1차와 2차 조사 결과가 유사하였고, 이슈별로 소폭 등락하였다. 이슈 중에서 기술 발전과 관련한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의 현재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고 평가되었다. 그 외 이슈들의 영향력은 평균값보다 작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각 이슈들이 주로 미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표 4-20〉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의 현재 영향력

(단위: 점)

이슈		1차	2차	순위 (2차)	GAP (1차-2차)
핵심 기술군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	58.8	59.9	2	▲1.1
초연결시대 도래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	57.9	58.6	3	▲0.7
기술 발전과 일자리 문제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	68.4	69.3	1	▲0.9
포스트휴먼 시대의 윤리와 정체성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	49.1	49.0	5	▽0.1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	56.1	57.5	4	▲1.4
전체 이슈 평균		65.5	66.5		

2)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들이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은 1차와 2차 조사에서 소폭 등락하였다. 이슈 중에서 2030년이라는 미래 시점까지는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을 제외한 모든 이슈의 영향력이 평균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별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이어서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 ‘과학기술

과 윤리의 문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의 순으로 영향력일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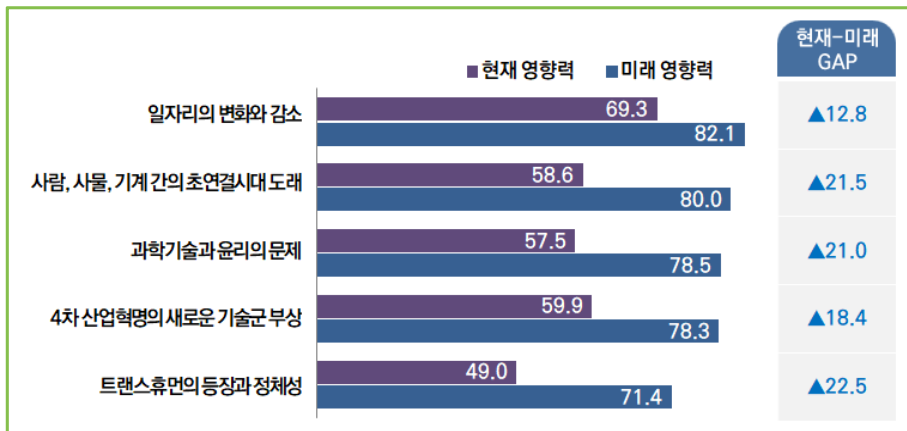
〈표 4-21〉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의 미래 영향력

(단위: 점)

이슈		1차	2차	순위 (2차)	GAP (1차-2차)
핵심 기술군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	78.9	78.3	4	▽0.6
초연결시대 도래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	81.1	80.0	2	▽1.1
기술 발전과 일자리 문제	일지리의 변화와 감소	82.0	82.1	1	▲0.1
포스트휴먼 시대의 윤리와 정체성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	70.6	71.4	5	▲0.8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	78.9	78.5	3	▽0.4
전체 이슈 평균		74.0	74.6		

3) 이슈 영향력 평가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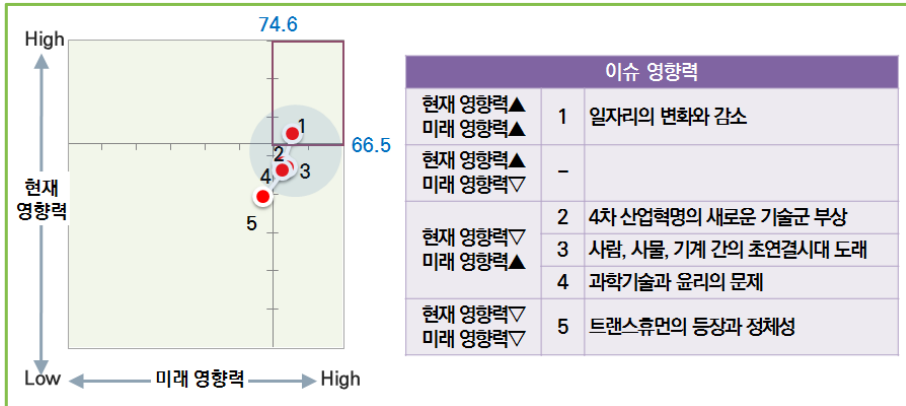
2차 조사 결과,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는 모두 현재보다 미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른 범주에 비해 현재 대비 미래 영향력 증대 수준 차이도 컸다. 증가폭은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이 가장 컸지만, 이 이슈의 미래 영향력은 전체 이슈 평균값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그림 4-17]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영향력 비교(2차 조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IPA 및 BSA 결과(2차 조사), ‘일지리의 변화와 감소’가 가장 영향력이 큰 핵심 이슈로 평가되었다.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은 현재와 미래 영향력이 모두 작다고 평가되었고, 그 외 이슈들은 현재 영향력은 작지만 미래 영향력은 크다고 평가되었다.



[그림 4-18]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영향력 분석(2차 조사)

나.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및 시급성

1) 대응방향의 중요도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별 대응방향의 중요도는 1차와 2차 조사 결과가 유사하였다. 2차 조사 기준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 및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에 대응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미래지향적 인문정책 모색’이었다. 이어서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에 대응한 ‘협업 기반 창작 지원 및 플랫폼 사업 확대’,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 및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에 대응한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재정립’,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에 대응한 ‘기술 변화에 대응한 문화 분야의 새로운 생산양식 및 일거리 창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에 대응한 ‘예술계의 기술 리터러시와 과학기술계의 예술 리터러시 제고를 통한 융합 및 협업 촉진’ 순이었다.

〈표 4-22〉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대응방향의 중요도

(단위: 점)

이슈		대응방향	1차	2차	순위 (2차)	GAP (2차-1차)
핵심 기술군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	예술계의 기술 리터러시(literacy)와 과학기술계의 예술 리터러시 제고를 통한 융합 및 협업 촉진	72.8	73.7	6	▲0.9
		일반 국민의 4차 산업혁명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58.3	60.2	10	▲1.9
초연결시대 도래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	초연결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전망 및 예측연구 강화	71.1	71.1	8	0.0
		협업 기반 창작 지원 및 플랫폼 사업 확대	77.2	77.2	3	0.0
기술 발전과 일자리 문제	일거리의 변화와 감소	예술창작 및 문화기획 분야 인공지능 이용 교육 확대	61.0	61.1	9	▲0.1
		새로운 기술문화에 대한 재교육 확대	71.9	71.2	7	▽0.7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78.9	79.2	2	▲0.3
		(추가)기술 변화에 대응한 문화 분야의 새로운 생산양식 및 일거리 창출		74.2	5	
포스트 휴먼시대의 윤리와 정체성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	미래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미래지향적 인문정책 모색	79.4	79.9	1	▲0.5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재정립	75.0	76.3	4	▲1.3
평균			71.7	72.4		

2) 대응방향의 시급성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별 문화정책 대응방향의 시급성은 1차와 2차 조사 결과가 유사하였고,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과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에 대응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미래지향적 인문정책 모색’의 시급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어서 ‘일거리의 변화와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과 ‘기술 변화에 대응한 문화 분야의 새로운 생산양식 및 일거리 창출’,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에 대응한 ‘협업 기반 창작 지원 및 플랫폼 사업 확대’,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 및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에 대응한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에

술교육 재정립’,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에 대응한 ‘예술계의 기술 리터러시와 과학기술계의 예술 리터러시 제고를 통한 융합 및 협업 촉진’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3〉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대응방향의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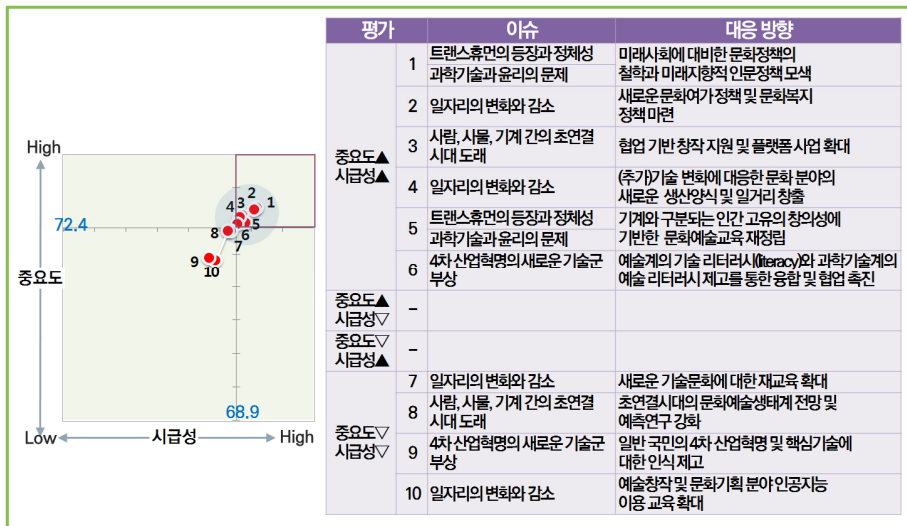
(단위: 점)

이슈		대응방향	1차	2차	순위 (2차)	GAP (2차-1차)
핵심 기술군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	예술계의 기술 리터러시(literacy)와 과학기술계의 예술 리터러시 제고를 통한 융합 및 협업 촉진	68.0	69.4	6	▲1.4
		일반 국민의 4차 산업혁명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59.6	60.7	9	▲1.1
초연결시대 도래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	초연결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전망 및 예측연구 강화	65.4	65.8	8	▲0.4
		협업 기반 창작 지원 및 플랫폼 사업 확대	70.2	71.4	4	▲1.2
기술 발전과 일자리 문제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	예술창작 및 문화기획 분야 인공지능 이용 교육 확대	57.0	58.2	10	▲1.2
		새로운 기술문화에 대한 재교육 확대	66.7	66.9	7	▲0.2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75.4	76.2	2	▲0.8
		(추가)기술 변화에 대응한 문화 분야의 새로운 생산양식 및 일거리 창출		72.7	3	
포스트 휴먼시대의 윤리와 정체성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	미래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미래지향적 인문정책 모색	76.3	77.2	1	▲0.9
	과학기술과 윤리문제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재정립	68.4	70.3	5	▲1.9
평균			67.4	68.9		

3) 이슈 대응방향 평가 결과 분석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들의 대응방향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한 IPA 결과(2차 조사),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과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에 대응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미래지향적 인문정책 모색’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에 대응한 ‘협업 기반 창작 지원 및 플랫폼

품 사업 확대’,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에 대응한 ‘기술 변화에 대응한 문화 분야의 새로운 생산양식 및 일거리 창출’,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 및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에 대응한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재정립’,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에 대응한 ‘예술계의 기술 리터러시와 과학기술계의 예술 리터러시 제고를 통한 융합 및 협업 촉진’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이슈들의 대응방향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낮게 평가되었지만,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문화에 대한 재교육 확대’는 평균값에 근접하였다.



[그림 4-19]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7. 정책 및 중장기 의제 제언

가. 정책 제언

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 최종 문항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제안할 사항을 자유의견 방식으로 수렴하였다. 그중 본 연구의 내용이나 방법론에 국한된 의견을 제외하고 전문가(n=34, 중복응답) 의견을 정리해 보면,

크게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현행 정책의 개선이나 과제에 대한 제언으로 나뉜다. 그중 전자는 미래 문화정책이 가야 할 방향과 주로 관련되는데, 문화정책의 본질, 기본원칙과 가치 등에 입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렴될 수 있다. 후자는 문화정책 각 분야와 포괄적인 정책 구조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포함하며, 그중에는 지역문화와 문화교육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환경 분석에서 살펴본 이슈 범주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고르게 제시되었는데, 수렴된 제언을 이슈 범주를 고려하여 정리하면 <표 4-24>와 같다.

<표 4-24> 전문가 델파이조사의 정책 제언(1차 조사)

구분	제언	이슈 범주
정책 방향 관련 제언	문화정책은 간접 지원, 소통 교류, 지역 전통 우선 등 기본원칙의 유지가 가장 중요함.	(문화 일반)
	'미래'라는 현상의 변화에 주목하기 보다는 우리사회가 그동안 행하지 못하고 결핍해 온 '문화정책의 역할과 가치, 본질'에 주목해야 함.	
	미래사회의 변화와 인간성에 대한 심도한 고민이 필요함.	
	미래사회의 인간성, 인간 삶의 가치 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적 관심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	
	개인의 문화역량 강화, 인간의 감성과 영성 계발을 통한 문화지수 향상이 필요함.	
	기술과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우므로, 당면한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 및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해서 단기 정책에 연속성과 일관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함.	
	미래 문화정책은 문화산업의 확장을 염두에 두어야 일자리 창출 등 당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국제화·세계화 추세를 민감하게 추적하여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해야 함.	
	최근 변화에 글로벌한 시각으로 대응하고, 단기적 정책과 변화보다 중장기적인 정책 보완 중심으로 설계하되 근본적으로 교육 변화부터 시행되어야 함.	
	인구감소 및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국제관계로서의 문화정책은 다문화와 보호주의가 혼재한 정책 변화이므로 새로운 국제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필요로 함.	
	문화정책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응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이끌어 가는 것이어야 하며, 그 방법은 새로 나온 것을 익히는 것이라기보다 인문학적 소양을 키움으로써 가능함.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 변화, 기술 발전과

구분	제언	이슈 범주
	<p>새로운 기술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한국 문화정책이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큰 틀과 방향성 제시가 가장 중요하며, 민간영역이 대체할 수 없는 지점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p> <p>지역과 전통, 그리고 4차 산업이 개별의 주제가 아니라, 함께 모색되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윤리와 문화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p> <p>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에서 윤리와 정체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생각해야 하며, 문화예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함.</p> <p>4차 산업혁명은 문화의 일상화, 예술의 지역화 등을 피할 수 있는 중요 지점이지만, 미래 문화정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음.</p>	인간의 미래
	<p>공공서비스의 양적 팽창과 질적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형식적 모니터와 감사, 양적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p> <p>부처 간 관련 사업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함.</p> <p>현행 문화행정체계의 개편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점 마련이 필요함.</p> <p>제시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이 가능한 구조(포럼)와 자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동인 마련이 필요함.</p> <p>문화예술 교육 개혁이 미래 아젠다 속에 포함되어야 함.</p> <p>문화정책과 다분야 간의 융복합, 연계방안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실효성 제고 모색이 필요함.</p>	(문화 일반)
정책 개선 및 과제 관련 제언	<p>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향후 대한민국의 문화발전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p> <p>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문화정책이 더욱 필요하고, 모든 국민이 창의성을 시험할 기술 능력 토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함</p>	인구지형의 변화
	<p>현재 등장하고 있는 이슈들(대학의 예술계 학과 구조 조정 문제, 초·중·고 예술교육 문제, 예술가의 노동자성 문제, 예술계 일자리 문제, 문화산업의 독과점 문제, 음원수익 분배 문제,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p> <p>전통-현재-미래의 연계 고리를 통해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p>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p>지역문화와 연관된 지역문화 발전 과제들을 연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p> <p>도시와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가 필요함.</p> <p>지역의 문화정책들이 단순한 정치적 아젠다가 아니라 진정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되어야 함.</p> <p>문화분권, 문화자치의 확립을 위한 자율성보장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및 지표개발, 지역학 연구에 대한 지역문화진흥법상의 기본의무조항과 국가 차원의 지역학 육성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p>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구분	제언	이슈 범주
	미래 문화정책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이나 기능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역역량 강화수단이 모색되어야 함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획기적인 정책이 요구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의 문화자치(문화분권)뿐만 아니라 자치 단체와 지역예술계 관계의 분권(자치)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문화유산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 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격차 요인과 해결 방안 탐색 연구가 필요함.	
	미래 문화정책에서 지나치게 기술을 강조하지 않아야 하며, 온라인 커뮤니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에 따라 현재 60, 70대 연령대가 급속히 테크놀로지 소외계층으로 전환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60, 70대 연령대 대상의 컴퓨터교육 필요성에 근거한 교육강화 정책이 필요함.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 기반의 새로운 생산양식 창출, 새로운 일거리 창출 가능성과 방법 모색 필요함.	

나. 중장기 정책의제 제안

2차 델파이조사의 최종 문항으로 1, 2차 조사를 종합하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문화정책의 중장기 의제와 해당 의제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n=45, 중복응답) 의견을 정리하면, 문화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의견과 특정 분야에 관한 의견이 고르게 나타났다(<표 4-25> 참조). 전자에는 문화정책 환경에 대응한 정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후자에는 지역문화 관련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그 경향은 지방분권 및 문화자치에 대응한 문화정책과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괄적 측면에서는 문제 해결이나 국가의 지향점 등에서 문화정책의 조정자 역할 강화, 문화정책의 지속성, 문화유산이나 문화산업과 연계된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구지형의 변화’에서는 다문화사회화 관련 의견이 중심이었다.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 변화’와 연계된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고, 인간 소외나 양극화 등과

관련한 문화정책적 접근이 강조되는 경향이었다. ‘도시문제와 지역문제’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지역분권과 더불어 지역문화생태계가 강조된 경향이었고,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축소도시계획 관련 의견도 제시되었다.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생태계 조성, 기술 변화에 대응한 정책 체계 구축 관련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표 4-25〉 전문가의 중장기 문화정책 의제 및 과제 제안

이슈 범주	제안 의제	추진과제
(문화 일반)	협업의 문화예술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가이드하는 문화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역할의 재정정장(트 진흥 부처에서 사회 조율 부처로)
	정책 기획 개발 운영(주도하는 인력의 전체 메커니즘에 대한 변화(개인 삶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나 정책은 개인의 삶보다 국가적 시각으로 운영되므로)	-
	문제 해결 수요 창출 등 단기한 중심 개별적·분산적 효과에 치중하는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현재가 미래에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지속가능 관점에서 문화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지속성 유지	• 가족형태의 변화와 세부적인 상황에 따른 통합적인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주거 등의 공공서비스 정책
	경계와 차이가 많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아이덴티티 문제)의 속도 조절	• 변화를 끝임 없이 리마인드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의제) 모임(위원회), 모니터링 그룹 등을 만들고, 활동을 공유
	지속가능발전전에 대응한 문화정책 의제 발굴과 대응물리적 환경과 사회·문화 환경 변화	• 경제 및 사회 교류와 관련한 국제문화교류 대응 추진체계 마련 및 지속 대응(FTA, SDGs 등)
	문화유산의 유지 보전 체계	•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 설명 체계에 대한 지속적 보완과 업그레이드
	국제 문화교류 확대	• 문화시장 개방으로 인한 자국문화 침해를 고려한 문화산업 수출역기능 해소 정책 및 문화역수입 정책 수립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교류의 필요성	•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및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 수행
인구지형의 변화	사회구조(1인 중심, 고령, 다문화) 변화	• 공동체 형성
	다문화 및 문화 융복합	• 다문화수용성 강화를 위한 조기교육 및 사회문화적 관용성과 이해도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사회 구성원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문화지형의 변모에 대한 대응과 준비	• 디엠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지원

이슈 범주	제안 의제	추진과제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문화민주주의[중앙부처 중심에서 지방분권으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문화공급자 중심에서 문화소비(향유)자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민주주의시대에 적합한 문화정책 수립, 집행, 평가의 체계 연구
	문화 분야 간 균형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불균형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지원 정책, 불균형 대상 분야에 대한 활성화 지원
	통일을 대비하는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 기반 민간 문화협력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 변화	보편적 문화권 실현과 생애주기에 따른 예술 창작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권과 생활정치 선진화
	자신과 타인, 자국민과 이주민, 수도와 지방, 인구와 기계 등 다양한 양극화로 인한 정체성 대립 해소 및 수평적 상호소통과 해결책 논의 체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개별성과 타인의 다양성을 함께 존중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주의 기반의 문화교육과 문화행사 증진 기술 발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융합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성인 대상 사회교육의 실시
	인간의 소외성(외톨이문화)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공유문화 확산(목적적 참여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 형성 중심) 평등의식의 재정립 및 가치 확산(한국적 평등의식의 재정립, 남녀차별·갑질 등의 부정적 시각 해소, 합리적 차별의 수용)
	문화영향평가의 안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영향평가에 따른 정책 제언의 실효성 담보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세대변화에 주목하여 점차 높아지는 인간 소외감을 없앨 수 있는 문화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특성 변화(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세대별로 보유한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할 수 있는 세대별·생애별 문화정책 수립
	공공교육과 연계된 문화창의성 교육 확대와 가정교육 약화를 대체할 일상적 문화활동 강화로 유년기 문화자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일상문화활동 큐레이터(방과 후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의 방문과 프로그램 활동 지원 4차 산업혁명 대비 문화예술교육)
	잠재적 문화예술소비계층인 청년세대의 빈곤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수준 저하 및 취향 변화(갑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생(특히 고등학생) 문화예술교육 강화 청년 소득 증대 방안 마련 대학생 등 20대 예술향수 지원 방안 마련
	여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 경험 및 교육을 통한 여가의 직간접적 체험 필요
	노동정책과 문화정책의 긴밀한 관계 하에 문화영역의 인력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문화정책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5일제 근무, 여가중심 시대라는 전제 하에 휴일에 공식서비스를 하는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조건 조성 및 적용 방안(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방안) 마련 문화예술영역 공공노조의 가이드라인 필요
	문화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 문화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이슈 범주	제안 의제	추진과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화수요 및 문화소비의 변화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학, 의학, 경제학, 기계공학, 문화정책 전문가, 예술가, 법학 등 관련 분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트렌드 분석과 대응방안 모색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산양식과 일거리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창업, 문화예술분야 창작 활성화 방안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지역분권체제에 기반한 문화정책의 작동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중앙집중적 정책관리 체계의 전면적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분권체제를 대비하는 문화정책 작동시스템 및 법제화 연구
	지역-전통-거버넌스를 연결 조화하는 정책사업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버넌스 구축 과제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실행단위인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이것이 삶의 질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의 확산과 고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정책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재정 확충 단기 정책사업 형태의 인력양성이 아닌 대항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문화관광인력 양상정책의 발굴과 확산
	지역문화 기반 조성 및 예술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권을 위한 계획 수립, 재정의 지방 권한 강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문화예술에 다소 치우친 정책 경향에서 벗어나 지역분권과 지역문화 정체성의 핵심인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토대로서 지역학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학 연구의 제도화 추진(지역문화진흥법 활용)
	지역과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발전을 위한 예술 정책, 사람들의 여가 생활 및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예술정책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역화가 삶의 질에 가장 중요	-
	지역문화의 지속적인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생태계에 대한 정밀한 연구조사와 그를 통한 예측 및 발전모델 수립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거점형 지역의 구축 내실화 지역문화기초시설 전반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 로컬에 초점을 맞춘 문화가이드 양성 등
	지역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의 성장동력화
	문화와 발전 간의 관계 모색과 문화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및 도시소통과 축소도시에 대응한 문화정책의 방향성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축소와 문화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도시폐교의 문화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태조사, 청년문화랩 및 생활문화 공간 활용방안 수립
	도시계획 등이 도시 변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를 문화계획의 범주로 전환·종합하는 문화정책 영역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관련 및 도시 계획 관련 법안 개정 및 신규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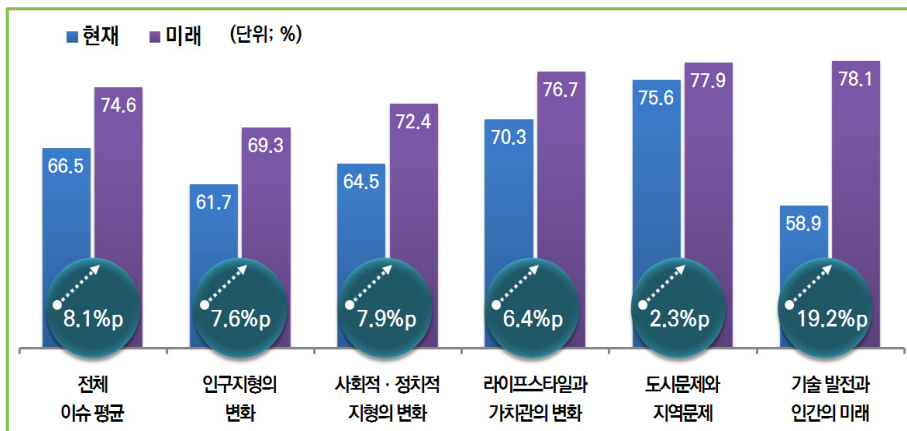
이슈 범주	제안 의제	추진과제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과 시장의 영역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시도될 수 있도록 하는 액셀레이터 교육 및 R&D 지원 • 예술가와 기본 문화예술기관의 기술 및 경영 관련 지식,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 내에서의 자생력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예: 영국의 Digital Arts and Culture Accelerator 추진)
	기존의 문화정책과 새로운 분야의 융복합으로 탄생하는 포스트 문화정책의 개념과 분야 등에 관한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과 문화정책, 가상공간과 문화정책 등 첨단기술에 따른 문화정책 흐름의 변화를 고찰하는 과제
	예술과 타 영역과의 연계성 강화, 예술과 시장·산업 영역, 정체성·시민윤리·디지털 관련 공간 및 기술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 모임 및 사업 지원 강화, 문화시장 활성화 정책, 디지털시대 문화정책 등
	미래문화와 기술문화의 상관성 및 그에 따른 정책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보다 더 기술 지향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유연한 문화정책 모색 및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게 될 기술문화 연구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경제 체계 변화에 대비한 유무형 인프라 및 법제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생활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 제고) • 인문교육 강화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영향 속에서 인간 중심의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적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느린 걸음의 정책' 필요
	과학기술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발전과 그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철학적, 윤리적 이해를 문화의 관점에서 도모하여 정책의 근간 마련
	4차 산업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상상력에 토대한 사회변동 시뮬레이션 • 창조적 파괴 수준의 문화정책 시스템: 과정, 사람, 문화 변동 시도(특히 기득권 내려놓기)
	기술변화에 따른 문화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변화에 대응한 문화수요 예측과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예술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문제, 수익배분 구조 등

제3절

소결: 핵심 이슈 및 대응방향 선정

1. 문화정책의 핵심 이슈 선정

문화정책을 둘러싼 환경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이슈들이 현재 및 미래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 결과, 현재보다 미래의 영향력이 크다고 전망되었다. 5개 이슈 범주로 보면, 단기적으로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 인구가형의 변화 >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범주의 순으로 크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서 중장기적으로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은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 인구가형의 변화’ 순으로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의 전체 크기(현재×미래)는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 인구가형의 변화’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20] 이슈 범주별 현재 및 미래 영향력 비교(2차 조사)

한편, 이슈의 영향력 평가 결과, 현재 영향력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형태 변화',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등의 순으로 크다고 평가되었다. 20개 이슈가 평균(66.5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미래 영향력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이어서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지역 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쇠퇴 심화' 등의 순으로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래 영향력에서도 20개 이슈가 평균(74.6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각 이슈의 영향력을 종합하면, 총 24개 이슈가 현재 또는 미래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표 4-26〉 참조). 영향력이 가장 큰 이슈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였고, 이어서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지역 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등의 순이었다. 영향력이 9위로 평가된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를 제외한 1위~17위 사이의 이슈들은 현재와 미래 영향력이 모두 크다고 평가되었다.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도 미래 영향력이 평균값에 가까웠다. 이처럼 현재와 미래의 영향력이 모두 큰 이슈에 대해서는 정책이 단기 현안 대응에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이슈 변화를 추적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18위~20위에 속한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정치 불신과 신직접민주주의'는 현재 영향력은 크나, 미래 영향력은 평균값 이하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은 미래 영향력이 평균값에 가까웠다. 현재 영향력만 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정책 대응 강화나 기존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슈로 해석된다.

21~24위는 현재 영향력은 낮고 미래 영향력은 크다고 평가된 이슈다. 그중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을 제외한 세 이슈는 모두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범주에 속한다. 이들 이슈에 대해서는 그 변화

를 추적하면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연구의 강화 및 지속적인 정보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26〉 영향력 평가로 본 문화정책의 핵심 이슈(2차 조사)

범주	이슈	현재	미래	영향력 종합	순위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81.1	87.8	현재▲ 미래▲	1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79.2	85.2	현재▲ 미래▲	2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78.6	83.0	현재▲ 미래▲	3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지역 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76.7	84.0	현재▲ 미래▲	4
사회적·장차적 지형의 변화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79.2	81.3	현재▲ 미래▲	5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	77.5	82.7	현재▲ 미래▲	6
사회적·장차적 지형의 변화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75.9	83.1	현재▲ 미래▲	7
인구지형의 변화	고령화 이슈 증가	73.5	82.4	현재▲ 미래▲	8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78.6	73.9	현재▲ 미래▼	9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75.5	76.8	현재▲ 미래▲	10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 과잉 문제 발생	76.7	75.6	현재▲ 미래▲	11
사회적·장차적 지형의 변화	문화민주주의 증진	73.6	78.5	현재▲ 미래▲	12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	69.3	82.1	현재▲ 미래▲	13
인구지형의 변화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69.0	79.8	현재▲ 미래▲	14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72.9	74.7	현재▲ 미래▲	15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	71.1	76.4	현재▲ 미래▲	16
인구지형의 변화	다문화 수용성과 문화정체성	67.4	79.5	현재▲ 미래▲	17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67.9	74.5	현재▲ 미래▼	18
인구지형의 변화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70.4	71.6	현재▲ 미래▼	19
사회적·장차적 지형의 변화	정치 불신과 신직접민주주의	68.8	70.1	현재▲ 미래▼	20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	59.9	78.3	현재▼ 미래▲	21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	58.6	80.0	현재▼ 미래▲	22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	57.5	78.5	현재▼ 미래▲	23
사회적·장차적 지형의 변화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	54.7	75.0	현재▼ 미래▲	24
전체 이슈 평균		66.5	74.6		

*주: '▲'은 평균값 이상인 경우, '▼'은 평균값보다 낮지만 그 차이가 1점 미만인 경우, '▽'은 평균값보다 1점 이상 낮은 경우를 의미함.

2. 문화정책의 핵심 이슈별 대응방향 분석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된 이슈일수록 대응방향의 중요도와 시급성도 높게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서 현재 및 미래 영향력 모두 작은 이슈의 대응방향은 중요도나 시급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5개 범주별로 보면(〈표 4-27〉 참조), ‘인구지형의 변화’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예솔치료 및 노인문화프로그램 등 건강한 노년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다문화사회화에 대응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다문화수용성 증진’,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이나 저성장에 대응한 ‘문화 분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높은 대응방향으로 평가되었다.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에서는 다양한 갈등 증가에 대응한 ‘공존·협력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문화인력 대상의 ‘문화 분야 종사자의 직업 및 삶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제도 개선’, 문화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문화기본권 및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정치 불신 및 기술발전 등에 의한 신직접민주주의에 대응한 ‘문화행정의 관료주의 점검 및 개선 모색’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 밖에 이슈들의 대응방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대응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중 남북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에서 제시된 ‘통일 기반 민간 문화협력 지속’처럼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에서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에 대응한 ‘생애주기와 세분화된 취향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 정책 강화’,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에 대응한 ‘일상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 제공’,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에 대응한 ‘다양성, 공존·상생의 가치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문화적 삶의 지표 설정’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게 평가되었

다. 이들 이슈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미래 문화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우리 사회의 경쟁과 스트레스 증가에 대응한 ‘여가시간 확보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도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AR, VR로 대표되는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에 대한 대응방향은 낮게 평가되었다. 이 이슈의 경우, 전문가 제언 등에서 제시된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와 기술을 결합하여 격차를 줄이는 정책, 미래세대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생산양식 창출 등을 대응방향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시된 이슈 대부분이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된 ‘도시문제와 지역문제’에서는 지역 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자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및 ‘문화재정의 확충과 효과적 운용’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대응방향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의 문화 생태계 진단 및 역량 강화 모색’도 중요도가 높고 시급성은 평균값에 매우 가까웠다. 도시화와 쇠퇴의 동시 진행, 그 과정에서 원도심 등의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도시재생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백화 및 문화과잉 문제, 지역 문화자산 소실 우려 등에 대한 대응방향도 대체로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다만, 현황과약을 통한 공간 활용 체계,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체계 구축처럼 타 대응방향에 비해 다소 구체적인 경우에는 중요도와 시급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이슈들과 관련하여 축소도시 계획이 논의되면서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가 필요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제시된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와 공공 문화서비스 체계의 보완적 운영’도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의 대응방향으로 제시된 기술을 활용한 교육들은 낮게 평가되었으나,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과 ‘기술 변화에 대응한 문화 분야의 새로운 생산양식 및 일거리 창출’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범용기술 부상에 대응한 ‘예술

제의 기술 리터러시와 과학기술계의 예술 리터러시 제고를 통한 융합 및 협업 촉진', 초연결시대의 도래에 대응한 '협업 기반 창작 지원 및 플랫폼 사업 확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 문제에 대응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미래지향적 인문정책 모색',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재정립'도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들 이슈는 미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문화정책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27〉 핵심 이슈별 대응방향 분석(2차 조사)

범주	영향력	순위	이슈	대응방향	중요도	시급성
인구지형의 변화	현재▲ 미래▲	8	고령화 이슈 증가	예술치료 및 노인문화프로그램 등 건강한 노년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	▲
	현재▲ 미래▲	14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다문화수용성 증진	▲	▲
	현재▲ 미래▲	17	다문화 수용성과 문화정체성			
	현재▲ 미래▽	19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문화분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장기 침체에 따른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문화적 접근 모색	▲ ▽	▲ ▽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현재▲ 미래▲	5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공존·협력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	▲
	현재▲ 미래▲	7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문화분야 중산층의 직업 및 삶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제도 개선	▲	▲
	현재▲ 미래▲	12	문화민주주의 증진	문화기본권 및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	▲
	현재▲ 미래▽	20	정치 불신과 신석집민주주의	문화행정의 관료주의 점검 및 개선 모색 신석집민주주의에 대응한 문화윤리 정립	▲ ▽	▲ ▲
	현재▽ 미래▲	24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	남북한(재외동포 포함) 문화 이해 등 통일 대비 문화정책 강화	▽	▽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현재▲ 미래▲	1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생애 주기와 세분화된 취향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 정책 강화	▲	▲
	현재▲ 미래▲	2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일상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 제공	▲	▲
	현재▲ 미래▲	3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다양성 공존·상생의 가치 등을 포함한 자습능한 문화적 삶의 지표 설정	▲	▲
	현재▲ 미래▲	10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여시간 확보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	▲

범주	영향력	순위	이슈	대응방향	중요도	시급성
	현재▲ 미래▼	18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세대간 기술적응 격차완화 및 세대 이해 계기 확대	▽	▽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현재▲ 미래▲	4	지역 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문화자원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문화재정의 확충과 효과적 운용 도시 및 지역 간 문화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지역의 문화 생태계 진단 및 역량 강화 모색	▲ ▲ ▽ ▲	▲ ▲ ▽ ▼
	현재▲ 미래▲	6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	지방 쇠퇴정밀 현황 파악 및 여흥체도입 유류공간 활용 체계 마련	▽	▽
	현재▲ 미래▼	9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문화적 도시재생 도시문화의 재생 정책 수립 및 시행 공간 시설 중심에서 사람 활동 중심으로 재생사업 체계 변화	▲ ▲	▲ ▲
	현재▲ 미래▲	11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	문화예술 커뮤니티 자활성 및 자부능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젠트리피케이션 모-프링 체계 구축 및 자산화 전략 지원	▲ ▽	▼ ▽
	현재▲ 미래▲	15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지역의 역사문화 전통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존 및 활용	▲	▼
	현재▲ 미래▲	16	쇠퇴지역의 문화 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와 공공문화서비스 체계의 보완적 운영	▲	▲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현재▲ 미래▲	13	일지리의 변화와 감소	예술창작 및 문화 기획 분야 인문기능 이용 교육 확대 새로운 기술문화에 대한 재교육 확대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기술 변화에 대응한 문화분야의 새로운 생생양식 및 일자리 창출	▽ ▽ ▲ ▲	▽ ▽ ▲ ▲
	현재▽ 미래▲	21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	예술계의 기술 리터러시(literacy)와 과학 기술계의 예술 리터러시 제고를 통한 융합 및 협업 촉진 일반 국민의 4차 산업혁명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 ▽	▲ ▽
	현재▽ 미래▲	22	사람, 사물, 기계 간 초연결시대 도래	초연결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전망 및 예측연구 강화 협업 기반 창작 지원 및 플랫폼 사업 확대	▽ ▲	▽ ▲
	현재▽ 미래▲	23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	미래사회에 대한 문화정책의 총괄과 미래학적 인문정책 모색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재정립	▲ ▲	▲ ▲

*주: '▲'은 평균값 이상인 경우, '▼'은 평균값보다 낮지만 그 차이가 1점 미만인 경우, '▽'은 평균값보다 1점 이상 낮은 경우를 의미함.

제5장 ●●

문화정책,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1절

현재가 미래 문화정책에 던지는 의제

1. 문화정책을 둘러싼 환경 전망

가. 선행연구의 정책 환경 전망

기존의 미래 문화정책 연구는 특정 분야 중심의 정책과제 개발이나 단기 트렌드에 집중된 경향이다. 문화정책 분야를 포괄하며 중장기 트렌드 변화나 미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미래 문화정책의 의제 발굴을 위하여 기존 연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김혜인(2014)의 연구에서는 2015~2020년 시점의 문화예술 메가트렌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다섯 가지 트렌드가 제시되었다. 그 줄기는 ‘여가 및 소비문화의 변화’, 소비자 니즈와 유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O2O(Online to Offline) 문화 주도의 라이프스타일’, 융합과 협업을 통한 ‘예술생태계 회복’, ‘집단지성의 사회적 영향력’, 문화 지형을 바꾸는 ‘문화다양성’으로 요약된다. 한편, 허은영(2015)의 연구에서는 ‘(가칭)2045 문화전략포럼’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주제로 ‘문화: 미래의 열쇠’를 선정하고, 소주제로 ‘기술혁신, 예술 그리고 예술인’, ‘지속가능성과 창조성 그리고 문화’, ‘글로벌 이동성, 공존과 갈등 그리고 문화’, ‘수명연장 시대의 문화’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소주제에 대응하여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 예술생태계의 변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 ‘글로벌 이동성, 사회갈등과 통합,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성’, ‘삶의 질과 문화여가’를 설정하였다. 두 연구에서는 문화다양성, 삶의 질과 여가, 예술생태계를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문화, 관광, 체육을 모두 다루었지만, 문화정책 환경은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그중 김향자 외(2006)의 연구에서는 여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으로 나누어 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와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 10대 문화트렌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2030년 미래 정책의 의제로 ‘문화개념의 확대’, ‘문화예산의 확대’, ‘지역문화의 활성화’, ‘참여와 분권을 위한 문화조직 개편’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2030년 문화정책 기조를 ‘행복사회, 여가사회로의 진화를 위한 문화향유 극대화’와 ‘다문화사회에서 문화다양성과 문화정체성의 확보’로 설정하고, 17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표 5-1〉 참조).

〈표 5-1〉 「미래문화전략 2030」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문화환경 변화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와 세계 경제의 통합 • 국민경제 성장 및 불균형 심화 • 산업구조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기술 등 고도기술사회 진입 • 저출산, 고령화 사회 • 가치체계와 소비문화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인종, 다문화사회화 • 여가사회화 • 정부 역할의 변화 • 남북관계의 변화 • 환경중시 사회로의 전환
10대 문화트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접변의 가속화 • 세계화로 인한 문화의 위상 강화 • 문화·관광 국제 교류협력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문화·관광 역할 강화 • 가족구조의 변화와 고령자 문화의 대두 • 소비자욕구의 다양화 및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소비와 문화향유의 양극화 • 여가 중심의 일상 재편 • 시민사회의 성장 • 남북 관계의 변화
문화정책 변화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개념의 확대 • 문화예산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의 활성화 • 참여와 분권을 위한 문화조직 개편 	
정책기조	행복사회, 여가사회로의 진화를 위한 문화향유 극대화		다문화사회에서 문화다양성과 문화정체성의 확보
기본방향	창의성 발현	경쟁력 제고	소통과 나눔
세부 정책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정책 추진 2. 우리 문화정체성의 창조적 추구 3. 다문화사회에 부응한 문화다양성 확보 4. 국민의 문화향유 역량 증진 5. 창의적인 인력 육성 6. 자기주도적 생산적 여가문화 확립 7. 산업구조 고도화 및 문화 관련 산업 진흥 8. 저작권 산업 형성 지원 9. 지방화 시대의 문화·관광 경쟁력 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문화·관광·체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11. 국제 협력체계 구축 12. 문화향유 양극화 해소 13. 고령화에 부응한 여가문화 향유 정책 추진 14. 문화·관광·체육의 주민생활 친화적 기반 확충 15. UCC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문화정책 추진 16.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17.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관광 협력체계 구축 	

*자료: 김향자 외(2006) 참조 정리.

한편, 정광렬(2011)은 미래기획위원회 주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2020 미래전략 개발의 문화 분야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 문화정책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각종 정책 및 비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부문별로 분리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를 탈피하여 통합적으로 설계”(2011: 7)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분야를 포괄하였다. 또한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사회·경제 변화를 설정하고, 그 변화에 대한 환경 분석을 통해서 인구구조 변화, 경제 변화, 문화의 양극화, 디지털기술혁신, 창조사회 진입, 한류의 글로벌화 등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 분석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일상적 삶의 문화화’, ‘다문화 및 문화양극화 심화’, ‘문화생산 및 소비의 복용합화’, ‘스마트파워 및 한국문화의 글로벌화’를 미래 문화 트렌드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트렌드에 대응하는 13개 정책과제(40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다(〈표 5-2〉 참조).

〈표 5-2〉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의 주요 내용

사회·경제 주요 변화	문화 트렌드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구조 변화(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 경제의 변화(창조적 일자리, 근무 형태 및 소득증가 등으로 여가시간 확대 및 여가와 노동간 경계 모호) 	일상적 삶의 문화화	1) 저출산 및 고령층 맞춤형 문화복지 정책
		2) 공동체 문화 및 사회적 관계망 조성
		3)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문화활동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및 인구구성원 변화(글로벌화 및 다문화사회 진입) 문화의 양극화(소득, 일자리, 다문화, 교육 등의 요인) 	다문화 및 문화양극화 심화	1) 한국문화 정체성 재정립과 사회적 통합 기능 확대
		2) 생산적 문화복지로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및 행복사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기술혁신(복용합, 디지털화) 	문화생산 및 소비의 복용합화	1) 콘텐츠 중심 개방형 문화생태계 구축 2) 소비자 및 개인화 중심의 문화소비·유통체계 혁신 3) 미래형 관광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조사회 진입 한류의 글로벌화 	스마트파워 및 한국문화의 글로벌화	1) 문화콘텐츠 및 전통문화의 지식재산 창출로 신성장동력
		2) 도시와 농어촌의 문화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추진 체계 구축
		3) 대중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문화국가
		4) 한국관광의 개방성 및 명품관광 콘텐츠 개발
		5)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국가브랜딩제고 및 국민통합

*자료: 정광렬(2011) 참조 정리.

기존의 미래 문화트렌드나 미래 문화정책 또는 의제 연구를 보면,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라는 인구구조와 가족형태의 변화, 다문화 사회화와 문화다양성, 경제 양극화 등 갈등의 심화, 기술 발전에 따른 문화생태계 변화, 여가수요 증가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라이프스타일 변화, 융합과 협업의 증가 등을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전망은 본 연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나. 문화정책 환경 변화 전망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정책 환경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이슈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중 다수는 현재부터 2030년이라는 미래 시점까지 문화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에서도 일과 여가의 균형이나 시민의 참여 등과 관련된 이슈들은 문화정책 분야의 본질적인 특성과 관련된다. 전자는 삶의 질에 관한 문제, 후자는 문화민주주의와 밀접히 관련되며, 이들은 국제사회의 문화의제에서도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하나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는 의제는 교류 협력과 거버넌스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함께 문화다양성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국제문화교류정책은 문화다양성정책과의 관련성, 문화외교나 국가브랜드 등과 연동되어 단기 대비 중장기적으로 중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단기 10.5점, 중기 52.6점, 장기 67.3점). 이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는 의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문화 분야 국제회의와 문화계획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에서도 ‘지속가능’과 함께 ‘문화다양성’이 두드러졌다([그림 2-6] 참조). 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문화다양성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단기 36.9점, 중기 76.8점, 장기 70.9점)되었고, 이슈별 평가에서도 ‘인구지형의 변화’ 중에서 다문화 관련 이슈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사회화 이슈에만 한정되지 않고, 차이에서 비롯된 사회적·문화적 갈등을 완화 내지 해소하고 다양성으로 승화해야 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문화정책을 둘러싼 환경 분석 결과를 보면, ‘갈등’이라는 키워드 관련 이슈가 주요하게 부각되었고,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는 해당 이슈들의 영향력과 이슈별 대응방향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사회적·정치적 환경 변화’에서는 양극화, 계층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 관련 이슈와 그 대응방향이 모두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갈등 관리에서 문화정책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은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장기화 또는 고착화부터 급박하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매우 불확실하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는 통일과 그 후 갈등 상황, 혹은 우리 국민의 전망보다 더 장기적인 분단 상황까지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을 함께 전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문화정책의 흐름을 보면, 각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지향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통문화’, ‘지역문화’, ‘문화유산’, ‘문화예술교육’, ‘문화시설’ 등이 문화정책의 핵심에 속해 왔고, 그 방향에서는 ‘확산’, ‘활용’, ‘융복합’ 등이 부각되었다. 특히 각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문화정책이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서 지역문화정책의 중요도가 단기적으로 매우 높아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요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단기 93.8점, 중기 59.2점, 장기 35.0). 이러한 결과는 지역분권과 문화자치, 문화민주주의 등의 이슈와 관련되며, 지역문화정책 관련 이슈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 틀과 내용의 전환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의제들을 보면, 도시문제나 지역문제와 관련한 의제들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그 논의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문화과잉과 문화백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와 관련되고, 도시나 지역의 소멸이라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문화과잉과 문화백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 및 지역문제가 심화되고, 2014년 기준으로 79개 시군구가 소멸 위험이 높다고 조사된바 있다(이상호, 2016). 그러나 미래 문화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지역의 소멸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최근에 급부상한 이슈라는 점과 함께 기존 연구의 환경 분석이 현재의 문화정책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에도 일정 정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정책 환경 분석 및 델파이조사 등의 결과,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된 이슈의 범주는 ‘도시문제와 지역문제’였다. 그 영향력은 전체 이슈 평균보다 현재 영향력 9.1%p, 미래 영향력 3.3%p가 높게 평가되었고, 제시된 이슈들의 우선순위도 상위에 포진하였다([그림 4-15], <표 4-26> 참조). 따라서 이러한 이슈와 관련하여 분야 간,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확대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에 진행된 미래 문화정책 연구들에서는 기술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나 트렌드를 고려하였지만,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명암 중에서 긍정적 영향 및 문화와 기술의 융합이라는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이에 비해서 기술 발전이 인간의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나 현상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 연구가 진행된 시점에서 해당 이슈들이 부각되지 않았던 점과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특히 미래기술이 가져올 인간의 미래라는 문제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 결과,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범주의 이슈들은 대체로 미래 영향력에서 상위에 포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2. 미래 대응을 위한 문화정책의 의제 및 목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논의 및 정책 환경 전망, 델파이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현재부터 2030년이라는 미래 시점까지 향후 문화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로 다음 다섯 가지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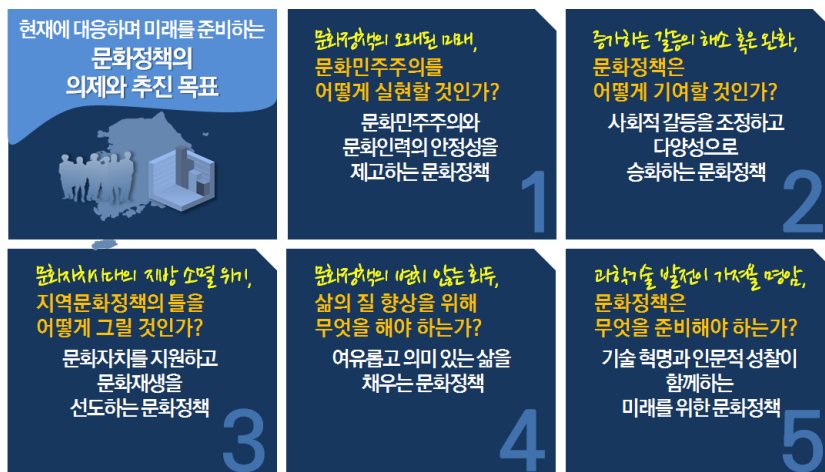
첫째, 문화정책에서 오래 전에 대두되었지만 최근에 다시 부상한 ‘문화정책의 오래된 미래, 문화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둘째,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가하는 갈등의 해소 혹은 완화, 문화정책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이다.

셋째, 지방분권과 문화자치가 강조되지만, 소멸 위기에 처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현상이 동시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한 ‘문화자치시대의 지방 소멸 위기, 지역문화정책의 틀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이다.

넷째, 문화정책이 지속 대응할 핵심 영역인 삶의 질과 관련한 ‘문화정책의 변치 않는 화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다섯째, 최근의 4차 산업혁명 논의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측면 및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명암, 문화정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이다.



[그림 5-1] 현재에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정책의 의제와 목표

가. 문화정책의 오래된 미래, 문화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인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문화정책
관련 이슈(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불신과 신직접민주주의(현재) •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현재) • 문화민주주의 증진(현재~미래)
영향력 발현 시점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중장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우리 사회에서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폭증시켰고, 문화행정의 관료주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논의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문화민주주의는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진행되는 이슈다.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도 문화민주주의 증진은 문화정책에 미치는 현재와 미래 영향력이 모두 큰 이슈로 평가되었다.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culture by everybody)’에 기반한 문화민주주의는 문화 향유와 접근성을 높이는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서 다양성과 다원성을 기반으로 정치적 자유, 참여, 실천적 활동을 지향한다. 또한 지역 분권과 문화자치의 이념적 기초로서 문화다양성 등과 함께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의제이고, 그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문화정책의 주요 과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민주주의 실현과 함께 그 배경이 된 문화력의 직업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나. 증가하는 갈등의 해소 혹은 완화, 문화정책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성으로 승화하는 문화정책
관련 이슈(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현재~미래) •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현재~미래) • 고령화 이슈 증가(현재~미래) •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현재~미래) • 다문화 수용성과 문화정체성(현재~미래) •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미래)
영향력 발현 시점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중장기

우리 사회의 갈등지수는 OECD 최상위권을 유지하지만 갈등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정영호·고숙자, 2014; 이부형·박용정, 2016). ‘헬 조선’, ‘N포 세대’로 상징되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기존의 이념 갈등이나 경제 양극화를 넘어서 세대, 성별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산되어 왔다. 또한 세계화와 국제적인 인구이동의 결과로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현상은 문화정체성의 문제와 문화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등 다양한 갈등 관련 이슈들이 문화정책에 미치는 현재 및 미래 영향력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와 관련한 대응방향의 중요도와 시급성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차이가 갈등의 요인이 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차이와 달리, 문화적 차이는 다양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문화적 차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보편성을 찾고, 나와 다른 타자를 인정하며 소통하는 것은 다양성을 풍부하게 한다. 따라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의 해소 혹은 완화를 위해서 문화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다양성으로 승화하며 사회발전의 동력화할 것인가를 문화정책의 주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제와 관련하여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다양성으로 승화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다. 문화자치시대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문화정책 틀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치를 지원하고 지역재생을 선도하는 문화정책
관련 이슈(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현재) • 지역 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현재~미래) •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현재~미래) •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현재~미래) •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현재~미래) •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현재~미래)
영향력 발현 시점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중장기

국제사회 의제나 우리의 문화정책에서 지역 또는 도시가 부각되고 강조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지역문화정책도 강화되어 왔다. 이는 문화의 형성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 들어서 지역분권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며 헌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자치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다가올 문화자치시대에는 중앙정부 지역문화정책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서 지역문화정책의 중요도가 단기적으로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점차 중요도가 감소한다고 전망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다가올 문화자치시대에는 자치단체의 문화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문화적인 지역 경영을 위한 역량 강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자치에 대한 논의와 달리, 지역에서는 쇠퇴가 심화되고, 그에 따라서 문화적인 활력도 약화되고 있다. 쇠퇴지역이 증가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가 크고, 현 정부는 도시재생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서도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범주의 이슈가 전반적으로 현재부터 미래까지 문화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적 재생이라는 화두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의 지속, 출산율 감소 및 젊은 층의 유출은 지방도시에 소멸 위험이라는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그에 따라서 2040년에 전체 자치단체의 절반 정도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 일본을 비롯하여 지역 쇠퇴와 소멸의 위기감을 가진 국가나 도시에서는 소멸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기준으로 79개 시군구가 소멸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이상호, 2016), 그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중기에는 지역의 재생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이 소멸하는 상황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즉, 기존과 같은 희망적인 전망 하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소멸이라는 부정적 전망까지 고려한 지역문화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의제와 관련하여 문화자치를 지원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재생을 선도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라. 문화정책의 변치 않는 화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채우는 문화정책
관련 이슈(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현재) •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현재~미래) •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현재~미래) •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현재~미래) •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현재~미래)
영향력 발현 시점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중장기

고도성장 시기의 양적 성장과 경쟁을 강조하던 우리 사회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국민의 행복지수는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다양한 갈등의 증가도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 가족, 일과 삶의 균형, 교육, 환경, 공동체 등을 포함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양상은 삶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특히 행복 중시의 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 추구 경향과도 맞물린다.

‘삶의 질’은 문화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타 분야의 미래 정책연구에서도 핵심 이슈로 꼽힌다(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 KISTEP · KAIST, 2015 & 2016; KAIST 미래전략대학원, 2016). 본 연구의 문화정책 흐름 분석이나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도 삶의 질과 관련한 이슈들이 현재와 미래 문화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삶의 질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의제와 관련하여 여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모색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마.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명암, 문화정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책 목표	• 기술혁명과 인문적 성찰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
관련 이슈(영향력)	•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현재~미래)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미래) •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미래) •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미래)
영향력 발현 시점 전망	• (단기~)중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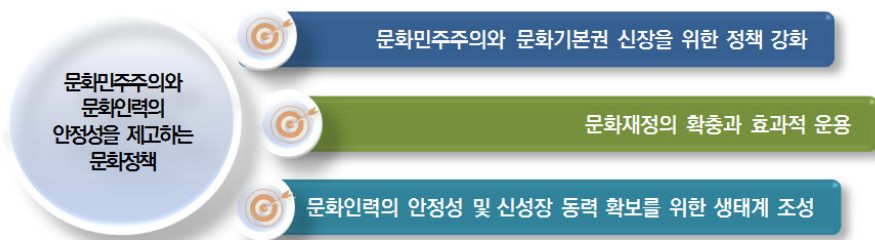
다양한 미래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미래의 중요한 트렌드로 제시하고 있다(박영숙 외, 2011;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 KISTEP · KAIST, 2015). 이미 예술 분야에서 과학기술 수용은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해 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과학기술과 문화의 관계는 최근 4차 산업혁명 담론의 촉발로 좀 더 심도 있는 관계 설정을 필요로 한다. 이는 우리 국민은 미래 사회에 대해 생활의 편리함(64.5%)과 새로운 기술 발전(52.1%)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자리 문제(56.7%), 인간의 존엄성 훼손(56.4%) 등을 염려하고 있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최인수 외, 2016)에서도 확인된다.

머지않은 미래에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차츰 증폭시켜 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 혹은 변화시켜 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과학기술이나 생명윤리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변화한 미래 환경에서 인간 공동체에 의해서 생성, 변화, 발전해 온 문화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고 제고할 것인가가 문화정책의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범주의 이슈들은 미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선제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의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의제와 관련하여 기술 발전이 가져올 혁명적 상황과 인문적 성찰을 조화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2절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인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문화정책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와 우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화민주주의 실현과 관련하여 ‘문화정책의 오래된 미래, 문화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의제로 설정하고,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인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문화정책’을 그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문화정책의 흐름,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와 대응방향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의제와 과제들은 문화자치 및 지역재생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그림 5-2]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인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문화정책’ 개요

1. 문화민주주의와 문화권 신장을 위한 기반 강화

□ 정책 환경

- 국제사회 문화의제 및 국내 문화정책에서 문화민주주의 실현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문화민주주의 증진’은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에서 중장기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이슈로 전망

□ 추진 방향

- 기본적인 권리로서 문화기본권 신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참여와 실천을 통한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모색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서 민주주의에 입각한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다. 문화의 민주화는 순수예술 혹은 고급예술의 향유를

통한 취향 형성과 교양 교육 등에 중점을 두는 특징을 보이며(김용신, 2008), 이로 인해서 특정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의 민주화가 정치나 행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한계를 잘 보여준다. 이에 비해서 문화민주주의는 소수의 예술인이나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비전문가, 아마추어, 지역 등을 중시하고, 다양한 하위문화를 포함한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문화민주주의는 문화복지를 추구한다. 또한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시민이 창작과 소비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며, 문화의 수용자가 곧 생산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문화의 민주화와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참여로서의 문화’, ‘동등한 권리로서의 문화’, ‘실천으로서의 문화’를 지향한다(김경욱, 2003).

국제사회에서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제를 전후로도 지속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 문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과 자율·참여·분권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방식 개선을 강조한 노무현정부에서 활발했으나, 이후 정책에서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문화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그리고 최근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계기로 다시 논의가 활발해졌다.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서도 ‘문화민주주의 신장’은 중장기적으로도 영향력이 높은 이슈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평가된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문화권(cultural rights)의 신장 및 문화행정의 관료주의 개선이라는 문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 「20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6a)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예술행사 관람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그중 다수가 영화 관람에 치중되었고, 연령별, 소득계층별, 거주지역별 격차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적 인권의 차원에서 문화권을 자리매김하고,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행 「문화기본법」은 문화기본권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문화기본권의 신장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 수단이 명료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화기본권 신장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문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추진되는 헌법 개정 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를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분권 추진,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문화공급자 중심에서 문화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의 틀을 전환하고, 문화민주주의 시대에 적합한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화행정의 경직성과 관료주의 개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서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과 불합리한 관행 및 인습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화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르 간·계파 간 갈등과 폐쇄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 문화계 내 양성평등의 신장, 신진예술가 및 청년문화활동가에 대한 열정착취 근절 등을 위해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되어야 할 것이다.

2. 문화재정의 확충과 효과적 운용

▣ 정책 환경

- 문화권 및 문화민주주의 신장 필요성과 문화자치 시대의 도래 전망으로 문화재정의 안정성이 요구되나, 문화재정의 기금 의존도가 높고, 지역문화기금의 조성은 부진

▣ 추진 방향

- 과도한 기금 의존도를 축소하여 안정적인 문화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단위의 지역문화기금 조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책 협력 강화

보편적 권리로서 문화권 및 문화민주주의의 신장은 문화복지의 실현 과도 맥을 같이 하므로, 안정적인 문화재정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우리의 문화재정 규모는 2000년에 정부 총지출 대비 1%를 달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 7조 원을 넘어서며 총지출의 1.77%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능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에 따른 재정지출 기준으로 OECD 국가의 문화재정을 비교한 연구(정보람, 2016)에 따르면, 우리의 최근 문화재정 증가속도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지만, 2014년 GDP 대비 기준으로 일반정부는 30개국 중 27위, 중앙정부는 29개국 중 22위로서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재정에서 일반회계보다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에 한계를 보이고, 문화사업에서도 기금을 활용한 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은 관료기구가 기금을 통해서 지역 및 문화계에 대한 수직적인 통제가 가능한 구조를 형성한다는 비판을 받는다(김상철, 2017). 따라서 과도화된 기금 의존도를 줄이고 문화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화재정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지역협력형사업 재원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이관 등으로 인한 지역문화 진흥예산의 축소와 불안정성 증가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윤소영 외, 2017). 이는 문화예술 분야 투자 비중이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가 높고, 이러한 투자에서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재정에 종속된 경향(김상철, 2017)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보조사업 비중을 줄이는 한편, 지역단위의 자율편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속적인 고갈로 인한 안정적인 문화예술지원의 어려움, 소규모 세부사업 중심의 국고 보조금 운용으로 인한 지역의 자율성 저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내재적 제약으로 인한 지역문화사업의 축소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문화의 생산-소비-분배에서 '탈중앙화'와 '문화다양성 확보'에 대한 정책 수요 증가와 함께 문화분권 및 문화자치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역문화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역문화기금의 조성이 중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한 지역문화기금의 조성은 부진한 실정이고, 지역문화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역 간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재정 투입 상황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지역문화기금의 조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인력의 안정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가. 문화인력의 일자리 및 삶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정책 환경

- 문화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 부재로 고용불안 등 삶의 불안정성이 지속

▣ 추진 방향

- 문화인력에 대한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교육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비전을 제공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문화예술활동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현장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문화인력에 대한 경력단계 혹은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단선적인 지원방식으로 인하여 문화인력의 자생력과 일자리와 삶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높은 노동유연성과 단선적 고용 기회, 예술시장의 영세성은 창작자의 고용불안을 고조시키고 그들을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문화 분야에서도 나타남을 알려준다. 문화인력의 고용불안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제도의 완결성 및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법제화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 향유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시장 확대를 견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문화예술 관련 학과 졸업생 등 배출인력의 숫자에 비하여 시장의 성장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창작과 향유 지원 정책이 예술계의 자생성을 담보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시장 촉진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 예술시장 진출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문화예술 협동조합이나 문화예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유통 및 매개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육성은 물론, 연관 산업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행위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프레임 및 그 추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문화인력에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비전을 제공하고, 해당 인력이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기존 대학 또는 대학원, 그리고 아카데미 형식의 교육과정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원하는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정부 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문화인력의 미스매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적 인력 정책 추진에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문화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 정책 환경

- 기술 발전과 연계한 문화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며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와 연계한 참여 활성화 및 문화인력의 직업적 안정성과 자생력 확보 필요성 증가

- 2016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공유경제가 상용화 및 확산되는 변곡점을 2025년으로 전망

▣ 추진 개요

- 기술혁명에 따른 새로운 문화분야 생산양식의 변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계의 기술리더십 제고 등과 같은 대응방향과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 필요
- 문화 분야의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현황 점검 및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과 재생산 기반 조성

생산인구감소로 인하여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 문화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 시장의 활성화가 지역 경제를 이끌고 국가의 문화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문화 분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은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사라지는 직업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2020년부터 단순반복 업무는 AI와 로봇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의 400여 개 직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등을 활용한 직무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체가 불가능한 확률의 직업군에 예술인 등 문화 관련 직업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또한 문화갈등해결원의 사례처럼 문화 분야와 관련하여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도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⁸⁾

이와 같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새로운 범용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몰려오면서 공공과 민간의 구분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 분야에서도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로 꼽았던 기술혁명에 따른 새로운 문화 분야 생산양식의 변화 및 새로운 일거리 창출, 문화예술계의 기술 리터러시 제고 등과 같은 대응방향과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소비 패턴이나 수요의 단순 분석 외에도 문화예술과 첨단 과학기술 간 융합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을 모색하여 새로운 가치창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정책적 환경조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와 문화 활동의 활성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대응과 함께 현재 문화인력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소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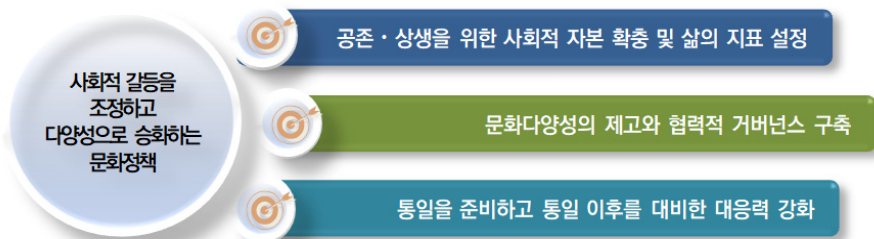
8) “3A 시대에는 어떤 직업들이 생길까?”(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 2014.12.25.) 및 “사로봇·사람, 협업의 시대가 왔다!”(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 2016.3.25.).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와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의존도가 높은 문화 분야의 경우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방식의 자생적 모델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정비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에서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이슈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된 것처럼, 집과 사무실의 공유를 통해 공동생활, 공동작업을 모색하는 신가족 또는 신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화인력의 공동거주와 공동작업 등을 통한 창작환경과 창조적 성과 제고를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공유가치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 합리적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3절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성으로 승화하는 문화정책

다양한 갈등의 심화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갈등관리가 요구되며 문화정책에서도 그러한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갈등의 해소 혹은 완화, 문화정책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의제로 설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성으로 승화하는 문화정책’을 그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문화정책의 흐름,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와 대응방향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림 5-3]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성으로 승화하는 문화정책’ 개요

1. 공존·상생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및 삶의 지표 설정

▣ 정책 환경

- 계층갈등, 세대갈등, 성별갈등, 문화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갈등 심화

▣ 추진 방향

- 공존과 상생을 위한 인문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정책, 예술적 개입(artistic intervention)의 역할 확대 및 지속가능한 문화적 삶의 지표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확보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많은 전문가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평가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세대갈등, 성별갈등, 다문화사회로의 이동으로 인한 문화갈등 등 갈등이 다양화하고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은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상호 교류와 공동 활동의 기피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결과, 참여에 기반한 공동체의 공동목표 추구를 방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갈등의 심화는 대립구도 속에서 패배한 집단을 절망감과 열패감 속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계층 간, 세대 간, 성별 간, 문화 간 반목을 넘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소통과 공감, 공존과 상생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인문정책이나 문화예술정책이 문화향유나 교양의 습득을 넘어서 자아성찰, 인권에 대한 감수성의 함양, 생태적 감수성의 함양, 가치의 다원성 습득, 시민적 미덕(civic virtue)의 함양, 타자와의 소통과 이해 기회 제공,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을 통해 갈등의 해결과 건강한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 틸트(TILLT)의 아이리스(AIRIS) 프로그램이나 우리나라의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처럼 예술을 매개로 조직 내 갈등 및 문제의 해결을 유도하는 예술적 개입(artistic intervention) 기법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양혜원, 2016).

또한 삶의 질, 다양성의 포용, 관용과 협력, 공존·상생의 가치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문화적 삶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지속가능한 문화적 삶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부처나 주체의 협력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문화다양성의 제고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다문화수용성 증진

▣ 정책 환경

- 국제적 인구이동 확대와 외국인주민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대비 필요
- 문화다양성이 국제사회 의제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지속가능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 추진 방향

-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다양한 소수자 문화로 정책 지명 확대, 원주민과 이주민 간 소통과 공존을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 확대

국제적으로 국가 간 인구이동이 확대되고 외국인주민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2016). 먼저, 우리 사회에 인종, 민족, 문화 간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숙련·저임금 인력이 대부분인 현재의 국내 체류 외국인 구성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하층계급을 형성할 수 있고, 도시의 슬럼화와 게토(ghetto)화, 치안문제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외국인 혐오(xenophobia)도 문제다. 이미 청년층을 중심으로 외국인 혐오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사회 전체로 확대되는 추세다. 끝으로, 다문화가정 2세들의 불안정한 한국사회 적응 문제다. 이들은 현재 우리사회의 배타성으로 인해 차별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돌봄과 배려를 소홀히 할 경우에 미래세대 구성원인 다문화가정 2세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반감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과 그 2세들을 위한 문화·여가 교육과 문화복지정책의 확대·강화가 필요할 것이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원주민과 이주민 간 소통과 공존을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과 그 2세들을 우리 사회의 구

성원으로 인정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한편, 이들이 가진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포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이들을 차별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다문화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다문화정책이 유입된 외국인 이주민, 결혼 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을 한국사회 내 새로운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동화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 문화다양성 정책은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이 문화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이와 같이 문화다양성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수용하는 한편, 문화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미래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민족이나 국적 외에도 성별(gender), 장애(disability),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세대(age), 종교(religion), 소득(income), 혼인(marital status), 예술취향(arts), 전통(tradition) 및 지역(geographic location) 등에 따른 다양한 소수자의 문화로 그 정책적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자와 소수자의 구분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차별과 배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김면, 2017). 즉, 사람 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다른 가치에 대해 보다 포용적이고 수용적 태도를 갖도록 장려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 및 시민교육의 개편, 대안예술·순수예술, 독립예술 등 비주류 예술에 대한 정책적 배려, 미디어다양성 보장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 공존과 상생을 위한 문화다양성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

▣ 정책 환경

- 국제정치의 긴장 관계 심화 및 국가별 국민정서, 연대의식, 정치적 역학관계, 기타 사회 환경의 차이로 인한 국가 간 갈등 존재
- 국가 및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다양성 증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 중장기적으로 국제문화교류정책의 중요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추진 방향

- 국가 간 단순 문화 교류를 넘어서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적 공존을 위한 문화협력,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제와 통합적 관점의 정책 추진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 분쟁을 통한 국제 분쟁 증가, 민족주의 부상 등으로 인한 긴장 관계가 증폭되고, 미래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적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NIC, 2012 & 2017; 박영숙 외, 2011 & 2012). 국가 간 문화교류 및 문화협력 강화는 문화적 긴장과 경쟁 관계를 완화시켜주고, 상호 이해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화가 추구하는 포용성,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는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간의 신뢰 회복, 공동체 의식 등을 이끌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역학관계에서는 문화적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다만, 공공차원의 국제문화교류가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의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교 기념행사와 같은 일회적인 행사의 성격보다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 간, 공공기관 간, 민간기관 간, 도시 간, 개인 간 등의 문화예술교류를 넘어서 학술, 교육, 인력, 관광, 체육, 청소년, 경제 등으로 교류가 확대된다면 경직된 국제 정세에서 대립이 아닌 우호와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문화는 정치와 경제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이익과 발전보다는 질적인 만족과 정서적 공감대와 유대감을 제공함으로써 공동발전에 근간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상대 국가의 역사적·문화적 경험과 인식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고, 무계획적·단발적·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문화교류는 문화정책에서의 정부의 일정한 목적성이나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원화된 교류 및 전통과 함께 그 변화에 대한 과정도 존중하는 문화교류를 위한 문화정책의 큰 방향성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서 문화공존주의, 문화상대주의, 복합문화주의에 입각한 문화협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간, 도시 간, 기업 간, 개인 간 등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채널간의 협력 등을 지원하여 문화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간 문화협력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국가별 인구지형 변화는 속도나 수준이 다르고, 정치역학이나 라이프스타일의 성격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문화가 가진 삶과 사회의 발전에 대한 힘을 신뢰하는 것, 숲을 보되 인간의 권리와 참여라는 나무의 중심성을 인정하는 것, 보다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의 세부 단위를 연결하는 것, 대화와 협치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등은 모든 국가가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문화와 발전’을 화두로 삼고, 문화의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와 정보 공유, 정책 개발, 국가 및 지역 내 협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류의 공생을 위한 문화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 분야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문화 분야 전문기구 설립 등에 대한 필요성을 국제사회와 공감하며 공동의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의 의제인 교육, 복지, 의료 등을 문화와 통합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인류공생의 가치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문화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3.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한 대응력 강화

▣ 정책 환경

- 남북 분단의 장기화로 남북 간 경제적·문화적 차이를 인정할 필요성 증가
- 통일 및 통일 이후 상황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비할 대응력 강화 필요

▣ 추진 방향

-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하는 삶을 통해 상실된 문화적 동질감을 회복하고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문화적 연대감 형성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는 ‘통일문제’를 10대 이슈이자 우리나라에 특화된 이슈로 선정한바 있다(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KISTEP·KAIST, 2015). 이 외에도 통일문제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적 의제가 된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장기화로 이질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긴장이 사회문화 분야 교류마저 단절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통일 후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증가시켜 통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각종 조사와 연구(최인수 외, 2016;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박주화, 2017)에서 확인된다.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 남북의 갈등 및 문화적 이질성 심화가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게 평가되었지만, 여전히 통일 후의 갈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은 평균값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그 대응 방향의 중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평가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오랫동안 경색된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문화정책은 선제적이고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실된 문화적 동질감 회복을 위해서는 함께 하는 삶,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거대한 담론적 접근이 아닌 시민의 문화생활에서 통일의 기반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차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문화정책 사업 내에서 북한문화, 통일문화에 대한 콘텐츠 활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에 대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오해와 편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상실된 문화적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통하여 문화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과정을 통해서 문화적 관용도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남북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한국에서 겪고 있는 탈북민의 사회적응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포용력 확대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남한과 북한의 상호 문화적응력 제고를 위한 문화교류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정책적 연구와 시행이 필요하다.

제4절

문화자치를 지원하고 지역재생을 선도하는 문화정책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밝히며 ‘문화자치시대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문화정책 틀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라는 의제를 설정하고, ‘문화자치를 지원하고 지역재생을 선도하는 문화정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문화정책 흐름,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와 대응방향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림 5-4] ‘문화자치를 지원하고 지역재생을 선도하는 문화정책’ 개요

1.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마련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원

가. 문화자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 ▣ 정책 환경
 - 국가체계 안에서 지방의 가치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방분권과 자치의 체계가 정립되면서 문화자치의 기본체계와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
- ▣ 추진 방향
 -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을 정비하고, 지역의 문화자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서 협치 구조를 형성
 - 문화예산의 전달체계 및 운용구조를 자치행정구조에 맞게 재편 및 지방정부로 이양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2017년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치를 위한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자치권을 헌법화하는 국정운영의 행로를 갈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와 함께 지역의 문화자치가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부터 가까운 미래까지 지역문화의 주요 가치이자 의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문화민주주의의 실현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이념적 가치로서의 문화가치를 넘어 지역의 실제적인 문화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다. 따라서 문화자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를 위한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의 확립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입법권’과 관련해서는 문화자치형 법률과 조례 구성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문화자치를 위한 법적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자치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를 두며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문화자치의 토대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법 제정 이후에 나타난 변화상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문화자치를 위한 법제적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로써 지역문화의 실질적 진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자치의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조광호, 2016). 또한 법 개정과 함께 각 자치단체에서도 문화자치를 위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에 상응하는 지역 과제가 관련 조례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문화자치 조례를 통해서 지역문화의 경영 틀을 합리적으로 구성할 때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문화자치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권’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것은 행정결정권과 정책 및 사업 관리권한의 지방이양이다. 이러한 지방자치구조가 성립되고 자

리 잡기 위한 행정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구조 및 체계 마련에서 중요한 점은 이를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와 공공적인 협치체계 마련 및 회복이다. 견고한 중앙집중적 행정구조를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틀에 맞게 변경 및 재구성하기 위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협치구조가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문화자치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기초에서 중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화자치형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중간에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두되므로, 광역자치단체부터 문화자치의 행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중앙-광역-기초 행정에서는 정책의 동반자인 민간과 협치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 논의구조를 고도화하는 문화자치형 민관 파트너십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권’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전달체계를 문화자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정 및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발전정책 내 국가 예산운용 및 관리구조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된다. 특히 지역발전정책 추진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지역문화예산에 대한 관리 구조 및 방식을 갱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조광호, 2016). 현재 문화분야 예산은 지역자율형 구성보다는 중앙정부 관리체계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역자율형으로 구성된 예산조차도 지역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율적 선택과 집중보다는 관리중심형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적 의미와 실효성을 갖는 지역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공공의 문화정책 및 사업 부문에서 예산계정의 구성, 지원예산의 관리체계 및 전달경로체계, 예산규모의 합리성 판단 및 이에 대한 조정권한 등 문화예산 계획-집행-관리 구조에 대한 문화자치형 구조 재편 및 마련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 경우에 각 지역이 스스로 결정 및 조정할 수 있는 지역중심형 체계로 재편 및 재구성되어야 한다.

나. 지역의 문화생태계 진단 및 역량 강화 모색

▣ 정책 환경

- 문화자치와 지역재생에서 지역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 강화 및 문화생태계 형성 필요

▣ 추진 방향

- 문화와 사회의 가치사슬 연결을 통해 지역의 문화생태계가 지속가능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노력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연계

지역의 문화자치와 문화적 지역재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생태계가 구축되고, 생태계적 순환구조가 활발하게 작동 및 운용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에서 문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접목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가치와 사회적 효과를 생성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좌표를 제시하는 문화적인 사회발전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적인 사회구조가 작동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해당 생태계의 현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스스로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여건, 현황, 가능성 등을 파악 및 진단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생태계적 구조를 생성·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 스스로 문화생태계를 조사하고 그 구조와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역은 문화자치와 문화적 지역재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사람 중심의 사회적 자본 축적과 문화자원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문화적 가치사슬 생성 및 연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의 문화를 만들고 문화생태계를 구성하고 작동하게 하는 주체는 문화적인 사람이다. 문화자치도 결국은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지역은 문화적인 사람을 발견하고 찾아내어 문화인력으로

양성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생태계를 구성하는 문화자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 문화생태계라는 그물망에서 그물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자원이기 때문이다. 문화자원의 다양성이 풍부하면 할수록 문화가 활발하게 도입 및 운용되고 생태계 구조가 촘촘히 구성되며 지속가능해진다.

문화적인 사회자본의 형성과 문화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토대로 이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가치사슬 생성이 문화생태계 형성의 최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문화적인 사람이 문화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더라도 그것이 지역사회와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지역의 문화생태계가 건강하게 활발히 작동할 수 있다. 즉, 문화생태계가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사회 각 분야의 가치사슬 연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문화적 창작과 가치 생성-향유와 소비-전달 및 유통-사회적 효과 생성 등의 가치사슬 구조와 다양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 문화자치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 간 문화적 소통과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화자치와 문화적 지역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체적인 노력 및 구조생성과 함께 지역과 지역이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는 구조의 문화네트워크 활성화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처럼 중앙이 지역을 하향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나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이 상호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발전구조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지원이 없어지면서 지역의 활동과 발전이 멈추어 그 효과와 지속성이 소멸되거나 지역 간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간 문화네트워크를 통한 상호보완적이며 공진적인 발전구조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 도시 및 지방정부 간 협의체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문화정상회의나 세계도시문화포럼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지역 간 문화네트워크는 프로그램의 단순 교환이나 교류 방식이 아닌 행정적·제도적 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문화상생벨트를 구성하는 구조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지역과 지역이 연대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대응하며 상생의 효과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2.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자활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정책 환경

- 창조성의 원천으로서 문화·예술 활동가가 강조됨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자활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필요성 대두

□ 추진 개요

- 문화·예술 활동가의 지역 안착을 위하여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주거 지원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지역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유입과 능동적 참여 여건 조성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자활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활동가나 기획자 등과 같은 문화매개인력뿐만 아니라 지역 외부의 예술가, 기획자 등이 지역의 주민이 되어 활동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김연진, 2015). 주거 여건이 불안한 예술가, 기획자, 문화 활동가일수록 장기간의 거주 공간이 제공될 경우, 본근거지를 떠나 안착하는 사례가 많고, 창작공간에 대한 전국적 수요가 이를 반증한다.

창작과 거주와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술가들의 생활 특성상, 예술가의 거주공간은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역동성 있는 창작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지역의 창조성과 지속가능성을 배가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예술인협동조합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막쿵(M.A.Coop)으로 알려져 있는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의 주택이 만리동에 조성되었고, 성북구에서도 정릉예술마을 만들기와 미아리고개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 입주순위와 관계없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현행 원룸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다세대·다가구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 중심으로 예술인 공공 임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술인 복지 차원의 단순 주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가의 지역화는 물론, 지역의 임대주택지구에서 소셜믹스(Social Mix)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가의 지역사회 유입과 능동적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3.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와 공공문화서비스의 연계 운영

▣ 정책 환경

- 초연결시대 도래와 함께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 개인의 요구에 맞게 모든 공공서비스가 복합화되어 제공될 것으로 전망

▣ 추진 방향

- 공유협력형 행정문화를 바탕으로 정책 및 공공행정 단위에서 복합적 제공이 가능한 정책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도입
- 생활권 안에서 행정·복지·문화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

초연결시대가 예견되고 진행되면서 정책서비스는 하나의 단일 분야에 한정되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많은 분야가 연결되어 얽히고설키면서 복합적인 서비스로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서비스는 지역 주민 개인 단위에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복지서비스와 공

공문화서비스는 하나의 복합적인 서비스로 구성되어 동시에 제공되어야만 그 수요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정책 및 공공행정 단위에서 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책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 및 지역의 행정부서 간 연계논의구조가 기본이 된다. 즉, 정책서비스의 최종 지점에서는 지역 주민이 수요자이자 향유자가 되므로, 수요자 집중대응형의 복합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구조가 정책방향으로 정립되고 공공의 행정·복지서비스와 문화서비스가 정책서비스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칸막이 행정의 제거는 필수적인 선결과제가 된다. 그러나 현재 중앙부처 및 지역 모두에서 칸막이 행정 경향이 강하므로, 이를 줄이고 없애기 위해 공공영역 내부의 공유협력형 행정문화를 생성하는 정책방안 논의도 공식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와 공공문화서비스 체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동시에 복합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권 안에서 이들 서비스가 동시적·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복지·문화 기능이 복합된 통합 기능시설 조성 및 개발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통합 기능시설을 신규 건립하거나 단일서비스 기능시설에 대한 공간 재구성 또는 증축 등을 통해서 기능을 복합화하고 통합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지역의 생활권 특성에 맞게 공간 및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까지 모두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복지·문화가 복합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체계 구성 및 재편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사업들 상호간에 정책적 목표와 방향이 서로 연결되어 그 관계성에 근거한 정책 추진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추진 행정구조 마련 및 통합적 시행전략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4. 사람과 활동 중심의 문화적 도시재생 및 도시문화 재생

가. 재생사업 체계를 공간·시설에서 사람·활동 중심으로 전환

▣ 정책 환경

- 현행 도시재생 사업 과정이 공간·시설 중심의 물리적 정비에 집중되는 경향 해소 필요

▣ 추진 방향

- 주민 주도성을 확보하고 수요에 기반 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 마련 및 사업 선장준·추진체계·성과지표의 전면 개편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방향과 목표는 물리적 환경정비 중심에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재생을 종합적으로 이루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기간과 집행방식, 성과지표 등의 충족을 위해서 공간과 시설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미 쇠퇴가 심화된 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주입하여 활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시도되는 과도한 투자나 새로운 시설의 도입은 그 자체로 운영 부담을 가중시켜 또 다른 쇠퇴를 낳는 악순환의 촉발점이 되기도 한다.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해서는 재생의 방향이 물리적 측면에서 비물리적 측면으로 전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요에 기반 한 사업 추진, 주민 주도, 활동주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과 활동 중심으로 도시재생 체계가 재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재생의 목적과 필요성을 주민 스스로 공감하고, 수요가 확인된 지역일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선정 과정에서 여건의 성숙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추진체계와 성과지표도 보다 유연하게 재설정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사업별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활동주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적 여건의 성숙과 기반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 공간이나 프로젝트 등 직접 활동 기회도 중요하지만, 관련 정책 입안 과정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등 활동주체와의 지속적 협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현행 주민공모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충분히 갖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 성장해 가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과정이 선도사업 선정기준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민간 단위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도 현재와 미래 문화정책에서 영향력이 높은 이슈다. 이와 같은 문제도 공간과 시설 중심의 접근과 밀접히 관련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자생적으로 파생하고 확장하며 이동하는 상권을 제도로서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상권이 확대되거나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에 대응책을 도입하는 것은 정책 개입의 타당성과 자원 확보 측면에서 불가능하므로, 제도적 개입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해당 지역의 주체 간 협치 구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다.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도 중요하다. 따라서 주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행정 절차의 간소화,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젠트리피케이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표 지표, 즉 상가건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김연진, 2016).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이 재원을 투입하여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지연하는 자산화 전략의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산화 전략의 대표 사례인 영국 로컬리티⁹⁾는 영국 전역에 750개, 자산 가치 1조 3,840억 원에 달하는 개발신탁이다. 모든 주민에게 개방된 회원제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사회·경제·환경적 재생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용 인력만 38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전문 자원봉사자도 2만 2,500여 명에 달해 마을공동체 복원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에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과 협업하여

9) 로컬리티 누리집(locality.org.uk) 참조.

공공재정 투입 또는 펀드 조성을 통해 주요 건물을 확보하고, 주요 활동 주체의 근거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람과 활동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지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도시 ‘문화의 재생’ 정책 추진 및 사업 체계·지표 전환

▣ 정책 환경

-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이 강조되면서 도시재생에서 문화가 수단이자 방법론으로 활용되는 경향은 증가하나 문화 자체에 대한 접근은 미흡
- 문화백화와 문화과잉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 증가

▣ 추진 방향

-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를 지역 고유성과 다양성의 강화로 재설정하고, 그 결과가 지역문화 진흥으로 나타나도록 도시재생사업 체계 및 내용 전환

도시의 재생에서 문화는 수단이자 방법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결과이며 추구해야 할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도시의 문화를 재생한다는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문화 부문은 ‘①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② 특화거리 및 경관 조성’, ‘③ 문화산업 육성’, ‘④ 생활예술 지원’, ‘⑤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⑥ 문화예술 활동 인력 육성’, ‘⑦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⑧ 축제 및 행사’ 등으로 유형화되어 나타난다.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콘텐츠로 개발하여 특화 거리와 경관을 조성하고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며 창작공간으로 특이 경관을 조성하여 도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 및 도시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일반화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력 육성도 활동인력 양성을 의미하고, 문화산업도 지역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추진된다.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문화적인 도시재생이 강조되다 보니 수단이자 방법으로서의 문화는 강조되지만, 도시재생의 목적이자 결과로서의 문화 자체는 도외시되는 것이다(김연진, 2015).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다양성이 강화됨으로

써 지역문화가 더욱 풍요롭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정책 지향점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역문화의 진흥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지역문화의 진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결과가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쇠퇴를 얼마나 극복하였는가를 점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활동이 얼마나 다양해지고 활발해졌는가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시적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활동을 촉발하고 이를 위한 기반 환경을 지원해주는 것이 도시재생의 정책 목표이며 사업내용이 되도록 도시재생사업 체계 및 지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 지방쇠퇴 진단과 스마트 축소 재생 전략 도입을 위한 정책 협력

▣ 정책 환경

- 인구감소 및 도시화에 따른 지방쇠퇴가 심화됨에 따라서 스마트 축소에 대한 요구 증가
- 스마트 축소와 연계하여 쇠퇴지역에서 증가하는 유휴공간의 가치 재인식 및 선순환적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추진 방향

- 도시정책, 용도지역, 토지이용,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에서 스마트 축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재생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협력
-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유휴공간을 도시의 변화를 유도하는 일시적·전술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문화정책적 접근 모색

세계적으로 심각한 도시쇠퇴를 경험한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쇠퇴를 불가피한 도시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계획적으로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즉, 쇠퇴지역이 인구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성장정책을 추진하던 차원을 넘어 계획적 차원에서 기반시설의 축소, 도시서비스의 공급조정, 공원녹지의 확충, 공가의 정비 등 감소된 인구에 적합한 정책, 스마트 축소(shrinking-smart)를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축소는 '인구와 건물, 토지사용을 적게 하고 덜 개발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도시의 인구와 고용성장을 유도하기 보다는 기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도시재생 방식을 의미한다(성은영 · 임유경 · 심경미 · 윤주선, 2015). 이 같은 스마트축소 도시계획은 미국과 독일, 일본 등지에서 이미 도입·적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특정 정책 영역이 아닌 관련 정책 영역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인구감소와 도시화에 의한 지역 쇠퇴가 소멸을 우려할 단계에 이르렀다. 일본 사례를 연구한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의 접근방식과 지표를 활용하여 '20~39세 여성인구 비중' 중심으로 국내 현황을 분석한 연구 결과(이상호, 2016), 2016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 비율이 역전되었고,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하여 소멸이 우려되는 기초자치단체가 79개에 달하였다.

그간 국내 도시정책은 성장·확대 지향의 도시계획과 정책 추진으로 개발을 유도하며 성장을 도모하였으나,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기존과 같은 개발 위주의 도시 확장 정책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정책에서도 부족한 기반시설 및 지역산업기반의 확충, 주택 개량 등을 위한 철거식 재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며, 성장을 전제로 한 외부 수요 기대로 인구 및 고용유입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모순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과거 도시 성장시대의 인구증가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정책, 용도지역, 토지이용,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에 있어서도 스마트 축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기반한 재생 전략에서 타 정책과 협력에 기초한 문화정책적 접근 및 관련 문화정책 사업과 법률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스마트 축소에 기반하여 유휴공간을 일시적·전술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스마트 축소를 전제로 한 도시재생은 물리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공간을 덜어내는 마이너스 개발을 지향하므로, 지역 규모의 축소로 유휴된 공간을 개발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주민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 유휴공간은 저이용되거나 ‘방치된(abandoned) 자원’으로서 도시미관 훼손, 우범지대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진원지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공공의 개입을 통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용자원’으로 인식된다(이종민·이민경·오성훈, 2016). 즉, 유휴공간은 쇠퇴의 원인과 결과이자 그 해결의 자원이기도 한다.

유휴공간 활용에서는 영구적 기능을 주입하기보다 스마트 축소 방식과 연계된 ‘일시적’, ‘전술적’ 활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공간의 일시적 활용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일종의 팝업스토어처럼, 상업 활동을 통해 소비공간으로 활용되거나 갤러리, 극장 등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주민이 빈 땅을 활용하여 밭을 일구고 수확물을 함께 나누며 커뮤니티 활동을 도모하는 공간이나 대체주거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여 주변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¹⁰⁾ 이와 같이 스마트 축소와 연계된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에서도 지역의 쇠퇴와 해당 공간의 특성에 기반한 일시적·전술적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역사·전통문화자산의 체계적 발굴·보존 및 지역학 진흥

▣ 정책 환경

- 지역의 문화정체성 형성에서 역사·전통문화의 발굴·보존 및 활용 필요성이 지속되고,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문화지원 발굴·수집·보존 필요성 대두

▣ 추진 방향

-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역사·전통문화 자산의 수집과 보존 우선 추진, 지역문화자료를 활용한 지역의 문화정체성 제고 및 현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학 육성 지원

10) 이와 같은 유휴공간의 일시적·전술적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유휴공간의 발생여부와 활용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추출과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휴공간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도 방안으로서 철거비 지원 및 세금감면, 개보수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등의 기존 포지티브 정책뿐만 아니라 유휴공간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세금할증을 부과하는 등의 네거티브 정책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일시적 활용의 경우, 공공성 및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 없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이종민·이민경·오성훈, 2016).

지역의 역사문화와 전통문화는 그 지역만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표상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역 및 지역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문화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은 문화정책의 고유한 책무에 속한다. 나아가 통시적 관점에서 지역의 과거가치로부터 미래가치를 이끌어내는 기본과정이 된다.

최근 소멸위기의 기초자치단체가 늘어가는 상황은 행정구역 소멸을 넘어서 해당 지역문화의 소멸을 우려하게 만든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많은 전문가가 지역문화자산의 소실 우려를 영향력이 큰 이슈로 인식하고 그 대응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이 걸어온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고,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여 보존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소멸 위기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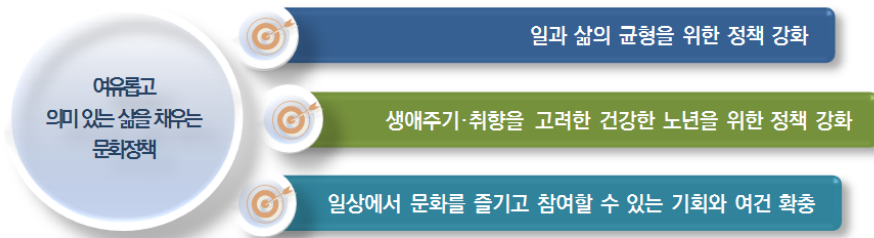
한편,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발굴·보존하는 것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그 활용이다. 특히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현재적 가치를 생성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되고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것은 결국, 역사문화와 전통문화 등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 지역학이다.

지역분권 논의가 활성화되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문화자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지역학은 학문적인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문화적인 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일본의 경우, 지역학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지역의 역량을 지역학으로, 지역학의 성과를 다시 지역의 역량으로 선순환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도시재생 과정에서 지역학의 성과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역학이 다양한 사회 분야와 연결되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5절

여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채우는 문화정책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책의 변치 않는 화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제에 대응하여 ‘여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채우는 문화정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문화정책의 흐름,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와 대응방향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림 5-5] ‘여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채우는 문화정책’ 개요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 강화

가.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 정책 환경
 - 인구감소, 지방소멸,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처음 겪어보는 새로운 미래의 도래
- 추진 방향
 - 새로운 미래의 문화정책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파열 혁신의 필요성, 다양한 시나리오 예측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과 준비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새로운 미래의 문화정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과감하게 선제적인 파열 혁신(disruptive innovation)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예컨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정착률으로 생산성의 비약적 제고가 이루어지고 로봇 등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경우에 근로소득의 소멸로 인해 문화·여가 향유 및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소득이 없어도 여가의 향유와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인간과 기계(인공지능)와의 상호작용 심화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여가 향유에 대한 관심이 현재에 비해 크게 확대될 경우, 현재의 문화여가정책, 문화복지정책의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문화복지정책의 주요한 주체로 등장하고 스마트케어 시스템이 문화복지체계에 전면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대신에 노인 계층의 증가로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지방이 소멸하는 시대에는 문화복지서비스 전달 체계가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시나리오 예측을 통해 지금부터 2030년까지라는 시점은 물론이고, 향후 20년 뒤, 30년 뒤의 문화여가와 문화복지정책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위한 시범 사업 등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여가시간 확보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 정책 환경

- 일상적 행복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치관 확산에도 불구하고, 삶의 속도 증가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의 증가, 소외의 심화, 삶의 주도권 및 자유의 상실 심화 전망

□ 추진 방향

- 여가시간 확대가 개인적 삶의 질과 사회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 관점에서 다양한 개입과 지원 방식 확대

많은 전문가가 미래에도 경쟁이 격화되며 등급화·서열화, 승자독식 구조와 물질주의 가치관이 더욱 심화되고, 삶의 속도 증가로 피로감 심화와 스트레스 증가, 소외 심화, 삶의 주도권 및 자유 상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여가시간 확보’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를 꼽았다. 노동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일이 우선이라고 여긴 과거와 달리 개인의 일상적 행복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지만, 노동시간 과다와 여가시간 부족이라는 근본적 제약요건을 깨트리지 않고는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나 더 나은 미래의 창조를 위한 여유와 활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소득이 많아도 근로시간이 많으면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조사(안주엽 외, 2017)에도 불구하고, 2016년 우리 국민의 평일 여가시간은 10년 전인 2006년과 같았고, 휴일 여가시간은 오히려 0.5시간이 감소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6b).

여가시간 확보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영역에 머물던 시간문제의 해결에 문화정책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여가시간 확보가 개인 삶의 질 제고에 핵심 요소라는 점과 더불어 사회적 스트레스와 갈등의 해소, 창의적 사고의 증진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잔여시간으로서의 여가나 소극적·소비적 여가를 넘어서 여가시간 확대가 개인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 관점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일주일 미만의 짧은 휴가로는 단순한 피로 회복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체적·정신적 재충전과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2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을 보편화하거나, 직장 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문화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역량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을 활용한 인적자원교육 커리큘럼¹¹⁾의 공유 및 확산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개입과 지원의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 예를 들어, 유니레버(Unilever)는 키타리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시인과 작가를 초청해 직원들의 글쓰기를 다듬어주거나, 연극배우를 초청해 역할극을 통해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체크해준다. 혹은 화가를 초청해 디자인과 컬러감각을 키워주는 방식을 활용한바 있다(양혜원, 2016).

2. 생애주기 · 취향을 고려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강화

□ 정책 환경

- 초고령사회 도래로 인한 빈곤, 건강, 소외, 자살, 범죄 등 다양한 노인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추진 방향

- 노인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예술치료와 문화여가교육, 문화복지정책 및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이 가능한 문화 영역의 발굴과 교육 확대
- 세대 갈등의 예방과 완화를 위한 세대 간 소통과 이해의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머지않은 2026년에 한국사회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변화하고, 그 비율은 2040년 32.8%, 2060년 41%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초고령화와 함께 빈곤, 건강, 자살, 범죄 등과 같은 다양한 노인 관련 문제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대상은 곧 고령 인구에 진입할 장년층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노인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증진, 치매 예방 등을 위한 예술치료와, 은퇴 후 늘어난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여가교육, 다른 이와 소통하며 관계를 맺고, 남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빈곤 상태에 있는 노인, 독거노인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인을 위한 문화복지정책의 강화와 함께 경제적 여유와 자존감 확보를 위해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 분야와 관련하여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이 가능한 영역을 적극적으로 탐색·발굴하고, 다양한 교육 및 경력 관리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노인만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은 자칫 세대 간 갈등과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노인 세대

와 기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과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기술로 인한 세대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연계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식 공감 및 기본적인 기술 리터러시 학습을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이를 세대 간 이해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확충

□ 정책 환경

- 특정 계층을 넘어서 일반 국민의 보편적 문화 향유와 참여에 대한 요구 증대

□ 추진 방향

- 보편적 문화권의 확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문화교육제도 개편, 생활문화정책의 질적 전환, 공공문화공간 확보와 창조적 활동의 촉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문화향유와 참여가 특정계층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는 일상적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보편적 문화권의 확립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전국 20대와 50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4.3%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57.9%), ‘나를 잘 알 수 있는 자아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17.8%),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14.0%), ‘지식이나 실력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10.1%) 등을 꼽았다(박영정, 2015). 개인적 삶의 질 제고 뿐 아니라, 문화향유와 참여는 미래사회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통합의 주요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일상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향유와 참여의 경험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청

년-중장년-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지속적으로 보편적인 문화여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생애 전환기에 들어선 중장년(50+ 세대)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문화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유소년기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문화여가교육 내실화, 타 교과목과 문화예술과의 융합·통합교육의 확대를 위한 교육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관람자를 넘어서서 국민 스스로가 문화의 주인공이 되어 능동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생활문화정책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예술장르에 기반한 생활예술이건, 다른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더 넓은 범주로 확산되어 나가는 생활문화이건,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함께 나누고, 삶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문화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만, 그간 생활문화정책이 주로 생활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거점의 확보와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향후에는 단순한 취향공동체를 넘어서 생활의제와 지역의제를 문화적 표현을 통해 공유하고 풀어내는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에 보다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일상적 삶의 공간 어디에서나 다양한 형태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문화공간의 지속적인 확보와 창조적 활동의 촉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인구감소시대에 공공문화공간의 확보는 과거와 같은 전문문화기반시설의 신축을 통해서가 아니라 집 앞의 작은 공원, 거리, 골목길, 폐교, 빈집, 광장, 기타 유휴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문화공간의 운영 또한 지역공동체 내의 다양한 주체를 통해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수요적합성을 제고하고, 내용과 형식의 다양성을 담보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제4절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

유로운 문화향유 및 문화참여 증진을 위해 문화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문화·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문화·복지 통합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존의 분야별 자격제도의 개편방안과 전문교육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복지시설의 통합적 운영과 관리체계,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적 설계방안에 대한 고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제6절

기술혁명과 인문적 성찰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인간 삶의 변화와 관련하여 문화정책의 역할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밝히며,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명암, 문화정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의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 의제에 대응하여 ‘기술 혁명과 인문적 성찰이 함께하는 미래를 가꾸는 문화정책’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내외 문화정책의 흐름,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와 대응방향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림 5-6] '기술혁명과 인문적 성찰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 개요

1. 미래사회의 인류를 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 정립

▣ 정책 환경

- 새로운 기술 및 산업혁명으로 인류의 문화정체성이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사회적 변화를 통해 정부 정책의 대상 및 목표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 요구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

▣ 추진 방향

- 문화정책 및 여타 공공정책의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문화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이에 부합하는 정책 철학 및 방향 모색 추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패러다임이 문명사의 거대한 전환기를 형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지 기존 '단위 사업'의 업그레이드에 골몰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일지도 모른다. 미래 문화정책은 큰 틀에서 ‘집승’은 물론 ‘기계’와도 구별되는 인간 정체성(예컨대, ‘사이보그 교양인’)에 대한 고민을 준거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가늠하며 4차 산업혁명에서 인류 또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사유를 시작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많은 전문가가 과학기술 발전과 윤리의 문제 같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미래지향적 인문정책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지금의 변화가 ‘인간의 의식적·사회제도적 융합을 촉진시키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다. 또한 그 이전의 산업혁명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의 혁명성은 인간에게 있고, 그것은 새로운 휴머니즘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김연순, 2017).

따라서 다가올 미래에 문화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에 근거한 문화 예술교육, 문화복지, 문화시설, 여가문화 등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장구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타 공공정책의 변화도 이러한 정체성 변화와 직접 연결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의 모든 정책적 사유의 기반으로 ‘새로운 인류’를 위한 문화정책 및 인문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빠르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2. 기술 변화에 조응한 협업 기반 및 새로운 생산양식 창출

가.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기반 플랫폼 사업 확대

▣ 정책 환경

- 독자적·고립적·폐쇄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또는 혁신은 장기적으로 쇠락 및 축소되는 대신에 많은 분야에서 협업기반 플랫폼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확대될 전망

▣ 추진 방향

- 협업창작의 확산과 촉진을 위한 새로운 틀의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의 구축과 활용 확대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협업 기반의 창작 지원사업이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한 플랫폼 사업 확대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과거의 고립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이 아니라 협업 기반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로서 ‘플랫폼’ 사업이 문화 분야에서도 향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플랫폼 경제의 부상은 제3세대 혁신정책의 확산과 깊은 관계가 있다.¹²⁾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개념, 즉 기술개발에서 내부 연구개발(R&D) 역량에 의존하던 폐쇄적 혁신이 아닌 외부의 자원 및 역량을 함께 활용하여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3세대 혁신 패러다임의 핵심 원칙이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플랫폼 경제의 성공은 ‘멀티사이드 플랫폼’(multi-sided platform)으로서 네트워크 효과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서로 별개인 두 개 이상의 상호의존적 표적 집단을 연결하는 멀티사이드 플랫폼은 ‘① 한 집단의 고객은 다른 집단의 고객이 존재할 때만 가치가 있고’, ‘② 서로 다른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서 ‘③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증대되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보다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가 가장 힘을 써야 하는 것은 상반된 욕구를 가진 사용자 집단을 동시에 확보하고 확대하기 위한 장치를 계속 마련하는 것이다. 창작자 간, 또한 창작자와 향유자 간 ‘협업 창작’ 확대를 위한 플랫폼 사업을 향후 문화예술 분야에서 확대해 나갈 때에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2)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1세대 혁신정책’이 과학기술계 주도하에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선형적 관점에서 혁신을 바라보았다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2세대 혁신정책’은 과학기술계와 경제계가 함께 참여하면서 단순한 R&D를 넘어 고용과 금융 등 보다 넓은 부문에 관심을 가지는 시스템적 관점을 도입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중반 이후 현재에 이르는 ‘3세대 혁신정책’은 디지털 혁명과 모바일 혁명 등의 기술 발전을 적극 활용하면서 과학기술계와 경제계는 물론이고 사용자와 시민사회까지 혁신의 적극적인 주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나. 기술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문화 분야 생산양식 및 일자리 창출

□ 정책 환경

- 신기술 도입에 따른 기술실업이 여러 분야에서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교육 방식과 새로운 일거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추진 방향

- ‘용(用)-기계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도입한 창작 및 유통 방식의 실험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생산양식 및 일자리·일거리 창출 방식 모색

협업기반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가속화될 새로운 형태의 혁신에 대응하는 의미가 있지만, 플랫폼만으로는 총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기술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생산양식의 도입 및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문화 분야 일거리의 창출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러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用)-기계적 관점’의 도입이 중요하다.

‘네드 러드(Ned Ludd)’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러다이트운동(Luddite Movement, 1811~1816)이 종결된 지 약 200년이 흐른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반(反)-기계적’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친(親)-기계적 입장’에서 장밋빛 환상만을 그리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당면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 문화정책은 ‘용(用)-기계적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군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면서 4차 산업혁명의 범용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산방식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와 일거리의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일자리-교육’이라는 삼각구도의 변화가 문화 분야에 적용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에 인공지능 연구에서 GANs(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나 VAN(Variational Auto-Encoder) 같은 다양한 생성모델이 발전함에 따

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생성해내거나 모사할 수 있는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인공지능의 창작 능력 자체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기존 데이터에 기반한 모사와 변형 능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창작을 보조해주는 도구로써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제고될 것이다(정중은·최보연·김연진, 2017). 따라서 어떠한 인공지능 저작 도구가 우리 문화예술의 성장과 혁신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이를 통한 새로운 문화생산 방식은 어떠한 형태를 띠 것인지, 이러한 생산과 유통, 소비 방식이 자리매김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새로운 일거리가 부상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인간 고유의 창의성’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정립

▣ 정책 환경

- 기계와의 공존과 더불어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기대 및 필요성이 점증할 전망

▣ 추진 방향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근원적이고 다각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이해하고 발휘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예술의 힘’을 실현

인간과 기계의 공생을 피하기 어려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더불어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래에는 용-기계적 관점에서 기계와 협업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가운데, 기계와 구분되는 (또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제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창의성을 발견하고 계발하려는 노력이 문화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강사 일자리 확대’ 사업으로 잘못 이해된다고 평가 받는 문화예술교육에서 미래 사회의 창의성을 준비하고 자극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커리큘럼, 교육 방식과 교육 목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근원적인 방향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령 최근 부산교육청은 내년부터 객관식 시험을 전격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바, 이처럼 과거와는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새로운 교육방식의 도입은 시급할 뿐만 아니라 연쇄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또한 ‘일상’과 ‘생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우리 국민의 문화향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를 통해 장기 비전 하에 질적인 재정립을 도모해야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 핵심적인 교육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예술 활동과 쉽고 흥미롭게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피상적인 이해를 벗어나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핵심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새로운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밀한 인식 공감을 위한 접촉면을 늘려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 문화예술-과학기술 간 리터러시 제고와 생태계 조성

▣ 정책 환경

-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문화의 확산을 매개로 문화예술계와 과학기술계의 협업 필요성 및 접점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추진 방향

- 문화예술계와 과학기술계의 상호 이해 및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사업을 설계할 경우에 양자의 협업을 전제로 한 접근을 필수적으로 모색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와 연결되면서 보다 강력한 지원과 진흥이 필요한 것이 예술계의 기술 리터러시 제고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와 스마트시티, 로봇공학과 합성생물학, 5G 네트워크와 혼합현실, 블록체인, 3D프린터와 스마트 앱 등의 핵심기술이 자신의 작업

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예술가, 창작자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문영역의 창작 양태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워크숍’(정중은·최보연·김연진, 2017)처럼 실제적인 작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자연스러운 예술인 재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창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창작 지원사업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예술과 기술의 만남은 주로 ‘미디어 아트’에 한정되었지만, 앞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등을 적용한 콘텐츠 시장이 획기적으로 확장될 것을 감안한다면 예술계의 기술 리터러시 제고는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 종사자 그리고 일반 국민의 기술 리터러시를 높여더라도 그것이 관련 기술을 전업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가의 수준에 미치지 힘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천기술이나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전문가의 문화예술 리터러시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협업 기회를 마련하고 확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양자 간 소통과 공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앞서 제시한 ‘인공지능 저작도구 개발’의 경우에 ‘예술가/단체’와 ‘기술자/단체’의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분야의 문화적 이슈는 무엇인지, 또한 관련 도구의 최적 기술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화 분야(예술계) 전문가들과 기술 분야(인공지능)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예술’의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예술가 또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과 목적, 제작 가능성 등을 망라하여 설계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차원의 지능화·자동화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물과 기계가 실시간 연결되고 소통하는 초연결사회를 앞당기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생활양식을 확산하고 있다. 초연결시대의 새로운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문법에 얽매이는 대신, 문화예술

및 콘텐츠의 창작-유통-향유 정책 등을 새로운 비전과 전략 차원에서 고민하여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팜’·‘홈’·‘팩토리’와 달리, 아직까지 스마트 ‘씨어터’·‘갤러리’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또한 혼합현실 시대의 ‘가상과 현실의 연결·융합·공진화’는 문화예술 창작자와 향유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최신의 VR·AR 기술에 대한 이해, 해당 기술의 기능과 효과, 기술적 발전 속도, 산업적 매력도 및 한계점 등을 확인하여 문화예술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고민하는 연구들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미래의 문화 트렌드와 대응 방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망과 예측 연구들이 핵심 기술별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장 ●●

결 론



제1절

2030년을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역할

1. 연구의 내용과 결과

본 연구는 현재부터 2030년까지라는 시간적 범위에서 우리의 문화정책이 주요하게 논의해야 할 의제와 각 의제에 대응한 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존에 논의된 국제사회 문화의제와 우리의 문화정책 변화 및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서 이슈를 도출하였다. 과거의 정책과 현재의 환경을 분석한 이유는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러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행동양식의 실행, 그리고 그 결과물들로 인해 어떻게 현 사회의 상황이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2007: 113)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변화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이슈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5개 범주에 16개 이슈 35개 세부 이슈와 이슈별 대응방향을 일차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이슈와 대응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거쳐 선별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요도성취도분석(IPA)과 편익구조분석(BSA)을 활용하여 각 이슈가 현재(단기) 및 미래(중장기)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슈별 대응방향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이슈와 대응방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24개 핵심 이슈(현재 4, 현재~미래 16, 미래 4)가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이슈를 보면(〈표 4-26〉 참조), 기존의 미래 문화정책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이슈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루지 않았거나

비중을 두지 않았던 이슈 중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게 평가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조사시점에 차이가 있고, 문화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과 관련되는데, 주로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및 ‘과학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범주에 속한 이슈들이었다. 해당 이슈들은 문화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된 이슈와 이슈별 대응방향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해서 현재부터 2030년이라는 미래 시점까지 우리 문화정책에서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의제로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첫째, ‘문화정책의 오래된 미래, 문화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둘째, ‘증가하는 갈등의 해소 혹은 완화, 문화정책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셋째, ‘문화자치시대의 지방 소멸 위기, 지역문화정책의 틀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넷째, ‘문화정책의 변치 않는 화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섯째,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명암, 문화정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이다. 이와 같은 의제별로 이슈의 대응방향을 평가한 결과와 전문가 제언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과제는 <표 6-1>과 같다.

<표 6-1> 미래 문화정책을 위한 의제와 과제

구분	내용	관련 이슈(영향력)
의제1	• 문화정책의 오래된 미래, 문화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책 목표	•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인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문화정책	• 정치 불신과 신직접민주주의(현재) • 내수시장 위축과 자성장(현재) • 문화민주주의 증진(현재~미래)
정책 과제	• 문화민주주의와 문화권 신장을 위한 정책 강화 • 문화재정의 확충과 안정적 운용 • 문화인력의 안정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 문화인력의 일자리 및 삶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문화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의제2	• 증가하는 갈등의 해소 혹은 완화, 문화정책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현재~미래)
정책 목표	•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성으로 승화하는 문화정책	•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현재~미래)
정책 과제	• 공존·상생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및 삶의 지표 설정 • 문화다양성의 제고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다문화수용성 증진	• 고령화 이슈 증가(현재~미래) •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현재~미래)

구분	내용	관련 이슈(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존과 상생을 위한 문화다양성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 •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한 대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수용성과 문화정체성 (현재~미래) •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미래)
의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치시대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문화정책 틀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현재)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치를 지원하고 지역재생을 선도하는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현재~미래) •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소멸 심화(현재~미래) •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 백화, 문화포잉 문제 발생(현재~미래) •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현재~미래) • 지역문화자산의 소실 우려(현재~미래)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마련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 지역의 문화생태계 진단 및 역량 강화 모색 •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자활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와 공공문화서비스의 연계 운영 • 사람과 활동 중심의 문화적 도시재생 및 도시문화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사업 체계를 공간·시설에서 사람·활동 중심으로 전환 - 도시 '문화의 재생' 정책 추진 및 사업 체계·지표 전환 - 지방소멸 진단과 스마트 축소 재생 전략 도입을 위한 정책 협력 • 역사·전통문화자산의 체계적 발굴·보존 및 지역학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책의 벤치 없는 화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혼란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현재) •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현재~미래) •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현재~미래) •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현재~미래) •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현재~미래)
의제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책의 벤치 없는 화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책의 벤치 없는 화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채우는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 여가시간 확보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 생애주기·취향을 고려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강화 •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확충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 여가시간 확보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 생애주기·취향을 고려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강화 •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거리의 변화와 감소(현재~미래)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미래) • 사람 시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미래) •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미래)
의제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명암 문화정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명암 문화정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명과 인문적 성찰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거리의 변화와 감소(현재~미래)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미래) • 사람 시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미래) •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미래)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사회의 인류를 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 정립 • 기술 변화에 조응한 협업 기반 및 새로운 생산양식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기반 플랫폼 사업 확대 - 기술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문화 분야 생산양식 및 일거리 창출 • '인간 고유의 창의성'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정립 • 문화예술-과학기술 간 리더러시 제고와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사회의 인류를 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 정립 • 기술 변화에 조응한 협업 기반 및 새로운 생산양식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기반 플랫폼 사업 확대 - 기술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문화 분야 생산양식 및 일거리 창출 • '인간 고유의 창의성'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정립 • 문화예술-과학기술 간 리더러시 제고와 생태계 조성

2. 문화정책의 방향과 역할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선정된 핵심 이슈와 대응방향,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도출된 의제와 과제가 기존의 문화정책 영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이슈가 정책의 경계와 상관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한 정책 영역만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반영한다. 그에 따라서 정책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실제로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문화적 접근이 요구되면서 문화정책 분야가 관련 과제에 통합적으로 협력을 모색하도록 계획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유엔이 2015년에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거시적 관점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경제, 사회, 환경 등 제 분야 의제에서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의제들을 관통하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정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성, 다양성과 창의성 등의 가치가 문화적 가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롭게 설정된 의제를 바탕으로 각국은 문화를 지속가능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경향이다.

우리의 문화정책은 고유의 영역에 집중하고, 타 정책 영역과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주변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문화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현재의 틀을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의 역할을 요구한다. 따라서 고유의 정책 영역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몇 가지 지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갈등의 해소와 관리에서 문화정책의 역할이다. 그 방향은 차이에서 비롯된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포착하고 문화적 다양성으로 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문화적 갈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영역의 조정자로서 문화정책의 역할을 모색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소극적 문화도시 정책이나 도시재생을 넘어서 적극적인 도시문화 재생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즉, 수단이자 도구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문화 자체가 목적이 되는 문화재생을 목표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도시 계획 등의 정책 영역과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도시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론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론의 원인 중에는 도시개발이 원도심과 신도심의 쇠퇴를 반복하게 만든 것도 한 원인이다. 그러나 쇠퇴지역이 증가하고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을 넘어서 쇠퇴와 소멸을 인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문화마저 소멸되는 상황을 막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소멸의 징조가 보이는 곳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문화재생을 통해서 소멸의 지연 또는 해소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시정책 영역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모색하는 한편, 지속되는 도시개발 욕구가 가져올 사회적·문화적 결과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방법론적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방법론적 수단으로써 현행 문화영향평가의 개선 및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미래 사회가 가져올 인간 정체성 변화에 대응하고 그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책 철학의 정립에서 문화정책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미래 연구에서 미래의 인간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절

미래 정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제언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미래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그 목적은 예측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미래 예측이나 연구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권기현, 2008; 박영숙·제롬글렌·테드 고든, 2007).

기존에 문화정책을 평가할 때, 단기 처방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김향자, 2006; 정광렬, 2011). 이는 현안 대응이나 문제 해결이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은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기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성을 갖추고 진행되는 연구가 중요하다.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매년 혹은 수년 단위로 지속성과 주기성을 가지고 미래 연구를 수행하며 이슈를 점검하고 수정·보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필요성은 문화정책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화정책 연구에서 미래 연구는 단발적 혹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정책과정의 첫 단계인 정책의제 설정은 정부가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정치적 과정을 의미한다. 이 때 정치체제의 역량(인적·물적 자원) 및 정책역량의 한계 때문에 모든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우선순위가 앞서는 사회문제들을 정확한 미래예측에 기반하여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미래예측은 정책의제 설정 이후의 정책결정과 정책분석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현안문제에서 벗어나 장기적 시

각에 기초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권기현, 2008).

이와 같이 미래에 대응한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현안 대응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트렌드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출현 및 성장 단계에 있는 이슈를 포착하여 추적하는 연구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기존에 문화정책 연구에서 미흡하였던 트렌드 연구와 미래 문화정책을 위한 예측 연구가 지속성을 갖고 주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현안이 대두되었을 때 시의성과 적절성을 지닌 정책의 제시와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문화정책의 세부 분야별 대응을 위한 연구를 넘어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이슈 중심의 통합적인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문화정책을 둘러싼 이슈들은 어느 특정 문화정책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현 또는 성장 단계의 이슈를 파악하고 그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유효한 정책 결정을 위한 대응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에서 미래 연구 방법론의 정립과 예측시스템 구축도 주요한 선결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15), 「박근혜정부 국정과제(2013~2017)」.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국정홍보처(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1 총론」.
- 권규호·조동철(2014), 20년 전의 일본, 오늘의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와 경제역동성 저하, 조동철 편,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3-23,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권기현(2008), 「미래예측학」, 서울: 법문사.
- 권순희(2014),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이해, 「새국어생활」, 24(4), 87-106, 서울: 국립국어원.
- 김경욱(2003),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문화경제연구」 6(2), 31-53, 한국문화경제학회.
- 김 면(2017),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상철(2017), 문화재정구조의 현황과 한계 총량적 구조를 중심으로, 「제1회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속 토론회 자료집」(2017.9.19.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김수진(2016), 여성혐오,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가져오다, 「교육비평」, 38, 163-188, 서울: 교육비평사.
- 김연순(2017), 4차 산업혁명과 휴머니즘, 「웹진 문화관광」, 2017년 3월호,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연진(2015),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문화·예술 도입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 (2016), 「문화·예술분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용신(2008), 다문화사회의 시민형성 논리: 문화민주주의 접근, 「비교민주주의 연구」, 4(2), 31-57, 서울: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 김유진(2015), 공유경제 트렌드 확산에 따른 산업 생태계 변화, 「글로벌 경영트렌드」,

- 10, 서울: 하나금융경제연구소.
- 김윤이 외(2016), 「빅픽처 2017: 4차산업혁명과 고립주의의 역설」, 서울: 생각정원.
- 김태현(2017), 중국의 부상, 세계질서의 위기, 그리고 동아시아: 한국의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KWP)」, 33(1), 1-38,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김향자 외(2006), 「미래 문화비전2030」,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현주(2017), 4차 산업혁명과 관광산업의 미래, 「웹진 문화관광」, 2017년 3월호,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혜인(2014), 「문화예술트렌드 중장기 경향 분석 및 전망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노화준(2007), 「정책학원론(제2 전정판)」, 서울: 박영사.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2008), 「국정과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참여정부의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
- 대한민국정부(2008),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 류정아(2015),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진단과 방향 정립」,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관광부(2004), 「창의한국」.
- 문화융성위원회(2013), 「문화융성시대-문화가 있는 삶」.
- 문화체육관광부(2008), 「문화비전 2008-2012: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 _____ (2015a),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
- _____ (2015b), 「문화융성 정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 _____ (2016a),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
- _____ (2016b), 「2016년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
- 미래전략정책연구원(2016), 「10년 후,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서울: 일상이상.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 KISTEP · KAIST(2015), 「미래이슈보고서: 10년 후 대한민국」, 경기 고양: 지식공감.
- _____ (2016), 「미래전략보고서: 이제는 삶의 질이다」. 경기 고양: 지식공감.
- 박문수(2017),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KIET 산업경제」,

- 3월호, 세종: 산업연구원.
- 박영숙 외(2011), 「유엔미래보고서 2025」, 서울: 교보문고.
- _____ (2012), 「유엔미래보고서 2030」, 서울: 교보문고.
- 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2007), 「전략적 사고를 위한 미래예측」, 서울: 교보문고.
- 박영정(2015),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재홍(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75-99, 한국인구학회.
- 박주화(2017), 「평화적 분단과 통일: 2017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와 함의」, Online Series(2017.6.23.), 서울: 통일연구원.
- 변미리(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51-573, 한국심리학회.
- 서울대학교(2017), 「미래 연구 방향 및 정책 어젠다」.
-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2017), 「2016 통일의식조사」.
- 성은영·임유경·심경미·윤주선(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 재생 전략 연구」,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송은희·신은성(2012),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탈북자정책에 관한 연구, 「글로벌 정치연구」, 5(2), 7-30,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양건열(2013), 「시각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계민 외(20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혜원(2016),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2011), 「2001년 vs 2011년 소비자트렌드 비교 분석 조사 No.5(정치판)」.
- _____ (2017), 「다문화 가정 및 사회 관련 인식조사」.
- 여성가족부(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 예술경영지원센터(2016), 「2017 공연예술트렌드조사 보고서」.

- 오성재·주병기(2016), 한국의 소득기회불평등에 대한 연구, 「재정학연구」, 10(3), 1-30, 한국재정학회.
- 윤소영 외(2017), 「문화공감(2017 문화정책포럼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경주(2016), 「4차 산업혁명, 앞으로 5년」, 서울: 마리복스.
- 이부형·박용정(2016),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경제주평」, (718), 16-45,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이상호(2016),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 브리프」, 충북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 이종민·이민경·오성훈(2016), 「유희공간의 전략적 활용체계 구축 방안」, 세종 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임 일(2016), 「4차 산업혁명 인사이트」, 서울: 더메이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전경구·전형준(2016), 인구감소지역의 스마트 쇠퇴를 위한 축소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1), 1-28, 한국지역개발학회.
- 정광렬(2011), 「미래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기선 외(2016), 「외국인 및 이민에 대한 국민의 태도변화 분석」, 경기 고양: IOM이민정책연구원.
- 정보람(2016), 「OECD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비교」,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4), 「ICT 부문의 사용자 주도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 정상훈(2014),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황과 이슈,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 「제5차 사회적 경제의 혁신활동, 현황과 과제 자료집(2014.10.21.)」,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영호·고숙자(2014),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종은(2017a),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 방향 모색, 「웹진 문화관광」,

- 2017년 3월호,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 (2017b),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한 예술정책의 대응, 「예술경영 웹진」, 2017년 5월호,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
- 정중은·최보연·김연진(2017), 「예술정책 미래 비전과 전략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정현민(2017), 저성장 극복을 위한 분권혁신형 지역발전 정책, 「지역발전정책 릴레이토론회 자료집」, 지역발전위원회.
- 조광호(2016), 「지역문화정책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화순 외(2016), 「빅데이터로 보는 한국정치 트렌드」, 서울: 한올아카데미.
- 최유석·오유진·문유진(2015). 대학생의 노인세대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228-241, 한국콘텐츠학회.
- 최인수 외(2016), 「2017 대한민국 트렌드」,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 _____ (2017a), 「2017 청소년 통계」.
- _____ (2017b), 「2016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표」.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2016),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7」, 경기 파주: 이콘.
- KAIST 미래전략대학원(2014),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 경기 파주: 이콘.
- _____ (2015),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6」, 경기 파주: 이콘.
-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2013), 미래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
- 클라우드산업연구소·위즈덤(2013),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기업들을 통해 살펴본 공유경제」.
- 하원규·최남희(2015),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콘텐츠하다.
- 안주엽 외(2017), 「일과 행복(II)」,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개발을 위한 지침서(요약본)」.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
- 행정자치부(2016),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_____ (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홍성주(2016), 글로벌 트렌드의 한국적 해석: 정치편, 「FUTURE HORIZON」, (28), 26-31,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황은애·정영훈(2015),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충북 음성: 한국소비자원.
- 吉川良三(요시카와료조)(2016), 「日本型第4次ものづくり産業革命 経営者よ,このままで生き残れるか」, 한일IT경영협회 옮김, 「제4차 산업혁명」, 서울: KMAC.
- Brynjolfsson, Erik & McAfee, Andrew(2014), *The second machine age*, 이한음 역(2014), 「제2의 기계시대」, 서울: 청림출판.
- CEBR(2015), *World Economic League Table 2016 Highlights*, London: Cebr Global.
- Evenett, Simon J. & Fritz, J.(2017), *Will Awe Trump Rules? The 21st Global Trade Alert Report*(2017.7.) London: CEPR Press.
- Gartner,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각 연도.
-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eds.(2017). *World Happiness Report 2017*,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IMD(2016),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Switzerland Lausanne: IMD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IMF(2016), *World Economic Outlook*,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_____(2017), *World Economic Outlook*,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NIC(2008),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유지훈·김수현 옮김 (2009), 「글로벌 트렌드 2025: 대변혁 이후의 세계」, 서울: 예문.
- _____(2012), *Global Trends 2030: Alternative Worlds*. 이미숙 외 옮김(2013), 「글로벌 트렌드 2030」, 서울: 예문.
- _____(2017), *Global Trends: Paradox of Progress*. 이미숙·이영래 옮김(2017), 「NIC 미래 예측 보고서」, 서울: 예문.
- OECD(2012), *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OECD Publishing.

- PwC(2015), *Consumer Intelligence Series: The Sharing Economy*, US: PricewaterhouseCoopers LLP.
- ___(2017), *The long view: how will the global economic order change by 2050?*, World in 2050 – Summary report Feb 2017, UK: PricewaterhouseCoopers LLP .
- Schumacher, E. F.(1973), *Small Is Beautiful: A Study of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London: Blond & Briggs.
- Schwab, Klaus(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Davos Reader*, 송경진 역(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 Schwab, Klaus et al.(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김진희·손용수·최시영 역(2016), 「4차 산업 혁명의 충격」, 서울: 흐름출판.
- UN(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 ___(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 ___(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Volume II: Demographic Profiles, New York: United Nations.
- UNESCO(2015), *Re/shaping Cultural Policies*, Pari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 WBG(2017), *2017 Global Economic Prospects: A Fragile Recovery*, Washington, DC: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 WEF(2015), *Outlook on the Global Agenda 2015*, Cologny/Geneva: World Economic Forum(WEF).
- ___(2016), *The Future of Jobs*, Cologny/Geneva: World Economic Forum(WEF).

※ 이 밖에 보도자료, 신문기사 및 누리집은 본문 및 각주로 대신함.

ABSTRACT

Direction and Tasks of Future Cultural Policy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Existing studies on cultural policy have been focused on responding to pending issues, and thus insufficient in identifying policy agendas for medium- and long-term policy outlooks. This study was initiated with an awareness for this problem.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ssues that have an impact on cultural policy from the present up to the future as of 2030 through macro environment analysis, and propose agendas that are expected to arise in future cultural policies and appropriate response direction for these agendas.

2. Research Process

This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ss. First, the issues that affect cultural policy were deduced through the analysis of political, economic, socio-cultur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s. Second, professional FGI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o sort the deduced issues. As a result, a total of 35 specific issues were selected, which were categorized under 'changes in population topography', 'changes in social and political topography', 'changes in lifestyle and values', 'urban and regional problem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the future of humans.' In addition, the response direction for each issue was drawn. Third,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with experts in related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ics, social culture and technology to evaluate the influence the identified issues have on current and future cultural policies and the importance of the response direction for each issue. According to the Delphi survey, a total of 21 issues were evaluated to have a strong impact on future cultural policies. In addition to these issues, this study analyzed the cultural agenda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cultural policies of previous Korean administrations and examined how they are correlated to the issues identified in this study.

3. Direction and Tasks of Future Cultural Policy

Through the process stated above, this study established five agenda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future cultural policies, and proposed the following tasks by agenda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expert evaluation on response direction for each issue.

(Agenda 1) How to realize cultural democracy, the long awaited future of cultural policy: Cultural policy that realizes cultural democracy and promotes the stability and security of cultural human resources

- Strengthening policies for cultural democracy and the realization of cultural rights
- Expanding cultural finance and managing stable operation
- Creating an eco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job stability and securement of new growth power in the field of culture

(Agenda 2) How will cultural policy contribute to solving or alleviating increasing conflicts?: Cultural policy that resolves social conflicts and uses diversification as the driving force of social development

- Expanding social capital and setting the indicators of life for coexistence
- Enhancing cultural diversity and building cooperative governance
- Preparing for unification and strengthening responsiveness for after unification

(Agenda 3) How to design the framework of regional cultur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risis of regional dissolution in an era of cultural autonomy: Cultural policy that supports cultural autonomy and leads regional cultural revitalization

- Preparing the foundation for cultural autonomy and supporting regional empowerment
- Enhancing the self-supportive cap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culture and arts community
- Strengthening conjunctive operation of regional administrative & welfare services with public cultural services
- Revitalizing people- and activity-centered cultural city and city culture
- Promoting regional studies and systematic exploration and preservation of regional history and traditional culture

(Agenda 4) What should be done to improve quality of life, an unchanging issue of cultural policy?: Cultural policy that serves a relaxed and meaningful life

- Strengthening cultural policies for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
- Strengthening cultural policies for leisure activities based on life cycle and preference and for healthy old age
- Expanding opportunities and conditions that enable people to enjoy

and participate in culture freely in their daily life

(Agenda 5) What kind of preparations should cultural policy make in readiness for the contrast that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will bring?: Cultural policy that cultivates a future where technological revolution and humanistic reflection coexist

- Establishing the philosophy and direction of cultural policy for the humanity of future society
- Creating collaborative foundation that corresponds with technological changes and new modes of production in the field of culture
- Establishing cultural arts education based on ‘human-specific creativity’ distinguished from machinery
- Improving the literacy between and forming the ecosystem for cultural arts and scientific technology

4. Proposal for Future Cultural Policy

Existing studies on cultural policy have been focused on responding to pending issues. Such practice is characteristic of policy research, but has led to insufficient countermeasure research on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in addition to researching countermeasures for pending issu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licy responsiveness by harmonizing trend research and future policy research through identifying and tracking issues.

Keywords

Cultural policy, future prediction, cultural democracy, cultural diversity, cultural autonomy, quality of lif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부 록 ●●

전문가 델파이 조사양식



문화정책의 미래 모색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1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은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이슈 및 이슈별 대응 방향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미래 문화정책의 의제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델파이조사는 2회에 걸쳐서 진행되므로, 종료시까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종료 후에 응답자분들께 소정의 답례품을 전해 드리고자 하오니, 답례품을 받으실 연락처를 꼭 기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1.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 분야(국어, 콘텐츠산업, 관광 분야를 제외)를 제외한 것입니다. 시기(별단기, 중기, 장기)로 현재보다 정책적인 중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문화정책 분야	단기(현재~5년 내)	중기(6~10년 내)	장기(10년 이후)
지역문화정책			
전통문화정책			
인문정책			
예술정책			
문화여가정책			
문화다양성정책			
국제문화교류정책			

※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도출하여 다음처럼 다섯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였습니다.

- 인구지형의 변화
-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하 설문조사는 다섯 가지 범주별 이슈 및 이슈에 대한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다음은 '인구지형의 변화' 관련 이슈에 대한 문항입니다.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이슈	이슈 관련 현상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14~64세) 감소 시작 • 구매력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 국내외 수요 부진, 수출 및 제조업 위축 • 저성장에 의한 장기 침체 및 성장동력 약화 •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 성장 •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빈곤, 건강, 자살 등) 증가 • 사회보장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고령화 이슈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증가 등으로 인한 다문화·다인종사회의 변화 • 우리 사회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문화적 갈등 • 원주민과 이주민 간 문화 수용과 문화정체성 혼란
국제적인 인구이동과 다문화사회화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증가 등으로 인한 다문화·다인종사회의 변화 • 우리 사회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문화적 갈등 • 원주민과 이주민 간 문화 수용과 문화정체성 혼란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2세의 노동시장 진출과 사회적 적응 문제 계층의 고착화 문제 대두 • 환경문제, 노동력의 국가 간 이동 등으로 인한 고급인력 유출

2-1. 제시된 이슈들이 현행 문화정책 및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 기준	현행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①매우 적음	②적음	③보통임	④큼	⑤매우 큼
	미래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①현재보다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다	②현재와 차이가 없을 것이다	③단기적으로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다	④중장기적으로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다	⑤ 지속적인 증가로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다

이슈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고령화 이슈의 증가										
국제적인 인구 이동과 다문화 사회화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										

2-2. 제시된 이슈 중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이슈가 있다면,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

3. 다음은 '인구지형의 변화' 이슈에 대한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3-1. 제시된 이슈들이 현행 문화정책 및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 기준	정책적 중요도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임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정책적 시급성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임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이슈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	중요도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저출산, 고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가능인구 감소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문화 분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이슈의 증가 	장기침체에 따른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문화적 접근 모색										
국제적인 인구이동과 다문화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수용성과 문화 정체성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련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 	문화 분야 창의인력 양성 정책 강화 및 국외유출 완화 모색										

3-2. 제시된 대응 방향 중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

4. 다음은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관련 이슈에 대한 문항입니다.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이슈	이슈 관련 현상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갈등	남북 갈등 및 문화적 이질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한 남북 관계 단절 및 갈등의 지속 남북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문화적 이질성 심화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 언어, 문화, 가치관, 생활양식 차이로 인한 갈등 대비 필요
	동아시아 역내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영토·정치경제 문제 등으로 인한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갈등 심화
사회적 갈등의 확산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보호 무역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질서의 양극화(G2)와 다극화, 신냉전과 신고립주의 부상 자국중심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 확산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과 부, 주거, 교육, 소비, 의식 등 삶의 영역 전반에 걸친 양극화 심화 실업, 중산층 몰락, 새로운 빈곤층 형성 및 계층 이동성 저하로 인한 계층 갈등 증가
	사회 전반의 갈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 이념 성별 등 사회 전반의 갈등 및 혐오범죄 증가로 인한 갈등관반비용 증가 귀농·귀어·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기존 공동체와의 갈등
	탈북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북민의 정체성과 한국사회에서의 문화 적응 문제

5-2. 제시된 대응 방향 중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

6. 다음은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관련 이슈에 대한 문항입니다.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이슈		이슈 관련 현상
라이프스타일 변화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 여가시간 및 여가지원 증가 • 기술 발전으로 소비자·향유자의 초개인화된 취향 부상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증가, 새로운 형태의 가족(공동체) 확대로 생활패턴 및 소유 형태가 변화하고 복지 수요가 증가
삶의 가치관 변화	자연과의 공존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원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과 공존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모색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 수요 및 생활문화 활동이 증가하고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확대 • 노미드형 삶 적정기술을 기반으로 성장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추구 • 국민행복지수(GNI)를 국가 발전의 지표로 추구하는 경향 증가
	장기불황시대의 자발적 가난 (소박한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난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니멀리즘으로 미니멀 라이프 라이프 다운사이징, 다운시프팅 등 소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중심의 경제, 다양성의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 부상 • 제한된 자원의 재분배와 재분포, 공유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부상
과로사회화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등급화·서열화 경향 및 승자독식구조의 심화 • 가치의 획일화(물질주의 가치관 심화) 및 삶의 속도 증가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 증가 • 소외의 심화, 삶의 주도권 및 자유의 상실
기술 발전 적용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기술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피로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발전으로 혼합현실(Mixed Reality)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에의 적응력 요구 심화 • 융복합미디어, 모바일플랫폼 등의 영향력 강화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

- [용어 해설]
- **초개인화(Hyper Personalization)**: 최적화된 상황 인지를 통해 취향이 고도화되는 것 여러 가지 개인화된 정보를 통해서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기업이 만들어 내는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임.
 -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適正技術)**: 해당 지역의 경제, 환경, 사회적 여건 등에 알맞은 해법을 제시하는 기술. 지역에서 산출된 원재료를 써서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제품을 만드는 데 적합한 기술을 지칭함.
 - **국민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I)**: 국민 삶의 질과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 4대 축(평등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 전통가치의 보존 및 발전, 자연환경의 보존, 올바른 통치 구조)에 9개 영역(심리적 안정, 건강, 시간 사용, 행정체계, 문화 다양성, 교육, 공동체 활력, 환경, 생활수준) 33개 지표로 고안됨(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 **라이프 다운사이징(life downsizing)**: 최소한의 삶을 지향하며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는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의미함(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 **다운시프팅(downshifting)**: 금전적 수입이나 승진에 구애받지 않고, 저소득일이라도 마음에 맞는 일을 즐기며 생활의 여유와 삶을 즐기려는 행위를 의미함(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 **혼합현실(Mixed Reality, 混合現實)**: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 정보를 부가하는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과 가상 환경에 현실 정보를 부가하는 증강 가상(AV: Augmented Virtuality)을 포괄하며, 현실과 가상이 연결된 스마트 환경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풍부한 체험을 제공함(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6-1. 제시된 이슈들이 현행 문화정책 및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이슈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라이프스타일 변화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삶의 가치관 변화	자연과의 공존 모색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장기불황시대의 자발적 가난(소박한 삶)										
과로사회화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기술 발전 적용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기술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피로도 증가										

6-2. 제시된 이슈 중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이슈가 있다면,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

7. 다음은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이슈에 대한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7-1. 제시된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향의 정책적 중요도와 시급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이슈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	중요도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라이프 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생애주기와 세분화된 취향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 정책 강화 일상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 제공											
삶의 가치관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과의 공존 모색 	다양성 공존·상생의 가치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문화적 삶의 지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불황시대의 자발적 가난(소박한 삶) 	문화 분야의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여가시간 확보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과로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세대 간 기술적응 격차 완화 및 세대 이해 계기 확대											
기술 발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기술 발전에 따른 피로도 완화 위한 문화적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피로도 증가 												

7-2. 제시된 대응 방향 중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

8. 다음은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관련 이슈에 대한 문항입니다.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이슈		이슈 관련 현상
지역 문화자치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와 연계한 문화자치 필요성 증가
쇠퇴지역 증가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화 및 수도권 집중도의 심화, 인구 감소 및 도시화로 인한 지방 쇠퇴 가속화와 지방소멸 위기 농촌공동화 현상의 심화, 학교·공공시설의 폐관 및 통폐합, 복합시설화 필요성 증가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쇠퇴지역의 문화시설 역할 및 사회·문화 서비스 공급체계 변화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인구감소에 의한 자연소멸 등)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자산 소실 우려 증가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폐교의 발생, 재래시장 등 상권 쇠퇴, 도심 슬럼화와 원도심 쇠퇴 심화 성장 위주의 도시관리정책,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점 대두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 관광 상권 형성 등) 소비 위주의 단거점 재생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심화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문화백화, 도시재생사업 과정(젠트리피케이션 촉발기)에서의 문화과잉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

[용어 해설]

- 문화백화(文化白化)**: 문화예술에 의해서 활성화된 곳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이탈하고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 측면만이 강화된 획일적 상업경관이 형성되어 매력도가 소실되는 현상을 의미함.

8-1. 제시된 이슈들이 현행 문화정책 및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이슈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 문화자치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쇠퇴지역 증가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										

8-2. 제시된 이슈 중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이슈가 있다면,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9. 다음은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이슈에 대한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9-1. 제시된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향의 정책적 중요도와 시급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이슈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	중요도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 문화 자치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문화자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문화재정의 확충과 효과적 운용										
		도시 및 지역 간 문화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쇠퇴지역 증가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	유휴공간 활용체계 마련, 스마트 축소도시 계획의 도입과 운영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와 공공문화서비스 체계의 보완적 운영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지역의 역사문화, 전통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존 및 활용									
도시 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문화적 도시재생, 도시문화의 재생 정책 수립 및 시행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자활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자산화 전략 지원									

9-2. 제시된 대응 방향 중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10. 다음은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관련 이슈에 대한 문항입니다.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이슈		이슈 관련 현상
핵심 기술군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용기술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의 정착 및 확산 • IoT 기술 및 로봇기술의 급속한 발전 • AR/VR 및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 • 3D프린터의 활용도 확대 및 자기제조형 4D프린터 등장
초연결시대 도래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 시대 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화, 자동화기반 초연결사회로의 급격한 전환 • 생산과 소비 등에서 초개인화된 소비자 취향 고려 필수화 • 공동창작 시스템과 플랫폼의 일반화
기술 발전과 일자리 문제	일지리의 변화와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와 공존이라는 화두와 인공지능 기반 새로운 일자리 탄생 • 단순, 반복형 노동 분야의 일자리 감소 • 노동자 간 수입 및 지위의 양극화 심화
포스트휴먼 시대의 윤리와 정체성	트랜스휴먼 의 등장과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랜스휴먼의 등장에 따른 인간 정체성 문제 대두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및 합성생물학 등이 제기하는 거대한 윤리적 문제 부상 • 과학기술 발전으로 감시 및 통제 강화, 프라이버시 침해

[용어 해설]

-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공공거래장부라고도 불리며, 기존에 금융회사의 중앙서버에 거래기록이 보관되는 것과 달리 사용자의 개인 컴퓨터 등에 거래기록이 저장됨으로써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하여 데이터의 대량 유출이나 위조를 막는 기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에 적용되어 있음(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 **포스트휴먼(post human)**: 인간과 기술(또는 기계)의 융합으로 나타나는 미래의 인간상을 일컫는 말. 정보통신기술, 인지과학, 나노기술, 바이오공학의 발달로 인간과 기계가 합쳐짐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과 관련됨.
- **트랜스휴먼(trans human)**: 현재의 인간과 포스트휴먼(post-human)의 중간적인 존재이며,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현재의 인간이 지닌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뛰어넘은 능력을 지닌 존재를 의미함.

10-1. 제시된 이슈들이 현행 문화정책 및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이슈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①	②	③	④	⑤				
핵심 기술군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									
초연결시대 도래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									
기술 발전과 일자리 문제	일지리의 변화와 감소									
포스트휴먼 시대 의 윤리와 정체성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									

10-2. 제시된 이슈 중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이슈가 있다면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11. 다음은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슈에 대한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11-1. 제시된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향의 정책적 중요도와 시급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이슈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	중요도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핵심 기술군 변화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 예술계의 기술 리터러시(literacy)와 과학기술계의 예술 리터러시 제고를 통한 융합 및 협업 촉진 일반 국민의 4차 산업혁명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초연결 시대 도래	•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 초연결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진흥 및 예측연구 강화 협업 기반 창작 지원 및 플랫폼 사업 확대												
기술 발전과 일자리 문제	• 일지리의 변화와 감소 예술창작 및 문화기획 분야 인문자능 이용 교육 확대 새로운 기술문화에 대한 재교육 확대 새로운 문화어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포스트휴먼시대의 윤리와 정체성	•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 미래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미래지향적 인문정책 모색 •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재정립												

[용어 해설]

- **리터러시(literacy)**: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문화적으로는 서로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지식 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 등을 의미함.

11-2. 제시된 대응 방향 중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12. 끝으로 본 설문조사나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문화정책의 미래 모색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2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은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이슈 및 이슈별 대응 방향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미래 문화정책의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번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핵심 이슈와 대응 방향을 선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품을 전해드리고자 하오니 다시 한 번 답례품을 받으실 연락처를 꼭 기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1. 다음은 국어, 콘텐츠산업, 관광 분야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 분야를 제시하고, 현재와 비교하여 시기별(단기, 중기, 장기)로 정책적 중요도 변화 전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각 분야의 선택비율에 따라서 주어진 중요도 순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각 분야의 중요도 순위를 조정해 주십시오. 1차 조사 결과에 동의하실 경우에는 '의의 없음'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문화정책 분야	1차 조사 시 선택비율	중요도 순위	순위 조정
단기(현재~5년 내) 중요도 변화 전망	지역문화정책	89.3%	1	
	예술정책	67.3%	2	
	문화여가정책	63.0%	3	
	인문정책	56.0%	4	
	문화다양성정책	46.4%	5	
	전통문화정책	44.2%	6	
	국제문화교류정책	43.1%	7	
			이의 없음	
중기(6~10년 내) 중요도 변화 전망	문화다양성정책	71.4%	1	
	국제문화교류정책	70.6%	2	
	인문정책	66.0%	3	
	전통문화정책	65.4%	4	
	지역문화정책	60.7%	5	
	문화여가정책	55.6%	6	
	예술정책	50.0%	7	
			이의 없음	
장기(10년 이후) 중요도 변화 전망	국제문화교류정책	45.1%	1	
	문화다양성정책	44.6%	2	
	문화여가정책	38.9%	3	
	전통문화정책	38.5%	4	
	예술정책	38.5%	5	
	인문정책	38.0%	6	
	지역문화정책	35.7%	7	
			이의 없음	

- 1-1. 1차 조사 결과, 장기(10년 이후) 전망에서는 현행 문화정책 분야의 중요도 전망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제시된 문화정책 분야 이외에 장기적으로 미래 문화정책에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거나 주목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도출하여 다음처럼 다섯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였습니다.

- 인구지형의 변화
-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이하 설문조사 문항은 다섯 가지 범주별 이슈 및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에 관한 1차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문항은 1차 조사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추가되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정' 또는 '추가' 등을 부가해 두었습니다. 그 외에 개별 이슈나 대응 방향의 범위를 넘어서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가 의견들은 종합분석 및 정책방안의 구체화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2. 다음은 '인구지형의 변화' 관련 이슈 및 대응방향에 대한 문항입니다.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이슈		이슈 관련 현상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14~64세) 감소 시작 • (추가)연령별 대체가 어려운 산업 부문의 노동력 부족 현상 심화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력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 국내외 수요 부진 수출 및 제조업 위축 • 저성장에 의한 장기 침체 및 성장동력 약화 •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화 이슈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 성장 •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빈곤, 건강, 자살 등) 증가 • 사회보장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국제적인 인구이동과 다문화사회화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증가 등으로 인한 다문화·다인종사회로의 변화 • 우리 사회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문화적 갈등 • 원주민과 이주민 간 문화 수용과 문화정체성 혼란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2세의 노동시장 진출과 사회적 적응 문제 계층의 고착화 문제 대두
	탈북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에서 위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민의 정체성과 한국사회에서의 문화 적응 문제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문제, 노동력의 국가 간 이동 등으로 인한 고급인력 유출 • (추가)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인재 유출 우려 증가

2-1. 다음은 제시된 이슈가 현행 문화정책 및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1차 평가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환산된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점수 조정 칸에 점수를 기입(소수점 이하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다면, "이의 없음" 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슈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59.2		71.5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70.2		71.5		
	고령화 이슈의 증가	72.8		83.3		
국제적인 인구이동과 다문화사회화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	66.2		79.4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68.4		79.8		
	탈북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53.5		58.8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	35.1		39.9		

2-2 다음은 제시된 이슈별로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성을 1차 평가한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환산된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점수 조정 칸에 점수를 기입(소수점 이하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의가 없다면, “이의 없음” 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슈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	중요도			시급성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저출산, 고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가능인구 감소 •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문화 분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72.4			70.6		
		장기적예에 따른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문화적 접근 모색	61.0			5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이슈의 증가 	예술치료 및 노인문화프로그램 등 건강한 노년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77.6			71.9		
국제적인 인구 이동과 다문화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정체성 •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사회문제 	(수정)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다문화수용성 증진	77.6			70.6		
		남북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 및 탈북민의 문화적응력 제고	60.1			5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 	문화 분야 창의인력 양성 정책 강화 및 국외유출 완화 모색	51.3			46.9		
		(추가) 문화 인력의 미스매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적 인력 정책 추진	X			X		

3. 다음은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 관련 이슈 및 대응방향에 대한 문항입니다.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이슈	이슈 관련 현상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갈등	남북 갈등 및 문화적 이질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한 남북 관계 단절 및 갈등의 지속 • 남북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문화적 이질성 심화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 언어, 문화, 가치관, 생활양식 차이로 인한 갈등 대비 필요
	동아시아 역내 갈등	역사·영토·정치경제 문제 등으로 인한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갈등 심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국제질서의 양극화(G2)와 다극화, 신냉전과 신고립주의 부상 자국중심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 확산
사회적 갈등의 확산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과 부, 주거, 교육, 소비, 의식 등 삶의 영역 전반에 걸친 양극화 심화 • 실업, 중산층 몰락, 새로운 빈곤층 형성 및 계층 이동성 저하로 인한 계층 갈등 증가
	사회 전반의 갈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이념, 성별 등 사회 전반의 갈등 및 혐오범죄 증가로 인한 갈등관리비용 증가 • 귀농·귀어·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기존 공동체와의 갈등
	탈북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탈북민의 정체성과 한국사회에서의 문화 적응 문제
정의 공감 및 문화의 정치	정치 불신과 신진집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불신 및 리더십과 관료제의 위기 • 기술 발전에 따른 신즈집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 인터넷민주주의)의 영향력 증가 • 일상적 이슈를 매개로 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증가
	문화민주주의 증진	문화권 신장 및 문화민주주의 증진의 필요성 증가

[용어 해설]

- **신직접민주주의:** 뉴미디어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체제를 보완하는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또는 인터넷민주주의,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공청회, 정책결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 및 토론 등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 등이 포함됨
- **문화민주주의:**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culture by everybody)’(랑스테드 Jom Langsted)를 지향하는 개념. 정치적·성적·민족적·사회적 다양성과 다원성, 참여에 의한 주체적이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중시함.

3-1. 다음은 제시된 이슈가 현행 문화정책 및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1차 평가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환산된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점수 조정 칸에 점수를 기입(소수점 이하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의가 없다면, “이의 없음” 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슈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갈등	남북 갈등 및 문화적 이질성 심화	47.8			70.6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대비 필요성	53.9			75.4		
	동아시아 역내 갈등	59.2			62.3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보호 무역주의	53.5			53.1		
사회적 갈등의 심화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79.4			82.0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75.9			83.8		
정의, 공감 및 문화의 정치	정치 불신과 신직접민주주의	69.3			70.6		
	문화민주주의 증진	72.8			78.5		

3-2. 다음은 제시된 이슈별로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성을 1차 평가한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환산된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점수 조정 칸에 점수를 기입(소수점 이하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다면, “이의 없음” 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슈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	중요도			시급성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국제 정 세 의 불 확 실 성 과 갈 등	• 남북 갈등 및 문화적 이질성 심화	남북 관계 회복 및 문화적 이질성 완화를 위한 문화 교류 강화	69.3			56.1		
		남북한(재외동포 포함) 문화 이해 등 통일 대비 문화정책 강화	68.9			53.9		
	• 동아시아 역내 갈등 • 국제질서의 불확실 성과 보호무역주의	한중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생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협력 강화	70.2			64.9		
		인류 공생의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 의제 연계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63.6			58.8		
사 회 적 갈 등 의 심 화	•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 (수정)사회적 갈등 의 다양화	공존·협력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 고 및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문화 정책 강화	78.9			78.5		
		문화 분야 종사자의 직업 및 삶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제도 개선	80.3			78.5		
정의, 공감 및	• 정치 불신과 신직접 민주주의	문화행정의 관료주의 점검 및 개선 모색	78.1			81.1		

이슈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	중요도			시급성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문화의 정치	• 문화민주주의 증진	신직접민주주의에 대응한 문화윤리 정립	68.9			71.1		
		문화기본권 및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82.0			81.1		

4. 다음은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관련 이슈 및 대응방향에 대한 문항입니다.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이슈		이슈 관련 현상
라이프스타일 변화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 여가시간 및 여가자원 증가 • 기술 발전으로 소비자·향유자의 초개인화된 취향 부상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증가, 새로운 형태의 가족(공동체) 확대로 생활패턴 및 소유 형태가 변화하고 복지 수요가 증가
삶의 가치관 변화	자연과의 공존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원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과 공존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모색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 수요 및 생활문화 활동이 증가하고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확대 • 노마드형 삶, 적정기술을 기반으로 성장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추구 • 국민행복지수(GNH)를 국가 발전의 지표로 추구하는 경향 증가
	(수정) 소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난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니멀리즘으로 미니멀 라이프, 라이프 다운사이징, 다운시프팅 등 소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중심의 경제, 다양성의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 부상 • 제한된 자원의 재분배와 재분포, 공유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부상
과로사회화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등급화·서열화 경향 및 승자독식구조의 심화 • 가치의 획일화(물질주의 가치관 심화) 및 삶의 속도 증가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 증가 • 소외의 심화, 삶의 주도권 및 자유의 상실
기술 발전 적응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발전으로 혼합현실(Mixed Reality)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기술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피로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에의 적응력 요구 심화 • 융복합미디어, 모바일플랫폼 등의 영향력 강화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

[용어 해설]

- **초개인화(Hyper Personalization)**: 최적화된 상황 인지를 통해 취향이 고도화되는 것. 여러 가지 개인화된 정보를 통해서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기업이 만들어 내는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임.
-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適正技術)**: 해당 지역의 경제, 환경, 사회적 여건 등에 알맞은 해법을 제시하는 기술. 지역에서 산출된 원재료를 써서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제품을 만드는 데 적합한 기술을 지향함.
- **국민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 국민 삶의 질과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 4대 축(명동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 전통가치의 보존 및 발전, 자연환경의 보존, 올바른 통치 구조)에 9개 영역(심리적 안정, 건강, 시간 사용, 행정체계, 문화 다양성, 교육, 공동체 활력, 환경, 생활수준) 33개 지표로 고안됨(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 **라이프 다운사이징(life downsizing)**: 최소한의 삶을 지향하며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는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의미함(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 **다운시프팅(downshifting)**: 금전적 수입이나 승진에 구애받지 않고, 저소득일자리라도 마음에 맞는 일을 즐기며 생활의 여유와 삶을 즐기려는 행위를 의미함(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 **혼합현실(Mixed Reality, 混和現實)**: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 정보를 부가하는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과 가상 환경에 현실 정보를 부가하는 증강 가상(AV: Augmented Virtuality)을 포괄하며, 현실과 가상이 연결된 스마트 환경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풍부한 체험을 제공함(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4-1. 다음은 제시된 이슈가 **현재 문화정책 및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1차 평가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환산된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점수 조정 칸에 점수를 기입(소수점 이하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의가 없다면, “이의 없음”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슈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라이프스타일 변화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78.9			85.1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81.1			88.2		
삶의 가치관 변화	자연과의 공존 모색	59.2			71.9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77.6			82.5		
	(수정) 소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58.3			60.1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64.0			72.8		
과로사회화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74.1			74.6		
기술 발전 적응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66.2			72.4		
	기술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피로도 증가	60.5			70.6		

4-2. 다음은 제시된 이슈별로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성을 1차 평가한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환산된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점수 조정 칸에 점수를 기입(소수점 이하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다면, “이의 없음”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슈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	중요도			시급성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라이프스타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 수요와 취향의 변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형태 변화 	생애주기와 세분화된 취향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 정책 강화	79.4			74.6		
		일상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여간과 기회 제공	83.3			76.8		
삶의 가치관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과의 공존 모색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수정) 소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다양성 공존 · 상생의 가치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문화적 삶의 지표 설정	75.4			71.1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관리	73.2			71.5		
		문화 분야의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가치 창출	70.2			64.5		
과로사회화	경쟁 심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여시간 확보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정책 강화	82.9			82.9		
기술 발전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합현실에 익숙한 세대의 등장 기술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피로도 증가 	세대 간 기술격차 완화 및 세대 이해 계기 확대	68.4			63.6		
		기술 발전에 따른 피로도 완화를 위한 문화적 방안 마련	65.8			62.3		

5. 다음은 '도시문제와 지역문제' 관련 이슈 및 대응방향에 대한 문항입니다.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이슈		이슈 관련 현상
지역 문화자치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와 연계한 문화자치 필요성 증가
쇠퇴지역 증가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	• 도시화 및 수도권 집중도의 심화, 인구 감소 및 도시화로 인한 지방 쇠퇴 가속화와 지방소멸 위기 • 농촌공동화 현상의 심화, 학교·공공시설의 폐관 및 통폐합, 복합시설화 필요성 증가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필요성	• 쇠퇴지역의 문화시설 역할 및 사회·문화 서비스 공급체계 변화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 (개발, 인구감소에 의한 자연소멸 등)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자산 소실 우려 증가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 도심폐교의 발생, 재래시장 등 상권 쇠퇴, 도심 슬럼화와 원도심 쇠퇴 심화 • 성장 위주의 도시관리정책,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점 대두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	• (수정) (도심 관광·상권 형성 등) 소비 위주의 단거점 재생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심화, (이화동 벽화사건 등)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 에 의한 주거환경 악화 •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문화백화 , 도시재생사업 과정(젠트리피케이션 촉발기)에서의 문화과잉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

[용어 해설]

- **문화백화(文化白化)**: 문화예술에 의해서 활성화된 곳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이탈하고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 측면만이 강화된 획일적 상업경관이 형성되어 매력도가 소실되는 현상을 의미함.
-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 주거 지역이 관광지화로 사생활 침해, 소음과 쓰레기 등의 문제가 증가하면서 기존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의미함.

5-1. 다음은 제시된 이슈가 현행 문화정책 및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1차 평가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환산된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점수 조정 칸에 점수를 기입(소수점 이하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의가 없다면, "이의 없음" 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슈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지역 문화자치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73.2			82.5		
쇠퇴지역 증가	도시화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	76.3			82.9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68.9			75.0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71.5			71.9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79.4			71.9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	77.2			75.0		

5-2 다음은 제시된 이슈별로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성을 1차 평가한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환산된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점수 조정 칸에 점수를 기입(소수점 이하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다면, “이의 없음” 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슈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	중요도			시급성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지역 문화자치	지역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	문화자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78.5			81.6		
		문화재정의 확충과 효과적 운용	80.3			80.7		
		도시 및 지역 간 문화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69.3			66.2		
		(추가) 지역의 문화 생태계 진단 및 역량 강화 모색	X			X		
쇠퇴지역 증가	도시원의 진행과 지방 쇠퇴 심화	(수정) 지방쇠퇴 정밀 현황 파악 및 예측체계 도입, 유휴공간 활용 체계 마련	67.1			63.2		
		쇠퇴지역의 문화서비스 체계 변화	74.1			76.3		
		지역 문화자산의 소실 우려	74.6			74.1		
도시 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원도심 쇠퇴와 도시재생 필요성 증가	문화적 도시재생 도시문화의 재생 정책 수립 및 시행	75.9			77.2		
		(추가) 공간, 시설 중심에서 사람, 활동 중심으로 재생사업 체계 변화	X			X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문화백화, 문화과잉 문제 발생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자활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75.4			74.6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자산화 전략 지원	68.4			71.5		

6. 다음은 '기술 발전과 인간의 미래' 관련 이슈 및 대응방향에 대한 문항입니다.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이슈	이슈 관련 현상
핵심 기술군 변화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	• 범용기술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의 정착 및 확산 • IoT 기술 및 로봇틱스 기술의 급속한 발전 • AR/VR 및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 • 3D프린터의 활용도 확대 및 자기제조형 4D프린터 등장
초연결시대 도래 •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	• 지능화, 자동화기반 초연결사회로의 급격한 전환 • 생산과 소비 등에서 초개인화된 소비자 취향 고려 필수화 • 공동창작 시스템과 플랫폼의 일반화
기술 발전과 일자리 문제 •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	• 기계와 공존이라는 화두와 인공지능 기반 새로운 일자리 탄생 • 단순, 반복형 노동 분야의 일자리 감소 • 노동자 간 수입 및 지위의 양극화 심화
포스트휴먼 시대의 윤리와 정체성 • 트랜스휴먼 의 등장과 정체성 •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	• 트랜스휴먼의 등장에 따른 인간 정체성 문제 대두 • 로봇 및 합성생물학 등이 제기하는 거대한 윤리적 문제 부상 • 과학기술 발전으로 감시 및 통제 강화, 프라이버시 침해

- [용어 해설]
-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공공거래장부라고도 불리며, 기존에 금융회사의 중앙서버에 거래기록이 보관되는 것과 달리 사용자의 개인 컴퓨터 등에 거래기록이 저장됨으로써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하여 데이터의 대량 유출이나 위조를 막는 기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에 적용되어 있음(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 **포스트휴먼(post human)**: 인간과 기술(또는 기계)의 융합으로 나타나는 미래의 인간상을 일컫는 말, 정보통신기술, 인지과학, 나노기술, 바이오공학의 발달로 인간과 기계가 합쳐짐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과 관련됨.
 - **트랜스휴먼(trans human)**: 현재의 인간과 포스트휴먼(post-human)의 중간적인 존재이며,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현재의 인간이 지닌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뛰어넘은 능력을 지닌 존재를 의미함.

6-1. 다음은 제시된 이슈가 현행 문화정책 및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1차 평가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환산된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점수 조정 칸에 점수를 기입(소수점 이하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의가 없다면, “이의 없음”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슈		현재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미래 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핵심 기술군 변화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	58.8			78.9		
초연결시대 도래	•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	57.9			81.1		
기술발전과 일자리 문제	•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	68.4			82.0		
포스트휴먼 시대의 윤리와 정체성	•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	49.1			70.6		
	•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	56.1			78.9		

6-2. 다음은 제시된 이슈별로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성을 1차 평가한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환산된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점수 조정 칸에 점수를 기입(소수점 이하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다면, “이의 없음”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슈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	중요도			시급성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1차 결과 (100점 환산)	점수 조정	이의 없음
핵심 기술군 변화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군 부상	예술계의 기술 리터러시(literacy)와 과학기술계의 예술 리터러시 제고를 통한 융합 및 협업 촉진	72.8			68.0		
		일반 국민의 4차 산업혁명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58.3			59.6		
초연결 시대 도래	• 사람 사물 기계 간의 초연결시대 도래	초연결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전망 및 예측연구 강화	71.1			65.4		
		협업 기반 창작 지원 및 플랫폼 사업 확대	77.2			70.2		
기술 발전과 일 자리 문제	• 일자리의 변화와 감소	예술창작 및 문화기획 분야 인공지능 이용 교육 확대	61.0			57.0		
		새로운 기술문화에 대한 재교육 확대	71.9			66.7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78.9			75.4		
		(추가)기술 변화에 대응한 문화 분야의 새로운 생산양식 및 일거리 창출						
포스트 휴먼 시대의 윤리와 정체성	•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정체성 •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	미래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미래지향적 인문정책 모색	79.4			76.3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재정립	75.0			68.4		

[용어 해설]
 • 리터러시(literacy):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문화적으로는 서로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지식 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 등을 의미함.

7. 끝으로 1~2차 조사에 참여하면서 생각하신 바를 종합하여 미래 문화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의제 및 해당 의제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해 주십시오.

중장기 핵심 의제	해당 의제와 관련한 정책적 추진과제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이 상 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정 종 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양 혜 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 연 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조 광 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수 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

김 한 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 행 인 김 정 만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7년 11월

발 행 일 2017년 11월

인 쇄 인 더크리홍보 주식회사

ISBN : 978-89-6035-705-1 93300

www.kcti.re.kr

